

文化藝術論叢

第 3 輯

1991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化發展研究所

차 례

I . 독일통일을 전후한 문화교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의 시사점	양영식 · 김경웅 / 9
II . 향토축제의 특징화와 개선방향의 모색	이창경 / 43
III .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정서함양 큰 모임	87
◇ 우리는 왜 이렇게 메말라졌는가	김태길 / 89
◇ 어떻게 문화적 정서를 가꾸어 가야 하나	이중환 / 95
◇ 미래 우리문화의 조건은 무엇인가	김용운 / 105
◇ 토론 내용	106
IV . 문화경제와 경영	자비에 그래프 / 123

V. 고급예술인력 조기양성을 위한 국립예술학교 설립운영	135
◇ 예술영재교육의 실태와 예술학교설립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이강숙/137
◇ 바람직한 예술학교의 교육체제와 운영방안	이상만/143
◇ 토론 내용	146
VI. 전통공예산업과 현대화, 문화재보존과 고도보호	151
◇ 전통공예산업의 현대화 : 민속공방촌 조성	정명호/156
◇ 古都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신찬균/156
◇ 매장문화재 훼손방지대책	김종철/160
◇ 토론 내용	163
VII. 지방화시대의 도시문화환경과 개선방안	175
◇ 지방 도시문화환경의 경제·사회적 의미	황기원/177
◇ 외국의 도시문화환경 조성정책	문정희/186
◇ 우리 나라의 도시문화환경과 개선방안	유병림/194

◇ '93대전 EXPO와 광역 도시문화환경 조성	정순오/201
◇ 토론 내용	217
VIII.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 개발 보급방안	이연숙/223
◇ 시작말	225
◇ 연구과정 개요	228
◇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의 개발	236
◇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의 보급방안	244
◇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원성	251
◇ 이후 발전을 위한 제언	252
◇ 맺음말	259
◇ 토론 내용	260
□ 부 록	269
1. 문화발전연구소개발정책연구보고서 내용요약	271
2. '90년 유럽한국학회(AKSE) 자료 요약	319

I. 독일통일을 전후한 문화교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의 시사점

연구의 시각과 범위/11
독일통일의 저변과 그 동력요인/11
동서독 문화교류의 의의와 성격/19
통일추진과정에서의 문화교류 실태와 성과/23
통독후의 문화교류와 문제점 평가/32
남북한 문화교류 추진에서의 시사점/38

독일통일을 전후한 문화교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의 시사점

梁 榮 植*
金 京 雄*

1. 연구의 시각과 범위

이 연구는 “독일통일을 전후한 문화교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의 시사점” 연구의 일환으로서, 통일과정 및 통일국가 출범 이후 동서독 문화교류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서독의 체제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정밀 진단함으로써 남북한 문화교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교훈요소와 시사점을 적출하는 것도 주요 연구목적에 포함시켰다.

분석의 시각과 범위는 주로 ‘자유통일’(Einheit in Freiheit)을 주도한 독일연방 공화국(BRD·서독)의 문화교류 정책을 중심으로 동서독 문화교류 촉진관련 합의 내용, 교류협력 사례의 유형과 특징을 규명하고 국내외 전문서적·주요 일간지 등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연구보고서, 특정 아이디어 개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독일통일의 저변과 그 동력요인

독일통일의 저변과 그를 가능케 한 주요 동력요인들을 살펴보면, 결과론적인 시 각이지만 크게 다음 세 가지 동력요인의 양상들이 통일의 조기실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 통일연수원 교수·정치학

* 통일연수원 교수·정치사회학

첫째,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과 종합국력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즉 ‘벤츠체제’의 자력이다.

둘째, 동독의 실정으로 인한 ‘트라비 체제’의 붕괴와 ‘밑으로부터의 무혈민주혁명’의 성공이다.

셋째, 동구권의 개혁 도미노 물결과 구라파 냉전체제의 종식이다.

이러한 3대 통일동력 요인¹⁾은 마치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과 같이 통일이라는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에너지를 근원이었다. 이제 독일통일의 3대 동력요인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1) 제 1의 통일동력 : 서독의 ‘벤츠체제’의 자력

분단 45년의 인고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독은 마치 매력만점의 벤츠 승용차와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명실상부한 ‘벤츠체제’를 확립했다고 평가할만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도 더 활짝 민주정치를 꽃 피운 나라, 세계최고 수준의 고도의 복지사회를 일구어 낸 나라, 그런 나라가 곧 독일연방공화국인 서독이었다. 누가 보아도 서독은 착실하고 건실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계속 다져 왔다.

한편, 계급간 적대의식을 조장하는 빈부의 격차가 없고, 노·사의 공동참여결정권(Mitbestimmungsrecht)이 보장된 이른 바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 모범국이면서 동시에 진실로 신생국들과 이웃나라를 도울 줄 아는 경제도덕 대국의 이미지를 서독은 확실히 땀흘리며 심어 나갔다.

동독에 있는 동포들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긴 지남철과 같은 힘은 바로 ‘벤츠체제’의 매력이었다. 동시에 인접한 과거의 적국, 과거의 희생양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폴랜드는 물론 소련, 영국, 미국까지도 전혀 예상과는 달리 독일통일을 허용하게 한 중요 요인도 바로 ‘벤츠체제’에 대한 믿음성이었다.

만일 서독이 분단의 장기화 현상에 자포자기한 채 분단체제에 안주하여 소리적 국가이기주의에 매몰되어버렸다면, 아마도 오늘의 통일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다

1) 동서독이 이와 같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많은 독일인들은 거의 같은 내용의 대답을 한다. 즉, 고르바초프의 역할과 동독의 평화적인 혁명(die friedliche Revolution in der DDR)이라고 평가받는 동독의 개혁운동, 그리고 민주·복지국가 서독의 경제력이 오늘의 독일통일을 가져오게 한 원동력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정용길, <정치적 측면 : 공존바탕 신뢰와 이해>,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서울 : 연합통신, 1990) pp.70 ~ 71.

시 말하면, 강대국들에게 분단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독일 국민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 ‘위대한 독일제국’의 신화를 되뇌이거나 복고주의적 정치풍토가 일기 시작했다면, 결코 히틀러 ‘제 3의제국’의 망령을 말끔히 씻지 못했을 것이며, 필경 ‘네오 나치즘’에 대한 의구심과 경제의 증폭으로 통일과정에 역기능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서독이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채, 아시아의 한 ‘경제동물 국가’처럼 ‘스꾸리지적 부의 축척’에만 골몰했다면 ‘구라파의 또 하나의 경제동물’이라는 악명의 칭호를 누릴지언정, 환희와 감격의 통일은 영원히 누리지 못했을는지 모른다.

내적으로 다진 ‘벤츠체제’를 바탕으로 서독은 외적으로도 착실하게 ‘동방정책’을 펼쳐 나갔다.

서독은 ‘동방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동독, 소련 및 동구라파 국가를 대상으로 결코 잔꾀나 심리전 차원의 전술적 행동을 취하지 아니 하였다. 우둔한 정도로 솔직하게, 그리고 산술적 계산보다는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베푸는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죄행에 대한 적나라한 공개와 재판과 철저한 참회를 입으로만 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손과 발로서도 행하였다. 마지못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하고 전후 40여년간 계속 이를 행동으로도 뉘우침을 뒷받침해 나왔다. 한 예를 들면, 서독의 남부지역에 있는 다카우(DACCHAU) 수용소까지도 서독 정부의 예산으로 복원하여 나치의 죄행, 유대인과 여타 구라파 국가의 국민들이 살육되었던 희생의 현장을 당시의 현장 그대로 모든 기물, 필름, 사진 또는 문서기록으로 적나라하게 밝힘으로써 치욕의 역사를 밝히고, 독일민족의 2세와 3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다시는 독일민족사에 나치독일과 같은 비극의 재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맹세를 다짐토록 하고 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에서 묵념을 하는 수많은 독일인의 남녀노소를 응시하면서 구라파의 옛 적들은 증오심과 의구심을 풀어나갔다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서독은 기본적으로 45년의 분단의 세월을 참으로 매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하여 다시 태어남으로써 이웃으로부터 불신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서독은 ‘벤츠체제’의 자력으로 미래의 통일독일국가의 원형이라는 강한 인상을 동독의 ‘트라비 형제’들에게 심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엄밀히 따진다면 아직도 독일민족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불식하지 못하는 전쟁경험 세대들이 이웃나라들에 있으나, 현 정치세대와 신세대의 대부분이 새로운 통일독일의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동방정책'에 대한 평가시각의 하나인데, 필자는 두 가지 측면에 특히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는 서독의 '동방정책'은 찬성하는 대신에 평화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통일을 지향한 성동격서식 우회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서독은 동방국가들(소련, 동구라파 국가, 동독)과 실질적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에 역점을 두었으나 냉전이 심화되었던 아테나워 · 에른하르트시대 이후에는 미사여구의 통일구호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민족자결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대전제인 구라파 평화를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서독은 '구라파평화 속의 독일평화와 독일 민족의 장래문제(즉 통일)해결'을 지향함으로써 이웃나라의 '독일제국'에 대한 공포증과 불필요한 의구심을 불식시켜 나갔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라파국경선 인정, 불가침, 핵무장포기, 동독의 주권인정 등의 과감한 조치와 일련의 동방조약의 체결을 통해 진실하고 알찬 협력을 두텁게 해나갔다.²⁾

또 다른 하나는 서독의 '동방정책'은 분명 "중립은 없다", "자유민주진영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백한 입장에 철저히 서 있었다는 점이다. 사회민주당(SPD)이 중립을 포기하고 자유를 위한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은 냉전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소련의 기묘한 신뢰를 획득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첨언하면, 서독이 어설픈 '중립주의정책'을 취하여 동·서 양대진영의 취약점이나 힘의 공백 · 누수현상을 이용, 독일민족의 민족주의적 반외세 통일을 노렸다면, 필경 그러한 정책노선은 정략적 기회주의로 낙인찍혔거나 매도되어 4대국의 '2+4방식의 통일협상'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을는지 모른다.

오늘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더 이상 중립국가로 남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에서 자유를 위한 민주진영의 한 주권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탈냉전 이후시대의 새로운 국제정치의 특징현상으로 주목할만하다. 요컨대, 독일통일의

2) 서독이 적극적으로 전개한 동방정책의 원류를 이해하는 데는 동방정책의 원조라 할 브란트의 다음 두 정책론을 참고할 것. ① Willy Brandt, Friedenspolitik in Europa (S. Fischer Verlag, Gmbl, Frankfurt am Main, 1968) ② Willy Bradt, "German Policy toward the East", in Foreign Affairs, Vol.46, No.3 April, 1968.

최대 난관이었던 독일문제에 대한 4대국의 책임과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 통일의 주요한 동력원인의 하나는 서독의 착실하고 건실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실된 평화정책과 협력의 실행으로 주위로부터 신뢰를 쌓은 '벤츠 체제'의 자력에서 연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제 2의 통일 동력 : 동독 '트라비 체제'의 붕괴와 무혈민주혁명의 성공

독일통일의 결정적 동력은 동독 내부의 대변혁으로부터 용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를린 장벽의 개방과 붕괴 그리고 동독의 정치변혁을 단순히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정책의 영향이나 압력의 산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독 내부의 대변혁은 바로 동독의 장벽 안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교회의 강단에서, 비밀결사체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설교와 기도, 글과 토론 그리고 비폭력 시위저항으로 줄기차게 분투해온 동독의 자유인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마무리지어진 것이었다.

전후이래 줄곧 '인민의 정부', '인민의 조국'을 표방해 온 '독일민주공화국'이지만 실제로는 동독의 자유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없었다. 결국 1989년 가을 동독의 제 2도시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교회에서 점화된 촛불시위가 삼시간에 반 '트라비 체제'의 '촛불혁명'의 불길로 번져 동독 전역에 확산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무혈민주혁명'으로 승화되었다.

코렌츠 전 동독서기장의 씩씩한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벽개방도 동독인민들의 신뢰를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허사로 끝났다." 말하자면, '인민의 조국'이 결국은 인민에 의해 버림받은 꼴이 되었던 셈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독국민들은 '독일민주공화국'(DDR)을 '진정한 조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을 '마음의 조국', '통일독일국가의 원형'으로서의 진정한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동독의 '트라비 체제'는 마치 트라비 자동차처럼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인권탄압의 매연을, 경제적으로는 비생산성·불균형·궁핍의 매연을,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통제와 폐쇄와 창의력 억압의 매연을 뿜어대는 '판도라 상자'와 같은 것이었다.

동독인들이 분단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자문하게 되는 물음은 이런 것이었음직하다. 왜, 같은 독일민족인데 서쪽은 자유와 인권과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데 동쪽은 부자유와 빈곤 속에 위축되고 침울한 생활을 계속하여야 하는가?

통신·통행·통상분야 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교류협력과 교회를 통한 마음의 교류와 사랑을 두텁게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동독인들은 ‘벤츠체제’와 ‘트라비 체제’의 실상을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낌으로써 필연적으로 양 체제의 차이를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 체제의 장·단점을 평가할 때 자력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서쪽의 독일사회, 특히 교회로부터 뻗어오는 전혀 조건 없는 형제애의 따뜻한 손길을 대할 때마다 자유독일, 민주독일, 자랑스러운 통일독일의 미래상의 원형을 동독의 형제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들이 마음속에서나마 갈망해 오던 ‘통일의 가난한 복지’의 이상향이 바로 서쪽지역에 현존하는 선진민주 복지사회인 독일연방공화국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체제, 그 사회, 그 정부에게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맡기고 싶지 않았을까?

동독인들은 공산당과 비밀경찰 또는 그에 빌붙어 기생하던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서독의 ‘벤츠체제’를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편입되는데 동의한 것이지, 결코 서독이 일방적으로 흡수통합해버린 것으로 매도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치의 장벽과 가시철망으로 방어하던 ‘트라비 체제’의 운전사 공산정권은 폭력압제의 사슬을 용인해 온 모스크바가 등을 돌림으로써 밑으로부터의 ‘촛불혁명’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벤츠체제’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숙명의 길을 ‘트라비 정권’은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트라비 체제’는 트라비 자동차와 함께 과거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트라비 자동차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독의 공산정권도 숨을 거둔 채 과거 역사의 무덤 속에 영원히 장사하고 말았다.

요컨대, 동독의 ‘트라비 체제’는 지난 40여년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공산주의라는 ‘지붕위의 풀’을 억지로 동독 자유민의 마음속에 심으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대실패였다. 동독 내부로부터 솟아난 자유의 활성화 기도와 ‘촛불혁명’의 열풍은 서독으로부터 계속 불어 온 자유, 인권, 민주, 복지의 훈풍과 또 모스크바로부터 휘몰아친 개혁의 바람과 어우러져 급기야 ‘지붕 위의 풀’을 송두리채 뽑아버렸다고 할 것이다.

3) 제3의 통일동력 : 소련과동구라파의 개혁·개방도미노물결

동구라파의 자유화 물결의 확대, 냉전의 해체, 베를린 장벽의 철거와 ‘트라비체제’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더 나가서 독일민족의 자유통일을 앞당긴 직접적 계기를

마련한 동력요인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를린장벽과 동·서독 국경의 전면개방을 직·간접으로 자극한 헝가리, 체코의 자유화운동과 국경대탈출,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들도 소련의 변화없이는 더 많은 희생, 더 긴 시간, 더 강렬한 투쟁의 대가를 요구했을는지 모른다. 고르비의 '신사고'와 '불간섭'선언과 유혈진압거부 압력이 없었더라면 동독의 민주혁명과 베를린장벽의 개방의 향방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과연 독일이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이 되었을까? 일단은 상당기간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론이지만 소련은 몰락해 가는 소련사회주의 체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한 '구라파 대가정'의 구상을 통하여 사실상 냉전체제의 해체와 중구라파로부터의 후퇴라는 불가피한 포석을 이미 내심으로 결정해 놓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하간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소련의 결정은 4대국의 책임과 권리의 유보를 변경시키는 엄청난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결국, 고르비의 정책결단은 소련을 몰락의 위기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알타체제의 해체로 피 흘리지 않은 독일통일을 보장해준 사실상의 국제적 여건을 충족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동독 내부에서 자유민들이 '폭력·과격운동, 파괴 대신에 평화시위·기도·촛불로써'³⁾ 자유속에서의 통일을 쟁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사실상의 후원자가 고르비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개혁의 의지가 없는 동독공산정권의 생명을 더 이상 무력으로 연장시켜 주기를 거부한 모스크바 정권이 독일통일의 열쇠를 독일민족에게 내준 셈이었다.

특히, 서독의 콜 총리는 1990년 10월 5일 통일선포식에서 행한 대국민연설⁴⁾에서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독일통일의 조기성취를 허용한 소련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각국 국민이 스스로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독일통일의 날이 이토록 빨리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소련이 고르비의 '신사고'에 따라 종래 고수해왔던 '독일의 중립화'를 포기하고 통일독일을 나토동맹체제에 계속 잔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엄청난 변화이다. 이는 냉전적 정세관과 발상의 대전환이라는 점에서 특히 한 반도 시각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다. 독일의 중립화통일이란 사실상 그것이 현실화

3) <드 메지에르 동독총리 고별사>, 《조선일보》(1990년 10월 5일자)
<콜 서독총리 대 국민연설문>, 《조선일보》(1990년 10월 5일자)

된다고 가정할 때, 자칫 미국과 소련이 독일의 군비확장을 제어할 명분마저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독일의 군사대국화의 길마저 열어주는 결과를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통일독일이 경제대국, 정치대국에다 초군사대국으로 치닫게 하는 것보다는 서방자유진영에 계속 묶어 두는 편이 훨씬 구라파의 평화질서 유지와 소련의 국익에 유익할 것으로 평가했으리라 사료된다. 그런데 이러한 소련의 결정은 미래의 한반도 통일상황에 새로운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결정의 배경과 전후관계를 정밀 진단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한편,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로 구라파의 냉전체제가 해체되어왔음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가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은 재론의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구라파의 냉전구조의 붕괴를 계기로 미·소는 실질적인 군축에 합의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국제분쟁해결과정에 군사적 공동보조를 취하는 역사적 대전환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냉전체제 이전 시기에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한 이후, 최초로 미·소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시기에 와서는 ‘중동의 히틀러’인 후세인을 응징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전승4대국의 책임과 권리의 소멸 그리고 독일통일은 필경 구라파에 있어서의 냉전체제의 해체로부터 연유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됨으로써 동·서구라파간의 군사관계와 대결을 종식하고 정치경제협력체를 거쳐 급기야는 하나의 대구라파 질서의 탄생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독일통일은 구라파의 냉전체제의 붕괴라고 하는 동력요인으로부터 나온 산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일통일이 실현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구라파의 냉전체제의 완전종식과 평화체제 확립이 달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독일통일과 구라파평화는 결국 계란과 닭, 동전의 앞과 뒤처럼 선후의 순, 원인과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의 해체와 독일통일은 상호분리하여 선후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맞물려 돌아간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평가일는지 모른다.

3. 동서독 문화교류의 의의와 성격

1) 문화교류 실태 분석시 필수 고려사항

분단 45년간 지속된 이질적인 정치이념과 체제하에서 생활해온 동서독 국민의 사고유형, 생활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기간내 급격한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후유증과 예상외의 문제점들은 '민족문화의 이질화'라기 보다는 '분단생활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일종의 불가피한 과도기적 '생활문화의 이질감(괴리감)'의 노출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독일민족사와 민족문화의 이질화가 아닌 양측 문화인 간의 사고와 생활환경상의 격차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결과 통일체제에 대한 적응능력의 부재, 미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정치적 자유통일 직후에 파생된 역기능적인 현상들은 분단 45년 동안 동독의 공산독재체제가 내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의 매연을 씻어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화의 종합치료기간이 필수적이며, 최소한의 기간과 최대한의 정책노력 분출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체제적 통일이전에 동서독간에 추진해왔던 문화교류협력이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공헌도는 결코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2) 문화교류의 의의와 경과

1972년 12월 동서독은 기본조약(Grundvertrag) 체결로 관계정상화를 비롯한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과 다각적 교류협력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내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소련의 개혁정책의 파장으로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이 성숙하게 되자, 서독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급속한 3단계 통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동서독의 통일과정은 ①경제·통화·사회통합, ②정치적 편입(Beitritt), ③자유총선 및 통일국가 수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기본바탕은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인적왕래, 경제, 사회 문화분야 교류협력 등)으로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형성이 밑받침되었으며, 특히 민족공동체의식의 보전과 함양을 통하여 통일기

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공헌한 쌍방간 문화교류의 의의와 실천적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는 분단 이후 초기에는 4대국의 실질적 보장하에 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점차 동서독 정부간의 교류협력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9년 브란트 수상이 이끄는 사민당·자민당의 소연정 출범으로 '동방정책'(Ostpolitik)이 본격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양국은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고 1973년 9월 유엔동시가입 이후 문화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당시 서독 브란트 정부의 '접근을 통한 변화'와 '작은 걸음의 정책'(Kleinschritt-Politik)인 '동방정책'은 문화교류의 제도적인 출범을 기약하는 산파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동서독은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제 7조의 관련조항을 설정, 양독간 문화협력 및 정부간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추진에 합의함으로써 공식적인 협력바탕을 마련하였으며, 1986년 5월 6일 '문화적 공동노력에 관한 동서독간 협정'(문화협정)을 체결, 정부간 차원의 문화교류가 본격화된 이래 정부·민간 문화교류는 확대일로를 걸어 왔다.

3) 문화 교류의 추진 근거

동서독간의 문화교류의 추진 근거로는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과 1986년 5월 6일에 체결된 '동서독문화협정'을 들 수 있다.

우선, '기본조약'을 살펴보면, 제 7조에서 "독일연맹공화국(BRD)과 독일민주공화국(DDR)은 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도적 현안문제들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양국은 이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학문·기술·통행·법률부문의 교류, 우편·전화·보건·문화·스포츠·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가협정'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추가협정'에는 제 7조의 추가사항 11개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양독의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장기협정 체결 약속, 2) 경제·기술분야 협력추진 및 조약체결 용의 천명, 3) 통행분야 협력강화, 4) 민법·형법 분야의 교류에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조약의 마련, 5) 우편협정과 전화협정의 체결, 6) 양독은 보건분야에 관한 관심표명, 7) 양독은 문화분야의 협력을 증대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간 협정체결에 관한 협상을 전개하기로 합의, 8) 양독은 조

약 비준 후 스포츠단체의 협상지원 용의 표명, 9) 양독은 환경보호협정체결 용의 표명, 10) 양독은 쌍방의 서적·정기간행물·라디오·텔레비전 제작물을 구입하기 위한 협상을 확대, 11) 양독은 비사업적 지불 및 청산거래협상과 약정 체결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동서독 ‘문화협정’을 살펴보면, 전문에서 “양독정부는 ‘기본조약(1972. 12.21)’에 따라, 문화적·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상호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화의 보장과 긴장완화를 도모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최종결의⁵⁾를 실행하려는 결의를 다짐하며 문화적 협력을 개선·발전시키기로 기대하면서 이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화협정’은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항을 보면 제 1조는 협력분야 및 주체에 대한 것으로 협력분야는 문화(Kultur)·예술(Kunst)·교육(Bildung)·학문(Wissenschaft) 및 관련분야로, 그리고 협력주체는 정부당국, 기구·단체조직 및 문화계 인사로 되어 있다. 협정당사자인 양독정부는 이 범위 안에서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 2조는 학문·교육분야 및 학교 교육·직업교육·성인교육과 대학·전문학교 교육분야 협력으로 ① 상호경험의 교환, 학술정보교환 및 학술회의 참가를 위한 대표단·학자·전문가 파견, ② 학자들의 강의·연구와 발표내용의 교환, ③ 학생층과 소장학자들의 교류, ④ 교육방법·수단에 관한 전문서적, 교재 및 실습재료 교환 등이다. 제 3조는 예술·영화·음악·문학·어학실습·박물관소장품과 기념물 보호분야 및 관련분야 협력으로 ① 각종 문화예술 대표단, 예술가 및 문화사업단의 교류, ②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쌍무적·다무적 행사시 전문분야 인사 참여, ③ 문화·예술협회간 출판물·정보자료 교환, ④ 각종 대회·회합을 통한 문화·예술업적 교환, ⑤ 영화제작·국내외 주요 영화제 참가, 영화기록·제도 등에 관한 협회·단체조직간의 교류와 협력, ⑥ 박물관제도분야 협력 및 전시회 출품교환, ⑦ 고고학상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기념물 보호협회간의 협력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제 4조는 가능한 문화예술분야의 상업적 공연·전시 등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제 5조는 출판분야 협력으로 ① 상업적 서적의 교환, ② 정보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출판장려, ③ 출판권의 상호위임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제 6조는 도서관분야에 대한 협력으로 ① 국제적 자료교환 확대, ② 독일어권 지역에 대한 목록의 공동작

5) 1975년에 체결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조약의 제 3분과 조항인 “35개 회원국간 인적왕래, 정보·문화·교육분야 협력과 교환”을 바탕으로 서독정부는 동독에 이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성, ③ 협력방법으로는 대금거래의 확대, 사서학 영역의 교환, 비상업적 도서관 출판자료의 교환, 정보교환 및 주요 국제회의의 참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7조는 문서분야에 대한 협력으로 ① 국내 법규에 근거한 공개문서자료의 인출, ② 문서보관당국에 의한 문서복사물의 교환에 대한 규정이다. 제 8조는 주요회의, 협의, 축제, 문화기념행사, 학술회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문화단체·학자·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제 9조는 라디오·텔레비전분야의 협력을, 제 10조는 스포츠분야에 대한 협력을, 제 11조는 청소년·학생교류의 확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 12조는 협정이행을 위한 재정계획 및 2년간의 계획에 대한 합의를, 제 13조는 이 협정이 베를린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제 14조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과 일방이 만기 6개월 이전에 문서통보가 없을 때에는 3년 연장된다는 것을, 제 15조는 협정의 효력과 서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문화교류의 대상과 영역

서독정부는 통일이전부터 '통일정책'(Wiedervereinigungspolitik)과 동의어로서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을 사용함으로써 구라파 평화질서 속의 동서독 통일을 지향하는 한편, 분단고통을 경감하고 독일민족의 문화적·사회적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류증진을 촉진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장벽 서쪽의 '자유'의 향기를 장벽 동쪽으로 내뿜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동독인들의 인권문제까지도 줄기차게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정,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동서독 전체를 포괄하는 '독일정책'의 의미를 명실상부하게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통일독일정부는 통일 후에도 “국제무대에서 통일된 독일의 위상은 정치적 역량과 경제적 능력 이외에 문화국가로서의 역량에 달려 있다”(〈통일조약〉 제 35조 1항)고 규정하면서 변함없이 '문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통일조약'에서 문화분야 관련조항인 제35조를 살펴보면, 첫째, 분단의 연륜이 쌓이고 독일 땅에 2개의 상이한 국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은 독일민족의 통일을 계속 유지해온 하나의 바탕이 되어 왔다. 세계 속의 통일독일의 위상은 정치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국가로서 갖는 의미에 따라서 정립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대외문화정책의 우선적 목표는 동반자적 협력의 원칙에 입각한 문화교류이다. 둘째, 2차대전후 격리된 프로이센시대의 문화재(국립박물관, 도서관, 국가비밀문서 보관서 등)는 베를린에 환원, 집결시킨다. 이때 프로이센 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작

업을 담당한다. 셋째, 문화기금은 문화, 예술 및 예술가 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 3조에 명시된 분야에 투입한다.

이같이 중요한 문화교류의 대상과 영역은 이미 전술한 ‘기본조약’ 제 7조와 ‘문화협정’ 제1조를 보면, 문화·예술·교육·학문 등 4개 영역을 주대상으로 하고, 체육·청소년 언론교류 등은 문화교류와 연결된 부수적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통일추진과정에서의 문화교류 실태와 성과

1) 제 1단계 : 정부지원·민간단체 중심의 문화교류·민족문화 공감대 유지노력

이 시기는 1945년 분단이후부터 1972년 ‘기본조약’체결 이전까지이다. 1945년 동서독 분단이후 양독간의 문화교류는 1960년대 중반의 베를린장벽 설치 등 양독에서 정치적 제약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 제한·차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베를린장벽의 존재는 역설적이지만 동서독 국민으로 하여금 통일의지의 상징으로서 “베를린은 언젠가 반드시 통일독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내면화시키는 통일추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61년 8월 13일 구축되어 1989년 11월 9일에 붕괴될 때까지 28년 2개월 28일간 존속한 이 베를린장벽은 오늘날 도리어 민족사적 기념비화 되었다. 다시 말해서 원한의 벽, 분단의 벽이었으나 역설적으로 독일은 하나라는 통일의지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왔으며, 통일 후에는 장벽 원형을 보존, 세계아마추어 화가들의 그림을 그려넣어서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낙서(“만인을 위한 하늘과 땅 : Himmel und Erden für die Ganges Menschen!,”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 Christ is Coming!—장벽은 반드시 붕괴되고야 말리라는 뜻”)들을 보존하며, 베르나우어 거리의 황폐한 건물 앞에 ‘나무십자가’를 설치하여 서베를린으로 뛰어내리다 죽은 자유인의 넋을 기리고 통일의지를 함양하며, 슈프레강변에는 장벽희생자의 추모비와 십자가를 세웠다. 결국, 베를린장벽 앞에 설치된 초대형 전광판의 “베를린에는 자유가 있다(Berlin Bleibt Frei!). 베를린장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구처럼 통일독일의 수도 대베를린(GroBe Berlin)의 꿈은 언젠가는 실현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독일민족통일의 상징으로 동서독 국민의 마음 속

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분단의 심화과정에서도 베를린장벽의 존재는 통일에 대한 게르만민족의 의지가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휴전선·판문점의 존재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당시 민간차원의 교류는 동서독 정부간의 공식적인 협의나 지원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물론 서독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었음) 소규모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주로 음악과 무대공연 예술분야로서 연극단, 관현악단, 오페라단, 연예단의 교환방문 및 공연과 주요 문화행사(괴테협회총회, 바하축제)⁶⁾참관 등이 그 주종을 이루었다.

2) 제2단계 : 정부주도하 문화교류의 질적, 양적 확대

이 시기는 1972년 ‘기본조약’체결 이후부터 1986년 ‘문화협정’체결 이전까지이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체결을 계기로 정부간의 공식적 ‘문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이래 무려 13년간의 끈질긴 마라톤협상 끝에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상과정에서도 양독간의 다각적 문화교류는 꾸준히 계속되어 질적·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보였다. 이 당시 콜(Kohl)·호네커(Honecker) 정상회담에서 3대협정 ① 과학기술협정, ②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협정, ③ 문화협정이 타결되었다.

초창기의 문화교류내용 이외에도, 학자교류·학술정보교환과 철자법 공동개정노력, 문학인 교류(낭송회) 및 서적판매, 도서관교류,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교환 등 세부적인 분야의 교류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상호 문화인식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특이한 점은 1982년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수학여행형식을 빌어 양측 청소년의 교환방문이 추진되었으며, 동서독 청소년들이 공히 독일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재확인하고 마음의 교통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넓히게 되었다. 동독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조국’ 보다는 ‘독일민족의 마음의 고향’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고, 이는 또한 동독내의 반체제지식인 그룹이 젊은층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과 정치범 매매의 경우에도 예술인, 학자, 청년종교인, 교사

6) 시성 괴테, 악성 베토벤은 동서독 국민 공히 체제·이념을 초월하여 독일민족이 낳은 위대한 인물로 칭송하였다. 그래서 1970년 5월의 동서독 정상회담시 동독의 호네커 수상은 서독의 브란트 수상에게 《괴테전집》을 기념선물로 증정하기도 하였다.

들이 상당수를 기록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독정부는 '정치교육'내용에 동독을 '적(Feind)'이 아닌 '반대자(Gegen-seite)'의 존재로 설정하여 적개심보다는 경계심을 고양하였으며, 서독청소년의 동독방문시 내독관계성이 마련한 설문서를 동독청소년들에게 주어 반응측정한 결과 ① “나는 사회주의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이다.” ② “나는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이다.” ③ “나는 독일민족이다”라는 질문항목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이 제 3항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당시 1982년의 경우 모두 23,200명(서독→동독 22,000명, 동독→서독 1,200명)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특히 서독정부는 방문하는 동독청소년들에게 1인당 하루 20마르크씩 보조금까지 지급하였다.

3) 제 3단계 : 총체적 문화교류의 제도화 및 자유통일 달성에 밑거름 마련

이 시기는 1986년 '문화협정'체결 이후부터 1990년 10월 통독 이전까지이다. 이 당시 '문화협정'체결을 계기로 정부·민간부문의 문화교류는 획기적으로 증가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독일 민족의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공동체를 이룬 '자유통일(Einheit in Freiheit)'의 기본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1988년 10월에서 1989년 3월 기간중 문화교류계획은 정부기관, 각종 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소 등 간에 총 563건(예술 384건, 교육 106건, 학술 73건)으로 방대하고 내용 또한 다양하다.

특히, TV,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문화분야의 파급은 교류라기보다는 주로 서독측이 거의 일방적으로 동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통일 달성 후 실제로 통일추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준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서독은 내독관계성 산하 전독문제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특수카렌다 제작·보급·동서독여행 안내책자, 분야별 독일문화 관련도서와 팸프렛제작 보급, 동독자료의 대폭 공개 및 통일문제 관련 세미나, 토론자료 제공과 경비보조, 장학금지급, 동서독 수학여행시 여비보조 등을 통하여 통일의식의 생활화를 도모하였다. 이 같은 통일의식의 생활화를 위한 사례 중에서 특이한 사례 두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로 통일카렌다의 제작이었다. 이것은 ① 동독의 명승고적 씨리즈(바이마르·포츠담·라이프치히·드레스덴 등 역사적 도시, 동베를린 가로수길의 보리수, 역사적 왕궁들, 후레데릭대왕의 마상의 조각상, 알렉산더광장 등), ② 역사적 인물시리즈(베토벤, 괴테, 루터, 실러 등),

③ 장벽시리즈(베를린장벽, 국경지대, 나무십자가 등) ④ 동독주민의 세대별, 지역별 삶의 시리즈, ⑤ 청소년시리즈(학교생활, 소년단, 군, 체육, 사회조직생활, 여가생활 등), ⑥ 예술·건축물, 공예품시리즈(교회 건축물, 동상, 자기, 박물관 소장품 등 독일특유의 유형소개), ⑦ 대학시리즈(훔볼트, 라이프치히, 칼 맑스 대학 등) 등의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둘째로 교회, 성당간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다. 서독의 교회들은 부활절기간 중 어린이들이 매일 초콜릿 한개씩을 40일간 모아 이를 교회를 통해 동독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였고, 노년층 특히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동독의 노인층을 위한 털실짜기를 수개월동안 하여 교회나 병원측을 통해 동독측에 전달하였다.

4) 주요 교류사례

동서독간의 주요 교류사례를 살펴보면, 첫째로 학술정보·자료의 교환 및 학자·대학생의 교류이다. 이는 학자들의 강의, 연구, 학술내용 및 교육기구·재료 등의 교환을 적극 장려하고 양측 학자들의 회합·회의 파견과는 별도로 대학생, 신진 소장학자를 교환·초청하여 일정기간 연수토록 하였다. 연수생들에게는 서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간은 1~6개월간으로 1988~1989년 중 동독측에서 300명, 서독측에서 110명이 상호교환 연수하였다.

둘째, 《독일어 대사전》공동 편찬계획이다. 1993년 12월까지 양측에서 학자·전문가 공동 참여 하에 《독일어 대사전》을 편찬기로 하였다. 이미 동서독 지역에 각기 회사를 갖고 있는 두덴 출판사는 1991년 9월 서로 달라진 단어 6천여개를 새로 수록, 총 11만5천 단어의 《독일어 대사전》을 출간하였으며, 통독이후 독일어학회 주관으로 ‘이념어’제거를 기본원칙으로한 ‘언어의 민주적 전환에 관한 사전(Wörterbuch der demokratischen Wende)’편찬을 검토중이다.

셋째, 민족·역사교육·민주시민교육의 강화이다. 통일을 향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하나의 독일민족이라는 귀속감을 유지하도록 민족·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통일국가로서의 짧은 역사(1981~1945 ; 75년간)에 비추어 동독을 외국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족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독국민 뿐만 아니라 구라파 및 세계국민들에게도 떳떳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에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되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넷째, 양측 TV등 언론교류의 확대이다. 상호 특정프로그램 교환이용, 부분적 제작지원 협조 또는 공동제작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협력 협정’체결(1987

년) 후 점차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서독지역의 20%가 동독 TV시청이 가능했지만 시청률은 미미한 반면, 서독 TV는 동독지역에서 최고 80%를 웃도는 시청률을 보임으로써 통독기반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향후 사회문화적인 완전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동안의 언론·출판교류 과정은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시 기	내 용	서 독	동 독
조약체결전	보도활동	○동독언론인, 서독내에서 타국언론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보도활동 가능	○서독과 서백림 언론인, 동독내에서 정상적 보도활동 불가능
1956	출판물전시회 개최합의	○동독출판물, 서독각지에서 전시됨.	○서독출판물, ‘라이프찌히’서 전시됨. ○선전공세위해 서독에 일간지 판매기도(실패)
1960	국가호칭문제 시비로 전시회 취소	○서독, 동독출판사의 동독의 정식국호 사용으로 서독내 전시회 취소시킴.	
1964.4	신문교류제의		○‘울부리히트’ 양독간 정치적 차원에서 신문교류 제의
1964.6	신문교환협상	○서독, 동독의 신문 교환협상 요구 거절	
1966.2	신문교환	○서독정부, 대동독 신문교환 입법화 계획 발표	
1966.11	출판물전시		○동독내 서적박람회에서 서독작품 출품제한
1968	동독신문구입	○서독의회, 동독일간지의 자유로운 수입, 배포 허용조치	
1970.1	기자회견		○울부리히트 9년만에 서방측 기자단과 회견
1970	양독간 출판물 교류개선	○67년 이래 동독 ‘베스트셀러’ 서적 출판	○서독의 저명한 작가 작품만을 수입
1971.3	동독간행물에 대한 자유화 조치	○서독의회, 서독인의 불법적인 책자, 자료의 수집, 배포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시킴.	
1971	동독간행물 구매현황	○매일 66종 2,800부의 동독 일간지 구입 ○매월 2,200부의 주간 및 월간간행물 구입	

시 기	내 용	서 독	동 독
1972.1.2	언론인 소관 업무		○동독정부, 서독과 서백림 언론인에 관한 소관업무를 내각위 사무국기관서 외무성 언론인 관계국으로 이전
1973.2	언론인 취재 활동문제협의		○동독정부, 공한교환의 실질 문제협의 위해 개별문제조정 전문가회담 개최
1976.6	동독내 취재 활동완화	○동독의 완화조치로, 76년도 680명의 서독특파원이 취재차 동독을 여행	○동독정부, 서독과 기타국 파견 특파원들의 동독내 취재활동 조건을 대폭 완화 조치시킴. —특파원부인 : 경계선추천서와 언론인 증명서 지급 —특파원자녀 : 특별학생 비자발급 —18세 이상학생 : 언론인 증명서 지급 —언론인, 동독공보실과 직접 접촉 가능
1979	취재활동에 대한 추가규정		○동독정부, 특파원의 여행 가능성과 정보수집에 대한 제한조치
1975.12	특파원추방		○(동독정부) 《슈피겔》지 특파원 동독 언론인 규정 위반혐의로 추방
1976.12	특파원추방	○제 1티브이, 동독주재 신임 특파원 파견	○동독정부, 서독 제1티브이 상주특파원 동독국민과 정부 비방혐의로 추방
1978.1			○동독정부, 신임 《슈피겔》지 특파원의 취재활동 거부
1978.1.10			○《슈피겔》지 동백림지사 폐쇄
1979.4.11	언론인 취재 조건 악화	○서독정부, 정치적 차원에서 동독정부에 강력항의 —동독의 태도변경 위해 노력 —‘헬싱키’언론인 취재활동 조건 개선에 대한 규정 위배라고 비난 —대동독 보복조치 취하지 않음	○동독정부, 언론인 규정에 대한 새로운 시행규칙 발표 —특파원 취재활동 조건악화 —백림외부 취재시 24시간전 신고의무 —모든 회견과 질문의 허가제 ○동독정부, 서독 제 2티브이 특파원에 대해 신규정위반 혐의로 취재허가 취소

시 기	내 용	서 독	동 독
			—서독정부의 항의에 동독의 이익내세워 시정치 않음.
1977. 1.17 2.6	학문, 과학서적 공식전시회	○서독, 동백림에서 최초의 학문과학서적 공식전시회 개최(관객 15만명 내도)	
기본조약 체결 이후- 1983	양독특파원교류현황	○17개사 19명의 특파원 동백림에 파견	○5개사 6명의 특파원을 ‘본’에 파견

다섯째, 학문·기술·환경보호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이다.

여섯째, 각종 문화·예술공연(재즈·팝포함) 상호교환개최, 종교행사, 스포츠 교류류의 확대 등이다. 이전까지의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교류

시 기	내 용	서 독	동 독
1945 1957	민간단체의 상호교류	○연극단, 오케스트라, 예술인의 동독방문 공연	
1958 1960	제한조치		○대서독 문화교류 제한조치
1961 1962	교류두절		○백림봉쇄로 교류두절 ○62년 말 ‘괴테’ 협회총회, ‘바하’축제에 소수의 서독 문화인 참석
1963	교류증가		○‘통행증약정’합의로 문화인 교류 증가
1964	교류활발화	○동독의 국립관현악단, 서독 방문 ○동백림극단, 서독 수개 도시서 공연	○서독문화인, 동독방문 공연 ○서독문화인, 동독행사 참석
1965	교류활발화	○동백림 오페라단, 서독공연	○서독 과학자들, 동독 연차 총회참석 강의
1966 1969	교류제한 및 차단	○동독의 문화협정제의 거부	○교류제한 ○문화교류 반대 선언
1970	교류의 정치적 해석	○국민의 단일성, 유지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정치문화 감수 주장 ○동독 국립극단을 초청	○사회주의 국민문화와 제국주의 문화 상호대립으로 교류곤란 주장

시 기	내 용	서 독	동 독
기본조약 체결이후 —1980	초청공연증가	○동독의 연극과 오케스트라 서독서 정기적 초청공연 ○동백림 실내악단 오페라 단 공연 ○동독의 ‘재즈’단, ‘팝송’ 가수들 서독 순회공연 ○동독의 저명한 희곡작가 작품, 서독서 공연	○서독의 희곡작가 작품, 동 독서 공연
	영화, 텔레비전 협력교류 개선	○103편의 서독 극영 및66편의 영화, 241편의 외화상영권을 동독에 수출	○446편의 극영화, 168편의 영화를 서독에 수출

② 스포츠류

시 기	내 용	서 독	동 독
1945 1957	교류가속화	○서독 ‘독일스포츠연맹’과 동독, ‘독일체조, 스포츠연맹’, 올림 픽경기에 양독 단일 전독일팀구성 참가 결정 (1957년, 1,530회, 35,480명 참가)	
1958 1965	교류단절	○스포츠왕래 중단 결정 ○동독의 공식대표로 여행하 는 체유관계자의 서방여행 불허—동독 참가 불능	○동독 체육인의 서독 대거 탈출로 제한조치 강구 ○스포츠교류를 ‘인신거래’ 라고 비난 ○백림봉쇄로 교류단절
1966 1967	스포츠교류의 정치적 이용 으로 교류부 진	○서백림 스포츠관할 결정 ○동독 올림픽위원회 호칭변 경 ○스포츠왕래의 정치로부터 분리주장, 정상적 관계수 립 제의 양독간 교류회수 감소(1970년 10회)	○스포츠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 ○서독제외에 무성의
1968 1970	교류정상화모색	○서독정부, 72년 ‘뮌헨’올 림픽대회에 동독선수단의 참가 결정 (68년 7.22) —서독 내의 동독 국기계양	○스포츠교류 강화원칙 입장 표명, 이의 실현을 위한 서 독측 보장 요구 (서독 연맹회장 제안에 대 한) —동등권원칙의 인정 및 단 일대표권의 포기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포기

시 기	내 용	서 독	동 독
		—동독 국가 연주 가능 ○‘후랑케’ 내독 관계상, 의회 ‘민족의 지위에 관한 보고’연설에서 양독청소년들의 교류 주장 —‘바이에른’지방의 청소년 야영장 개설 상호 만날 것을 촉구 ○서독정부, ‘동독 국기계양 처벌에 관한 규정’폐지 (70.3.12) ○양독스포츠 연맹회장 회담 서독회장, 활성화 6개항 제안 —스포츠 각 종목 상호 교류 —국제적 훈련지도 —스포츠의 학문적 지식의 교환 —스포츠시설 및 기구제조에 대한 경험 교환 —독일국민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도자간의 지시 및 물자교환 —청소년대회 교대 공동주최	—동독연맹 내부사항에 대한 간섭포기 ○또 다른 이의 조건 —서독 스포츠 기관 명칭의 단일대표권 주장지적 (도이취 국내 올림픽위원회) —서독 스포츠기관들이 동독 스포츠를 의전상의 권위격 하 시도 —동독스포츠인들에 대한 변질종용 (서독측 제안에 동의하지 않음)
1971 1972	올림픽시설 시찰초청	○체육연맹회장, 동독연맹회장에게 뮌헨의 올림픽시설 시찰제의 서한 발송 (71.2)	○동 제의 수락 —체육인사와 기자단 현장시찰 취재
		○‘할레’양독회장 회담 후 동독의 적대감 완화, 동독정부의 서독 탈출기도 체육인에 대한 의심으로 체육분야관계 개선 난망	
1974	체육의정서 체결로 교류확대 모	○체육의정서 협정 —양독 운동선수들의 접촉과 교류전기 제공	○동독연맹회장, 답방 (1977)
		○동 의정서 합의사항 실천 위한 제의 —가능한 한 많은 종목을 위한 스포츠교류의 확대 —국경 변경지방에 있어서	

시 기	내 용	서 독	동 독
		교류의 실시 —청소년 스포츠경기 개최 ○서독연맹회장, 대표단 인 술 동독 공식방문(1975) ○서독연맹, 대동구권스포츠 협약 체결 —대 ‘루마니아’(1975) —대 ‘소련’(1977) ‘불가리아’ —대 ‘폴란드’, ‘헝가리’ (1978) ○스포츠교류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측면의 지원, 재정 지원 제공	
	청소년회합	○서독 청소년, 대동독 접촉 희망 —개별, 그룹미팅, 전문여 행(동독 내에서) ○서독 청소년 연합회 연맹, 동독 연맹과 공식접촉 —양독 대표단 상호방문과 공동세미나 개최 —쿠바에서 개최된 세계청 소년 대학생축제에서 접촉	

5. 통독후의 문화교류와 문제점 평가

1) 문화통합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

문화통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문화적 협력’(Kulturelle Zusammenarbeit)에 두
고, 독일민족사에 빛나는 위대한 인물의 활동무대가 동독지역임을 상기시키는 한
편, 분단으로 인한 생활문화의 차이와 이질감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통일독일에 대
한 문화적 적응력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문화교류를 통해 서독이 동독의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일반주민들에 독일민족사에 찬연한 문화의 유산과 우수성을
심어 줌으로써 민족의 정신적 긍지를 함께 찬양토록 하였다.

통일독일연방의회 개원식에서 최고령의원의 자격으로서 브란트 전 서독수상이

행한 환영사도 동방정책을 입안한 정치가들이 지난 20년간 동방정책(Ostpolitik)을 어떤 입장과 자세로 독일민족사의 찬란한 문화사와 더불어 동독국민들에게 어떻게 상기시켜 왔는가를 짐작케 한다. 특히, 브란트는 동독 6개 주의 서독편입을 환영하면서 각 주의 명예를 괴테와 실러의 튀링겐주, 바하와 라이프니츠의 작센주, 루터와 니체의 작센·안할트주, 로이터와 발라하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먼주, 신켈과 폰타네의 브란덴부르크주, 훔볼트와 헤겔의 베를린주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통독이후 동독지역(신설 5개 주와 베를린지역)의 문화통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정부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다. 당초에는 통일직전에 동독지역의 재건과 동화문제를 총괄하는 특별부서인 '재건성'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부처간 업무중복 및 문화통합이 과도기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 부처내의 전담기구 신설 등 기존조직을 활용하였다. 즉, 문화통합문제는 통독이전의 내독관계성의 인력과 기구를 흡수, 확대 개편하여 내무성이 문화분야의 분단후유증 해소와 문화시설 확충 등 주무부서로 하고, 교육부·문화공보처·부녀청소년부 등이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부처별 업무추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무부(BMI)는 ① 신설동독지역의 행정체제 설립지원 ② 동독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실시 ③ 양독지역 문화·체육분야 통합문제 지원, 교육부(BMBW)는 ① 신설 5개 주의 교육개혁 ② 공산체제 관련학과, 연구기관 폐지 및 종사자 해고, 문화공보처(BPA)는 통일후 방송, 언론의 재편문제, 부녀청소년부(BMFJ)는 ①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동화문제 ② 동서독간 낙태법 조정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문화기금(Kulturfonds)'을 설립, 정부차원의 한시적(1994년 말까지)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지원계획의 내용은 ① 과거 동독지역 내의 문화재 전시장, 연극·오케스트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② 동독사회의 붕괴시 새로이 등장한 자발적인 예술운동·단체지원 ③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있어 경과기간동안의 대책 ④ 국내의 문화·예술유학생 장학계획 ⑤ 주요 산업문화의 보존 등이다.

그 외에 동독인민의회(1990년 2월 5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교환의 자유를 결의한 이래 정치개혁방안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신문들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맞았으며, 동독지역의 모든 방송은 1991년 12월말까지 기존조직을 해체하고 각 지방의 특색에 맞게 재편될 예정이다. 또한 프로이센문화재 보호재단을 창설하여 2차대전 후 각기 다른 국립박물관, 도서관 및 비밀문서 보관소에 분리 소장되었던 프로이센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2) 문제점 분석과 유형별 평가

동서독은 통일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문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및 지속적인 노력과 축적된 문화교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통독 후에 나타난 역기능적 현상으로 인하여 새로운 갈등상이 노정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동서독간의 상호 이념적, 정치제도적 차이와 경제생활의 차이,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 속의 생활의 차이 및 문화적, 사회심리적 간극에서 비롯된 것인 바, 앞으로 통일독일은 '머릿속의 장벽'을 마저 허물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드메지에르 전 동독수상도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달라져 있다", "사는 것이 다르다", "장벽은 붕괴되었으나 이제 남은 문제는 사람들 머리 속의 장벽마저 허물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Spiegel誌, Esist ein anderes Leben, 1990.9.24). 이와 같이 특히 동독체제 청산에 따른 진통과 사회문화적 이질성의 잔존, 동독·교육체계의 개편 및 동독주민의 재교육문제와 하부구조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 노정 등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노정으로 "통일비용만 마련되어 있으면 만사해결"이라는 경제제일주의적 접근방식은 불식되어야 한다는 반성의 자책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재산권 처리대책, 행정, 입법조치, 각분야 전문가 확보문제와 함께 생활문화의 측면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고, 민족문화의 이질감은 교류로 해소되었으나 이질적 체제에서의 삶으로 인한 생활문화의 격차가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베를린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졌으나 45년간의 이질적인 체제로 인한 생활장벽은 상당한 홍역과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남긴 수많은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5~10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아마도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체제로 환골탈태시키는 대역사일 것이다. 그밖에 동독지역의 매연, 쓰레기 청소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상당기간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통독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대략 살펴보았다. 이제는 문화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공산체제는 정신의 황폐화와 사회·문화적 열등화를 초래하였다. 동독지역에서 40년 동안 진행된 공산체제는 자유의 부재와 인간성 경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상태를 황폐화시켰고 사회·문화적 열등화를 촉발함으로써 "통일로 잃은

것은 손목에 묶인 밧줄 뿐이다”라는 동독인들의 주장에서 보듯이 자유만 얻었지 신제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부감도 제기되고 있다. 통독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1991년 7월 22일자 Spiegel誌)에서는 ① 생활의 질과 문화적 차이 및 상호 이질감이 상존함(65~70%) ② 통독에 대한 기대감 감소(50%이상)와 ③ 동독주민은 ‘2등 국민’이라는 열등의식마저 느낀다(86%) ④ 가장 큰 편차를 보인 항목은 동서독간의 동일한 생활조건 창출(서독주민 41%, 동독주민 72%), 국가재정적자 축소(서독주민 51%, 동독주민 29%)로서, 이는 양측의 가치관 기본입장의 차이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또한, 동독지역에서의 독일민족 문화예술은 제자리를 찾고 있으나, 과거 동독측 문화예술인들의 상당수는 폭풍과 같은 생활의 변화를 강요받음으로써 적응에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순수성과 창의성을 회복하기 위한 진통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공산당활동에 깊이 연루되었거나, 수준 낮은 연주자들과 미술가들은 사실상 타의에 의해 감원되고, 그 자리는 서독예술인들로 대체되었다. 그리하여 감원된 사람들은 ‘거리의 악사’와 ‘거리의 화가’로 전락하거나 택시운전사, 공장직공, 관광안내원 등으로 전직하고 있다. 과거 동베를린시에는 4,7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동독문화성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불과 수백명 선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동독의 문화예술인이 조직적으로 양성됨으로써 예술의 미 자체나 민족문화역사, 문화의식 및 재능보다는 사상성, 충성도를 중시하였고 또 불필요한 비문화인들이 상당수 문화예술단체조직에 가맹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였다. 동베를린 라디오방송국의 경우에도 16,000여명의 기존직원 중 공산당원과 비기능직 요원들이 대폭 감원되었으며, 동독의 학술원(회원 24,000명)의 경우에도 통일 이전에는 학술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통일 이후에는 실직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공산주의체제의 정신적 또는 의도적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비판과 의구심 속에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 외에 문화외적인 요인도 더 큰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① 법과 질서를 새롭게 배워 익히고 적응해야하는 문제, ② 슈타시(Stasi, 비밀경찰 85,000명)와 공산첩보원 및 경찰간부 처리문제(600만 명의 서류철 공개문제), ③ 공무원 및 각급 조직요원의 자질검사 후 충원여부 결정문제, ④ 재산권 문제와 주택문제, ⑤ 공산체제 유지에 기여해 온 지식인층의 처리와 직업전환 문제 등이다. 이로 인해 동독에서 핵심계층의 지위를 누렸던 소수 공산엘리트층 중심

으로 한 구공산집단의 '서독식민지화 반대'의 구호도 부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둘째, '의식통합'을 통해 '정신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화폐·경제·사회분야에서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양독지역의 주민들은 의식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머리 속의 장벽'마저 허무는 것이 최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독인들은 57년간에 걸친 나찌와 공산당독재 아래서 주조화되어 권위주의적이고 극도로 통속적이며 정서불안적인 '공산주의자 독일인'으로 전변됨으로써 생활관이나 세계관, 문화의식 등에서 서독의 독일인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들에게는 무력감, 열등감, 좌절감, 불안감, 당혹감, 박탈감, 모멸감이 뒤범벅되는 가운데 '2등 국민', '2등칸 인생' 의식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에는 통일후의 경제·사회적 어려움, 예컨대 구조적인 경제능력적응의 부재, 실업자 급증, 저임금, 물가급등, 서독국민의 오만과 멸시의 눈초리 등도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완전고용'이란 구호와 타율적 노역에 길들여진 동독인들은 시장경제원리의 이윤추구가 적용되는 자본주의 서독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과 괴리감이 상존하며, 동독의 도로·통신·주택·병원·학교 등 열악한 산업하부구조의 노출과 낡은 생산시설, 오염된 환경 역시 '장미빛 통일청사진'에 대한 즉각적 호응을 유보시키거나 경계심을 낳게 한다. 할레대학 헬무트 슈페테 교수가 "동독사회는 서독의 물질적 부와 경쟁체제 앞에 백인의 소방호수 물세례를 처음 받은 인디언과 같은 당혹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체제차이로 인한 생활감각의 격차로 말미암아 통일직후의 1년간 나타난 양측의 갈등양상은 의외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상명하복식 명령경제체제에 길들여진 동독인들에게 창의력, 경쟁력, 능동적 생산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어 갈등과 괴리감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빚게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의 폴크스바겐(Volkswagen)과 동독의 트라비(Trabi)자동차 제조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폴크스바겐은 부속품을 22,000개 중소기업 등에서 부속품별로 납품 받아 조립하여 엄청난 개발비와 우수한 기술로 세계일류의 승용차를 제조하고 있다. 반면에 트라비 자동차는 나사에서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한 생산공장에서 100%제조하며, 세계최하위의 매연과 텅텅 차라는 악명, 개인이 주문 신청하면 10년이나 걸릴 정도로 품귀현상(과거 동독치하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차와 집 신청부터 하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이 심하다. 결국, 두 자동차는 각 경제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일부 서독국민의 냉담한 반응과 불만 및 동독인 멸시풍조도 문제점이다.

횡포운전과 교통사고 급증, 자동차 도난사고, 주차질서, 슈퍼마켓의 식료품 싹쓸이, 불친절(손님이 왕이 아니라 관리, 판매인이 왕인 듯한 구태의연한 사회주의적 태도)에 서독국민의 일부 층에서는 동독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힐난하는 ‘촌뜨기놈들(Ossis!)’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또한 서독내에 풍미하는 조소적 희언의 사례로, 20년 이상 뒤떨어진 동독인의 대등한 대우요구에 “허리띠 졸라매라. 뻥뻥스럽다”, “연방정부는 고물로 처분되는 털털차 트라비(Trabi) 한대 당 1,500마르크를 지불함. 이는 내용물을 포함한다”(‘내용물’은 곧 운전자인 동독인을 지칭한다), “40년간 기던 놈이 갑자기 뿔 수야 없지!”라는 등의 것이 있다.

이는 ‘통일세’ 신설로 인한 서독 국민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콜 수상은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절대 세금인상이 없다고 단언했던 선거공약을 불가피하게 파기함에 따라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면 용기 있는 파약(“가장 뻥뻥스런 식언이자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식언”으로 평가)으로도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넷째, 언어의 통합으로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다. 양독간의 상이한 언어이해로 인한 고충이 현존하는 가운데, 동독의 이념어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화사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동과 상품, 시간, 돈 등에 대한 일상생활 속의 현실감각은 물론, 용어의 의미가 서로 달라 서독주민의 우월감과 동독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은 보다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동독주민들은 ‘인민’, ‘사회주의’ 등 집단의식과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계층화 경향이 두드러져 천편일률적이고 기계적인 공식언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3) 통일독일정부의 과제

동서독의 갑작스러운 통합은 주로 대량실업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현상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는바, 이것이 문화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화적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동서독의 통합은 ‘꿈의 화폐’라고 불리우는 마르크화(DM)의 위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분단이후 지속되어온 양측의 문화교류 등 공동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때, 현재의 갈등과 고통 등 통일후유증은 ‘성공적인 수술 뒤에 마취가 깨어난 아픔’이라고 보고, 양독인은 ‘함께 성장한다’는 의식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문제해결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민족의 함양, 민족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책은 자유민주체제로의 적응력 배양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자립능력의 부여 및 각급 행정·사회조직의 민주적, 자율적 재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정확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이 과제로 제기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1,600만 동독인과 6,000만 서독인의 마음을 묶는 일은 단순한 과거의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독일의 출발점이란 인식 아래 차분한 ‘생활 속의 통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같은 생활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울이는 집중적인 노력사례는 5년에서 10년의 중장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데, 특히 방송매체의 역할과 그 파급효과를 각별히 중시하며, 신규 1,000마르크짜리 지폐에 민족의 상징으로 되어온 카셀시 박물관(동화작가 그림 형제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 형제사진을 수록하는 등 무엇보다 동독인 스스로의 현실진단과 자각을 일깨움으로써 정신적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예상 밖으로 일찍 다가온 독일통일은 미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치고는 있으나 결코 극복 불가능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통일 1주년(1991년 10월 3일)에 즈음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안정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6. 남북한 문화교류 추진에서의 시사점

1) 동서독 문화교류의 특징

동서독 문화교류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동서독은 분단이후 냉전의 악화현상으로 특정기간 동안 문화교류가 제한·차단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서독정부의 용의주도한 양면 교류정책, 즉 비정부 및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 동독정권을 교류의 장으로 인도하고 또 민족문화의 유산변조시도를 극소화시켰다. 이 결과 동서독 국민의 독일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화인식이 지속적으로 형성·유지될 수 있었으며, 명분에 치우친 상호대치나 힘의 소모보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여 서로 실리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특히 서독의 동방정책은 ‘상호접근을 통한 변화’ 추구하고 함께 ‘작은 걸음의 정책’으로서 상대방의 저항과 반발을 극소화시킨 것은 현실적인 정책접근 노력으로 높이 평가 할만 하다.

셋째, 문화교류는 주로 문화행사의 수준에서 문화예술인의 교환방문이나 공연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또한 학술교류 및 청소년교류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양독간 '문화협정' 체결(1986년 5월 6일) 이후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협의와 지원 아래 문화교류가 제도화되고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민족문화의 이질화라는 우려의 요인을 말끔히 씻어냄으로써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내면적 바탕이 되었다.

넷째, 이 같은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는 통독 후에도 새로운 독일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통합 노력으로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 독일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문화적 통합 노력으로는 기존의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 이외에도, ① 분단 문화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문화통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부조직 및 기구개편, ② '문화기금'을 설치하여 주로 동독지역의 문화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확대, ③ 언론기관 재편, 박물관, 도서관, 문서보관소의 프로이센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 보호재단 설립 등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45년 공산독재체제의 상흔으로 인한 동독지역 주민들의 무력감과 불안감 및 열등의식의 상존 그리고 황폐화된 의식구조와 정치이념으로 오염된 문화행태 등 실질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통일후유증이 발병함으로써 조기통일로 인한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독일사회는 통일의 기쁨과 함께 진통과 시련의 아픔도 동시에 겪고 있다.

다섯째,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내무성을 중심으로 교육성, 부녀청소년성, 문화공보처 등 유관부처와 민간문화 단체들이 공동노력을 기울이면서 기존의 문화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한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치교육, 시민교육을 강화하면서 의식통합(BewuBtseinunion)에 역점을 두는 장기적 통합계획도 시행하고 있다.

1945년 패전으로 폐허가 된 중구라파에 라인강의 경제기적과 정치기적을 창조하여 선진복지 민주국가를 세운 독일민족을 상기한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엘베강의 경제기적과 정치기적을 기대해 볼만하다.

2) 남북한 문화교류 추진에 대한 교훈요소

동서독의 통일은 유사한 분단구조를 유지하는 한반도에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문화교류 측면에서 나타나는 교훈을 정리하였다.

첫째, 책임 있는 정부당국간에 문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민간차원의 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 것이 주효하였다.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민간교류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정부간 문화협정 체결과 상대측이 회피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할 주요 활력소가 될 것이다.

둘째, 상대측이 체제의 약점으로 부각되거나 명분에 손상을 입는 것으로 우려하는 민감한 분야는 뒤로 미루고 쌍방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야(음악, 미술, 전통 문학, 어학 등)와 상대측이 호응함으로써 당장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문화교류에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서독정부는 공개적인 제안이나 교류원칙 발표 등에 있어 선전효과 보다는 장기계획 차원에서 개인, 단체(대학 및 종교단체 포함),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등 모든 가용통로를 소리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전면 가동하는 '전방위 교류' 전략과 '종이에 물 스며들기식 접근'을 구사함으로써 상대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통일과정에서 이미 장악했다는 점이다.

넷째, 일종의 데이터뱅크식 교류협력 종합프로그램을 정부(문화공보처, 내독관 계성 협조)가 주도면밀하게 작성,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전략의 실효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장기적 안목에서 청소년 교류실현에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결국 청소년 시 접촉했던 장본인들이 양독정치, 경제, 사회 각계의 요소 요소에 진출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족물화의 공감대를 형성·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동서독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사업으로써 서독정부는 '최소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특수아이디어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는 점이다.

일곱째, 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 지원하여 통일과정과 통일 후 과도기간 중에 나타난 의외성 문제에도 기민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기관내 전문가그룹('총론적' 전문가가 아닌 '각론적' 전문가), 대학 및 민간기관 연구소 전문가그룹, 주요정당의 재단(예 ; 아테나워재단, 한스자이델재단, 훔볼트재단 등)에 속한 전문가그룹 등에 대한 지원·양성이었다.

여덟째, 그러나 이질적인 체제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나타난 갈등요인을 과소 평가함으로써 통일 후 동독인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시민생활에 적응시킬 수 있는 세부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했다는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예를 들어, 동독문화 예술인의 성분분류 기준과 등급별 처리기준 설정문제나 일반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이질과 및 갈등요인 실태분석과 계층별·세대별 극복방안

등이다.

3) 남북문화교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당면과제

첫째, 동서독 상황과 남북한 상황의 차이를 감안한 문화교류 정책의 추진원칙과 전략수립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미 발표한 문화교류 5개 원칙은 실행가능성을 정밀진단,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정부 지원 하의 개인간, 민간단체간, 해외동포단체간 또는 제 3국 참여하의 우회접촉 교류전략의 단계별 지침의 수립이다. 그리고 문화분야 교류협력 전담반의 상설화 문제를 검토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하고, ‘을지연습’시 남북한 문화교류 시행계획(안)을 검토 보완해야 한다.

둘째, 남북문화위원회 구성방안을 포함한 ‘남북한 문화협정’안을 작성 및 주요 조항에 따르는 추가의정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북한당국의 민족문화 이질화정책의 전개과정과 변화진단 및 북한주민의 생활문화면의 이질화현상을 심층분석 연구하여 통일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도출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북한 문화예술인의 성분분류기준과 대상별 세부처리 방안 및 일반주민의 자유민주체제 적응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단기적 남북 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실적의 발전책 및 전향적 조치를 포함하며, 민족문화보존 분야·동질성유지 분야(예 ; 고고학, 과학 분야)는 우선적 교류협력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II. 향토축제의 특장화와 개선방향 모색

머리말	/45
금산인삼제	/46
백제문화제	/53
저산문화제	/60
죽서문화제	/65
처용문화제	/72
한라문화제	/78
맷음말	/85

향토축제의 특장화와 개선방향의 모색

이 창 경*

1. 머리말

축제는 일반적으로 집단성, 현장성, 신명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참여자들의 행위와 신명이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서 축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창조적인 의식이 되어야하며, 신명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축제는 사회를 통합하여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유지해 주게 되며, 문화의 붕괴를 막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축제는 주기적으로 반복을 거듭하면서 참여자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향토 축제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족국가 시대의 제천의식에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형태와 의미로 향토축제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와서였다. 이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분업화와 개인화에서 오는 분열을 불식하고 화합의 장으로 변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 연중 행해지는 향토축제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종합향토축제, 역사적·제의적 축제, 민속놀이 축제, 예술제, 경연대회중심축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수는 3백 여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간단체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 민속행사가 현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변질되고, 지역민의 호응도 미약한 편이다. 또한 향토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역사에 바탕을 둔 특성 있는 행사가 되지 못하고, 지역적·시기적으로 편중된 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증을 통한 축제의 원형을 재현,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나, 지역의 역사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현대에 걸맞는 축제의 양식과 내용을 개발하여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전통문화를 창달하고, 원초적 생명력을 재충전하는 건전한 향토축제의 방향모색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 신구전문대 교수

이에 따라 문화부에서는 향토축제를 총 점검, 지역 특수성에 바탕을 둔 향토축제로 개선 발전시켜, 지역민의 대동단결을 도모하고 문화향수와 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향토축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91년 4월 민속학자·기획연출가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향토축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자문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전국향토축제 가운데서 금산인삼제, 백제문화제, 저산문화제, 죽서문화제, 처용문화제, 한라문화제 등 역사성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비교적 특색이 두드러진 여섯 축제를 선정하여 개선발전을 위한 현지조사 및 현지 관계인들과의 회의 등을 거친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향토축제자문위원은 김문무(전 문예진흥원 진흥 2국장)·김재형(기획전문가)·신찬균(국민일보 수석논설위원)·예용해(문화재위원)·이보형(문화재전문위원)·이종인(문화발전연구소장)·이중환(서울신문 논설위원)·임동권(문화재위원)·장주근(문화재위원) 등이다. 지역관계자는 신정교(금산문화원장)·전동호(인삼협동조합장)·이관용(공주문화원장)·임병교(부여문화원장)·한상각(공주대 교수)·노금래(서천문화원장)·노홍래(서천서면중 교장)·김영준(삼척문화원장)·김일기(삼척산업대 교수)·박재문(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진인택(삼척향토문화연구소장)·김석보(울산향토사연구회장)·박영출(울산문화원장)·이유수(울산향토사연구소장)·신상범(예총제주지회장)·양창보(제주대 교수)·현용준(제주대 교수) 등이다.

2. 금산인삼제

1) 금산의 문화 환경

가. 인문지리적 환경

인삼재배로 널리 알려진 금산군은 충청남도의 동남단에 위치하고있다. 충북, 전북 등 2도의 7개 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대전시와 접하고 있다. 소백산맥과 노령 산맥이 동북쪽에서 갈려나가고 있어, 이들 산계와 高原狀盆地로 나뉜다.

군내에 대성산(705m)·서대산(904m)·대둔산(877m)·진악산 등이 있어 도내에서 가장 큰 산악군을 이룬다. 남이면 건천리에서 발원한 봉황천이 제원면 천내리에서 금강과 합류하고 있다. 지질이 대체적으로 변성퇴적암지역에 속하여 인삼재

배에 적합한 사질양토가 풍부한 편이다.

1940년 금산면이 금산읍으로 승격되어 금산읍과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일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등 1개 읍과 9개 면을 행정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군청소재지는 금산읍 상리이다. 1963년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 면적 573.69km², 인구 89,549명, 특산물인 인삼의 재배는 재배면적 6,755,800m²에 경작인원은 7,229명에 이르고 있다(88년 현재). 역사적으로 군사의 요충지로 신라와 백제가 자주 이곳에서 충돌하였으며, 후삼국시대에는 왕건의 군사와 후백제가 싸운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중봉 조헌선생과 충장 영규대사가 이끄는 칠백의사가 순국한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다.

대전 34.8km, 공주 45.2km, 홍성 58.6km의 거리에 인근 도시가 위치한다.

나. 문화유산

1) 문화유적

사적 1, 천연기념물 2 등 3종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군내에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3, 문화재 자료 297종 등 3백여 종이 있다.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는 身安寺와 龍虎石이다. 신안사는 제원면 신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찰로, 신라 26대 진평왕 5년(583)에 무염선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한때는 3천여 명의 학승들이 수학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많은 건축물이 6·25때 소실되고 현재는 중건한 대광전(도 유형문화재 제 3호), 극락전, 요묵당 등이 남아 있다.

龍虎石(도 유형문화재 제 4호)은 용과 호랑이를 화강암에 새긴 조각물인데, 제원면 내천리 앞강변에 2백 여 미터를 사이로 하고 서 있다. 고려 공민왕 때 왕이 자신의 능소로 이 지역을 정하고 왕릉에 필요한 여러 석물을 조각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 趙憲선생과 靈圭大師가 칠백의병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왜적과 결전하다가 모두 장렬하게 순절한 금성면 의총리에 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603년에 重奉趙憲先生一軍殉義碑를 세웠고, 1647년에는 徒容祠를 세워 이곳에서 제향을 받들게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막다가 장렬히 전사한 權宗의 순절을 기리기 위하여 1874년 순절지인 제원면 금강 상류의 기슭에 세운 權忠愍公殉節墟碑(도 문화재자료 24호)를 비롯하여, 兵僧壯碑(1893년 건립, 보석사 입구), 梨峙大捷碑, 高敬命先生殉節碑(효종 27년 건립, 1964년 재건) 등의 비가 있다.

錦山鄕校(금산읍 상리 비호산, 도문화재자료 제 14호), 珍山鄕校(진산면 교촌리 도문화재자료 제 15호) 등의 향교와 金穀書院(금성면 상가리), 山泉齋書院(남일면 음대리), 石浦齋書院(부리면 창평리), 星谷書院(남이면 성곡리) 등의 서원터와 비가 남아 있다.

2) 전통문화예술

금산지역의 민속놀이로는 좌도농악과 물페기 들노래가 발굴 전승되고 있다.

① 좌도농악

참여자의 복장이 비교적 간소하고 전립을 쓰며, 가락과 동작이 대단히 빠른 데 특징이 있다. 1, 2차 가락이 기본이며 윗놀이에 치중하나 밑놀이의 굿가락은 담백하다. 근래에 와서 남사당패의 유랑연예와 우도농악의 경향으로 좌도농악의 형태가 많이 변화를 가져와 이를 복원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김봉기·전석봉 등이 계승하고 있다. 1982년 제 2회 금산인삼제 때 재현되었다.

② 물페기 들노래

논농사시의 농요로 모심기부터 타작까지의 논농사 전과정을 노래하는 이 지방의 전래 민요이다. 음색이 처연하면서도 유장하고 힘찬 가락이 특징이다. 모노래 마당, 논매는 마당, 잘개질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산문화원에서 평촌리 물페기 마을 길기천, 양승환씨의 구술을 토대로 복원하여 11회 금산인삼제에서 시연하였고, 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91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3) 문화예술단체 및 연고문예인

금산지역 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연고 문화예술인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단체

문학 : 시림문학동인회, 좌도문학회 등

미술 : 금동인, 금산미술교사협의회, 금산서도회 등

연극 : 인삼극회 등

기타 : 금산문화원, 좌도농악보존회(금산읍 중도리), 금산향토사연구회, 금산들소리 연구회, 금산풍물연구회 등

② 연고예술인

한상수(민속학), 박광서(소설), 진웅기(수필), 고제열(사진), 하대진(한국화), 현천행(연기), 양은하(한국무용)

4) 문화시설

시설명	위 치	규 모
금산문화원	금산읍 상리 176-43	전시실 22평, 도서실 17평
금산향교	금산읍 상리 4	강당 25평
진산향교	진산면 교촌리	강당 18평

2) 금산인삼제의 현황

가. 연 혁

금산지방에서는 예로부터 인삼의 새 싹이 돌아날 무렵 인삼농사가 풍요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삼장제를 농가 개별적으로 가져오고 있었는데, 금산군에서는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군의 축제로 발전시키며 인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이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발, 전승하기 위하여 1981년 금산인삼선양위원회주관, 인삼제집행위원회 주최로 제 1회 금산인삼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10월 초순에 여러 종목의 향토축제를 개최하여 91년 제11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11회를 개최하는 동안 각 회의 변모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횟수	개최기간	주 관 처	특 징
1(81)	10.1 10.2	금산인삼제 추진위원회	개삼터 발견
2(82)	10.6 10.7	인삼선양위원회	좌도농악발굴 시연
3(83)	10.2 10.4		인삼탐, 개삼각, 송의정 건립
4(84)	10.6 10.7		개삼각에서 강신례, 본제, 사신례 거행. 화합체육대회, 주부 백일장 추가
5(85)	10.7 10.8	금산인삼 선양위원회	체육대회, 인삼생산경진대회, 농악대회, 불꽃놀이 등 생략
6(86)	9.26 9.27	금산인삼제 집행위원회	5회 때 생략되었던 행사 확대 부활
7(87)	9.26 9.27		널뛰기, 그네뛰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추가. 헬기로 진악산에 인삼씨 살포
8(88)	10.11 10.12		총각대방놀이 발굴시연
9(89)	10.6 10.7		개삼각 이축, 인삼전시판매코너 운영
10(90)	10.11 10.12		개삼각 주변 확장, 강처사고택 복원, 인삼 식품 세미나 개최
11(91)	10.1 10.2		

나. 행사개요

금년 10월 1일부터 이틀간에 진행된 금산인삼제의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간 : 91년 10월 1일 10월 2일
- 2) 장소 : 개삼각, 칠백의총, 금산여고, 금산여중, 중앙국교, 문화원 등
- 3) 주최 : 금산인삼선양위원회, 금산인삼제집행위원회
- 4) 행사내용 : 10월 1일 군민화합의 잔치, 2일의 풍년 축하잔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행사 내용의 뚜렷한 구분은 없으며, 성격상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 ① 인삼관련 행사 : 인삼제전, 인삼식품세미나, 인삼생산경진대회(인삼깎기, 미듬새끼꼬기, 인삼덧발엮기, 인삼발짜기), 인삼제품 전시 및 판매
- ② 체육행사 : 향우회배구대회, 전국궁도대회, 씨름대회
- ③ 민속행사 : 그네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금산농악 시연, 물폐기 들노래 시연, 농악경연
- ④ 문화행사 : 주부백일장, 미술대회, 서도대회, 향토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 서예전, 시화전
- ⑤ 기타 : 불꽃놀이, 군민위안잔치, 개막식, 가장행렬, KBS전국노래자랑, 헬기 축하비행, 고적대연주, 고공낙하 및 특공무술

위와 같이 양일간 치뤄지는 전체 행사는 20여 종에 이른다. 이중 이 지역 특산물인 인삼관련행사가 6종에 이르고 있는데, 전체 행사의 서막을 여는 인삼제전이 개삼터(남이면 성곡리)인 개삼각에서 지방 유지들이 참석하여 개최된다. 또 금산인삼의 홍보를 담당하게 될 인삼아가씨 선발이 있으며, 인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만들어내는 발엮기, 인삼깎기 등의 경연이 있다. 특징적 행사로 출향인사들이 참여하는 향우배구대회가 있으며, 민속놀이로 금산농악과 새로 발굴한 물폐기노래의 시연이 있다.

다. 현지조사 결과 분석

1)주최 및 주관처

금산인삼선양위원회(위원장 : 금산군수), 금산인삼제집행위원회(위원장 : 금산문화원장)이 주최하였다.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 행사 추진과 진행에서 무리가 없었고, 각 관공서의 협력체계나, 진행요원 및 진행본부의 행사진행능력이 양호하다.

2) 행사구성 및 내용

- ① 인삼생산경진대회 등의 특징적 행사의 내용이 돋보인다.
- ② 가장행렬, 민속경기, 백일장, 서도회 등은 다른 축제와 큰 차이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특산물인 인삼을 주제로 하는 인삼제 행사의 특성이 부족하다. 규모나 진행방식에서 구성적 노력은 돋보이고 있다.
- ③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장별, 면 단위별, 자연부락별로 협동심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종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주민의 참여도 및 지역여건

- ① 주민의 참여도는 높으나 주로 야시의 음식점에 올리고 있으며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부분은 노인과 부녀자층이어서 축제 본래 의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 ②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개최의 여건과 축제분위기 조성 등의 여건이 두드러 진다.

4) 문제점

- ① '93EXPO 전후한 축제의 국제화 기반이 취약하다.
- ② 전 주민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총괄적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 ③ 학술행사인 인삼식품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강사의 강연성격으로 일관하였고 그 내용의 면에 있어서도 빈약하였다.
- ④ 인삼씨뿌리기 등의 행사는 주민에게 행사의의를 적극 홍보하여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 ⑤ 인삼에 관한 배경민속의 정립이 부족하다.
- ⑥ 인삼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참여가 미흡하다.
- ⑦ 국제화를 위한 기본적 여건, 즉 상설볼거리, 포장재의 세련화, 홍보자료의 세련화가 미흡하다.
- ⑧ 외부인의 유치를 위한 지역 숙박여건이 미흡하며, 주변 문화관광단지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3) 금산인삼제의 개선방향

가. 주최 및 주관처

현재 금산인삼선양위원회와 인삼제전집행위원회 에서 공동주최하고 있다. 행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역의 어느 특정단체(문화원, 총예 등)가 이를 전담하되, 해당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행집위원회가 조직되더라도, 몇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고, 지역민의 여론조사를 통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민참여와 특장화

- 1) 인삼제전을 밤에 지내도록 하여 개막식과 연결시키고, 여기에 참여하였던 주민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읍내를 행진한 후 강강수월래나, 대동놀이, 줄다리기 등을 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2) 축제 기간을 공휴일이나 인삼장날과 맞추어 지역민의 참여 기회폭을 넓힌다.
- 3) 상설 볼거리를 개발한다. 현재 국제인삼시장에 개설되어 있는 인삼제품전시장과 인삼경작 과정에 대한 전시물 및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삼전본, 중국인삼과의 비교전시물 등을 종합 전시할 공간을 확보한다.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홍보전시관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그 명칭을 ‘인삼자료관’으로 하고 인삼관련 도서 및 학술논문, 슬라이드, 영상자료, 인삼경작과정, 효능에 관한 과학적 분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상설 볼거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전시 내용물 및 디스플레이 등에 과감한 연구를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4) 인삼문화 전반을 부각시킬 수 있는 행사가 있어야 한다. 학술 세미나로 식품관계 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으나, 현물 판매에만 주력하고 있는 인상이다. 학술행사를 통하여 인삼의 역사, 인삼에 관한 민속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다.
- 5) 개살터의 강신례행사에 상징성을 부여, 이를 바탕으로 인삼축제를 전개해야 한다.

다. 축제의 관광상품화

금산인삼의 국제화가 인삼제의 국제화이므로 이를 연계하는 홍보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 1) 인삼제품의 원산지 표기로 신뢰성을 제고한다.
- 2) 포장 케이스 및 포장재의 현대화를 통한 국제감각을 획득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포장센터나 산업 디자인학과 설치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3) 안내 팸플릿의 디자인 개선으로(영문판) 홍보의 세련성을 획득한다.
- 4) 외국의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 그 지역의 예술팀을 초청하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5) 중국 길림성 교포를 초청하여 인삼재배의 기술지도를 하고 함께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본다.

라. 인삼주간 설정 검토

- 1) 축제기간(4 5일 정도)을 인삼주간으로 설정, 주한 외국인·국내외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때에 인삼관련 행사 및 금산 전통민속놀이를 집중 개최한다.
- 2) 기업의 문화지원을 대폭 신장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11회 총 행사 규모가 1억 6천만원인데 이중 10%인 천 5백만원 정도를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일화, 두산)의 지원이 있었다. 이를 대폭 신장하여 금산인삼제의 국제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축제기간을 고향 찾기 기간으로 정해서 동창회, 향우회, 화수회를 이 기간에 치루도록 권장이 필요하다.
- 4) 출향문화예술인·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백제문화제

1) 부여 , 공 주의 문화 환경

가. 인문지리적 환경

□ 부 여

찬란한 백제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의 고도 부여는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하여 동쪽은 논산, 서쪽은 서천, 남쪽으로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북도 익산과 접하

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공주·청양과 접하고 있다. 차령산맥의 남쪽 끝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높은 산이 없고 백마강 연안에는 구룡평야 등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행정구역은 1960년 읍으로 승격한 부여읍을 비롯하여 규암, 은산, 외산, 내산, 구룡, 흥산, 옥산, 남,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적성, 초촌 등 15개면 191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3만여 가구 123,567명이다(88년 현재). 면적은 667,44km²로 충청남도 전면적의 7.6%에 해당한다. 타 지역과의 거리는 대전 60.9km, 천안 77.7km, 공주 32.5km, 논산 19.6km 등이다.

□ 공 주

충청남도 중앙부처 위치하는 백제의 고도로 동쪽은 공주군 장기면, 서쪽은 우성면 및 이인면, 남쪽은 계룡면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다.

1956년 읍에서 시로 승격하였으며, 23개 동이 편입되어 있다. 인구 5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나. 문화유산

1) 문화유적

□ 부 여

부여지방의 문화재는 국보1, 보물9, 사적 및 명승1, 사적13, 천연기념물1, 중요민속자료3, 무형문화재1 등 국가 지정문화재가 29종이며,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16, 기념물16, 무형문화재1, 민속자료1, 문화재 자료36종 등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림사지 5층 석탑(7세기초, 국보 9호), 장하리 3층 석탑(고려시대, 보물 제 84호), 무량사 5층 석탑(고려시대, 보물 제 185호), 세탑리 5층 석탑(고려시대, 지방문화재 제21호, 초촌면 세탑리), 흥양리 5층 석탑(고려시대, 지방문화재 제29호) 등 탑이 있으며 불상으로는 정림사지 석부좌상(고려시대, 보물 제8호. 정림사지내 북쪽에 위치),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고려시대, 보물 제217호, 임천면 구교리), 금성산 석불좌상(고려시대, 지방문화재 제23호, 동남리 조왕사) 등이 있다. 碑로는 당유인원기공비(백제시대, 보물 제21호, 부여박물관), 보광사 중창비(고려시대, 보물 제 107호, 부여박물관), 만덕교비(조선시대, 지방문화재 제3호, 북촌리 흥산국민학교 앞) 등이 있다.

건축물로는 무량사 극락전(고려시대, 보물 제356호), 대재각(규암면 진변리 부소산), 水北亭(규암면 규암리 강변), 迎日樓(부소산) 등이 있다.

□ 공 주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후의 찬란한 백제문화의 면모를 보여주는 많은 유물이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의 무령왕릉에서 발굴되었다.

백제의 도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산성(사적 제12호) 내에는 쌍수정사적비, 명국삼장비, 공복루 등 유적이 있다.

2) 전통문화예술

□부 여

① 은산별신제 :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군대의 의식이 가미된 장군제적 성격을 지닌 이 지방 특유의 별신제이다. 꽃받기에서 시작하여 장승 세우기까지의 행사가 진행되는데 수만의 군중이 운집하였던 대규모 행사였다. 47년 발굴 재현. 윤달이 있는 해의 2월 중순이나 하순에 택일하여 일주일간 행해지고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 (7회, 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장려상, 대통령상)

② 홍산보부상놀이 : 홍산면 교원리 일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대대로 전해져오는 보부상의 領位印 등 유품을 놓고 전국의 보부상이 모여 公文祭라는 총회를 가졌는데, 이때 행해지는 놀이이다. 65년 발굴 재현, 제20회 전국민속놀이경연대회 문공부장관상 수상. 유품은 중요민속자료 30호로 지정.

③ 산유화가 : 세도면 일대에서 불리워지는 민요. 백제시대부터 유포·전승되어 왔다고 한다. 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76년) 문공부장관상 수상. 도무형문화재 4호.

□ 공 주

① 머슴호미씻기 : 매년 백중일에 농사일을 끝내고 머슴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펼치는 민속놀이이다. 일제초기까지 전승되다가 중단된 것을 71년 재현하여 77년 백제문화제에서 시연하였다.

② 공주장승제 : 장승의 성적 결합으로 농산물의 증식이 이루어져 세화연풍할 것을 믿고, 4백여 년 전부터 행해 오던 민속놀이로 매년 정월보름에 행함. '84년 전국민속놀이 경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3) 문화예술단체 및 연고문예인

부여지 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연고문예인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단체

문학 : 백제문학회, 백제시문학회 등

미술 : 부여군미술교사회, 부여사진회, 아사달회, 예사회 등

음악 공연예술 : 국악협회부여지부, 한가락회, 사비극회 등

기타 : 부여문화원, 은산별신제보존회, 산유화가보존회, 상무사, 백제사적연구회

연정국악원, 부여국악원 등

② 고문예인

김용철(소설), 김숙현(회곡), 김철성(한국화), 박계홍(민속학), 신덕선(서예), 오태학(한국화), 윤우(연기), 이광복(소설), 이용휘(한국화), 이인영(양화), 임옥상(양화), 전래식(한국화), 정하경(시조), 조남익(시) 등

□ 공 주

① 문화예술단체

문학 : 계룡문학회, 금강문학회, 석초문학회, 새여울동인회, 이은수요문학회, 한누리문학회 등

미술 : 미협공주지부, 금강미회, 한갈서양화회, 일수회, 창공회, 사진협회공주지부, 공주사우회, 백제사우회, 사미회, 공주사대 focus 등

음악 · 공연예술 : 공주보리수합창단, 공주어머니합창단, 금향회, 수요음악회, 극담합성, 포르미에르발레단, 학무회 등

기타 : 공주문화원, 공주장승제보존회, 백제문화연구소 등

② 연고문예인

심우성(민속학), 김용옥(시), 김홍신(소설), 박일동(회곡), 유근주(시), 윤석산(시), 이용호(시조), 이현석(문학평론), 임강빈(시), 임성숙(시), 임성조(시), 최원규(시), 이익제(기악), 강태성(조각), 김교만(공예), 김재배(한국화), 김재석(공예), 김종현(사진), 최종걸(한국화), 이승규(연출), 이승옥(연기), 이인영(연기), 최청자(현대무용) 등

4) 문화시설

□ 부 여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부여군민회관	부여읍 동남리	강당 106평, 전시실 17평
부여문화원	부여읍 동남리	강당 80평, 전시실 16평, 시청각실 12평
부여국악원	부여읍 관북리	공연장 13평, 연습실 44평
부여향교	부여읍 동남리	강당 45평
임천향교	임천면 군사리	강당 16평
석성향교	석성면 식성리	강당 25평
홍산향교	홍산면 교원리	강당 20평
천일민속관	부여읍 구교리	
실내체육관		면적 1,916km ²

□ 공 주

시 설 명	위 치	규 모
공주문예회관	웅진동 280	강당 850석
공주문화원	반죽동 184	강당 40평, 전시실 40평
공주향교	교동 211	강당 30평

2) 백 제 문 화 제 의 현 황

가. 연 혁

올해 37회를 개최한 백제문화제는 민간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1955년 백제대제로 출발하였다. 그후 명칭을 백제문화제로 개칭하였고,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조직하여 주최하게 되었다. 12회부터는 62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에서도 동시에 개최하였으며, 21회부터 21회까지는 대전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부여와 공주에서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나. 행사개요('91년)

공주에서 개최된 '91년 제37회 백제문화제의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주최 : 공주백제문화선양위원회
- 2) 기간 : 91년 10월 18일 ~ 10월 21일
- 3) 장소 : 공주문예회관 및 시내일원
- 4) 행사내용

무령왕릉발굴 20주년을 기념하여 거행된 제37회 백제문화제는 본제와 전야제로 크게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야제는 성화점화집전식과 전국궁도대회, 도내 경서학 생백일장, 시군대항 농악경연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성화집전 축제의 밤 행사로 시내 일원에 청사초롱을 밝히고, 화관무, 강강수월래군무, 장고춤, 갈춤, 농악놀이 등 민속행사를 거행하였다.

본제는 3일간 계속되는데, 무령왕릉에서 백제중흥 사왕추모제를 거행하고 공산성에서 서막식을 개최하였다. 이외 3일간 치루어진 행사는 다음과 같다.

- ① 민속놀이 : 씨름 등
- ② 불전축제 : 불꽃놀이, 관등선풍우기, 탑돌이, 승무

- ③ 문화축제 : 토스카공연, 관현악단연주회, 문학의 밤, 향토출신작가 서화전 및 음악미전, 도내 여성백일장, 국악향연의 밤, 도내 한시백일장, 학생예술제, 음악제, 전국시조경창대회, 백제사극의 밤
- ④ 학술행사 : 백제문화학술대강연회
- ⑤ 기타 : 창작가요의 밤, 백제문화가장행렬, 축하비행

다. 현지조사 결과 분석

1) 주최 및 주관처

- ① 주최는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다. 위원장이 공주시장인 까닭에 행정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 ② 주관처는 공주문화원이다. 축제가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진행이 조직적이고 짜임새가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하겠다.

2)행사구성 및 내용

- ① 백제 고도를 상징하는 행사가 있기는 하나, 민속놀이 분야에서는 타문화제와 동일한 일반 행사였다.
- ② 천안의 관현악단, 공주의 교향악단이 상호 방문하여 가지는 연주회는 돋보이는 행사였다.
- ③ 백제를 소재로 한 창작가요제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특장행사로 발전할 만한 행사이다.
- ④ 많은 행사를 일시에 개최하고 있어 축제의 의미가 축소될 소지가 있다.

3)주민의 참여도 및 지역여건

- ① 오랜 역사로(37회) 주민의 축제로 정착되어가고 있기는 하나, 많은 사람이 관중에 머물러 있다.
- ② 백제의 문화유적, 또는 전통민속, 설화의 현장 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축제와 연계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문화관광지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문제점

- ①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번갈아 가며 개최되는 까닭에, 한쪽에서는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으며, 축제의 성격도 희석될 수 있다.
- ② 불전의 밤 행사와 타 종교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하다.
- ③ 학생위주의 행사가 많고, 많은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부족하다.

- ④ 축제기간(4일)에 비하여 행사내용이 단조롭다.
- ⑤ 백제문화가장행렬 등의 행사는 고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백제문화제의 개선 방향

가. 주최 및 개최장소

- 1) 현재 백제문화선양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까닭에 진행이 조직적이기는 하나 점차 예총이나 문화원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담당하고 행정기관은 재정, 행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2) 현행 격년제를 개선하여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마라톤 등 두 지역을 연결하는 행사가 있어야만 축제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토요일에 전야제를 행하고, 다음날부터 본제를 개최하는 것이 주민의 참여면에 있어서 효과일 것이다.

나. 축제의 특장화

- 1) 백제문화를 상징하는 행사를 보완하고, 학생의 참여에서 지역민의 참여로 유도하는 방안, 또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축제를 문화상품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백제병영을 설치하여 계백·성충 등의 충절을 행사 검토
- 3) 웅진으로의 천도사실을 고려하여 백마강 뗏목놀이 검토
- 4) 백마강과 삼천궁녀의 사실을 토대로한 여성참여 프로그램 개발
- 5) 백제문화연구회 등의 백제관련 연구단체와의 협조체제 모색

다. 기 타

- 1) 축제가 열리는 날을 고향 찾는 날로 정하고 타지역에 나가 있는 주민을 불러들여 축제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모색
- 2) 고란초를 각종 기념품의 디자인 및 행사의 엠블렘으로 사용
- 3) 관등선 띄우기에는 승려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4) 사왕추모제의 ‘國樂斑席’은 ‘國樂土席’으로 고쳐야 할 것이며, 가장행렬에서 의상과 모자에 금박을 하고, 文周王은 복건을 씌워야 함. 또 ‘16官等’ ‘24대 성왕’ 등의 표기는 한자로 표기해야 하며, 강강수월래는 강강술래로 하여야 한다.

4. 저산문화제

1) 서천의 문화환경

가. 인문지리적 환경

서천은 충남의 서남부에 위치한 곡창지대로 미곡의 집산지이다. 동쪽은 부여 서쪽은 황해, 남쪽은 금강을 경계로 전라북도 군산시·옥구군, 북쪽은 보령군과 인접하고 있다. 보령군과 부여군의 경계에 장태산(367m)·원진산(217m) 등의 산이 있고 원진산에서 발원한 도마천이 한천천과 합류하여 길산천을 이루어 황해로 흐른다.

백제시대에는 서림군, 통일신라시대에는 가림군, 고려시대에는 서림·한산으로, 조선시대에는 서천·한산·비인군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931년에 세 군을 통합하여 서천군이 되었으며, 1930년에는 장항항이 개항하였고, 1931년에는 장항선 철도가 개통되었다.

서천읍·장항읍 등 2읍과 마리,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판교, 종천, 비인, 서면 등 11개 면이 편입되어 있다. 군청소재지는 서천읍 군사리이다. 가구는 25,207가구이며, 인구는 100,844명(88년 현재)이다. 특산물로는 모시를 비롯하여, 질 좋은 김이 생산되며, 소곡주·봄마늘·갈꽃비 등이 있다.

특히 한산의 세모시는 그 은은한 색상과 가볍고 투명한 질감으로 최상의 의료로 호평을 받아왔으며, 한때 진상품으로도 쓰였다. 삼국시대 백제영토였던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기린산 기슭에서 저마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한산면을 중심으로 화양·마산면 등 서천 일원과 부여, 보령지방까지 퍼졌다고 한다.

이러한 모시생산의 전통을 이어 화양면 화촌리에 모시부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한산면 지현리 일대 4만평의 대지에 모시전시관, 모시판매장, 숙박시설, 향토음식점, 쇼핑센터 등을 갖춘 관광 휴양의 종합관광지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6년의 관내 저마경작지는 1.5ha에 이르며, 생산량은 3만필 정도이고, 연간

모시소득액은 85억원 정도이다.

공주 35.2km, 금산 34.8km, 천안 68.8km, 대전 96.7km 떨어져 있고 서울과는 172.7km 거리에 위치한다.

나. 문화유산

1) 문화유적

보물 1, 사적 1, 천연기념물 2, 민속자료 1, 무형문화재 2 등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로는 유형 1, 무형 2, 문화재자료 13종이 있다.

비인면의 5층 석탑은 보물 224호로 지정되었으며, 건지산성이 사적 69호, 서면미량리의 동백나무숲과 신송리 소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한산 지현리 문정옥씨가 무형문화재 14호(모시짜기)로, 한산면 동산리의 라상덕씨는 도지정무형문화재 1호(모시짜기)로, 한산면 초암리의 김영신은 도지정무형문화재 3호(한산 소곡주)로 지정되었다.

2) 전통문화예술

저산팔읍길쌈놀이와 한산굿놀이 등 민속놀이가 전한다.

저산팔읍길쌈놀이는 모시짜기의 전 과정을 한산을 중심으로 홍산·임천·서천·비인·정산·보령·감포 등 옛 군현의 주민이 모여 구성진 가락과 율동에 맞추어 재현하는 公同續麻의 민속놀이이다.

70여명이 동원되어 모시훅기—모시발래기—모시삼기—모시날기—모시매기—모시짜기 등 모시생산의 과정이 재연되며, 중간에 농악 관련 민요가 불리워진다. 23회 민속놀이경연대회(82년)에서 문공부장관상을 받았다.

3) 문화예술단체 및 연고문예인

① 문화예술단체

전통예술 : 문화공간 얼 등

음악 : 서림합창단 등

미술 : 일요화가회, 서천 Fade in 클럽, 서천 F.I.C. 사진동호회 등

기타 : 서천문화원

② 연고문예인

구인환(소설), 구재기(시), 구창환(문학평론), 나태주(시), 박경수(소설), 신동한(문학평론), 원형갑(문학평론), 조진상(소설), 이향아(시), 김동수(한국화), 김명억(공예), 김훈곤(서예), 방근택(미술평론), 서흥원(한국), 신양섭

(서양화), 유희영(서양화), 이영순(공예), 전유오(한국무용)

4) 문화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서천문화원	서천읍 군사리	강당 9평, 전시실 9평
서천향교	서천읍 군사리	강당 21평
한산향교	한산면 지현리	강당 20평
비인향교	비인면 성내리	강당 41평

2) 저산문화제의 현황

가. 연 혁

1989년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및 모시의 원산지 부각과 선양, 국민체위 향상으로 건전한 국민정신 고취, 군민화합 기반조성으로 활기찬 서천건설을 목표로 제 1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제30회 군민의 날, 제24회 군민체육대회와 유엔 가입 경축을 겸하여 제 3회 저산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나. 행사개요('91년)

- 1) 주최 및 주관처 : 저산문화제추진위원회
- 2) 기간 : 91년 9월 25일 ~ 28일
- 3) 장소 : 서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군민회관 등 시내일원
- 4) 행사 . 저산문화제 4일간에 거행된 행사는 전야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 ① 전야제 : 축등행렬과 농악놀이, 불꽃놀이, 군민위안의 밤(군민노래자랑 예선) 등이 개최되었다.
 - ② 군민의 날 기념행사 : 서천여상교정에서 기념식, 새일꾼시상식, 농악(한산종합고등학생 출연), 저산팔읍길쌈놀이(한산종고) 시연 등이 개최되었다.
 - ③ 체육행사 : 서천군체육회 주관으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달리기와 마라톤경주가 행해졌다.
 - ④ 문화행사 : 축제의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민속놀이 경연행사로 농악,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줄다리기, 투호, 팽이치기 등을 13개 읍면대항으로 서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정에서 펼쳐졌다.

- ⑤ 특장행사 : 모서관련 행사로 모시짜기, 모시길쌈, 모시아가씨선발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모시짜기는 13개 읍면에서 여자 1인씩 출전하여 3일간규격(폭 32, 길이 24m, 8승 8승 3모 이내)에 맞게 생산한 양과 질을 가지고 시상하게 되는데, 완성품을 제출했을 때는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모시길쌈은 각 읍면에서 선발된 1명이 출전하여 모시짜기, 모시삼기, 꾸리감기 등의 과정을 1시간에 걸쳐 행한 양과 질을 가지고 품평하는 경기이다. 금상·은상·동상이 시상된다.

모시아가씨 선발대회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3명의 미인을 선발한다.

- ⑥ 기타 행사 : 시조시창회(서천군 시우회 주관), 국궁대회(궁도협회주관), 게이트볼 시범경기(게이트볼 협회), 사진촬영대회(행사 후 전시), 학생서화전 및 가훈전시(국교생대상, 문화원), 모시시장 개설, 향토음식점 개설 등이 있다.

다. 현지조사 결과 분석

1) 주최 및 주관처

축제의 연원이 짧은 까닭에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행사는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 행사구성 및 내용

- ① 국민의 날, 군민체육대회와 함께 개최하는 까닭이겠으나 체육행사가 축제 내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②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서관련 특장행사가 부족하다. 현재 저산문화제에서 치루어지는 모서관련 행사는 저산길쌈놀이와 모시짜기, 모시길쌈, 모시아가씨 선발, 모시시장개설 등이 있다. 저산길쌈놀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하여 기념식에서 시연될 뿐이어서 지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모시짜기, 길쌈 등도 읍면 대표 13명에 의한 경연에 불과하다.

3) 주민 참여도 및 지역여건

- ① 주최측의 노력에 비하여 주민의 참여도가 낮으며 학생위주의 행사가 많다.
- ② 모시의 특산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한다면 축제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주민의 호응도 있을 것이다.

4) 문제점

- ① 군민체육대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되므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 ②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부족하다. 문화 행사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과 사생대회, 가훈전시회, 행사기간 중의 사진촬영대회가 있을 뿐이다.
- ③ 축제의 개최와 아울러 모시를 국제적 상품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부족하다.

3) 저산문화제의 개선 방향

가. 주최 및 주관처

점차적으로 문화원, 예총, 모시조합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관해 나가도록 개선하되 각 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확립이 필요하다.

나. 주민의 참여도 제고

- 1) 이 지방 특산물인 모시의 출하기를 전후한 때를 개최시기로 잡으면 주민의 참여도를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저산길쌈놀이를 읍면대항 경연으로 하여 참여를 유도하며, 모시짜기나 길쌈 경연은 행사 이전에 미리 실시하여 생산품을 축제기간에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재경인이나, 타지역 주민들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다. 축제의 특장화

- 1) 군민체육대회와 분리하여 모시를 중심으로 한 축제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2) 모시 주제의 패션쇼를 개최한다. 재경 유명디자이너를 대거 초청, 모시를 소재로한 의상디자인전을 개최하되 이때 모시아가씨가 참여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3) 모시 염색전을 개최한다. 지역민 뿐만이 아니라 전문인을 참여시켜 전통염료를 사용한 모시염색전을 개최하여 상품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4) 모시아가씨 선발에 모시짜기도 심사과정에 편입시키면 축제의 명칭에도 걸맞

을 것이다.

라. 모시의 국제적 상품화

1) 현재 '93년 대전 세계박람회를 겨냥하여 한산면 지현리 일대에 모시타운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모시전시관, 모시판매장 등을 갖춘 건평 2천여평 규모의 모시전시관, 모시판매장 등을 갖추고 공주·부여의 관광권과 연계하여 외부의 상인과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어 상설기관이 설립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때 한산모시의 옛 명성이 부활될 수 있을 것이다.

2) 모시재배기술의 확대와 생산공정의 개선, 유통의 문제, 또는 대학의 의류과나 섬유과와 연계하여 모시의 특성 및 의료로서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다.

5.죽서문화제

1) 삼척의 문화환경

가. 인문지리적 환경

삼척시는 강원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동해, 서쪽은 삼척군 미로면, 남쪽은 삼척군 근덕면과 노곡면, 북쪽은 동해시에 접하고 있다. 시 전역이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해안까지 산지가 발달하여 평야가 적다. 시의 서남단에 선구산(460m)이 있으며, 도계읍 구산리에서 발원한 오십천이 시를 동류하여 동해로 흐르고 있다.

1986년 삼척읍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행정구역은 27개의 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11,161가구, 인구 5만 1,905명(88년 현재)이 거주하고 있다.

부족국가 시대에는 悉直國 혹은 悉直谷國이라고 불리워왔다. 신라시대부터 동해안지역의 군사전략상의 요충지가 되어 왔으며, 산신신앙 및 해양신앙이 뿌리 깊은 지역이다.

나. 문화유산

1) 문화유적

삼한시대 실직국의 성지로 전해지는 갈야산성지, 삼척읍성, 요전산성 등의 城址가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로 삼척향교(도 유형문화재 제102호), 실직군왕릉(도 기념물 제15호), 척주동해비 및, 평수토찬비(도 유형문화재 제38호), 홍서대(도 민속자료 제2호)등이 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로는 죽서루(보물 제213호)가 있다.

죽서루는 1275년 이승휴가 창건한 누각으로 삼척시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다. 죽서루에서 관동팔경이 모두 해경을 끼고 있지만 오직 죽서루만은 해색을 볼 수 없는 것이 특색이기도 하다. 누각 전면에 걸린 ‘竹西樓’와 ‘觀東第一樓’의 편액은 부사 이성조가 숙종 41년(1711)에 쓴 것이고, 누안의 ‘第一溪亭’은 현종3년(1662)에 허목이 쓴 것이며, ‘海仙遊戲之所’는 현종 3년에 부사 이규현이 쓴 것이다.

척주동해비는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에 있다. 이는 1662년 허목이 당시 부사로 있을 때, 해파가 격심하여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세운 것이라 한다. 당초에는 정라항 만리도에 건립하였으나 1710년(숙종 36)에 죽관도 동쪽에 재건립하였다. 웅혼한 필치와 신비로운 문장의 위기와 덕화에 감동하여 조수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여 속칭 퇴조비라고도 한다.

2) 전통문화예술

삼척지방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전해지고 있다.

① 삼척줄다리기

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삼척지방 고유의 민속놀이이다. 도 민속문화재 2호로 지정·등록된 해안 팀과 서쪽 산곡팀의 경기로 沙臺廣場에서 매년 정월 보름에 행해왔다. 직경 3.5m, 길이 1백m 정도의 이르는 줄에, 쥐고 당기기에 알맞게 작은 가닥을 내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기줄이라고 한다. 한때 이 놀이는 대형화하여 수만이 넘는 군중이 운집하며 흥을 돋우고 단결을 과시하는 민속놀이였으나 일제시대부터 소멸되어갔다. 70년대에 재발굴 되어서 죽서문화제의 주종목으로 등장하였다.

② 三願祭

豊農, 豊漁, 消災招福의 세 소원을 비는 際典이다. 삼척 포진성의 자리이며 또 陟州東海碑와 大韓平水土贊碑가 있는 六香山頂에서 행한다. 《삼국유사》의 四海際를 지내던 곳 중의 한 곳이 非禮山(실직군에 있다)이라는 기록에 준거하여 죽서문

화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삼척지역에는 기줄다리기에 필요한 기줄을 만드는 과정을 술비통노래에 약간의 농악을 곁들여 구성한 술비놀이('83년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참가), 매년 입춘에 선농제를 지낸 후 행하던 조비농악('88년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참가), 석성을 쌓는 과정을 재현하는 축성놀이('87년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참가), 완평마을의 염전사업을 주제로한 土鹽놀이 등의 민속놀이가 전해지고 있다. 또 삼척지방의 궁촌과 살해재 주위에 살던 고구려 유민들이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하여 불렀던 삼척아라리가 정성아라리처럼 다양한 가사로 불리워지고 있다.

3) 문화예술단체 및 연고문예인

① 문화예술단체

문학 : 두타문학회 등

미술 : 묵연회, 사진협회 삼척지부, 삼척군청 사진회, 삼척다우리여성사진클럽, 삼척사우회 등

음악 : 삼척시립합창단, 석류합창단, 문화어린이합창단 등

기타 : 삼척문화원, 삼척시조회 등

② 연고문예인

김영기(문학평론), 이성교(시), 박재열(작곡), 노덕주(공예), 안몽인(사진),

이완교(사진) 등

4) 문화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삼척문화원	남양동	강당 26평
삼척향교	교동	강당 35평
삼척공전	교동	강당 74평, 전시실 33평

2) 죽서문화제의 현황

가. 연혁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내고장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의 대두로 이 지역의 뜻 있는 유지들이 모여 소멸되어 가는 민속놀이를 재발굴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죽서문화제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73년 제 1회는 삼척번영회가(대회장 정충교) 주축이 되어, 음력 정월 보름에 현 시청 앞 대로인 沙臺廣場에서 “정월 대보름제”란 행사명으로 막이 올랐다. 제 1회 때는 하루 동안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이, 2회부터는 2일간 계속되게 되었으며 주최도 삼척민속놀이위원회를 결성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78년 제6회 때부터는 축제의 명칭을 “죽서문화제”로 개칭하고, 삼척죽서문화제위원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소는 사대광장, 읍사무소 앞 광장 삼척농민회관 앞 등에서 개최하여 오다가 90년부터는 공설운동장에서 주행사가 치뤄지고 있다. 개최시기는 주로 정월 보름에 행하여 왔던 것을 17회(1989년)부터 6월 10일에서 10일까지로 변경 실행해 오고 있다.

19회를 거쳐오는 동안 축제의 전야에 행해지는 ‘三願際’와 ‘기줄다리기’, ‘술비놀이’등은 삼척의 전통적 민속 제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 행사개요('91년)

금년에 개최된 제19회 죽서문화제의 진행과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최 · 주관 : 죽서문화제위원회
- 2) 기간 : 1991년 6월 21일 ~ 6월 23일
- 3) 장소 : 삼척공설운동장
- 4) 후원 : 삼척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동양시멘트, 강원도, 삼척상공회의소, 삼척문화원
- 5) 행사내용 : 전야제, 경축식, 문화행사, 민속체육행사, 기타 행사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 ① 전야제는 삼원제, 시립합창단 합창발표회, 제등행렬, 시민폭죽놀이 등의 행사가 21일 정오부터 개최된다. 삼원제는 전통유교식 제례로 천신제 · 지신제 · 산신제가 죽서루 경내에서, 해신제는 육향정 경내에서 문화제위원장, 시장 등이 중심이 되어 개최되고, 합창발표회, 제등행렬 등이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며, 이 시간에 봉황산에서 폭죽놀이를 병행한다.
 - ② 이튿날 주행사지인 삼척공설운동장에서 경축식과 문화행사 및 민속체육행사가 개최된다. 경축식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민속체육행사로는 술비놀이(삼척노인회), 기줄다리기(삼척고, 삼일고 학생), 외줄다리기(6개동 남녀가 25명씩), 농악시연(노인회, 죽서농악, 삼여중, 남국민학교), 풍선공굴리기

(지역별 65세 이상노인 30명), 율놀이(각 동별 19명), 널뛰기(각 동별 10명), 장사씨름(각 동별 10명), 육상(각 동지역별 10명), 모래가마니들기(각 동별 10명), 팔씨름(각 동별 10명), 긴줄넘기(각 동별 10명)등이 개최된다.

- ③ 장외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로는 다우리여성사진전시회(해와 달, 4일간), 동양화전시(삼척단협민방위교육장, 4일간), 날그림 소품전시회(삼척우체국 회의실, 5일간), 서예작품전시회(시청회의실, 삼척서예동호인회, 5일간), 난전시회(시청회의실, 삼척난우회, 4일간), 수석전시회(삼척단협 민방위교육장, 수석동호인회, 4일간) 등의 전시회와 연극발표회(유림회관 3층, 연극동호인회, 2일간), 시낭송회(힐링, 두타문학회) 등이 개최된다. 기타 궁도대회(죽서정, 삼척군도회, 3일간), 시조경창대회(유림예식장, 삼척시우회, 3일간) 등의 경연대회가 개최 된다.

이렇게 3일동안 베풀어진 행사의 내용을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행사는 식전행사와 각 지역 대항 체육대회, 민속놀이가 주가 되고, 문화행사로서의 전시회나 발표회는 각 문화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축제기간에 개최된 위의 행사들은 모두 20여종이 되는데 이를 다시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식적 행사 : 2종(삼원제, 경축식)
- 전시회 : 6종(사진, 동양화, 서양화, 서예, 난, 수석)
- 발표회 : 2종(합창, 시)
- 시연 : 3종 (술비놀이, 기줄다리기, 농악)
- 경기대항 : 10종
- 기타 : 6종

다. 현지조사 결과 분석

1) 주최 및 주관처

죽서문화제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고, 삼척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동양시멘트 · 강원도 · 삼척상공회의소 · 삼척문화원 등이 후원하고 있다. 업무 배정에 있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삼척시에의 의존도가 크다.

2)행사구성 및 내용

현행 죽서문화제는 보름축제인 기줄다리기와 삼원제를 복원하여 술비놀이 농악 등 민속놀이를 덧붙이고 각종 문화행사 및 민속놀이 체육경기 등을 추가하여 양

력 6월에 개최하고 있다. 기줄다리기와 삼원제를 6월에 개최하여 문화적 시기를 상실한 감이 있다. 또 기줄다리기와 삼원제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몇몇 행사는 구성이 행정기관 및 지방유지 위주로 되어 있어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3) 주민참여도 및 지역여건

죽서문화제의 핵심행사라고 할 수 있는 기줄다리기와 삼원제에 있어서 기줄다리는 학생들이 시연을 보였고, 삼원제는 기관장과, 지도급 인사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기회가 적었다. 또 개최 장소가 공설운동장·죽서루 등 제한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중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 감이 있다. 농악공연은 노인회·부인회·학생들의 시연이었기 때문에 일반산업체 근로자·농민 등 주민의 참여가 적었다.

지역 여건은 향토문화의 고유한 특질과 전통이 잠재해 있어 재창조 행위의 여하에 따라 발전의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4) 문제점

- ① 축제의 주된 행사에 문화행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선별된 인원만이 참여하여 다수의 주민은 관람자로서 제 3자가 되고 있다.
- ② 삼척시 및 지역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철쭉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개선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삼척죽서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사나 주제가 없다.
- ③ 해암정, 해신당 등 삼척시 인근의 역사적인 설화장소가 산재함에도 축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설화관련 지역의 선정, 수로부인 행사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 ④ 주행사장이 삼척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공연자, 관중, 난장으로 분리되어 연계성이 부족하다.
- ⑤ 죽서문화제위원회가 동 문화제를 주관할 수 있는 집행부의 기능확대가 필요하다.

3) 죽서문화제의 개선방향

가. 주민의 참여

- 1) 죽서문화제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공동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

저 주민들에게 본 행사가 지니는 문화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동원된 소수의 학생이나 주민이 출연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관람자론 문화행위의 연행자에서 제외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서문화제가 지니는 축원행위, 설화의 연행 등 문화적 동기를 스스로 유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대보름 축원행위, 단오 축원행위, 수로부인 설화의 연행과 같은 것 가운데 하나를 내세워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구현하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줄다리기가 중심이 되는 대보름축제로 환원하든지 별신굿이 주가 되는 단오축제로 복원되든지, 수로부인 설화를 재현하여 삼척 주민의 설화로 승화시키는 축제로 이끌어가든지, 주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든 문화제는 이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

2) 향토의 문화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의 선행이 필요하며,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도의 고양을 위한 민간주도 운영의 방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행사시기를 철쭉꽃이 만개 하는 때로 하여 주민의 응집력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나. 축제의 특장화

수로부인설화의 수로부인 행차 및 철쭉관련 행사를 축제에 도입하여 죽서문화제의 주제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1) 삼국유사의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수로부인 행차행렬을 재현한다.

2) 임해정, 한재 등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바다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현화가가 불리워지던 현장, 주민들이 海歌를 불렀던 현장(임해정)과 축제장과의 연계를 문화행위로 이어야 한다. 현재의 여건상 설화현장이 축제장이 될 수 없으므로 수로부인 성령을 축제장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창출해야 하며, 성령 강림시 현화거나 해가를 연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령을 神竿 또는 神擧에 모셔 축제장으로 이동한다.

이동 행렬에는 시민들이 철쭉을 들고 춤추며 현화가를 삼척민요조(미나리 또는 기타 삼척민요)로 합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로부인의 성령이 축제장에 오면 주민들이 수로부인 맞이를 가무로 연행한다. 이것은 동해안 별신굿의 당맞이 또는 문굿의 공연형식을 따르면 될 것이다, .

- 4) 헌화가, 해사가 등을 노래로 만들어 행사시 활용하도록 한다.
- 5) 용화, 한재 등 설화관련 지역 및 시 곳곳에 철쭉을 심어 축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헌화에 의미를 부여, 발렌타인 데이 등과 같이 행사기간 중에 철쭉꽃을 선사하는 범시민적 헌화의식으로의 승화가 필요하다.
- 6) 수로부인 선발대회 개최

6. 처용문화제

1) 울산의 문화환경

가. 인문지리적 환경

경상남도 동북부 울산만에 위치하며 우리 나라 공업의 중심이다. 뿐만 아니라 처용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함월산(200m), 염포산(206m), 무룡산(453m) 등 200m내외의 산이 시내에 위치하며, 동천 및 태화강 하구의 평야 지역은 두 하천에서 유출된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한때는 海面下의 지역이었다.

1962년 울산군 울산읍 방어진읍 등을 통합하여 울산시로 개편 승격하였다. 현재 3구 53개 동에 인구는 7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가구수는 154,009가구이다.

1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돼 정유, 비료, 제철공장 및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산업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68년에는 자동차공업업체가, 73년에는 조선소가 각각 건설되어 국내제일의 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3백여 개의 업체에 10만여 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나. 문화유산

1) 문화유적

보물 1, 사적 1등 국가지정문화재 2종과, 유형문화재 2, 기념물 3 등 5종의 도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태화동에 있는 태화사지에서 출토된 太和寺址十二之像浮屠(학성공원, 보물 제441호), 처용암(도 기념물 제50호), 성암동의 개운포성지(도 기념물 제72호), 신정동의 二休亭(도 문화재자료 11호), 태화루의 현판과 이휴정출토복식(중요민속자료 제37호), 동헌 및 내아(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울산향

교(도 유형문화재 제199호) 등이 대표적 문화유물이다.

2) 전통문화예술

① 물당기놀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물 잘 나는 다른 우물에 가서 물을 당기는 이 지방 민속놀이이다. 기원제, 물당김, 새로 판 우물에서의 축제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87년 발굴, 제19회 경남민속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② 울산쇠부리놀이

쇠부리란 쇠를 녹이는 일로, 이 지방 단천 쇠곳의 토철을 녹여 철을 뽑는 제련작업을 재현한 놀이이다. 부리꾼의 등장, 고사, 한마당놀이, 쇠부리놀이의 순으로 진행된다. '85년 발굴, 제17회 경남민속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③ 처용무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만든 가면무이다.

3) 문화예술단체 및 연고문예인

① 문화예술단체

문학 : 문인협회울산지부, 변방시동인회, 살어리문학회, 우향글모임회, 우산수필동인회 등

미술 : 미협울산지부, 신우회, 울산일요화가회, 울산현대미술회, 울산서도회, 사진협회울산지부, 울산무지개사진회, 현대사진동우회 등

음악·공연예술 : 음악협회울산지부, 국악협회울산지부, 고려실내악단, 울산교향악단, 울산실내악단, 울산어머니합창단, 울산청소년교향악단, 울산어린이합창단, 울산국악관현악단, 극단울산, 극단처용, 극단태화, 무용협회울산지부, 울산현대무용단 등

기타 : 예총울산지부, 울산문화인, 울산향토사연구소, 울산울주향토문화연구회 등

② 연고문예인

김교한(시조), 김상길(사진), 박상지(소설), 서임환(시), 최신해(수필) 등

4) 문화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울산 KBS홀 상공회의소연주홀 공간미술관 동삼화랑 울산문화원	울산시 울산시 성남동 울산시 남구 달동	객석 2500석 객석 50석 전시면적 11평 대강당 97평, 소강당 35평, 전시실 24평, 도서실 202 강당 31평
울산향교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교동	2,562m ² 633,452m ²

2) 처용문화제의 현황

가. 연혁

울산시에서는 67년 제1회 울산공업축제를 개최하여 90년까지 24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울산 공업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산시민의 화합을 다지고, 향토문화를 진흥한다는 취지 아래 시로 승격된 6월 1일을 전후하여 쇠불이놀이, 처용무, 탈춤 등 민속행사와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또 85년부터는 울산문화원 주최로 개운포의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처용제를 개최했었다.

91년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처용문화제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나. 행사개요('91년)

제29회 시민의 날 행사를 겸하여 추진된 91년 처용문화제의 구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주최 :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
- 2) 주관 : 울산문화원, 예충울산지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시체육회
- 3) 기간 : 5월 31일 6월 1일
- 4) 장소 : 처용암, 종하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시내일원
- 5) 행사내용

기념행사, 처용제행사, 민속놀이,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공단문화행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처용행사와 공단문화행사를 따로 둔 것이 특징이다.

- ① 기념행사로는 전야제와 기념식을 중심으로 식전 공개행사와 식후 공개행사가 있다. 전야제로는 축등행렬이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여고학생들이 시내 일원에서 펼치며, 태화강에서는 신도협회주최로 유등놀이를 전개한다. 식전공개행사는 일반문화제와 같이 각급 학교 학생들이 출연하여 농악, 매스게임, 고적대연주 등을 펼치며, 일반인이 참여하는 행사로는 야음 3동이 주관하는 건강체

조가 있다. 식후공개행사는 울산문화원이 주관하는데, 재념자, 처용무, 처용회 등 민속행사 중심이다.

- ② 처용관련 행사로는 울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처용제전과 처용무국악관현악연주, 처용학술심포지엄, 처용가장행렬 등이 있다.
- ③ 민속놀이로는 처용제 외에 널뛰기, 그네뛰기, 고성오광대, 길놀이, 재념자 등이 고수부지에서 시연된다.
- ④ 문화행사로는 각 협회가 주관하는 피아노경연대회, 한글백일장, 사생실기대회, 사진촬영대회, 무용경연대회, 연극제, 꽃꽂이전시회, 다향제, 합창제 등의 행사가 있다.
- ⑤ 공단문화행사에는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산업체대항축구대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업체대항 바둑대회 등의 행사가 있다.
- ⑥ 체육행사는 체육회와 각 협회가 주관하는데 배구, 테니스, 복싱 등 12종목의 시합이 있다.

다. 현지조사 결과 분석

1) 주최 및 주관처

처용문화제의 주최는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이며, 주관처는 울산문화원·예총울산지부·울산상공회의소·울산시체육회 등이다. 행사의 필요성과 의의는 느끼고 있지만 공단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다.

2) 행사구성 및 내용

전통문화 행사로 씨름, 줄다리기, 별신굿, 난장 등이 금년에는 없었으며 체육행사에 치중된 느낌이다. 씨름은 이 지역에서도 단오, 추석 등에 성황을 이루었으며 하지일에는 이곳에서 뽀줄다리를 했다고 하는 지역 향토사가들의 증언이 있었다.

3) 주민참여도 및 지역여건

- ① 시민의 축제 참여도는 높지 않으며, 내부 시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이벤트가 별로 없다.
- ② 처용설화를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공업도시의 특징을 살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관광객까지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제점

- ① 처용문화제의 중심행사라고 할 수 있는 처용제가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추진됨으로써 체육행사에 묻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 ② 처용문화제 개최 의의와 행사주관처의 성의에 비해 지역민의 참여도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처용암, 개운포 등 처용설화의 현장이 공단입주 등으로 처용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멸실 될 우려가 있다.
- ④ 소요경비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연출 프로그램 수준 및 소품상태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⑤ 처용관련 노래, 관광상품 및 부대행사가 부족하다.

3) 처용 문화제의 개선방향

가. 개최시기

현재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 개최하고 있으나 처용제만을 분리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처용암, 개운포를 중심으로 춘삼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절감 등을 고려 시민의 날과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는 전야제의 형식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 행사의 주관

대학관련 학자(울산대학), 상공인, 문화원, 기업인, 향토사연구회, 국악단체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상설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연고기업 및 지역기업의 연례적인 협찬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개최장소

1) 처용행사는 처용설화의 역사적 장소인 개운포와 처용암이 중심무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운포의 활용공간은 30평 내외로 좁으며 이 지역이 공해 이주 지역으로 민간 가옥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공단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처용설화의 주무대인 역사의 광장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 현재 철거보상이 끝나 사유지로 되어 있는 개운포지역의 1만여 평을 공원부지로 전환하여 처용 행사 및 처용 관련 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처용문화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라. 축제의 특장화

1) 헌강왕의 개운포출유와 처용출현의 과정을 극적으로 재구성한다.

현재 개발한 헌강왕 출유, 처용출현 등을 발전시켜 처용제의, 처용무, 처용가, 헌강왕 개운포 출유, 처용출현 등을 연계시킨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흥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씨름, 그네, 줄다리기, 농악놀이, 별신굿, 난장설치 등 시민 및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2) 처용암을 둘러싼 해상 위에서의 프로그램개발

- ① 1~2백척 규모의 배 또는 뗏목을 띄우고 야간의 불빛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② 처용암을 높은 단계로 승화시켜 함부로 밟지 않게 하는 의식을 개발한다.
- ③ 처용행사시 대규모의 민속 농악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④ 처용가에 곡을 붙여 처용행사시 활용한다.
- ⑤ 처용설화를 소재로 한 오페라·발레 등의 공연, 또는 극화하여 공연한다.
- ⑥ 처용가장행렬은 고증을 거쳐 경주에서 울산까지의 차로, 울산 시내에서 일정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출의 전문화 및 소품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⑦ 헌강왕 개운포 출유, 처용출현의 전단계를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

마. 기 타

- 1) 처용행사관련 각종 엠블렘, 현수막, 아치 등은 처용관련 상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시내 가로변에 처용탈을 활용한 축하등을 달아 처용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 3) 처용설화와 관련된 망해사 등 10여 곳을 처용관광코스로 개발한다.
- 4) 개선의견을 바탕으로 한 동 축제의 연출, 시나리오작성, 처용가사 노래 제작을 전문인사에게 용역 의뢰할 필요가 있다.

7. 한라문화제

1) 제주도의 문화 환경

가. 인문지리적 환경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목포에서 91마일, 부산에서 168마일 떨어진 남쪽 바다에 위치하고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에 걸쳐 타원형으로 뻗어 있으며 면적은 1,820km²로 전국 면적의 1.8%정도이다. 부속도서로 有人島 8개, 無人島 41개 등 모두 49개의 섬이 있는데 本道 沿岸 에 12개, 추자도 인근에 37개가 위치해 있다.

제주도의 행정조직은 제주시,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2市 2郡 6邑 5面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시는 耽羅國始祖의 開國 聖地로, 제주도의 핵심적 행정을 담당하며 17개 동이 편입되어 있다. 도심지 서남쪽 제주국제공항 남쪽에 '신제주'가 건설되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12개 동이 편입되어 있는데, 농경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농업이 주산업이다. 경지면적 88.1km²중 감귤재배 면적이 24.6km²로 전국 제일의 주산지를 이룬다.

北濟州郡은 도의 북부일원을 행정구역으로 3개 읍, 3개 면과 5개의 출장소가 편입되어 있다. 주민의 7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 중간지대에 넓은 牧野地를 가지고있어 松堂·濟東·이시돌 목장 등 국내 유수의 목장이 있다. 南濟州郡은 우리 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동서남쪽은 東支那海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으로는 한라산의 연봉을 사이에 두고 제주시 및 북제주군과 인접하고 있다. 3읍 2면과 3개의 출장소가 편입되어 있다. 주민의 6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온화한 기후를 이용한 特用作物의 재배로 농가소득은 높은 편이다.

제주도를 연결하는 교통망으로는 제 1횡단도로, 제 2횡단도로, 일주도로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大浦·釜山·大阪 등지와 航路가 개설되어 있고, 서울·부산·대구·광주·여수·진주 등 항공 국내선과 오사카 국제선이 운행되고 있다.

나. 문화유산

1) 문화유적

보물 1, 사적 및 명승1, 천연기념물 18, 민속자료7, 무형문화재 4등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면, 도 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9, 기념물 36, 무형문화재 8, 민속자료 4, 문화재자료 3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보물 제322호로 지정된 觀德亭은 세종 30년(1448)에 안무사 신숙정이 병사의 훈련과 무예수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건한 건물이다. 건물구조에서 처마가 긴 것이 특징이며, 사방은 창호 없이 개방한 정자양식이다. 편액은 안평대군의 글씨이며, 정자 안의 ‘湖南第一亭’은 방어사 박선양이 쓴 것이다.

사적 제134호로 지정된 三姓穴은 제주토 원주민 高·梁·夫 三神人 용출하였다는 地神族 說話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1526년(중종 21)에 이수동 목사가 주위에 석단을 쌓고 혈의 북쪽에 홍문과 혈비를 세워 후예로 하여금 춘추제를 모시게 함과 아울러 매년 1월 상정묘일에 주민으로 하여금 혈제를 모시게 하였다.

지방기념물 제 3호로 지정된 濟州城址는 신라시대부터 축성된 성곽으로 알려져 있는데 多孔質 玄武巖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1555년(명종 1) 을묘왜변 때 왜선 40여척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한 도성이기도 하다.

지방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된 法華寺址는 고려 말 元에서 건립한 거대한 사찰의 廢址이다. 1960년경 草家屋을 헐어내고 정진작업 중 지하에서 주초석과 섬돌이 발견되어 伽藍으로서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유적이 발굴되었다.

지방기념물 제22호인 海神祠는 목사 한상목이 1820년(순조 20)에 해상왕래시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화북포 해안에 사당을 짓고 매년 정월 보름에 해신제를 지내도록 한 곳이다.

2) 전통문화예술

제주도의 전통문화예술은 다음과 같은 것이 전한다.

① 제주칠머리 당굿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음력 2월에 영등신에게 올리는 무속제이다. 영등신은 영등할망이라고 부르는 신으로 음력 2월에 찾아와 15일에 떠난다고 하여 어민들이 해상안전과 풍요를 빌기 위해 2월 1일에 영등환영제를 행하고, 13일에서 15일 사이의 어느 날에 영등송별제를 행한다. 초감제, 용왕맞이, 씨드림, 산받음, 액막이, 배방선의 순으로 행해진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② 입춘굿

입춘날 제주목의 관아에서 관과 심방들이 합동으로 행하던 곳이다. 춘경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곳은 농경의 모의적 행위를 실연하여 풍농을 비는 관과 심방이 합동으로 행하던 풍년제였다.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74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③ 세경놀이

세경이란 농신을 이르는 말로, 세경놀이는 농신에 대한 의례이다. 단독의례로는 행해지지 않고 종합제인 큰 굿 때에만 행해져 왔으며, 농사의 풍요를 비는 농경의례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모든 농경과정으로 연출되는데 대풍을 만나 곡식을 광에 저장할 수 있도록 유감주술적 효과를 노리는 의례이다.

④ 영감놀이

영감은 일명 '참봉', '야채'라고도 하는데, 모두 도깨비의 존칭어이다. 이 놀이는 도깨비신에 대한 의례로 행해진다. 영감신이 여인의 미모를 탐하여 병의했기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환자에게 영감신을 보내어 병을 치료하고자 한 때 실연한다.

이밖에 태우만드는 놀이, 鼎沼岩花煎놀이, 연신맞이굿놀이, 연물놀이, 송당리 마을제, 산신놀이, 불싸움놀이 등의 제의 및 놀이류의 민속과 달구노래, 땃돌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방앗돌굴리는 노래, 봉지가, 불미노래, 비바리, 오돌또기, 집줄 놓는 노래, 해녀노래 등 민요와 민속춤이 전하고 있다.

3) 문화예술 단체 및 연고문예인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연고문예인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단체

문학 : 문인협회제주지부, 경작지대동인회, 정방문학회, 제주시조문학회, 제주아동문학협회, 풀잎소리회, 한라산동인회 등

미술 : 미술협회제주지부, 사진협회제주지부, 관점미술동인회, 동행회, 제주디자인회, 소목회, 정연회, 뇌백회, 바람코지, 상목회, 서귀포서화동인회, 시나브로, 시상청년작가회, 영주목연회, 우목회, 원미회, 정서회, 제주도중등미술교육연국회, 탐서회, 한지회, 화맥, 제주카메라클럽, 포토 Y, 한라사우회, 제주영상동호회 등

음악·공연예술 : 음악협회제주지부, 국악협회제주지부, 연극협회제주지부제주실내악단, 제주시립 교향악단, 아가페합창단, 아라베스크중창단,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 오현음악동문회, 제주대관악연구회, 제주시무궁화합창단, 제주시 여울목합창단, 제농음악부동문회, 제주어머니합창단, 제주플루트동호회, 제주현악합주단, 클래식기타회 등

기타 : 예총제주도지회, 칠머리당굿보존회, 제주민속연구소, 탐라문화연구소

② 연고문예인

강금중(소서), 김광협(시), 김대현(시), 김시태(문학평론), 김제영(소설), 김종두(아동문학), 김종원(시), 문두훈(기악), 문순화(사진), 박세원(한국화), 박철희(문학평론), 박태준(서예), 변효인(서예), 양선규(소설), 양인옥(서양화), 오용수(시), 우수언(공예), 전대웅(문학평론), 한석홍(사진), 현기영(소설), 현길언(소설) 등

4) 문화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제주문예종합회관	일도 2동 신산공원내	대극장 720석, 소극장 200석 전시발 211평, 놀이마당 220평 공연장 931석 186석(공연)
제주시민회관	이도 1동 1563	공연
동아생명문화센터	연동 282-3	공연
제주도학생회관	제주시	공연
제주YMCA소극장	제주시	공연
그랜드호텔	제주시	공연
자유회관	제주시	전시
가톨릭회관	제주시	전시
한솔화랑	제주시	전시
한국투자신탁	제주시	전시
제주향교	용담동 198	강당 53평
자연사박물관	일도 2동 996	보급, 전수
민속박물관	삼양 3동 2505	보급, 전수
탐라목석원	아라동 1795- 1	보급, 전수

2) 한라문화제의 현황

가. 연 혁

62년 제주도민의 일체감 속에 화합을 다지고, 향토민속의 재현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전승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제 1회를 개최하였다. 해

를 거듭할수록 문화축전으로서 제주도민의 긍지와 자존을 드높이는 민속예술의 혼을 개화시켜 왔다. 행사의 내용은 오랜 세월동안 제주민의 혈맥을 타고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민요 등의 경연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중심이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한라문화제는 그 동안 펼쳐왔던 종목을 연관성 있게 체계화하여, 재주의 독자적 문화원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신명의 축제성을 고조시키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한마당이 되도록 시도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일체감을 조성시키는 향토축제로 승화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나. 행사개요('91년)

제30회 한라문화제의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체 : 제주도, 예총 제주도지회
- 2) 주관 : 제30회 한라문화제 집전본부
- 3) 기간 : '91년 9월 28일(토)~10월 6일(일)
- 4) 장소 : 제주도 일원
- 5) 축제의 내용

① 전통문화축전—기원축제와 종합축제, 화합축제로 대별하였다.

기원축제 : 만덕제, 한라산신제, 축등행진, 놀이마당, 불꽃놀이 등이 포함되며 제주인들의 심성 속에 자리한 한라산신을 맞아들여 도민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신산공원 및 모충사, 산천단, 자연사박물관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종합축제 : 거리축제, 개회식, 공개시연, 민속예술경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리축제로는 참가 시군 출연단이 문예회관에서 출발하여 개회식장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개회식의 식전공개행사로 제주여학생들의 고적퍼레이드가 있었다. 식후 공개행사로는 제주목사행차, 발리예술단, 중요무형문화재, 망테기 질드리는 소리 등의 공연이 있었다.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시군단위의 경연형태로 치루어졌는데, 참가 종목은 걸궁(8개 시군 참가), 민요 민속놀이 (4개 시군 참가) 등 이었다.

화합축제 : 걸궁, 지게발경주, 집줄농기, 물허백 경주, 듬들들기, 씨름, 줄넘기 등을 시군 대표와 국·중·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펼쳐졌다. 같은 날 향토축제로 칠머리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7호)과 조을선(인간문화재)의 소리춤 한마당이 시연되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제8회 전국민요경창대회가 제주 종합문예회관에서, 잠수경

연, 주남만들기·어망짜기·보물찾기·줄넘기 등의 바다축제가 한림항에서 개최되었다.

② 문화예술축전 : 한라문화제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음악, 문학, 미술, 국악, 원예, 사진, 건축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민속무용제, 발리예술제 음악제, 국악제, 연예제 연극제 등을 각 협회 주최로 개최하였으며, 문인협회에서는 문학의 밤(파라다이스 회관), 문학백일장(초중고학생대상), 시화전(문예회관 소극장) 등을 주관하였다. 미협에서는 미협전(문예회관 전시실), 미술실기대회(초중고 학생대상) 및 입상작 전시(문예회관 전시실) 등을 사진협회에서는 사진전과 사진공모전을, 건축가협회에서는 건축슬라이드 상영(문예회관 전시실)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예전과 경서대회 등을 주관하였다.

다. 현지조사 결과 분석

1) 주최 및 주관처

제주도와 예총 제주도지회에서 주최하고 있다. 축제의 기본 성격상 민간단체인 예총이 행사를 주관해야겠으나, 인력부족(사무국장 1명, 여직원 1명)으로, 매년 주관문제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 행사구성 및 내용

제주도의 전통 민속놀이들을 많이 발굴하여 시연하거나 경연을 펼치고 또 그밖의 가능한 축제행사를 많이 개발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제주시 외에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전역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최측의 주도면밀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3) 주민의 참여도 및 지역여건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 토요일에 전야제를, 일요일에 종합축제를 개최토록 행사기간을 잡았으나 참여도는 저조한 편이다. 지역여건상 관광의 도시임에도, 한라문화제를 보기 위해서 온 관광객은 미미했다. 또한 도내에 장급여관이 200여 개가 있지만 대부분이 육지인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했다.

4) 문제점

①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시·군비는 출연팀의 출연비 지원으로 충당되고, 도비는 본부의 진행비로 사용되며, 진행도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② 도내 관광단체의 협조가 미흡하다.
- ③ 독특한 자연과 민속을 결합한 축제의 관광상품화가 부족하다.

3) 한라문화제의 개선방향

가. 주최와 행사진행

1) 점진적으로 예충중심의 민간추진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부(예산담당), 제전부(각종 의식담당), 민속경기부(씨름, 그네, 뽀빠들기 등), 민속예술경연부(농악, 민속놀이, 민요 등), 문화행사부(음악제, 연극제, 백일장, 미술전, 사진전 등) 등 분야별 원로가 중심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고 각 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 행사를 진행해 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2)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은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후 60분 이상 계속되는 개회식은 지루한 감이 있다. 개회식이 지루하게 진행되면 오히려 주민의 참여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나. 축제의 특장화

1)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민속을 중심으로 하는 한라문화제를 국제적 축제로 부상시켜, 국제적 관광명소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2) 제주도는 삼다(바람, 돌, 여자)의 고장이므로 이를 잘 응용할 필요가 있다.

즉 바람, 하루방, 해녀 등을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바람개비 대회(네덜란드의 풍차대회 참고) 등 오방색을 활용한 바람축제

—세계의 얼굴 하루방대회(조각 등)

—해녀가 참여할 수 있는 해녀잔치 프로그램 개발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스코트의 개발(상품화)

3)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거대한 민속박물관이므로 한라산신제를 포함한 3~4개의 특색 있는 민속의 축제를 개발

—도처에 크고 작은 동굴, 폭포, 기암절벽, 원시림의 대자연이 신비를 드러내고 또한 분지, 해안, 계곡의 절승을 만나게 되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와 함께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재정의 자립화 방안 모색

숙박업협회, 의사협회, 토산품협회 등 지역단체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한 종목의 행사를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진행경비를 민간주도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요자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라도 한라문화제를 위한 축제복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8. 맺음말

향토축제는 지역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민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여 향수하고 신명을 풀며, 그 과정에서 단합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축제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일차적 개선의 방향이다.

여섯 종의 향토축제의 검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는 경우가 많고,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
- ② 행사의 내용이 지역의 문화환경과 관련,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 ③ 축제의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④ 연고 기업인 및 춘향문화예술인의 참여가 미흡하다.
- ⑤ 다음 축제 때까지 축제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상설 볼거리 전시관이 없다.

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문화 축제의 특장화이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유형화되어 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개성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① 고유한 민속을 발굴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타지역의 축제와 변별성을 갖게 하고 ②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울산의 처용암, 삼척의 철쭉 등)을 찾아 학술적 점검을 거쳐 축제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③ 지역의 특산물(한산의 모시, 금산의 인삼)을 축제와 연계시켜 홍보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주민의 참여를 높여 보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설기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신문·방송·잡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며 공동참여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재정자립을 이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기금적립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축제관련 복권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역기업 및 연고기업의 지속적인 후원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지역성을 벗어나서 문화관광의 자원화를 이룩해야 한다. 즉 지역축제가면서 이를 관람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① 지역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현대적으로 놀이화 ② 고유성을 지닌 놀이를 개발(금산의 인삼깎기 등) ③ 지역적 특징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④ 홍보지를 통한 홍보전략의 수립 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국제화의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는 주변의 문화환경이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산이나 금산은 93년 대전 EXPO를 겨냥하여 특산물을 상품화하고 울산, 제주, 부여, 삼척 등은 관광자원이나 문화유적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중앙의 전문인과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공동위원회의 조직 ② 향토사학자와 연고문예인이 참여하는 문화자원 연구개발 사업 ③ 지역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통합작업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III.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정서함양 큰 모임

우리는 왜 이렇게 메말라졌는가/89
어떻게 문화적 정서를 가꾸어 가야 하나/95
미래 우리문화의 조건은 무엇인가/105
토론 내용/116

* 본고는 1991년 3월 22일(금)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정서함양 큰 모임」의 발표요지 및 토론
내용을 전제한 것임.

우리는 왜 이렇게 메말라졌는가

金 泰 吉*

1.우리들의 정신풍토

우리 조상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세상을 살았다. 본래 낙천적 기질이 강했던 우리 조상들은 쪼들리는 물질 생활 속에서도 풍류와 멋을 알았고, 몸의 고달픔을 해학의 웃음으로 달래는 슬기를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들의 조상은 춥고 배고픈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아끼며 오순도순 따뜻하게 산 사람들이 많았다. 농사 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은 우리 조상들은 공동작업을 통해서 협동을 익혔고, 혈연과 지연으로 엮힌 소규모의 집단 생활 속에서 따뜻한 정을 키워 나갔다. 농사라는 것은 작업의 협동 없이는 지을 수 없는 생업이었고, 농토는 개인 각자의 소유가 아니라 가족의 공동 소유였다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에게 강한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었고, 그들의 사회를 인정 많은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혈연과 지연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식이 강했던 우리 조상들은 마을 단위로 한데 어울려서 고락을 같이하며 정겹게 살았다. 개인 각자의 독립된 생활이 있기에 앞서서 ‘집안의 살림’ 또는 ‘마을의 행사’ 등 공동의 관심사가 우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내집’, ‘내마을’, ‘내 어머니’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우리집’, ‘우리 마을’,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 쓰였다는 사실이 암시하듯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감성 속에서는 ‘나’보다 ‘우리’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근대화 내지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온 뒤부터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사회 구조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사고 방식에도 변화가 왔다. 사회 구조와 생활 양식의 변화가 너무나 급격한 속도로 찾아온 까닭에

*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들의 의식 구조와 사고방식은 이 급격한 변화에 미처 적응을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혼란을 겪는 가운데 생긴 의식 구조와 생활 양식의 변화였던 까닭에, 그 변화는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였다.

산업화를 지향한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덕분에 우리들의 물질 생활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물질 생활의 개선이 반드시 정신 생활의 개선을 함께 가져오지는 않았다. 물질 생활의 풍요 속에서 정신 생활은 도리어 빈곤해진 측면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고 항상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현저하며, 늙음 속에 뜻 없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많으나, 느긋한 심장으로 깊은 삶을 음미하는 즐거움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낙천적이던 우리 조상들과는 달리, 오늘의 우리들은 불확실한 내일을 내다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안하다. 광란(狂亂)에 가까운 유흥 속에서 한때를 즐기는 사람은 많으나, 조용한 기쁨 속에 멋과 풍류를 즐기는 사람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몸은 편안하나 마음을 편치 않은 그런 세상이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유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옛날처럼 원만하지도 따뜻하지도 않다.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옛날의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서로 아끼며 마음이 훈훈한 삶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들은 풍요로운 물질 생활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무관심 또는 갈등 속에서 냉랭하게 사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우리 조상들은 고부간의 갈등을 제외하면 그 밖의 가족들은 대체로 하나의 '우리'로서 살았으나, 요즈음은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또는 형제간의 갈등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이웃사촌'이라는 관념도 크게 약화되었으며, 대도시에서는 서로가 이웃을 모르고 상호 무관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갈등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도시와 농촌의 갈등, 지역과 지역의 갈등 등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갈등은 집단 사이의 갈등인 까닭에 개인 사이의 갈등보다도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이 반드시 집단주의적 인간상(人間像)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전략적 필요성

을 따라서, 같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협동하고 단결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자아(自我)는 '우리'가 아니라 '나'인 까닭에, 같은 집단 내부에서도 개인적 갈등의, 요인은 항상 잠재해 있다. 결국 그들도 대개는 고독한 인간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비해서 대체로 인심이 각박하고 황폐한 가운데 범죄 사건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옛날에도 범죄 사건이 더러 있기는 했으나 좀도둑 정도의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빈도도 적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나라에서는 살인과 강도, 유괴와, 인신 매매 등 흉악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범법자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우리 나라 교육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농경시대의 사회 구조와 극도의 산업화로 치닫는 현대의 사회 구조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의 전체적 구조와 사회를 형성하는 개인들의 의식 구조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옛날 농경사회의 정서와 인심을 오늘의 산업 사회에서 그대로 보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회의 양상이 바뀌면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사고 방식에도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업화를 이룩하며 산업 사회가 되면, 반드시 오늘의 한국의 경우와 같이 정서가 황폐하고 인심이 각박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산업화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어떤 구조를 가진 산업 사회를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산업화에 따르는 의식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오늘의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바와 같은 각박한 인심만이 유일한 가능성은 아닐 것이다.

산업 사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것이 있고, 산업 사회의 인심과 정서 생활 및 문화 일반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현대의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업화 내지 산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산업사회를 형성하고 어떤 모습의 의식 구조와 정서 생활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숙명론적으로 대답될 성질의 물음이 아니다. 우리 사회와 인심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자유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 방향의 유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느냐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우리들의 정서와 인심 그리고 문화의 모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폐한 정신적 상황이 어떠한 원인에 연유하는가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지면의 제한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것만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의 정신적 상황이 황폐하고 각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가치체계 안에서 돈의 위상(位相)이 지나치게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사실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 체계에서 돈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라 하겠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 정도가 유심히 지나치다. 그 정도가 유심히 지나치게 된 이유의 하나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집념이 물질의 가치를 극도로 강조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유의 또 하나는 돈만 가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우리 나라의 정치적 타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소상히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나, 어쨌든 우리 사회에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졸부(悭富)의 심리가 팽배하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서 숭상하게 되면, 예술, 학문, 사상, 인격, 도덕 등 정신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오인하는 사회에서는 돈을 목표로 삼는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게 된다. 돈에 대한 욕심은 끝없이 부풀게 되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에 집착하는 풍조가 지배하게 된다. 지나친 집착으로 소유의 극대화를 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지나치면 소외된 계층의 불만과 위화감을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다수가 느끼는 불만과 위화감은 사회와 인심을 거칠고 메마르게 만든다.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오인하는 사회에서는 향락과 과소비의 풍조가 일어나기 쉽다. 향락과 과소비의 풍조는, 예술과 학문 또 사상 등 창작적 활동에 경주되어야 할 정력을 헛되이 낭비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문화의 창달을 방해하며, 퇴폐적인 문화를 조장한다.

향락과 과소비에 대한 욕구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갖는 특수한 심리가 아니며, 그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름없이 일어난다. 정상적 방법으로는 많은 돈을 벌 길이 막힌 사람들로서 향락과 과소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길은 오직 범법(犯法)을 감행하는 길뿐이다. 특히 자제력이 약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범법을 감행해서라도 유흥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대두하기 쉽다. 범죄의 피해에 대한 불안은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각각 자기의 돌레에 성을 쌓고 사는 폐쇄적 인간관계를 결과한다.

우리 나라의 정신적 상황을 황폐하고 각박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의 또 하나는 이기주의로 궤도를 이탈한 잘못된 개인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입각한 산업화 사회는 개인주의적 인간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니와 자본주의와 함께 우리 나라에 들어온 개인주의는, 서구에서 형성된 개인주의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이기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의 방향으로 흐른 것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첫째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남을 공정하게 대접하고 자타가 함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합리적 정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이 합리적 정신의 전통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우리 한국인은 본래 이 지보다도 감정이 우세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 급격했던 까닭에 합리적 정신을 충분히 체득하기까지에는 좀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의 방향으로 몰고 간 또 하나의 사유로서는 앞에서 말한 바 금전 제일의 사고 방식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돈과 재물은 배타적 경쟁성이 강한 목표인 까닭에, 소유(所有)의 극대화를 삶의 최고 목표로 삼는 가치풍토 안에서는, 남을 고려할 마음의 여유를 잃고 나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기주의로 흐르기가 쉽다.

우리 나라에 이기주의적 생활 태도가 팽배하게 된 두 번째 사유로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법질서 확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에 많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을 거듭해 왔으며, 안정되고 권위 있는 정부를 갖지 못했던 까닭에, 무법자들의 횡포를 공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책임이 막중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까지 법의 정신을 어기는 사례가 많았던 까닭에, 일반 사람들의 이기주의적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실천적 장치가 부실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우리 나라의 정신적 상황이 황폐하고 각박하게 된 세 번째 이유로서 우리는 '인간 교육'의 실패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교육열과 교육 수준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정서 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주축으로 삼는 인간 교육 내지 전인 교육에는 실패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서 교육과 가치관 교육은 뒤로 미루고, 금력과 권력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사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량과 기술을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했다는

사실이, 우리 나라의 정신 풍토에 미친 나쁜 영향을 여기서 길게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나라의 정신 풍토와 문화적 환경을 바르게 마련하는 문제는 결국 넓은 의미의 교육문제로 귀착한다.

우리 나라의 정신적 상황에 대한 이상의 고찰은 매우 소략한 것에 불과하나, 그 가운데는 앞으로 우리의 정신풍토를 어떤 방향으로 고쳐가야 하며 그 고치는 방안이 무엇이나에 대한 다소의 의견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함축에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전개하는 일은 오늘의 심포지움이 나에게 준 과제 밖의 일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맺는 말을 겸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이상에서의 우리들의 고찰은, 오늘날 우리 나라의 황폐한 정신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1) 돈을 정점으로 삼는 가치 체계를 바로잡는 일,
- (2) 이기주의와는 구별되는 건전한 개인주의 정립,
- (3) 법질서의 확립,
- (4) 정서 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포함한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성공적 실시 등이 필수적임을 암시한다.

이들 선행해야 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책임은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은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국가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큰 까닭에, 올바른 정치를 외면하고 올바른 정치 풍토를 조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민의 가치관 교육 또는 정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정신 풍토를 조성하는 일 정부가 표면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는 뒤에서 후원만 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도, 한 나라의 정치 풍토가 그 나라의 정신 풍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민주적 정부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정신 풍토와 문화 일반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문화적 정서를 가꾸어 가야 하나

李 重 漢*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대안으로서의 문화적 정서이다. 보다 창조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지식이나 물질의 양적 소유를 통한 만족감·불만감 같은 것이 아니라 삶과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한 느낌에 있어 그 깊이와 무게를 자기 나름대로 감지하며 분별할 수 있는 감정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정서적·감정적 상태는 일종의 상황에 대한 평가, 상황의 어떤 특징에 대한 지각, 즉 어떤 종류의 인지를 포함한다”(R.S. Peters & C. A. Mace)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고찰했을 때 사람들에게 덮쳐오는 그 무엇”이라는 문학적 서술도 있다. 이러한 어떤 개인이 갖는 정서적 역량은 그 사회의 삶의 양식과 문화의 質을 결정하는 기초적 素子이다.

‘삶의 質’이라는 말도 이제는 자주 쓰이고 있다. 이 삶의 질이야말로 양의 개념이 아니고 더욱 물리적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삶의 질’은 사회복지, 사회적 만족도, 사회적 복리, 생활수준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일 수 있지만 특히 ‘인간의 행복감, 생활에 대한 만족감, 또는 불만’ 등에 대한 감정적 상태를 뜻한다고 정의된다(Dailey & Rouke).

이런 관점들에서 볼 때 지금 우리의 평균적 국민정서역량은 지극히 평면적이며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이런 취약성 속에서 자극적인 공격형으로까지 전환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대단치 않은 항목들에서도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있고, 또 끊임없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을 파헤쳐 보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물질적 量의 개념일 뿐이다. 비싼 것만이 사회적 가치로 통용되고 또 이 비싼 것을 모두 똑같이 갖는 것만이 충족감이 될 수 있다.

* 서울신문 논설위원

하기는 이러한 상황이 전면적으로 우리만의 경험은 아니다. 그 차원과 범위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산업적 발전이 일찍이 시작됐던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60년대 말부터 인지하기 시작했다.

1970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던 르네 마외가 베니스문화장관회의에서 했던 연설에 기억할 만한 지적이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커다란 空白, 위험한 공백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욕구와 갈망의 불만이다. 현대인은 일찍이 유례없는 욕구와 갈망을 느끼고 알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 놀라고 분노하고 있다. 욕구와 존재, 더 정확히 말해서 가능과 현실 사이의 거리에서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과의 거리는 새로운 몰이해와 敵意로서 구분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보다 더 역사적으로 비인간적이며 허무감을 심게 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야말로 서글픈 광경이다. 이것은 인간의 새로운 황무지이다. 수세기에 걸쳐 인간이 스스로 구축해 온 휴머니즘이라는 전통은 이제 이 황무지에 의해 부서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의 인식에서 인간은 보다 문화적 감성측면에서의 ‘삶의 質’ 논의를 시작했고, 이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 기초적 능력이 문화향유의 환경과 그 향유를 위한 소양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구조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문화의 권리’, ‘문화적 생활조건의 권리’라 규정하고, 이 권리들을 보다 높은 질적 수준에서 평등하게 향유토록 하는 노력은 곧 국가적 국민적으로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힘일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체계화되어 온 문화촉매운동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까지 진전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장하는 문화개발은 경제·사회개발과 이미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된 개발은 예술과 문화교육을 조장할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함께 이에 따르는 질적 욕구의 만족을 통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국가적 결속을 강화하며, 사회적 평화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적인 엘리트의 예술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렵다. 만족은 만족치 못한 사람과 문화에 굶주린 사람에게도 주어져야만 한다. 즉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소도시 지방주민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받았지만 문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문화적 활성화의 이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이념에 국민 모두의 문화적 정서의 증진을 위한 감수성교육은 오늘날 선

진국들에 있어 이미 시작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국가적 노력이다. 정책 표방의 요지 자체가 바뀌어 있는데, 예컨대 “문화를 교육·커뮤니케이션·환경에 연계시키고도 이를 지역분산에까지 정책적 배려를 함으로서 창조적 측면에서는 소수 집단까지, 수용측면에서는 비수혜계층까지 문화생활을 보다 크게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단계를 또 뛰어넘어 “개발의 모든 양상에 인간적 요소를 고려하여 문화적 목적을 부여하며, 이 속에서 국민들은 엘리트문화나 대중문화의 산물에 단순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문화창조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러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초보이며 기초적 단계인 학교교육마저 정서교육을 포기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국어교육은 문학교육이어야 하며, 문학교육은 곧 정서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 ‘문학은 독자에게 삶의 정서적 대안’이라는 생각은 이제 어떤 반론도 받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서교육은 ‘비평’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문학교육은 부딪쳐 있다. 문학교육이야말로 가치의 주입대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나 태도·참여의 실행을 개개인 학생들에게 맡겨야 함에도 교육자들은 너무 자주 문학강의를 자신의 비평적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로 보자면 이런 문제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교육마저도 규격화된 가·부의 단어선택형으로 만들고 있다. 그 알량한 국어교과서 한 권마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볼 필요가 없도록 정서적 접근은 배제돼 있다.

정서적 훈련의 기초가 되는 여타 문화예술영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육용 미술교과서는 가장 낮은 지질에 인쇄효과마저 최소로 고려되는 제작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음악교육 역시 ‘건전가요’ 정신만이 교육의 대상이다. 근본적으로 현장에서의 경험교육이 없다. 유럽 여러 나라들 중학교교육과정에 음악회 가기, 연주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엔 너무나 난처하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 중학생들이 모두 그들처럼 중학교과정에 20회 이상의 음악회를 가도록 한다면 과연 이들을 수용할 음악회란 있는 것인가 라는 현실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지금 우리는 참담한 현실과 마주치고 있다. 가장 최근자료로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학생생활 실태조사는 중·고교생들사이에 극단적인 이기주의·무절제·난폭화·의타주의들을 밝혀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실태는 더 극적이다. 90년 10월 韓日靑協세미나에서 발표됐던 한국청소년 약물남용실태는 전국 17개 도시 6천 2백명 샘플조사로서, 中·高

남학생 47%와 여학생 22%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 중 남 10%, 여 4%가 한달에 20일 이상 음주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푼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남 1.8%, 여 1.4%가 본드사용자였다. 이 증상은 최근 연료용 가스를 마시다가 질식사나 폭발사고로 죽는 청소년 증세까지 만들고 있다. 이 사망자는 90년 수사상 정밀검사로 찾아낸 숫자만도 97명이다.

오늘날 교육이 문화적 人性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결과는, 이것만이 아니다. 청소년 73%가 자살충동을 받고 있고(YMCA조사),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48%가 ‘접촉공포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自閉症 증상을 보이고 있다(대교문화조사). 한국 청소년선도회 파악에 의하면 90년도 가출로 신고된 청소년만도 4만명이고 추정으로는 6만명을 넘는다. 모든 高敎에서 매 학급당 35명 이상이 성적순으로 일찍이 진학을 포기하고 누구의 관심대상도 되지 않은 채 술집·오락실을 떼지어 떠돌고 있다. 이 死角지점의 청소년들이 상시 1백만명 규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겨우 개념적 표현으로서 ‘국민정서함양’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사회환경의 조건은 더 비극적이다.

도처에 특히 주거용 아파트에까지 술집과 퇴폐문화들은 산적해 있지만 문화정서 공간은 너무 적다. 공간이 혹 있더라도 그 안에서 ‘경험’할 프로그램은 또 더욱 없다.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는 한 번 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든다. 예컨대 오늘 우리의 영화관에서 연간 10편쯤의 영화를 보려는 시민은, 연간 1편도 보지 않은 시민보다 정서적 질과 역량에 있어 10편만큼 향상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히려 더 퇴폐화된 정서일 수도 있고 더 난폭화되고 황량화된 人性일 수도 있다.

이 주제의 결론은 그러므로 간명한 것이다. 일찍이 앙드레 말로가 한 마디로 정리했듯이 우선 “보다 탁월한 문화내용물과 만나게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탁월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체계적 문화감수성교육을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을 말하기보다 우선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부문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일별 하는 것이 더 쉬운 이해를 얻게 할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사회교육 전략은 오늘날 희망이 아니라 실시되고 있는 모델이다. 英國의 ‘아트센터’가 우선 그 하나이다. 예술인에게는 예술의 생활화를, 생활인에게는 생활의 예술화가 되도록 하는 거점으로서 ‘아트센터’는 다음

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보통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 시니어 코스 :

은세공/방적과 직조/창조적인 자수/뜨개질/매듭/손잡이 장식/보석
세공/녹음기술/모형비행기제작/사진(기초와 진보)/신디사이저/수학
적오락/요가발레/그림/기계도장(Plant Painting)/데생/어머니 워크샵

· 주니어 코스 :

모험적 워크샵/음악실작업/모형 비행기/보석세공/손잡이 장식/직조
/발레

· 워크샵 코스 :

연주 워크샵/록 연습실 제공/필름작업실 제공/시와 미디어 워크샵

· 지역단체 · 사회단체를 위한 프로그램 :

지역회의/낙시클럽/골프클럽/밴드/파티와 결혼식/음반제작

· 기타 통합 프로그램 :

영화상영(요일별 내용구분)/연극제작

(이것은 英國의 신도시 중 하나인 블랙넬 아트센터의 자료이다)

좀더 확대된 프로그램의 모델도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 예술프로그램들은 형태
별로 나누어 구성된다.

첫째는 기초교육 프로그램. “모든 학교들이 춤과 회화와 데생 혹은 드라마나 영
화에 있어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기초 소양교
육을 지역사회에서도 해야 한다는 관점의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감상프로그램. 이것은 연령별 · 성향별로 조직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70
년대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전 박물관 중 66%가 어린이를 위한 특별감상프로그램
을 갖고 있고, 56%가 지역사회학교에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셋째는 문화동질성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인간조건에 관한 지역사회
의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있다. 강습 · 워크샵 · 프로그램 제작으로
이어지고 그 영역은 거리劇, 재즈 세미나, 건축의 이해 등 지역사회의 모든 공간과
동원가능한 예술내용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새로운 창조에의 시도가 포함된다. 물
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구체적 느낌의 확인”이다.

넷째는 치료프로그램. 예술을 활용해 개인이나 집단의 전망을 개선하거나 바꾸
는 프로그램들이다. 노인프로그램도 이 영역에 들고, 죄수들 프로그램도 이 영역
에 분류된다. 음악 · 연극 · 독서들이 다 이 프로그램의 도구이다.

다섯째가 여가활동 프로그램. “미래의 성인이 창조적이고 우아하고 감수성이 있는 생활을 즐기면서 살게 하려면, 보다 교육적 환경은 일과 노동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가 이 프로그램의 지표이다. 그러므로 예술과 오락도 합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술적 오락을 예술영역에서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를 거부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쟁점사항이다.

여섯째는 생활의 질 프로그램, 여기에서 예술과 생활은 드디어 협동을 완성한다. “전 세대 賢者들은 예술과 인생을 같은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런 사회에서 예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개념이 아니라 환경이다. 예술은 개인적 훈련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유공간이 되어야 한다.”

“원시사회에서도 예술은 일상적인 경험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자기집 문을 장식하고, 돼지를 잡고, 춤을 추고, 아침이면 옷을 입고, 때로는 아버지의 보호를 강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술경험인 것이다.” 물론 오늘에도 많은 사람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미학적 고려가 가해져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현대의 생활은 예술적이라는 것 자체에도 사회계층적, 물질소유적으로 일상에서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이를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 두 프로그램의 모델을 통해,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의 질문은 우선 이러하다.

첫째,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의 문화센터화 대상거점(공공도서관·문화원·구민회관·문예회관)들에서 얼마나 추구될 수 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울 문화예술의 量은 있는가. 특히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순회시킬 가능성은 있는가.

둘째,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조직하고 진행시킬 요원들은 있는가. 있다하더라도 이들을 운영해갈 예산확보는 가능한가.

셋째, 공간거점별로 우선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이해는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상하게도 자기 영역중심의 고집스러운 모양지키기에 굳어져있는 일반적 문화양식이 있는데, 과연 각자 장르의 벽을 허물고 문화라는 시야를 보다 큰 개념으로 보는 각성은 또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 열림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가.

넷째, 이 전체의 전달망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 질과 양의 균형을 맞추며 지역간 계층간을 구분해 구성해야 할 요소들은 누가 정리해 낼 수 있는가.

다섯째, 개별적 프로그램의 단계적 수준의 구분 및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특별성향 프로그램의 창조는 어느 때에 가능한가. 예컨대 미디어의 변화 속에 새 미디어별로의 복합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나는 불가능한 과제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제나마 국민정서 함양작업에 나선다고 할 때 이러한 고려들이 충분히 전제·검토되지 않는 한 또 다른 폐해만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현존하는 우리 문화내용물들의 질적 수준’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안 보아도 좋을 프로그램들이 더 확산되고, 이들이 또 기득권을 가지고 문화적 거점과 프로그램들을 장악해 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지향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감수성만을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 형식보다 내용의 질을 먼저 보는 일을 해야하고 이 질에 의한 전달망의 구성까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들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 1)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거점별 (공공도서관, 문화원, 박물관, 문예회관, 구민회관 및 학교공간들) 프로그램 조직구조를 만들고, 이들 프로그램에 도입될 내용물들의 질적 기준을 정해보는 일
- 2) 거점별 실수요자의 요구와 실제 가능한 프로그램들의 차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이를 보다 가깝게 좁히는 방안을 만드는 일
- 3) 모든 프로그램들의 수요자계층별·수용단계별 구분을 해보는 일. 특히 교육과정에서의 커리큘럼화.
- 4) 모든 거점의 전체망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더 잘 유통되게 할 수 있는가를 강구하는 일
- 5) 거점별 문화센터로서의 특성화와 이 특성화의 거점별 역할분담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일
- 6) 모든 거점의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체를 이루는가를 통합해 보는 일
- 7) 그리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일

오늘날 촉매운동으로 불리는 ‘사회·문화 활성화’의 실천지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 ① 가능한 한 폭넓게 세련된 문화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 ② 사람들의 수용태도를 적절히 참작하는 현대화의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의 변형을 인정한다.
- ③ 대중문화와 상업문화의 가장 저질스러운 영향을 막도록 한다.
- ④ 주변문화의 개발과 강화된 경각심을 근거로 하여 보다 얻기 쉬운 사회적 성향의 문화를 창조토록 하며 그것을 통해서 방관자들을 국가 사회에 다시 통합시켜 그들을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지향이나 작업의 원칙들이 우리에게서 정립된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시간적 촉박성에 대한 전략이 또 따로 필요하다.

기본시설과 그 촉매를 아무리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현실과 현상을 뒤쫓아가는 속도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설의 재개편은 그것만으로도 몇 년이 걸려야 할지 알 수 없으며, 프로그램 측면 역시 보다 좋은 것의 객관적 평가까지 받을 수 있기까지에는 여타 모든 문화예술 장르가 균일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추정하기에 어려운 시간의 문제를 갖고 있다.

예컨대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부로의 이관은 현실화되었지만 이 공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조직·예산따기는 아직도 명목에 불과하다. 여전히 희망속에만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예산과 연관된 모든 공무원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그 이해력이 우선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보다 강력한 기능적 매체를 가져야만 한단데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이 매체로써 문화전담 TV채널을 독립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유일하면서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전략일 수 있다.

관념적으로는 기존 T채널이 문화매체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성공적이지 아니며 현저하게 효과적일 수 없느냐는 이미 과거와 현재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영적 운영이지만 기업적 운영구조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나름대로 TV매체의 속성을 그 속성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TV방송의 구조이다.

따라서 운영체계 자체를 독립된 목적으로 설정함으로써만 이 작업은 가능하다. 이 TV의 독립채널은

- ① 기본적인 문화감수성 교육
- ② 전통문화생활의 계발·보급
- ③ 최선의 청소년문화 계발·보급
- ④ 지역별 문화활동의 공유를 위한 교환보급

⑤ 국민차원의 문화창조성 증진 및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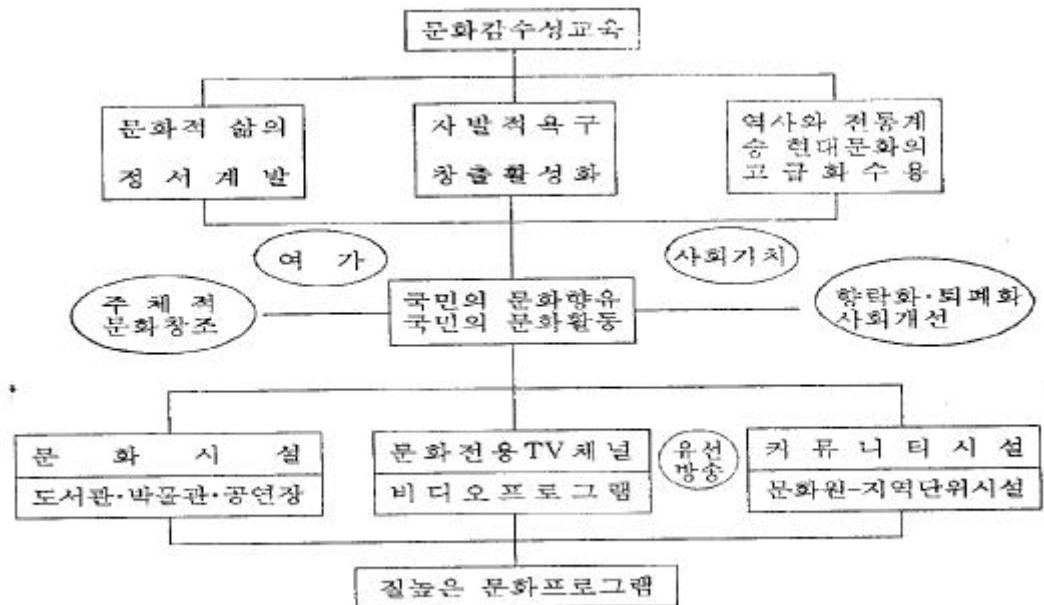
등의 프로그램으로 건전문화창출의 전략적 기능을 눈에 띄게 수행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디오매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TV와 함께 체계화할 수 있다.

오늘의 비디오수용 현실은 특히 퇴폐문화의 온상이다. 이를 막는 길은 비디오프로그램 그 자체를 우리 자신의 프로그램으로써 전환시켜야 하는 일이다. 질 높은 비디오프로그램을 생산 보급하는 일은 그러나 상업적 차원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직접 생산에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참여가 정책적으로 가능하면 현저한 효과를 가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선방송의 출발과 그 유선방송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수준으로 정착되어 갈 것인가는 오늘 이 시점의 상황으로 보아 역시 불행하지만 비관적이다. 문화저질화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 역시 제도적 검색이나 권유로 대처할 일은 아니다. 모델이 되는 유선방송을 공공적으로 창출 참여하는 작업만이 확실한 대책이다.

이상의 구도를 도표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이유나 논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으로서의 정서교육의 부활은 아마도 革命的 결단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현실적 요구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의 발전에 따른 삶의 양식과 그 선택에 있어서도 정서의 함양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국민 하나 하나가 다같이 정서적 안정감과 정서적 질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문화적 인권'이 기도하다. 이것이 국가발전의 새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 먼길이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 자신의 관점개혁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미래 우리문화의 조건은 무엇인가

金 容 雲*

우리는 전세대의 가치관을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격변하는 시기에 자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가령, 마을적인 인심, '우리'의 의식, 금의환향의 보람, 높은 교육열, 강한 평등의식 등은 그 자체로서 결코 부정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비리를 낳는다.

우리는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것과도 같은 의지로 새로운 문화의식을 창출해야 한다. 지난날의 정신적 유산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을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어울리도록 승화시켜야 하겠다.

앞으로 가치관은 산업의 다변화, 정보화의 추진으로 다양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가치관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기존의 사상, 종교(유교, 기독교) 등의 일원적인 가치체계는 무너지고 오히려 감각적인 흐름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인이 지닌 가치관의 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조선시대의 유교, 주로 규범과 형식적인 질서관
- 2) 식민지시대의 상처
- 3) 해방 이후의 반공 이데올로기, 군사적인 가치관
- 4) 마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정서와 고루한 윤리관
- 5)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로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에 흐르는 자학적인 태도
- 6) 지나친 정치참여 의식과 평등의식으로 인한 중우(衆愚)사회화

1.원형과 종교개혁적 의지

이번 걸프전쟁 중에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후세인의 행동이었다. 우리

* 한양대 교수

의 상식으로는 그는 미친 사람이다. 하지만 이라크의 대부분 국민들은 패전 후 까지도 후세인을 받들고 있었다. 미친 사람을 영웅으로, 또는 신격인 사람과도 같이 여긴다면 그 나라 전국민 모두가 미친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라크 국민 모두가 미친 것은 아닐 것이다. 저마다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들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심성이 있다. 그것이 곧 그 민족의 원형이며 민족원형이 국가 차원에서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국민의 심성 역시 이따금씩 다른 나라 국민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할 때가 있다. 나비가 불 속으로 덥비는 일은 분명히 미친 짓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비의 원형이 그것을 결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개성(원형)에는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단점도 곁들여 있으며 그 역도 또한 참이다. 그러기에 원형에는 우열이 없다. 원형과 시대적 상황과의 어울림의 정도가 번영 또는 좌절을 자아낼 뿐이다. 때문에 어느 한 시기에는 적절했던 원형도 새로운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수가 있다.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 상황에 어울리지 못하여 많은 갈등을 낳는 것이다. 일본인의 별의 집단과도 같은 원형은 전국시대의 가치관에 여과됨으로써 마침내 '천하제일주의'의 국시가 형성되었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 범위에서 일등(최고)이 될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전쟁에는 사상이 없다. 오직 눈앞에 나타난 적을 쓰러뜨려야만 했다. 그러한 생활태도가 마침내 기능중심주의적인 사상인 천하제일주의를 낳았다.

천하제일 정신은 평화시대가 오래 계속되는 동안에 기술존중, 분업의 기능을 조장하는 윤리를 마련하게 된다. M. 웨버가 지적한 프로테스탄트의 천직의식에 버금가는 윤리성을 일본사회에 심어놓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명치유신 후에는 일본 봉건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는 실패했다. 요컨대 한국인은 원형을 시대적인 상황에 어울리게 만들려는 시도, 이를테면 종교개혁과도 같은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2. 새로운 문화정책의 필요성

한말, 조선은 병적인 형식주의, 평등주의 등이 가속화되어 완전히 냉사회화(冷

社會化)되어버렸다. 한국인 개개인을 주목하면 거의가 똑똑하고 비범하다. 특히 일본인과 비교해보면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다. 일본 명치유신의 대공로자 카스(勝海舟)는 일본인으로서로는 드물게 거시적 시야를 지닌 인물이었다. 일본에서 정한론이 거세게 거론되었을 때에도 “두고보아라. 머지않아 조선에 대인물이 나와 혁신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비록 나왔다하더라도 냉사회의 정신유산을 지닌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하루빨리 이 냉사회적인 정신유산을 청산하고 활기 넘치는 건전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인 것이다.

3. 가치관의 부패

우리 나라는 제도적으로 부패하게끔 되어 있다. 첫째 이유는 교육의 목적에 있다. 교육이 출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누구나 학교를 나와 출세하여 돈만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제일의 향상심, 세계제일의 교육열은 모두가 출세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인격을 다듬고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뜻은 아예 처음부터 없다. 조선시대 관리가 부패한 이유도, 과거의 목적이 금의환향, 즉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非理·不正은 이미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출세가 목적이기에 수단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출세의 척도는 돈이다. 그러기에 기회가 있는 대로 먹어야 했다. 교육을 받을 때부터 이미 출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항상 그 기회를 노리고 있기 마련이다. 제도적으로 不正, 非理를 막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목표, 즉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지적 자극을 가하면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새로운 문화의식이 출세 지향적인 가치관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간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잘 살아보세’의 구호는 ‘보람있게 살아보세’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학력고사로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측정하지 못한다. 수많은 응시자들에게 하나의 서열을 정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암기위주, 문제풀이의 능력 측정이다. 이러한 시험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시되고 기계적으로 재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만 시키고 있는 것이다. 非生産性에 관한 한 조선

시대의 과거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목적도 고등고시, 의사시험, 기능사시험 등..., 온갖 국가고시에 있다. 이는 학력 고사에 기반을 두고 개개인의 가능성이나 창조성보다는 비생산적인 암기력을 요구한다. 조선왕조가 은자의 나라로 5백년 동안이나 지탱되었던 것도 조선시대 엘리트층이었던 사대부의 비생산적인 태도에 기인한다.

오늘날 한국의 부패는 출세를 위한 교육, 획일적인 엘리트의 배출, 그에 따른 무창조, 무활력에 있다. 과감한 문화정책과 교육개혁만이 한국 미래의 관건이 될 것이다.

4.약점을 알자

한국사회의 가능성과 병폐는 모두가 한민족의 군질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군질적이기에 신속하게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한 자학과 좌절의 허약함을 동시에 안고 있다. 오늘날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대중사회의 현장에서는 다양화된 사회의 윤리와 더불어 자율성의 발휘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가치관이 요청된다.

서양 철학사는 소크라테스 이후 전통(원형)에 대한 반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소크라테스는 시대적 상황에 무조건 따르는 국가 존립의 형식에 위험을 경계하였고, 아테네 민주제의 위험을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아테네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지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서 결국 독배를 마셔야 했다. 그것은 사회와 시대를 지배하는 풍조의 시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F. 베이컨은 전통과 시대, 그리고 사회의 우상을 타파함으로써 사회는 성장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 J. 듀이는 관습(custom)의 모순을 자각하고 충격(impulse)을 받을 때 지성(intelligence)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적 자각만 있다면 그 시대의 분위기는 승화될 수 있다. 한편 시대적인 상황에 무비판적인 추종은 타락의 원인이 된다. 현재 한국인이 안고 있는 병은 바로 국민적 자각이 한번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민족의 원형은 자각과 함께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화랑정신은 한국인의 원형 위에 유, 불, 선의 정신을 소화해낸 것이다(최치원). 신라의 당시 범파라다임은 젊은이의 윤리성을 높였고 마침내 민족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게 했다. 우리는 이들 철학과 교훈을 되새기며 마음의 가다듬음을 요청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기마민과 농경민을 조상으로 모시면서 그 두 가지 문화사조를 번갈아 체험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점 농경민적인 경향이 강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마민족 기질이 깊게 잠재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밖으로 표출했다. 조선 초기에는 변혁에 따른 적극적인 문화의식이 자각되었으나 거듭 동일한 가치관과 생산양식에 원형은 활력을 잃었고 조선에는 거의 완전한 농경적 생활을 강요당하면서 쇠국체제 아래 매우 강한 보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는 36년간의 일제 식민시대로 이어졌고 마침내 한민족은 제대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신장시킬 기회를 더욱 억제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인의 의식세계는 경제의 늪에 빠져들었으며 物神숭배에 도취되어 적극적인 문화의식을 상실했다.

최근의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한국인은 그 동안 오랫동안 동면상태에 있었던 진취적 기질을 발휘할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각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자극으로 깨어난 것이다. 냉철한 이성으로 스스로의 방향을 자각한 것이 아니다. 전근대적 가치관으로부터 산업사회로 이행할 때도 아무런 정신적 성찰이 없었고 또 90년대 정보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변혁의 시기에도 그에 부응한 내적인 반성이 없다는 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5. 새로운 시대의 목표

우리의 미래는 단순히 현재의 직선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정보화시대이기에 부의 창조는 교육과 문화적 의욕 등이 빚어내는 지혜에 입각한다. 인간의 목적이 오직 부의 축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시기에 있음을 의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다움과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다. 그 작업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의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경제성장은 국민에게 일할 마음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박정희시대의 잘 살아보세의 구호는 60년대의 절대빈곤에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그러한 구호는 설득력 이 없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도록 새로운 철학이 창출되어야 한다. 일에 대한 새로운 문화의식과 도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M. 마르크스

한의 말대로 부족적 사고와 효율성의 시대이다. 한국인의 생애적(生愛的), 마을적인 원형이 능률적일 수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적 갈등을 충분히 소화해내야 제대로 도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새로운 부족사회는 원시적인 부족사회가 아니라 전자미디어를 통한 광역에서의 상호의존적인 사회이다. 원초적인 한국의 좁은 마을의식이 광역의 상호의존으로서 승화되어야 힘을 얻는다.

우리는 유사이래 최대의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사의 흐름은 한국의 분단을 해소하고 한국의 평화가 세계사적인 문제해결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또 한국인의 생애적, 마을적 원형은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수평적, 부족사회적 조건에 적절하게 적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60년대 이후 한국의 발전은 국민에게 명확하고도 단순한 목적, 즉 경제적 발전이라는 표어가 제시되어 왔다. 그 동안 반공이란 이름아래 도외시되어 온 통일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앞으로 속히 해결할 문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1) 90년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통일이다.
- 2) 미국, 일본, 소련,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런 변화를 이용할 수 있는 큰 안목을 지닌 젊은이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 3) 국내 행정기구의 재편성(지역문제의 해소 차원)이 있다.
- 4)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 5) 윤리문제(특히 공개념과 소득차원)와 청소년문제, 다양한 사회에 어울리는 올바른 직업사상(正業)
- 6) 도시의 거대화 문제

경제성장과 국제화, 정보화의 추세가 가치관의 다양화를 가져오고, 규범주의적 도덕은 자연법의 도덕관, 이를테면 감수성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의 보급,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계몽적인 노력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시민적 공동의식, 자연주의, 자연적인 관용과 책임감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오직 교육만이 담당할 수 있다.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등과 같이 계몽운동이 크게 요청된다.

한국민은 틀림없이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어 앞으로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요를 맞이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현상만을 보더라도 물질적 풍요로움은 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부는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현상이 민족, 국가차원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행, 불행은 물질이나 외

부로부터의 영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싫건 좋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정신적인 유산과 과제를 안고 21세기를 맞이 한다.

6. 통일의 길과 젊은 세대에의 바램

우리의 통일문제는 ‘잘 살아보세’의 구호만으로 경제개발만을 서둘러 온 남한의 국민과 경직화된 주체사상으로 정신 무장된 북한의 주민이 함께 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적인 민족적 신념의 창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민족원형의 기반에서 융합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체사상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래 한국의 반공교육이란 ‘때려잡자 김일성’, ‘말 많은 자는 공산당’식이었다. 그러나 이성적인 접근 이외에는 그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

주체사상은 한국적 마을의식에 사회주의적 이론을 삽입한 것이다. 그것을 민족 국가 형성에 적절하게 확대하여 교묘한 정치이론을 만들었다. 일부 남한의 학생들이 주체사상에 호감을 갖는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6·25 직후 부흥사업에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버이 김일성 수령이란 호칭부터 가부장적인 마을의식의 확대이다. 어른에 대한 순박한 마을 농민의 존경심을 확대하여 국가체제에 적용시킨 것이다. 김일성이 어버이로 격상되는 한편, 철저한 중앙집권적인 지도체제가 채택되고 산업의 국유화·집단농장화가 실시되고 이것을 천리마운동으로 가속화시켰다. 근대화는 국민국가의 건설에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마을 구조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통한 국민국가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전통을 바꾸는 엄청난 에너지는 그대로 어버이 김일성상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된다. 즉 전통적 마을의식을 불식하고 사회주의 국민국가를 형성하게 한 에너지는 수많은 숙청을 가능케 하였고 강제적인 국민의 동원을 일상적으로 실시했다. 그리하여 김일성 일가를 성가족화 하고 만다 전쟁의 위협, 숙청의 매질, 당에 대한 참여의식이 상승작용하여 김일성 우상화를 가능케 한 것이다. 김일성의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미국과 남한에 대한 증오심, 전쟁의 공포 등에 의한 긴장 속에서 하나의 마을, 인민공화국을 의식하게 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한 것이다. 민족의

자주, 자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민족자립론이 나르시시즘(자기도취)을 촉진한다.

2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의 마을로 설정하고 김일성을 아버지로 삼으려면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사찰, 정치공작으로 죽음의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사회 전체를 경직화시킨다. 북한이 감옥과 같다는 표현도 결코 과장만은 아니다.

이러한 북한의 실상에 맞서 남한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했다. 그러나 그 발전의 정신적 배경은 앞에서도 몇 번이나 지적한 바와 같이 잘 살아보자는 구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극단적인 물질주의였다. 포식황음(飽食荒淫)은 물질숭배의 산물이다. 소득의 증대가 문화의 창조에 이어지지 않고 과소비 문화를 지속하게 된다. 대중사회에는 선비가 숨을 못 쉰다. 원래 한국인의 의식에 생애적인 것과 함께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내재하고 있다. 나르시시즘, 열등감, 물질숭배는 종이의 앞, 뒷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벼락부자의 과소비, 싹쓸이는 같은 심리의 표현이다. 열등감을 물질로 보상하려는 심리이다.

북한이 지나친 정신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경직화된 제도에 허덕이고 있다면 남한은 지나친 물질주의 때문에 국민적인 구심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J. A. 슈페터는 ‘자본주의는 번영하기에 망한다’고 했는데 한국인은 그간의 가난을 보상받기 위해 경제적인 번영을 소비와 향락으로 조장시키는 필연성을 그 내부에 지니고 있다. 임금이 상승하면 할수록 근로의욕과 생산능력이 떨어져간다는 통계도 나온다. 여기에 한국적 속물근성(snobery)과 물질숭배(fetishism)가 등장한 것이다. 속물주의란 간판, 지위에 집착하고 상류층에 편입될 것을 동경한다. 유명인, 상류계급, 권력층과의 가까움을 자랑하고 KS마크나, TK사단과 같은 것을 내세운다.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경멸하고 무시한다. 같은 한국인 사이에 일등국민과 삼등국민이 나오고 지역감정이 조장된다.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쳐 6·25를 겪으면서 유교의 뿌리인 정신적인 금지로 살아간다는 선비정신 같은 것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그리고 재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정하는 경향이 나왔다. 오늘날의 양반은 재벌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권력이 밀착하게 된다. 부동산, 특히 땅 소유 등은 사회적 위치이다.

이러한 속물근성은 사장님, 박사님을 대량생산한다. 한국사회가 속물화된 좋은 보기는 학벌주의, 지역주의에 잘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교육열은 학문을 위함이 아니라 속물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자녀를 KS마크와 같은 집단에 편입시키기 위해서이다. 2공비리, 3공비리, 5공비리 등이 그대로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성보다도 학력, 재력, 지위를 높이 평가하는 한 한국의 병은 치유될 수가 없다.

속물주의, 물신숭배는 자신의 정신성에 자신이 없는 데에서 나온 일종의 열등의식의 발로이고 그것이 곧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짧고 좁은 시공 속에서 넓은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대상에 눈을 뜨지 못한 채 폐쇄적인 생활을 거듭하다 보면 나의 생각은 남과 비교할 여지가 없다. 남을 제대로 평가할 줄도, 또 나와 남의 관계를 제대로 확립할 줄도 모른다. 이럴 때 열등의식과 나르시시즘이 나타나는 것이다.

민족사는 각 시대의 요청으로 이어져 왔다. 박정희는 한국민의 염원인 근대화(경제성장), 민주화, 남북통일 가운데에서 근대화만을 택하였다.

막스 웨버는 '정치란 단념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정치가는 언제나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단념할 줄 알아야 한다. 단념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된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윤리성만큼은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 목적 하나만을 성취하면 된다는 집념아래 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윤리성을 망각했다. 그가 뿌린 씨는 공업화와 더불어 물신숭배의 토양 속에 큰 병폐를 낳았다. 민족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이고 노태우정권의 역할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시기적으로 그러한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관건은 오직 강력한 윤리성이며 지도자의 사명감이다.

또한 막스 웨버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관계를 논한다. 그가 정치를 두고 '단념의 기술'이라고 한 것은 단념할 만큼 강한 의지를 윤리성이 지탱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의 이라크의 문제는 이라크와 쿠웨이트간의 민족문제에서 출발하였다. 또 한편으로 유테인이나 중국 화교의 경우처럼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에 유입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문제가 있다.

저마다의 민족이 민족원형의 의지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남북통일 문제도 이러한 흐름의 현상에서 전개된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날의 약점과 병폐를 극복해야만 새로운 시대를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대의 정신적 병폐를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새 시대의 번영을 발휘할 수 없다.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일은 시대적 상환의 인식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의 원형을 자각하고 미래의 환경에 맞도록 승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폐는 마을적인 한국원형과 공업사회의 갈등에 있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갈등과 좌절을 청산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갈 것이다.

7.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길

정권은 정보화사회의 현실 앞에서 운신의 폭을 겹겹히 좁혀가며 생각해야만 했다. 6·29 이후의 자유의 범람은 강력한 질서유지를 요망하는 집합적 무의식을 국민 사이에 형성하게 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국내외적 분위기 속에서 군대가 등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교육목표를 바꿀만한 문화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훌륭한 전술일수록 기교가 많아서는 안되고 당당하고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한다. 정보사회의 특성 중의 하나가 정보의 범람으로 일반국민이 정치적 정보를 갖는 것이다. 정치인의 역할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애국적인 외침이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이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가치관이다. 도시적인 질서와 공의식이다. 가문이나 지연을 우선시하는 현실은 근대국민국가는 고사하고 아직도 부족국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즉 오늘날 세계수준으로 따진다면 중진국의 의식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세계사적인 정보화, 국제화의 물결에 뒤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큰 불행이다.

르네상스의 영광은 이탈리아에서 페스트의 만연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죽어 가는 극한상황과 내란이 되풀이되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식에 눈뜬 그들은 위대한 르네상스의 문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독일은 유럽의 후진국이었다. 무책임한 왕권 때문에 내란이 그칠 날이 없었고 국민들은 용병으로 팔려갔으며 심지어 왕은 그 대금으로 불꽃놀이를 즐길 만큼 부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에 도전하였다. 그리하여 독일 고전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걸쳐 대 문호 괴테, 실러가 나오고 철학자 헤겔, 쇼펜하우어가 나왔으며 대 음악가 베토벤을 역사무대에 올려놓았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우리도 원형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다. 이는 욕망보다는 희망, 물질보다는 인간을 우선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은 생애적이고 강한 생명력이 있다. 희생적인 지도자와 건전한 문화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뛰어난 힘을 발휘한다. 이제 더 이상 자학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1세기에 적응할 문화국민으로서의 한국인의 원형을 살펴보면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각자의 자각과 함께 고쳐나가야 하겠다.

1) 강한 참여의식(의병운동)의 승화다. 제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한 수용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용소는 강한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나이 먹은 유대인들은 자신을 희생시켜 젊은이들을 탈출 시킬 것을 계획, 손을 잡고 모두 철조망에 몸을 던진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몸을 밟고 탈출하게끔 한다. 우리의 의병운동이나 3·1운동도 맨손으로 왜적과 싸워 민족의 명맥을 유지한 거룩한 희생이었다. 이후의 세대가 이 희생을 긍정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적응하며 각자가 맡은 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선조들의 희생을 살리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칫 그 뜻을 오해하여 작은 일에도 너무나 쉽게 거리로 뛰어나와 데모를 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선열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다.

2) ‘팔은 안으로 굽히는 마음’이다. 이는 지역감정을 유발시켰으나, 한편으로 애郷심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 이 애郷심을 보다 넓은 공간관, 시간관 위에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넓은 시야를 지닌 문화활동을 권장한다.

3) ‘강한 교육관’으로, 단순히 출세를 위한 교육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이 유도되어야 한다. 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각자의 보람을 찾도록 한다. 즉, 정업(正業)사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①의식주의 해결 ②적극적인 창조성의 발휘 ③사회에의 공헌 등을 목적으로 한다.

4) ‘마을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도시적인 가치관’이 심어져야 한다. 한국적인 ‘멋’의 정신은 소박하고 농촌적이다. 이것에서 벗어나 세련된 모습으로 세계적, 범 인류적인 것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토 론 내 용

〈참 석 자〉

사 회 이 광 훈(경향신문 논설위원장)	서 연 호(고려대 교수)
발 제 김 태 길(서울대 명예교수)	이 상 만(음악평론가)
이 중 한(서울신문 논설위원)	공 종 원(조선일보 논설위원)
김 용 운(한양대 교수)	정 연 태(한국영재아교육협회장)
토 론 정 희 경(계원예고 교장)	신 찬 균(국민일보 논설위원)

이광훈 : 김태길 선생의 주제발표를 요약하면 “공동체의식이 근대화·산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너지고, 정신적인 빈곤상태를 빚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교육이 실패하고, 졸부심리와 이기주의로 궤도를 이탈한 개인주의가 만연된 상태에서 건전한 개인주의의 정립과 법질서의 확립, 정서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포함한 전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정희경 : 김태길 교수의 제안은 거의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동감을 주는 분석이었다. 1915년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문화의 단절과 역사의 단절 속에서 대한민국의 살림을 시작했고 건전한 국민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전에 경제발전과 근대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결의 문제를 소용돌이 속에 두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경제제일주의·성취제일주의 속에서 경쟁과 대결을 해온 것이 현대사 속의 우리 모습이었다. 교육제도 국가적 과제에 동승하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인간교육의 토대를 이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토대 자체를 잃어버렸다. 때문에 교육이 입신양명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쓰여졌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에 있어서 정서 순화와 정신적 풍요를 위해서는 문화적인 갈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그러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했던 것을 크게 반성해야 한다. 두 번째 에브라함 마즐호의 인간의 욕구에 대한 단계적인 설명을 인용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거칠고 타성적이며 1차적인 욕구나 2차적인 욕구에 고착되어, 사회전체가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나아가 문화적인 심리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의 풍요로운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욕구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스스로 즐거움과 가치를 찾는 교육의 부재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1차적인 욕구에 고착되어, 부단한 재창조의 갈증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박탈한 교육을 실시해온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입신양명의 도구로까지 삼는 사회가 우리를 메마르고 거칠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신적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해방 후 60년대까지 우리는 낡은 우리의 것을 벗어나기 위한 극단적인 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는 우리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세는 앞으로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가꾸는 겸손함과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되 우리의 것으로 변형시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광훈 : 결국 교육문제로 귀결이 되었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이 인간교육의 측면을 상실하였던 점과 창조적으로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다음은 서연호 교수의 의견을 듣겠다.

서연호 : 질문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겠다. 공공적인 언론 기관이나 연구 기관이 중심이 되어 소위 2000년대 후기 산업사회 내지는 2000년대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적합한 문화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즉 각계 각 지역 전문가들이 앞으로 국가목표에서 특히 정신문제, 문화예술의 향수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현상타개에만 급급하거나, 정책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불안감과 혼선을 갖게 된다. 이제까지의 시행착오를 극복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목표에 대한 장기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를 꾸준히 실행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에 대한 훌륭한 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매체나 학문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대학의 정서교육에 대한 집중지원이나 선별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결국 교육의 면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이고 새로운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 된다.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정서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광훈 : 국가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김태길 선생으로부터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듣겠다.

김태길 :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정부의 큰 역할이 필요한데, 이때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기관이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여 기본목표를 달성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이광훈 : 이어서 서울신문사의 이중한 선생이 발표한 “어떻게 문화적 정서를 가꾸어야 하나”라는 제 2주제에 대하여 이상만 선생의 의견을 듣겠다.

이상만 : 발표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겠다. 첫째 문화채널의 독립, 즉 앞으로 생길 유선TV의 문화채널화이다. BBC의 경우 양식 있는 미술가들의 혁명적 결단으로 오늘날 영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두번째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민속전통을 지켜 가는 에너지는 매우 생산적인 것이다. 좀더 철저하게 의식화해서 지켜나가고 그것들 교육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서가 과거의 전통과 오늘을 이어가면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종원 : 문화적 정서의 함양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정서, 생리적인 정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이다. 우리는 인간본성에 바탕을 둔 기본 정서를 키워나가는 운동부터 해야 한다. 즉 우리 가운데 있는 본래적인 감성을 찾아 키우고, 그것을 가로막는 제여건을 제거하여 본래적인 우리의 정서를 키워야 한다. 두번째로 문화적인 정서를 키우는데 있어 그 밑받침인 자연환경과 주변환경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것의 개선이 없이는 정서의 함양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서의 함양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각 도시와 지방, 정부의 정책적인 받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신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는 전인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양성에 힘을 기울이는데서 출발한다. 자기부터 몸을 닦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세를 각자가 키워나갈 때 공동사회의 윤리도 형성될 것이다. 이처럼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교사의 인격수양이 문화적인 정서 함양의 선결적인 요건이 된다. 더불어 가정의 역할이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중한 : 공종원 선생이 보충하신 부분에 감사한다. 가정교육의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작년에 실시한 ‘청소년에 대한 어른의 시각은 어떠한가’하는 측면의 대규모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몇 가지만 말하겠다. 30%가 자녀들의 취미를 모른다고 응답했고, 65%는 자녀들이 보는 책이나 잡지를 모르며 자녀가

듣는 음악의 종류에 대해서는 40%가 모른다고 했다. 반면에 공부의 강요는 부모로서 당연하다는 응답이 74%, 청소년의 여가생활이 공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응답이 60%였다. 더구나 시험기간동안 각성제를 복용해도 좋다가 무려 7%나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문화의 인식변화가 절실한 것이다.

이광훈 : 다음은 김용운 교수께서 발표하신 “미래 우리 문화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연태 선생의 의견을 듣겠다.

정연태 : 문화창조는 영재들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영재는 종전처럼 머리가 좋거나 지능이 높다는 결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다. 영재아는 전문가에 의해 아이의 재능이 앞으로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보통 아이들과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아이를 말한다. 최종적인 결과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몇 가지 검사를 해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영재아들이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수치를 보면 미국은 3~5%정도, 영국에서는 2%정도로 보고 그 중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길 사람이 나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법으로 인해 그런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수업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은 자연발생적인 영재가 출현하여 문화발전을 이룩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어릴 때부터 소질을 발견하여 그 능력과 소질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7년 동안의 교육성과를 보면 국민학생이 대학생 수준에 이르고 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성장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가르쳐서 영재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학습동기의 유발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교육당국에 검토를 바란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런 태도가 개선되어 새로운 미래의 찬란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될 영재들의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광훈 : 마지막으로 신찬균 선생의 의견을 듣겠다.

신찬균 : 국민정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문화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취지로 이 모임이 개최된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문화부에서 존경할만한 사람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정서의 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살아온 결과 가난은 물리쳤지만 부정부패, 인권탄압, 빈부격차 등의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목적을 위

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회가치관이 정서불안을 유발한 것이다. 도박을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한다는 한탕주의가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체제의 설득력이 무너지면서 새 시대를 향한 진통이 계속되고 사회이행의 욕구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만 절대빈곤의 해소가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다. 우리의 삶을 소유 양태의 삶에서 존재 양태의 삶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윤리와 문화창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가치관과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자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다. 과거의 농촌에서 우리의 미덕으로 여겨지던 두레나 단합을 위한 동제 등이 사라졌는데, 오늘날 도시에서 우리의 정서를 운택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드는 가치관은 없는지에 대해 말해주기 바란다.

이광훈 : 김태길 선생은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둔 공동체의식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고 김용운 선생은 마을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해주기 바란다.

김용운 :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다. 이를 위해 조그만 지엽적 의식이 도시적인 넓은 만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식으로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능보다는 정서를 살려온 우리의 태도가 현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으니, 기능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겠다.

이광훈 : 정부의 책임과 이해, 지원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문화부의 발족 이후에 기대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문화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어령 장관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다.

문화부장관 : 실제로 이런 큰 모임이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가시화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지라도 전하고 싶다. 우선은 기존의 시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찾아가 보여주는 예술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형무소나 병원에서의 전시회 등이 그런 일련의 작업이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그림엽서에 시인이 직접 쓴 최신작을 실어 보내고 있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문화부의 일은 크게 말해서 제도적인 변화, 행정적인 변화를 일으키

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문화교육으로 옮기려고 한다. 움직이는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학교로 하나의 생활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을 만들어가겠다. 또한 산업도 문화화하겠다. 상품의 예술화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상의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변화이다. 더불어 행정적인 협조와 문화적인 사업을 펼침으로써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실천에 옮기겠다. 오늘의 절망적인 위기의식을 서로서로 나누어 서서히 기적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손과 발이 되어 합심으로 노력하자.

공종원 : 모든 문화공간은 국민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감안하여 지어야 하며, 동시에 그 접근 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정서의 문제를 실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토대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광훈 : 참석자 중에서 질문을 하기 바란다.

박근형 : 문화예술의 부흥과 그 결과인 정서함양은 정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기업활동과 국민의 소비활동과의 관계에 있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이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헌이나 자연 보호에 대한 공헌에 따라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이나 소비단체의 의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와 소비단체에 대한 방향의 제시를 문화부에 바란다.

윤병일 : 점자도서관을 22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10년이 지나서야 약간의 보조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운영비의 20%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매년 늘어나는 시각장애자들에 비해 점자도서관과 녹음도서관의 숫자는 합해서 6군데밖에 없어 태부족인 실정이다. 더구나 그나마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을 바란다.

이광훈 : 문화예술 향수환경의 확대를 통해서 국민정서의 함양을 이루자는 주제를 놓고 매우 유익한 토론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으로 토론회는 전부 마치겠다

I. 문화경제와 경영

수익성의 문제	/ 126
공공해결책의 애매성	/ 128
수요의 경영기술	/ 129
생산물의 확장	/ 131

* 본고는 1991년 5월 3일(금)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자비에 그레프 교수 초청강연회의 발표요지 및 토로내 요을 전제한 것임

문화경제와 경영

자비에 그레프*

문화경제는 문화활동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말하자면, 문화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익과 문화활동에 드는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활동의 비교적 분명한 영역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문화경제를 경제활동에 대한 문화활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오늘날,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유형의 경제연구가 중요성을 갖게 되는가?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부 국가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활동의 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단독적이든 아니면 관광과 같은 그 밖의 활동들과 결합되어서든, 문화활동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평균소득의 증가와 함께 고급재화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고급재화의 전면에 있는 것이 문화이다. 셋째, 문화활동이 여러 활동들과 함께 음반, 서적, 텔레비전, 비디오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표현과 창조가 없다면 그러한 산업들은 그 원천을 잃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활동에 대한 검토는 경제학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W. Baumol의 작업과 함께, 영국—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에서는 A. T. Pecoock의 작업과 함께, 독일에서는 W. Pommerehne의 작업과 함께 발전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발전되었다.

게다가, 주변적인 것일지라도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협의의 문화활동 총량은 G. N. P.의 대략 1.5~2%를 나타낸다.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소위 문화활동이라고

* 프랑스 파리, 제 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교수,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 교수

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산업인구는 대략 1%가 된다. 그러나 시청각설비기재와 초와 관련된 소비자 지출의 전 영역을 고려하면 G. N. P.의 4.5~5%라는 숫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엄청난 숫자이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단일 분야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므로, 보다 일반적인 시청각문화라는 분야를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어떠한 유형의 질문을 다루기를 원할까? 예를 들면, 극장의 입장료는 얼마여야 하며, 책값은 얼마여야 하는가? 당국이나 민간기관이 지급하는 수많은 지원금들은 정당한 것인가? 공연예술은 그 결여된 재정적 수단을 구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가? 그림의 값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박물관에는 어떻게 투자하는가? 등등 이러한 질문들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술가의 소득과 생산성의 이익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문화활동에 대한 경제분석이라는 이 새로운 장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그 전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질문들 전부를 하나 하나씩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의문이었던 것부터 시작하겠다. 즉, 왜 이러한 문화활동들은 그토록 수익성이 없는가? 그리고 왜, 시장에 의해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것 이외의 재원을 찾아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여러가지 해답들을 보게 될 것이다.

1.수익성의 문제

도처에서 문화활동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활동이 시장의 자율 기능으로부터 그들 재원의 미약한 부분밖에는 끌어내지 못하며,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의 예산과 문체후원 혹은 민간 스폰서에 의해 재원이 충당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사회적 불평등이다. 많은 수의 개인들은 문화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낮은 소득을 고려할 때 가능한 계산이 아니다. 그들의 낮은 소득은 그들로 하여금 생계에 관련된 소비에 재원을 집중시키게 만든다. 생계에 관련된 소비에서는 그림 구입이라든가 음악회 출입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문화활동에 대한 보잘 것 없는 수준의 보수는 문화활동이 소비주체의 소비기능들에 있어서 고급재화를 형성한다

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두번째 해석은 아주 유명해졌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공공보조금에 대하여 정당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해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문화활동은 생산성의 이익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전무한 활동이다 라는 것이다. 몇 곡의 음악작품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10년 전이나 100년 전보다 더 빨리 연주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가의 작품들도 언제나 같은 수의 배역이 등장한다. 만일 이러한 문화활동 안에서,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보수와 같은 정도로 보수가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논리상, 문화용역의 판매가격의 상승과, 그 용역에 드는 비용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는 불가피하다. 국가나 민간문화후원자가 시장 이외에서 필요한 활동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그 판매가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한, 관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활동은 사회에서 여타의 활동들에 비하여 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언제나, 공급가격을 올리는 요인과 수요가격을 낮추는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시장에 대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비록, 문화활동이 사회에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논지나, 당면문제들의 해결책을 추구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야기될 사회적 일치에 대한 요구 등에 의거하여, 사회에서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균형상태는 필연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날 것이며 문화활동은 거의 중요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해결책은 보다 만족스러운 활동 수준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때 사람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공공조직의 창설과 같은 직접적 형태하에서의, 혹은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간접적 형태하에서의 공공개입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관점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관료주의, 예산증가 요인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훨씬 더 적절한 두 번째 해결책은, 시장에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부유한 일부 소비자들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수요보다도 더 광범위한 문화소비수요가 사회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문화소비에 의해 초래되는 여러 가지 유용성들에 대하여 고찰한다면, 그리고 동일한 유물유적이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비양식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수많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 시장을 출현시킬 수 있다. 문화창조는 처음에는 다량의 문화소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진정한 문제는, 적합한 모든 소비양

식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상의 몽타주를 강구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수요의 경영기술’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은 어떻게 보면 앞의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창조는 그 최초의 창조장소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비되어지는 수많은 시청각활동들의 상류에 위치한다. 특히 텔레비전과 ‘상자 속 문화’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그것이 문화활동의 정확한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문화활동의 시장을 확장시킴으로써 예술 및 예술창작을 위한 중요재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 즉, 전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된다. 만일 문화가 수많은 시청각 프로그램의 모태가 되고, 그리하여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인 프로그램산업의 수단이 된다면, 상응하는 이윤의 분배가 문화창조의 이익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 공공해결책의 애매성

공공차원이나 민간차원의 문예후원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한 가지 해결책이 될 것이다. 민간차원의 문예후원에 관하여는 두 가지 한계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것은 종종, 국가가 승인한 세제상의 이익으로 표현되는데, 민간차원의 문예후원을 부분적으로 공공차원의 문예후원으로 귀착시킨다. 세수상의 손실로 표현되는 공공문예후원의 비용은 매우 높은 액수이다. 그것은 경제상황에 따라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제상의 이익이 강화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문예후원이 증발해 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다. 공공문예후원이란, 보다 정확한 재정상의 용어에 의하면, ‘지원금에 의한 재정적 지원’인데, 그것은 처음에는 시장에 의한 제재로부터 어느 정도 너무 멀어지게 되자 수많은 관료주의적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의하면, 일부 국가들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문화활동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비교적 높게 증가되고 있다. 한편으로, 지원금 지급이 초래할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드러낸 사람들인 예술가들은, 그 지원금이 진정한 창작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시장에 의해서만 조정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문화발전이 부유층의 취향에 의해서만 조정통제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최초의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러한 상황은 예술가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다. 그러나 그 지원금의 일부가 예술가들이 수익성 추구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창작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것일지라도, 그 지원금의 일부는 특히 연금이나 과잉지출, 독점이윤 등을 강화하고 정당화시키는 데에 쓰여진다. 게다가 이러한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부유층의 소비를 지원하면서도 소득이 적어서 문화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소비는 조금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이익의 취약성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함으로써, 지원금이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해결책의 요인들이나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균형상태를 발견해내기 위해 드는 비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이익을 얻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효과적으로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한계점이 나타난다. 첫째, 경험에 의하면 생산성의 이익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공연단체의 기초가 되는 행정적·상업적 부분 전체에 대하여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해도, 소위 스펙타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러한 첫 번째 한계는, 언제나 보다 높은 기준을 부과시키는 많은 문화활동의 국제화에 의해 두드러진다. 두 번째 한계는, 가능한 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경제적 결손을 예술적 결함으로 대체시키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생산성 이익의 만회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조정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3. 수요의 경영 기술

이때에 절실히 요구되는 점은 수요층을 확대하는 것이다. 문화활동은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면 국가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난관에 곧잘 봉착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떤 관점이 없는지 질문해볼 수 있다. 이 관점은 모든 문화소비 뒤에는 사회를 위해서처럼 개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가능한 유용성의 소지가 있고, 이런 까닭에 여러 가지의 재정조달도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복구사업의 대상이 되고, 관광에 따르는 수입만을 우리가 일단 생각하는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런데 이 옛날의 유적들은 인식적인 또는 교육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입장료와 지원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흡수하고, 다른 활동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틀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문화활동의 가치에 있어서 일차적인 기준이 되는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들을 상상할 수 있거나, 하나의 장소, 하나의 활동에 대한 다른 사용 방법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다른 수입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실천적인 문제를 외적 경제라는 테두리 속에서 알고 있다. 소비는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예를 들면, 관광을 위해 요금을 실제로 기꺼이 지불하는 관광객의 즐거움이 그렇다), 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도 소비는 유용하다(예를 들어, 이러한 관광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감각과 역사적 지식 등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또 다른 접근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문화재는 하루 또는 한 해의 시간적인 상황에 따라, 혹은 다른 활동과의 결합 내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박물관이 낮에는 박물관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저녁에는 모임 장소나 교육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성질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정보내용을 갖고 있는 모든 비물질적 생산물처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정확한 동기로부터 수요가 형성되는지를 예측하기란 흔히 어려운 일이다. Arrow가 피력하는 분석문제들을 따르면, 우리는 이러한 생산물들의 지불능력화에 대한 실질적인 전망은 효용성의 가능한 원칙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너무 이론적인 참고사항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마케팅과 경영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의 활동이나 매체로부터 소비를 감소시키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수요의 경영 기술'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문화활동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는다. 이 전망이 기념비적인 문화유산이나 박물관에는 들어맞는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드러났지만, 공연예술에 대해서는 아마 덜 확실한 것 같다. 여기에서의 분명한 어려움은 재현의 공간이 쉽게 변조될 수 없고, 극장의 범주 안에서 상연되거나 준비된 것은 다른 극장으로 옮기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처음의 작품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는 한은 말이다.

4. 생산물의 확장

문화적 산물은 다른 생산물의 원천이 될 수 없는지, 그래서 다른 시장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점유할 수 없는지를 성찰하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서 제시한 입장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수요의 경영기술 문제인데, 그 유형이 약간 특별할 뿐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생산물의 성질을 이용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간접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 일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문화소비의 양식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비가 전통적으로는 문화적인 사건들로부터 그리고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 소비가 가정적인 소비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시청각 제도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 생산물의 전차

일련의 생산물들이 하나의 독특한 작품에서 기인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목격한다. 한 편의 영화, 하나의 카세트 비디오, 일련의 TV드라마, 전출판 한 장, 책 한 권 등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관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주어진 생산물을 여러 지원매체로 편향시키고, 처음에 한 투자를 여러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허락하는 새로운 정보기술 분야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또 있다. 다차원 미디어 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미디어 기업들은 오늘날 조직적으로 이 생산물의 편차를 추구하고 있고, 그 기업들은 그러므로 새로운 지원매체를 동원하기 위한 부가 투자의 비용이 기대치의 소득에 밀돌 경우에만 활동을 멈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최초의 생산물이 오페라의 각본(West Side Story)이든, 한 권의 책(닥터 지바고)이든, 한 편의 오페라 또는 영화이든, 산업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들을 개진하면서, 상당수의 경제적 어려움에 또한 당면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문화적인 행사들의 시장이 일정한 시기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위에서 제시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생산물의 편차로 간접화된 시

장이 무한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연계 생산물의 구매는 주위 환경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민감도는 아마 아주 충실한 소비자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 소득의 감소에 덜 신경을 쓰는 그런 소비자에게 내정된 문화적 행사의 수요의 그것보다도 클 것이다. 이 구매는 또한 세제상의 이익에 민감한데, 우리는 이를 아주 분명하게 부가가치세를 변경하는 많은 나라에서 본다.

끝으로, 디스크나 책, 카세트 비디오 애호가 중의 어떤 이들은 일단보유고를 형성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만족하면 현저하게 구매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2) 어떤 이익분배를?

여기서 제기할 두 번째 문제는 문화활동이—특히 창조활동이—시장의 팔목할 만한 신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희망적인 조짐들과는 반대로, 사실에 대한 성찰은 전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방송국과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소비재를 구입하고 있고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그들의 법을 창조자의 대표들에게 강요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두 개의 지수가 이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양적인 것으로서 문화적 창조에서 오는 부가가치의 분배는 시발점이 아니라 종착점으로, 이익을 위해, 다시 말해 관현악단보다는 음반제작소의 이익을, 연극보다는 텔레비전의 이익을, 출판사나 작가보다는 언론기관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다 질적인 것으로서 생산물의 편차로 인하여 저작권 또는 일부 국가에서는 통역권마저도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비례적이 아니라 총괄적이라는 것이다.

왜 이런 변화가 있는가? 예술가와 문화인들이, 오늘날에는 실망했지만 많은 희망을 걸었던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를 들어보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텔레비전 업체는, 그들의 원칙은 결국 시청자들을 광고자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구입을 그것을 보는 시청자에 의거하여 지불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화활동은 운동경기나 뉴스보다도 경쟁력이 적은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업체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삶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이 업체는 수입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지출을 하는, 말하자면 생산 기업이라기보다는—왜냐하면 이 업체의 생산은 다른 생산들을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회계부적인 기업이다.

그러므로 이런 업체는 부가가치를 회계부의 이익에서 중점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고 생산물에서는 아주 부차적으로만 얻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업체들은 문화활동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고도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매우 불평등한 분배조건하에서 문화활동의 보수를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3) 프로그램의 문화와 산업

그렇다면 우리가 예술경제와 문화현상의 전망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예술적인 표시들은 경제학자에게는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공연예술, 전시회 또는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청각 생상품과 함께 계속되는 일련의 활동이나 경로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다. 이 활동의 비중과 그 경제적 의미는 그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이 활동은 생산활동을 낳고, 고용을 창출하며, 설비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의 경우처럼 수출에서 중요한 수입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문화활동은 프로그램 산업의, 즉 아주 다양한 지지기반 위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 산업의 근간을 이룬다. 누구도 앞으로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는 이 활동은 더 나아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핵심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정신에게는 만족할 만한 것이다. 우리는 부가가치의 분배가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 창조의 단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위에서 막 지적했다. 그런데 보다 멀리 논리를 밀고나갈 수도 있다. 가장 긴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업체들이 이 사회에서 전체의 기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해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 업체들이 동시에 그들이 원하는 시청자와 그에게 제공할 문화적 산물을 만들려 한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모든 순수한 문화적인 기준을 떠나, 단지 재정적인 면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역설적으로 미래에 있어서 문화활동의 진정한 문제는 자금은 확보하는 것보다는
아마 은폐된 경제적 이익의 압력에 대하여 자율권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V. 고급 예술인력 조기양성을 위한 국립예술학교 설립운영

예술영재교육의 실태와	
예술학교 설립의 필요성 및 운영 방안/137	
바람직한 예술학교 교육체제와 운영 방안/143	
토론 내용/146	

*본고는 1991년 7월 15일(월)에 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문화정책대토론회 ①의 발표요지 및 토론내용을 전제한 것임

예술영재교육의 실태와 예술학교 설립의 필요성 및 운영방향

李 康 淑*

‘음악’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하나’가 아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 중세 시대의 선동 교육에서 정식과목(Quadrivium)으로 채택된 ‘음악’은 오늘날의 ‘음악’과 그 뜻이 같지 않다. 당시의 음악관에 따라 ‘음악 실기’가 아닌 ‘음악 이론’을 의미했다. 당시의 음악관을 낳았던 피타고라스, 보이티우스 등의 사상 때문이었다.

음악원(Conservatory : Latin 어원으로 보면, 보육하다라는 뜻이며 고아나 천민들을 모아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보육한 것과 상관됨)의 성립 배경은 세속 음악의 집단인 길드가 발전된 형태였다. 15세기 말 이태리의 천민 음악인 집단이 음악원의 모체이다. 음악원의 성격은 그 이후 역사적 여건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많은 변화를 겪는다.

분리 전통이 생기게 된 원인은 음악을 보는 두 개의 관점 때문이었다. 음악을 ‘하는 짓’으로 보는 눈과 음악을 ‘듣는 짓’으로 보는 눈이 그 두 관점의 뿌리이다. ‘하는 짓’의 개념은 그 말의 의미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지만, ‘듣는 짓’의 개념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뒤에 가서 그 의미를 다시 정의하기로 한다.

이 두 개의 관점은 실기는 천민, 이론은 고상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낳았다. 분리 전통은 그러니까 이분법의 역사를 갖게 했다는 뜻인데, 이 이분법은 음악에서 무엇을 중요시했나 라는 생각과 상관된다. 천민들은 목에 힘을 주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은 이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고 전통을 낳았다. 보이티우스 같은 사상가는 ‘소리를 내면서 하는 실제 음

* 서울대 교수

악'을 가장 저급한 음악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사상은 구라파 사고를 오랫동안 지배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음악은 그러니까 실기 개념과 상관되는 음악이 아니었다. 중요한 음악이 실기 개념과 상관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구라파 전통 때문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광의의 이론만 가르쳤다. 여기서 이론이란 함은 '하는 짓'이 아니라, '하는 짓'을 이해하는 방법이나 '하는 짓'의 역사나 의미 등에 대한 설명 내지 이해를 '앎'의 대상으로 삼는 일과 상관된다.

그런데 시대는 변하는 법이며,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게 마련이다. '소리를 내면서 하는 실제 음악'은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리를 내면서 하는 실제음악'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던 것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정글러나 마이스터 징거의 집단이 길드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의 발전된 형태가 음악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음악원에서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하는, 실제 음악'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다. 음악원에서 오늘날 음악을 학문으로 다루는 일보다 음악을 '하는 짓'쪽, 그러니까 이른바 실기를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전공에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유럽의 분리 전통을 그대로 수용했다. 1865년 유럽의 전통적 음악원 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19세기 말, 전통 유럽식에서부터 탈피한다. 음악원 제도 수용시기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 나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미국이 유럽 전통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이유는 실기 연주자의 대량배출이 사회적 필요인력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실기 분야에서의 낙오자는 교사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교직은 학위를 요구하였으므로 유럽식 디플롬 제도라는 교직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학위를 수여하는 음악대학으로 교육 체제가 수정된다. 이렇게 수정된 형태는 School of Music 혹은 College of Music으로 불리거나 그대로 Conservatory로 불리우기도 했다.

수정된 형태는 디플롬과 학위 수여제를 병행하는 식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었고, 종합대학에 합병(피바디가 존 홉킨스 대학에 흡수, 이스르만이 보체스터 대학으로 흡수)되는 추세로 발전되기도 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음악 인력의 배출을 위해서 전문 연주가 양성 및 교수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 제도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교육제도가 먼저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음악이 먼저 들어왔다. 50년대에 와서 처음으로 음악교육기관인 서울 음대의 전신이 생길 정도였다.

그만큼 음악교육제도의 역사가 짧다. 서울대 음대가 생긴 덕분에 여러 교육기관이 숫자적으로 팽창했고 서울예고가 생김으로써 연주가 양성에 획기적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아 오늘날까지 아무런 개혁 없이 음악교육제도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나라의 현 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과도한 해외유학 현상만 팽배하고 있고, 국내에서 예술영재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교육기관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 음악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전문 교수요원 배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수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귀중한 어린이들이 있고 신문 방송이 있다. 어린이들이 음악에 눈을 떠야 한다. 신문 방송에서 좋은 음악프로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은 교사, 기자, 제작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피아니스트를 하려다가 안 되는 경우, 교사가 된다, 기자가 된다, 제작자가 된다, 평론가가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실패자가 떠맡는 인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피아니스트에 알맞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에 알맞는 사람이 있다. 기자에 알맞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만한 사람이 되도록 길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음악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 기관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지만,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인력을 필요로 하느냐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여기서 '실기 인력'과 '비실기 인력'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구라파의 분리 전통의 뿌리와 상관되는 사고인, 음악과 상관되는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앞에서 '하는 짓'과 '듣는 짓'이라는 말을 사용한 일이 있다. '실기 인력'과 '비실기 인력'의 개념은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짓'과 '듣는 짓'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하는 짓'은 문자 그대로 '음악을 하는' 사람의 '짓'과 상관되는 개념이다. 연주를 '하고' 작곡을 '하는' 일과 상관된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듣는 짓'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듣는 짓'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이 글에서 달리 정의된다.

음악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인간은 음악을 특정 방식으로 수용한다. 이 글에서 '듣는 짓'이라는 말은 이 수용의 문제와 상관되는 모든 일들과 관계지우고 싶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짓’은 ‘실기’ 개념과 상관시키고, ‘듣는 짓’은 ‘비실기’ 개념과 상관시키고 싶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실기 인력’과 ‘비실기 인력’ 모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실기 인력’이 한 쪽 발이라면 ‘비실기 인력’은 다른 한 쪽 발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두 발로 걸을 때, 우리의 ‘음악 조국’은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서 굳건히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이 말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음악 인력’은 ‘실기 인력’과 ‘비실기 인력’ 모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는 짓’도 제대로 못하고, ‘듣는 짓’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노출시킨다. 다시 말해서 아직 실기 인력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비실기 인력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음악원 설립의 기본 취지는 이 대목에서 그 설자리가 찾아진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 속으로 뻗을 수 있는, ‘하는 짓’의 명수를 길러야 한다. 유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길러야 한다. 우리의 손, 우리의 힘으로 길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부의 발상은 획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짓’은 어느 세상에서나, 인간이면 모두 하고 있고, ‘하는 짓’은 잘해야 그 존재 가치가 더욱 값지게 된다.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더욱 그렇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하는 짓’만이 아닌, ‘듣는 짓’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도 길러야 한다는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야만 ‘하는 짓’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는다.

연주가는 그 성격상 ‘실기 인력’ 개념과 상관되지만 오늘과 같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사람은 ‘비실기 인력’ 개념과 상관된다. ‘연주가’와 ‘평론가’의 전공은 개념상 동일할 수가 없다. 작곡과 연주가 같은 전공일 수 없는 것과 같다. ‘실기 인력’이나 ‘비실기 인력’이나 간에, 한국 사람이면 한국 ‘말’을 할 수 있다. ‘실기 인력’이나 ‘비실기 인력’이나 간에, 인간인 이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식의 ‘말’ 또한 할 수 있다. 그러나 ‘말’ 중에는 자기의 상식을 일상어로 피력하는 식의 ‘말’과 어떠한 개념을 전공개념과 연결시켜서 이른바 ‘학술적 언급’을 하는 식의 ‘말’이 있다. 이 두 ‘말’은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르다. 음악원에 대한 언급의 경우라고 해도 연주가의 언급과 음악교육철학자의 언급은 그 전공의 속성상 같은 것일 수 없다.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연주’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도 길러야 하지만 이 땅에는 음악과 상관되는 모든 일을 두고 ‘말’을 전공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길

려야 한다는 데에 있다. ‘말’을 전공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실기 인력’의 조건이 아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비실기 인력’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실기 인력’의 조건을 여기서 전부 항목화할 수는 없고 또 항목화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최소한도 역사에 눈 뜬 사람,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눈 뜬 사람, 감수성은 교육에 의해서 조건지워진다는 사실에 눈 뜬 사람, 관습적 사고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습적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말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민족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람직한 새로운 관습의 창조의 필요성에 눈 뜬 사람이다. 문화부가 바로 지금 새로운 관습의 깃발을 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음악원의 설립은 이 나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때 그 존재 가치가있어진다. 문화는 전체요, 음악은 그것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음악 발전은 부분의 발전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체의 발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실기 인력’만이 양산되고 그것들의 수용 방식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만 양산되고 도로는 그대로 두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그러한 부작용을 낳는 문화는 우리가 바라는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누차 ‘말’하는 것이지만, 「‘실기 인력’을 기른다」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비실기 인력’ 역시 ‘실기 인력’에 못지 않게 이 나라의 문화발전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음악원 설립 취지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원 운영은 누가 해야 하느냐, 여기서는 원칙론만 제시하기로 한다. 안의 시각과 밖의 시각을 동시에 가진 자에게 전권을 주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서 안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즉 음악을 하는 사람의 시각을 뜻한다. 밖의 시각은 음악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의 시각을 뜻한다. 음악밖에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과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정치 사회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글에서 밖의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음악원 운영은 안의 시각 하나만으로도 안되고, 밖의 시각 하나만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에의 인식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두 개의 시각을 동시에 가진 자, 다시 말해서 ‘하는 짓’과 ‘듣는 짓’의 생리를 동시에 알고 있는 자, 실기 인력과 비실기 인력의 속성을 동시에 알고 있는 자, 이러한 인격체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제시

하기로 한다. 그러한 인격체가 현실적으로 없다면, 그러한 인격체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음악원 설립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음악원 설립 추진의 의미는 크다. 그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한 쪽 발을 내딛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반드시 다른 한 쪽 발을 또 내딛자는 의지가 음악원 설립 취지의 뿌리가 되길 바란다. 이름이야 무엇이든 좋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실기 인력’과 ‘비실기 인력’을 동시에 길러낼 수 있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음악교육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그 일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을 함으로써 조국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쌓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바람직한 예술학교의 교육체제와 운영방안

이 상 만*

1. 바람직한 예술학교의 교육체제와 운영방안

현행 음악 실기교육은 약 46년 전에 음악대학이 한국에 설립되었을 때부터 출발되었으나 출발당시 미국식 제도와 일본식 제도가 혼합된 상태로써 시대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전공자들이 외국에 유학해서 음악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되고 있어, 대학 수준급의 음악실기 위주의 음악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학교의 운영에 있어 경직성이 강한 국립학교가 적절하지만은 않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1차 단계로 국립학교를 설립하고 이와 버금가는 수준의 사립학교 설립의 문호도 개방하며, 또 국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운영의 주체를 법인체로 하여 특수성과 유연성과 신축성 있는 운영이 바람직하다.

우선 1차적인 학교의 설립 목표는 대학 및 대학원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먼저 설립하고 이에 병행하여 국민학교 이전의 조기교육 위주의 기관을 병설 운영한다.

중고등학교 수준은 현행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예술학교 학생들이 현행 음악대학과 음악학교를 자연스럽게 분리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고등학교에서 실기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의 반수 이상은 장학금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음악평론가

2. 학제 및 교과과정과 그 내용

실기분야에 있어서는 현행 음악대학에서 서양음악 전공과 국악전공, 서양무용과 한국무용전공을 모두 수용하고 추가로 지휘 전공, 작곡전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음악, 가칭 한국음악으로 불리워질 우리의 독창적인 창작음악이 개발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한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과정은 대학교 과정 4년과 대학원 과정 2년 그리고 박사예준하는 3년 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에 절대 구애됨이 없이 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학위의 명칭은 일반 학사와 석사와 구별되게

(음악학사)급은 음악사

(음악석사)급은 음악원사

(음악박사)급은 장인 등으로 구별하여 호칭할 수 있다.

3. 학제의 특성

주로 이태리에서 기원하며 서양의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여러 나라의 제도, 예컨대 이태리의 콘셀바토리오와 아카데미 코레기움은 물론 영국식 커리지와 아카데미 스쿨 등의 제도, 독일의 호크슐레, 오지리의 아카데미(현재 호크슐레), 프랑스의 콩세르바투아, 소련의 콘세르바토리, 체코·헝가리 그리고 미국 제도 인스티튜트와 컬리지 데파트먼트 등을 잠정 연구하고, 일본의 음악대학 교육 제도의 장단점 등을 크게 참고해야 한다. 한국의 전통음악 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장악원 제도 등을 크게 참고로 한다.

4. 지도교수 확보 및 지도자 양성계획

① 교수의 반 이상은 당분간 외국에서 초빙하되 기능과 역량위주로 대상국을 안배하여 초빙하며, 한국인 교수들은 비교적 연령계층이 낮더라도 역량 있는 교

수들을 국내에서 초빙한다.

② 미국에서와 같이 레지던트 아티스트를 대거 활용, 국내외적으로 연수활동이 잦은 예술가들을 활용한다. 레지던트 아티스트는 기업과 연계를 갖는 활용제도도 검토한다.

5.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 방안

학교의 부지는 학교의 성격과 걸맞는 공연장이 인접한 장소가 가장 적절하며, 불가피한 경우 문화부가 소유한 부지가 적당하며 절대로 수도권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

학교 시설 및 기자재와 확보에는 민관의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개방, 학교후원회 조직 등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세제혜택 길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에 기증자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 악기 등을 무상 대여 받는 제도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안 국립(무용)음악원

2안 한국(무용)음악원

3안 국립 음악(무용)학교

토 론 내 용

〈참 석 자〉

사 회 이 중 한(서울신문 논설위원)	한 상 우(서울예고 음악과장)
발 제 이 강 숙(서울대 교수)	김 형 배(서울대 교수)
이 상 만(음악평론가)	김 신 환(영남대 교수)
토 론 박 영 근(한양대 교수)	이 득 효(계원예고 무용과장)
백 낙 호(서울대 교수)	

이종인 :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국내에 전문예술인을 양성·교육하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우수한 지도자와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하는 체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진학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실기 중심의 교육이 극히 어려워 국제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유학에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문화부에서는 예술학교 설립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예술영재의 교육이 이루어져 그들이 국내의 교육단체에 공급되어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산실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학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동시에 모든 부분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단계적이며 연차적인 추진이 될 것이다. 이에 오늘은 음악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지만, 앞으로 다른 분야의 예술학교 설립과 많은 부분이 상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토론이 될 것이다. 여러 발표자들의 기탄 없는 조언을 바란다.

이중한 : 음악교육의 역사적 고찰과 우리 음악 교육의 현상 분석, 또 현단계에 대한 정리가 있었다. 더불어 중요한 쟁점으로 비실기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이강숙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이상만 교수는 독창적이고 전문화된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조기교육을 위한 학제와 교과와 개편을 제의했다. 다음에는 예정된 순서에 따라 여섯 분의 토론을 듣겠다. 먼저 백낙호 선생

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백낙호 : 음악원의 발족을 위한 이강숙 교수의 발표에 많은 부분 동감한다.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의 힘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실기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기형적인 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비실기 인력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치·사회 각계의 후원이 있기를 바란다. 음악원을 개설함에 있어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기의 교육적 지표가 기능직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하며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진취적인 창조를 위해 기본적으로 최소 18년의 교육이 필요함을 전제로 새 학제가 세심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예비학교제로 하고 고등학교부터 실기에 중점을 두는 음악원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비실기 인력의 양성과 주위의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이는 음악계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또한 지방과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예술학교법의 제정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실기인력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학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박영근 : 영재교육은 음악원의 설립문제와만 연관된 것이 아니므로 그 후에도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선 국내 영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동감한다. 현행교육기관이 예술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술학교의 설립이 필요함은 알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어떤 예술인력이 필요한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국민학교의 경우 전담교사의 부재와 전담교실이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음악, 예술 교육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구나 시간마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재능이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대학교육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연주와 작곡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음이 문제이다. 비실기 인력을 위한 연구방안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듣고 싶다. 운영방안에 있어서의 첫째 문제는 규모의 문제이다. 둘째는 학력과 학위 인정의 문제가 있다. 셋째는 다른 학교와의 연계 문제이며 네 번째로는 기존 대학과의 연계 문제가 있고, 다섯번째로 이런 특수학교의 설립시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의무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충을 하겠다. 최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를 어디에 짓느냐보다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압도

적이었다.

한상우 : 문화부가 음악원을 만들려는 이유는 현재 우리 나라의 음악교육의 문제점, 즉 좋은 음악가를 배출하지 못하는 제도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음악원에는 전공분야만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인 것이다. 이때 비실기인력은 전문적인 지식 등이 필요하므로 음악원 외에 다른 곳에서 교육해야 한다. 음악원 설립은 참다운 음악가를 만들겠다는 정신이 앞서야 한다. 다음으로 실기인력의 순응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음악원을 졸업한 이들의 사회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안과 밖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음악원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또한 정부나 문화부의 간섭이 줄어들어야 함도 동감한다. 그러나 이상만 선생이 음악원에 전통 음악을 함께 수용해야 한다고 한 점은 반대한다. 이는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이니 분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형태의 연계를 갖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중환 : 우선적으로 이강숙 교수의 답변을 듣겠다.

이강숙 : 문제는 연주가 위주의 조기교육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참 음악가의 개념을 연주가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이때 연주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용을 위해 나머지 인력을 교수 등의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기인력과 비실기 인력의 개념이 정리되어 교육되어야 음악 전체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우선은 대학에 음악교육학과와 설립이 비실기 인력의 수급을 도울 수 있다. 여기에서 음악의 주변부에 필요한 전문부분을 교육할 수 있다.

김형배 : 현재 추진되는 음악원은 공연기관이 아닌 가르치는 기관인데, 문화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때 학사관리, 교수채용 등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교육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인지 공동의 책임인지가 확실히 규정될 때만 앞으로의 학교 운영에 혼란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커리큘럼과 학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실기지도만을 한다면 이는 현시점에 맞지 않는 것이다. 기술연마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총체적인 인식이 예술을 낳게 하는 뿌리이며, 이를 위한 과목의 개설이 바람직함을 믿는다. 그리고 예술대학의 과정수료 후에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도 문제가 된다. 장소에 관해서는 이상만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김신환 : 각 도시와 각 도에 국립음악원이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들어 국립음악원

의 설립과 우리 극장의 체계를 바로잡는 것 등을 건의한 바가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열악한 것이 우리 음악교육의 현실이다. 이에 문화부의 음악원 설립은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음악원에서의 교육은 한 부분에 치중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기에 음악이론과 음악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실기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모든 부분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입학할 때의 시험성적에 의해 면제되는 과목을 주는 식의 교과과정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악원의 설립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학제의 경우를 볼 때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아닌 영재교육이 될 수 있어야한다. 영재교육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야말로 훌륭한 음악가를 배출할 수 있는 기초인 것이다.

이득효 : 무용교육(특히 발레교육)은 조기교육이 특히 필요하며 이제까지의 교육은 무용대학이 없이 체육대학의 일부분으로 교육되어 왔고 자격도 체육학사, 석사를 받아왔다. 이에 발레교육은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전인교육이라는 묶음 안에서 현시대에 맞는 전문교육이 되지 못하여 발레인들은 유학을 가거나 외국으로 연수를 가야했다. 무용과를 갖춘 대학에 비해 조기교육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권위와 신뢰성을 지닌 국립발레학교의 설립이 요구된다. 학제와 교과과정도 수정되어야 한다. 7세부터 교육이 시작되어 12년제의 여러 교육방법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졸업한 학생을 위한 차기 교육기관으로 실기와 이론을 겸한 교사 양성과정 등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 나라와 특성에 맞는 학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양성에 있어 역량에 따른 기용과 외국의 특출한 발레가를 초빙하여 우선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음악원 뿐만 아니라 발레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상만 : 무용과 음악교육이 병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여러 예술의 교육이 동시에 진행됨을 볼 수 있다. 김신환 선생에 대한 답을 하자면 교육은 학교에 맡겨져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어야한다. 다만 개인이 아닌 공공적인 단체의 관리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재원의 지원에 국한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국악과 양악의 혼합교육은 충돌의 우려가 있지만 함께 교육을 하며 방법상의 문제를 연구하여 우리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실기교육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음악원 졸업자에게 당연히 학위가 주어져 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김혜자(게스트) : 국립예술학교의 설립시에 기존의 예술학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와 학위문제의 경우를 설명 바란다.

이상만 : 예술학교법안 등의 제정, 운영이 필요함에 동감한다. 국립학교에 준하는 학위도 수여될 수 있어야 한다.

임원식(게스트) : 구체적인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 학교의 교과를 따라가기 위해 과외의 공부를 해서 음대시험을 치뤄야 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예술인력의 조기양성을 위한 토론이 필요했다. 문화부가 교육부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와 법률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음으로 실기만으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론과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와 정책입안에 투입되어야 하며 기존의 예술학교에 대한 방침도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강숙 : 안과 밖의 시각을 모두 가진 인력의 배출을 위한 실기, 비실기의 구분을 했던 것이다. 상호보존적인 역할을 위한 비실기의 개념을 말한 것이다.

김형배 : 이제까지의 교육제도가 항상 한가지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 예술학교가 생긴다면 각자에 맞는 세분화된 학위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한 : 오늘 모임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중요성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지녀온 예술교육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새로운 학교에서 포함할 문제에 관한 혼란도 많았다. 정규음악교육과 특수음악교육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다.

VI. 전통공예산업과 현대화, 문화재 보존과 고도보호

전통공예산업의 현대화 : 민속공방촌 조성	153
古都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56
매장문화재 훼손방지대책	160
토론 내용	163

전통공예산업의 현대화 : 민속공방촌 조성

정 명 호*

1992년은 우리 나라의 전통공예가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만국박람회가 개최될 때 출품하여 세계인들에게 선 보인지 100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우리의 수도를 서울로 정한지 꼭 60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전통공예품이 근세 세계만국박람회에 출품한 지 한 세기를 맞이하는 동안 현대 공예분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으며 발전하였을까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통공예산업은 향토성이 짙은 공예산업으로 이는 날로 발전 향상되어 가는 현대 공예산업에 대응할 수 없는 침체된 산업이며 낙후된 산업으로 전락되어 가는 현실에 불필요한 공예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통공예가 우리시대에 와서 조상들의 공예로 인식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부문으로 알려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독특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공예기술을 형성하였으며 그 공예기술을 통해서 과학기술산업발전에도 기여하였다.

현대 서구문명으로 인하여 버림받은 전통공예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요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이 1962년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비로소 관심을 갖고 1964년부터 중요무형 문화재를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중 전통공예제작 기술인 무형 문화재를 국가에서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며 전승시키는 동시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국가의 고유한 공예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국가 경제발전을

* 동국대 교수

도모함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1964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를 발굴조사하기 시작하여 이들의 기량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간문화재 공예품전시회를 최초로 1973년에 개최한 이래 작년까지 15회에 걸쳐 명칭을 전승공예대전으로 변경하여 매년 개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해 공예분야는 1991년 현재 30종 42명의 중요무형문화재와 23종 27명의 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인정하였으며 이들의 후계자 격인 보유자 후보 14명을 합한 83명의 기능인을 지정 보호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승공예대전에 출품되고 있는 종목은 56종으로 이 중 지정된 종목이 48종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 지정하지 못한 왕실공예인 화각공예를 비롯하여 7종목이 남아있는 실적이다. 이상과 같이 계속 우수한 전통공예의 발굴 개발에 굳은 터전을 마련, 이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재현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적인 전통공예 문화가 현대의 세계 곳곳에 보급되어 그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통공예 기술 보존 대책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중 그들의 작업환경을 보면 열악한 작업환경과 시설이 영세한 소규모의 가내공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개발 발전시킬 수 없으며, 근대화된 산업공예로는 접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공예는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전통공예가들의 경제적 향상은 물론이고 외화획득을 위한 산업분야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때 지방경제 활성화와 문화확산이 기대되는 것으로 미루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성이 요망되며 이에 따라 민속공예촌과 같은 좋은 환경 요건을 갖춘 집단 공방시설의 설립이 절실히 요망된다.

다행히 1990년 문화부가 발족되면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전통공예상품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문화의 효과적인 보존 전승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결과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공방시설의 개선문제가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화부는 우수한 전통공예기술을 현대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수공업 생산체계를 갖추고 전통공예기술의 전승교육과 보급활성을 기

하여 우리의 고유한 생활문화의 창조적 보급사업을 위해 민속공방촌을 조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전통공예를 보존하기 위하여는 기능자 보호와 전승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현대적인 공방시설인 기계시설에 의한 다량생산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공예산업에 종사하는 장인들의 요구는 작업환경개선과 공예상품생산 활성화를 위한 판매확충과 후진양성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인 것이다.

즉 전통공예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충분한 국내시장 활성화에 따른 내수의 확보와 외국 진출을 위한 외국시장 확보인 것이다.

이를 위한 집단공방인 민속공방촌을 조성함에 있어 이원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 1) 전통공예기술을 보존하기 위한 기능보유자의 기능전수를 위한 공방시설 개선
- 2) 기능보유자로부터 배출된 기능 후보자 및 기타 전승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집단 민속공예촌 조성
- 3) 관광자원의 유치 확보를 위해 전용전시장 시설 확보
- 4) 전용전시장 시설 내에는 국내 국민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전통공예를 이해시키기 위한 실연관광시설 확보
- 5) 민속공방촌 유치조건은 문화유적지 및 도심지 부근 교통조건이 좋은 곳
- 6) 전통공예 기능자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기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에 전통공예학과 신설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 7) 전통공예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전문연구기관 및 기구가 시급하다.

古都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申 瓚 均*

지난날, 어쩌면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문화는 意匠으로 끝난 것이 많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치 전통은 마치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허수아비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 시대의 역사추진 에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전통문화는 정책발표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 장을 장식하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높히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표상인 사적이나 유물은 단순한 의미부여만으로는 상징조작에 불과하다. 유적에 정신의 삶을 부여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속적 가치로 잊지 않으면 영화가 가버린 폐허의 궁전처럼 삭막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 도시를 개발한답시고 시멘트를 치덕치덕 발라 옛 모습을 없애버린 시행착오를 기억한다. 완만한 능선을 배경으로 해서 초가집의 선과 조화를 이뤘던 마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울긋불긋한 스투트지붕으로 바뀌버린 만용도 기억한다.

순전히 일시적인 도시기능만을 위해서 덕수궁의 대한문을 뒤로 옮긴 예라든가, 독립문을 보호한답시고 고가도로를 S자형으로 구부려놓더니 결국은 그 독립문마저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무모한 도시계획과 문화재보호는 문화정책 부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된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을 깨는 역사적 첫걸음이다. 당연하게도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방문화가 진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문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어서 어느 지방도시는 시의회가 교향악단원의 수를 줄이자고 했다가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얻었고 오페라공연의 예산은 삭감되었다. 지자체와 함께 이 땅의 문화는 오히려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

* 국민일보 논설위원

려의 소리가 높다.

더구나 地自制시대에 빚어질지도 모르는 무궤도한 古都개발은 문화재를 크게 훼손시킬 수가 있고 古都의 역사성과 환경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오늘날 전국 어디를 가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는 균질화된 복사문화다. 그 지방 고유의 문화는 사라지고 중앙집권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서울을 닮은 복사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문화는 독특한 향토문화를 기르는 과제를 지닌다. 그 문화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웃과 담을 쌓는 지방도시에 인정을 불어넣고 향토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서로 고향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교량역할을 하게 된다.

■ 古都보존 및 整備에 관한 법률

지자체실시와 함께 古都를 무궤도하게 개발할 경우 그 원형이 파괴되고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많다. 전문가가 참여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古都보존과 개발이 절실하다.

1) 취 지

古都보존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문제가 뒤따른다. 주민들은 당연히 해제를 요청하기 마련이다. 땅이 투자의 대상이 되고 곧 재산이라는 가치관은 향토의 문화재가 국보나 보물이 되어 지역의 긍지를 높여주는 쪽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古都보존은 유적과 관련되지 않는 지역에 신시가를 공영개발형식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고도보존 지역의 사유재산 제한에 따르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이 정착된 일본은 그 지역의 문화재나 사적지를 주민 스스로가 지정하고 보호해주기를 당국에 요청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실질적 재산손실 때문에 규제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보상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古都보존을 위한 법으로는 영국의 ‘都市田園景觀法’(1974.9.1 Town and Country Amenties Act)과 프랑스의 ‘프랑스의 역사적, 미술적 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토지건물의 修復을 원활케 하기 위한 법률’(1962.8.4 Loi complitant la législation sur la protection du patrimoine historique et esthétique de la France et tendant faciliter la restauration),독일 바치에른 州의 ‘記念物保護法’(1973 Gesetz zum Sahutz und zur pflege Denkmaler), 미국의 ‘地表와 歷史지구보존’(뉴욕시 法典 Preservation of Landmarks and Historical Dist-

riots)법 등이 있다.

사적지 보호의 예를 들면 프랑스는 문화행정의 일환으로 城과 유적지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건축군이 2,000개소이고 400개소는 保護都市지역(Protect Urban Zones)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내에 있는 개인소유자가 기념물의 복원공사를 할 때는 국가로부터 복원비를 장 기저리로 대부 받을 수가 있다.

2) 古都 보존을 위한 기금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古都보존에 사용한다. 예컨대 아파트단지 등을 만들면 땅값이 오를 것이고 그 이익은 곧 재산권 행사제한을 받은 지역에 환원한다. 그러나 古都개발이나 기타사업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에서는 각종 강연회, 음향과 불꽃의 향연, 축제, 쇼와 연주회 등을 특정 기념물에서 개최함으로써 이익금을 얻는다. 또한 Mont Saint Michel의 千年際 같은 특별 기념제를 열기도 한다.

3) 古都의 범위

역사 문화 유적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慶州, 公州, 扶餘, 益山, 金海는 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원형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慶州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역사도시인데도 시멘트 투성이의 復元이 되어 古都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선례를 남겨주고 있다. 가야문화의 寶庫인 金海는 釜山이 팽창해지면서 古墳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公州나 扶餘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古都보존이 절실한 지역이다.

公州市는 古都文化지구와 신시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도시이다. 그 현황을 보면 公山城 옆 미나리밭에서부터 무령왕릉까지를 연결시켜 古都문화지구로 정하고 이곳에는 건물의 고도제한과 건물의 색깔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금성동(무령왕릉에서 강 따라 가는 지역)에는 관광레저타운을 만들고 있으며, 신시가지 지

역인 강북에는 택지개발과 함께 건물의 고도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보상이 없고 또 개발을 하지 않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는데 있다. 즉 공산성 안의 9천 평 토지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慶州市 역시 동국대캠퍼스 주위는 땅값이 오르고 있으나 문화재지역은 보존에 묶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덕수궁이나 창덕궁 주위의 건물이 턱없이 높아서 옛 궁전을 건물의 뜰로 사용하는 무지는 古都보존의 문제점으로 남는다(日本の 궁궐 옆에는 빌딩이 없음).

일본에는 古都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京部, 鎌倉, 奈良 등 세 도시 주민들의 모임인 '역사적 유산과 경관을 지키기 위한 3部시민공동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다. 建部 1천 2백년을 맞는 京部시를 역사도시로 지키기 위해 역주변의 고도제한을 주장하고 鎌倉시 띄 녹색보존조례를 시민들이 만들고 있다. 古都보존에 따른 보상도 물론 지급되고 있다.

4) 세 제 혜 택

사적지 안에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편으로 예산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5) 古都개발위원회

古都개발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대한 사업을 승인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가칭 古都개발위원회를 설치, 古都개발에 따른 모든 사업을 승인하도록 한다. 만약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업권한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가시적인 사업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이러한 古都의 사업을 통제하는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한다. 위원은 도시전문가, 디자이너, 문화재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매장문화재 훼손방지대책

金 鍾 徹*

1. 서 언

매장문화재는 일단 훼손되면 원형을 복원할 수 없는 민족문화유산으로 그 훼손의 주범은 도굴이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를 보다 근본적으로 철저히 훼손하는 행위는 공사기관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굴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보호대책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훼손방지대책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2. 도굴방지대책

도굴행위가 일제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일찍이 일본인 학자가 일본인에 의한 도굴피해의 참상을 고발하여 “목불인견, 잔인혹독하여, 정치·교육상으로 보아도 매우 두려워해야 할 일로서, 현대인의 죄악과 땅에 떨어진 도의를 보려면 이 고분군집지를 보아야 한다”고 스스로 폭로하고 있지만 오늘의 도굴파괴의 참상이 모두 일제시대에 자행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지금에 이르러는 전국조직망의 도굴집단에 의해 동일유구에 대해 2차, 3차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외관상 식별 불가능한 지하토광묘까지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민에 의한 도굴도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첫째, 매장문화재의 중요성과 도굴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교육프로그램으로 개

* 계명대 교수

발하여 마스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을 계몽하여 야 한다.

둘째, 문화재관리행정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도·시·군의 문화예술과(문화공보실) 직제에 문화재계가 있으나 행정미분화로 문화재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그나마 전문가의 미배치로 행정직이 담당하여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과로 승격시키거나 독립시키고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직을 두어야 한다.

셋째, 유적감시원의 효과적인 운용이 시급하다. 시·군이 유적감시원인 없는 곳도 많으며, 있다하더라도 유적감시 업무는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 유적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이장을 유적감시원으로 위촉, 일정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유적보호 내지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유적의 사적지정과 공원화가 필요하다. 지금도 많은 중요유적들이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있다. 이들이 사적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당국의 책임과 관심이 고조될 것이며, 또 이들이 공원화될 경우, 지역주민의 부족한 휴식공간 확보라는 측면과 아울러 매장문화재 보호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개발사업에 의한 매장문화재 훼손방지대책

산업화에 수반된 각종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문화재보존정책과 상충되는 입장에 있다. 각종 개발사업은 현 지형에 대한 형질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유적전체를 완전 파괴해버리는 점에서 도굴파괴보다 가공할 만하다.

개발사업에 의한 매장문화재 파괴는 제 3공화국 이후 경제개발정책에 수반된 국토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최근에는 지방 중·소도시 단위의 지역개발정책으로 증폭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더욱 가속화, 광범화될 것이 분명한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적훼손과 문화재보존정책의 상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개발사업당국과 문화재관리당국의 횡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관리당국은 개발의 시기와 규모 등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1991.5.11)이 제정됨으로써 매장문화재 확인절차가 마련되고

있으나 환경처가 주무부서로 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전국적인 규모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시급하다. 당국에서 지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으며, 세밀하고도 철저한 지표조사 자료를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학술기관도 자체인력과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셋째, 사적지정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전국유적은 345개소(1991.5.1현재) 뿐으로 많은 유적이 누락되어 있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우선 개발사업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그 상충되는 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다.

4. 결 어

문화재관리의 책임당국은 더 이상 유적파괴를 과거의 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고 도굴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유적파괴를 막으려는 강력한 국가차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자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학계의 전문가들도 유적보존이 국가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유적의 보호자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유적보존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불요불급의 예산을 사적지정과 보존에 따른 보상과 전문인력의 확보에 투입해야 한다.

토 론 내 용

● 제 1주제 : 전통공예산업의 현대화 : 민속공방촌 조성

〈참 석 자〉

사회 서 연 호(고려대 교수)

발제 정 명 호(동국대 교수)

토론 맹 인 재(용인민속촌 대표)

임 영 주(전통공예관장)

김 종 태(한양대 교수)

서연호 :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정부측에서 어떤 확정된 안이라든지 계획이 다 수립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 의견 내지는 각계의 견해를 들어서 정책수립 시에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공방촌 조성에 따른 여러 문제, 즉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만드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맹인재 : 공예의 고유기능과 신공예 등의 변신 모색 기능은 공존해야 한다. 공방촌 혹은 작업환경, 공방제작소, 인력, 자재구입, 운영자금지원 등이 핵심적 문제이다.

현대화·산업화의 양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종목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선정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 양산체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자수의 경우, 중국에는 기계자수가 나와 있다. 여기에 손으로 직접 뜨는 우리 자수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고유기능 보유자가 자신의 기능을 유지·전승해가면서 공방운영, 즉 생산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된다면 이중 책무를 지게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타 전시장이라든가 홍보·선전 문제는 국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 전통공예관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를 격상하고 확충하여 연구직과 같은 학예직을 배치하여 고정연구를 하도록 시켜 연구 성과를 생산에 바로 원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선전문제는 관민이 연합해서 할 수밖에 없다. 문화부뿐만이 아니라 공보

부에서도 언론매체나 전파매체를 통해서 1920년대 일본에서 일어났던 민예 운동과 같은 공예운동이 한번 획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민예의 미를 사랑하고 넓혀갈 수 있는 홍보전략 같은 것도 정부와 연합해서 벌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수요층도 늘려가면서, 즉 수요층의 확보 후에 생산을 늘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김종태 : 먼저 과연 중앙체제의 공방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한 7~8년 전 경주에 민속촌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와 똑같은 취지를 내세우고 있었다. 지금와서는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 되어 재산을 형성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공예를 민예적 국민차원에서 형성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중앙에 공예촌을 집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의문이 간다. 이것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차라리 각 지방에 생산품의 종류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충무에는 나전칠기 집단, 지리산이면 한지 공방체제, 죽세공품단지인 담양에 만드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각 지방에 공방 집단 체제를 만들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중앙에 집단체제의 공방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운영이 가능한가, 곧 자체 생산에서 판로까지의 수지타산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인 의견으로는 집단 공방촌을 만들려면, 첫째 장소 선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연환경 보호문제 · 교통관계 · 수출입을 위한 운송체제 · 어린이의 교육적 환경 · 한가족의 1일 관광코스로 적당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가에 의문이 있다.

둘째로는 관광적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현상유지가 된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로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어떤 가족이나 집단이 와서 관광하고 물건을 사가는 수입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한 공예촌 건설의 확신이 서있는 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가족이 하루 정도 와서 있으려면 수공예 박물관 · 상설전시관 · 판매장 설립이 필요하며 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을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공예촌 건설에는 우리의 옛날 수공예 예술이 전부 집단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만든 사람들은 사기 집단을 만들어 여주 · 이천 · 변산

반도 등에서 집단체제로 유지되었다. 이것이 길드 형식을 이용하여 집단을 만드는 것 등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와 경제적 수지타산,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의문이 간다. 전통공예를 현대화하기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7·8년 전에 전통공예대전을 열 때에 전통적인 작품과 창작적인 작품을 함께 모집하여 상을 주려고 하였으나 매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현대 생활 공간에 맞는 작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서야만 이 공예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임영주 : 민속 공방촌의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전승공예 육성 발전 관계를 얘기하면서 일단 관광자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공방촌이 한 지리에 조성된다는 것은 각 지방의 특산재료 보호와 각 지방의 기능 보호 차원에서 무형문화 기능이 발전 저해 요소가 된다. 우선 각 지방의 공방 집단 체제에 대해서는 1964년 중요 무형 문화재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지만, 74년부터 여러 가지 인간문화재 공예품 전시를 비롯해서 전통 공예 대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전통공예관에 대해 보완을 해야 된다. 여러 공방체제를 한 자리에 모아서 조성하기 전에, 전통공예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우선 강화시키고 유형문화재를 다루는 국립박물관과 더불어 무형문화재를 다루는 국립공예박물관으로 발전시키는 길이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공예박물관 속에 역사적 공예유산과 더불어 현대 전승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또한 더불어 현대 공예를 같이 전시함으로써 그 속에서 명실공히 공예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반영시켜야 한다. 또한 그 속에 공예연구실을 두어 교육 제작 및 현대공예와의 연계를 꾀해야 한다.

전통공예의 산업화 문제는 상공부의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 가능하면 전통성을 지닌 공예작품을 대량생산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계속 펴나가고 있고, 여러 해 동안 계속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통공예 사업의 현대화 문제는 미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예인 육성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자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산업공예에 자문을 받아 별도로 발전

시키는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 전통공예관은 명실상부한 종합공예박물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육성시켜 그 속에서 모든 교육·전시·제작·실연이 이뤄지고, 각 지방에서 지방의 특산에 따라 그 지방의 전승공예를 더욱 지원 육성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명호 : 질의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민속공예촌을 조성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하는 것, 또 하나는 전통공예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것을 다루는 사람을 양성하는 문제인데 별도의 대학 교육보다는 현재의 공예관이나 지정되고 있는 분들 밑에서 양성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첫번째 것으로는, 민속공예촌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전통성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성하여 성공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시하며 경주 공예촌의 예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화가 되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작품의 디자인에서 제작, 판매까지에 이르는 공동작업을 하지 않아서 실패하게 된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공예촌의 사유재산화를 막고, 기술센타를 만들어 공동작업을 유도·감독하고, 공예촌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국가의 지원이 있어준다면 해결될 것이다.

지방과의 마찰은 지방의 전통공예를 보존하면서 중앙의 공방촌에서는 공예의 산업화에 대한 연구 발전에 치중하는 2원 체제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연옥(월간 한국나전칠기 보호협회지 기자) : 전통공예를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속공방촌의 건설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공방촌이 당장 생길 것도 아니며 이런 것들이 전통공예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현재 전통공예를 산업화시킨다면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

정부의 지원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있다. 대부분 전통공예인은 가내수공업 규모로서 공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공장의 개념이 아닌 공방이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즉 ‘공방등록’의 형태로 정부가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배우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능보유자들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활발한 작업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이 문제되고 있다.

정명호 : 전통공예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 산업화된 공방과 지정되어 있는 분을 중심으로한 분야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세금 등의 혜택을 받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수한 전통공예를 몇몇 사람만이 즐겨할 것이 아니라 이를 좀더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규모의 공방보다는 대규모의 공방체제가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생산이 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발전하여 세계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정보수집력도 충분히 갖게 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 학(전통자수협회장) :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본다.

삼성동에 있는 전수회관의 기능 강화가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부지에 고층빌딩을 신축하여 박물관·전시관·전수회관을 한곳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공방촌 조성에 있어서도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문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액 국고부담인가, 아니면 민간자본이나 공예가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입주 공예가의 재산권 및 권리 문제도 있다.

월 주(문화재 단청기능 보유자) : 중앙에 집단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방문화를 전혀 무시하고 중앙에만 공방촌을 건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지방의 특성을 유지해줘야 한다.

이봉주(유기장) : 본인이 기능보존협회 회원들과 한 2년 동안 공방을 70여 군데 탐방한 결과, 공방뿐만 아니라 공예인들은 크게는 공방촌 건설과 작게는 중앙에 전시관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체육인들에게는 체육관을 크게 만들어 주고, 예능인에게는 놀이마당 등을 마련해주었지만 우리 전통공예인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나는 불평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전통공예관을 하나 건립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병호(나전칠기 종사자) : 나전칠기 하나를 두고 본다면 전승·전통·현대를 구분했을 때, 공방촌 건립 후 입촌 대상자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선별할 것인가, 또 관계기관에서 전승·전통·현대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명호 : 구분은 전통과 현대의 둘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국가에서는 전

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분을 지정문화재라 하고 지정되지 않은 분을 전승자라고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양자는 모두 전통의 범주에 해당한다. 현대는 다만 외국의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공예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앞으로 많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지정되신 분들의 품목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전승분야도 포함되며 또 현대 산업화에서 전통분야 종사자를 망라하는 심사기관이 차후 설정될 것이다.

서연호 : 정리를 대신하여 종합적 질문을 한가지 하겠다. 공방촌 조성의 주체는 정부와 민자유치 중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명호 : 어차피 국가에서 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를 설정하고 있는 이상에는 국가적인 경제향상에 이바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의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통공예인들에게 작품을 만드는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서연호 : 대체적인 의견은 공방촌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 2 · 3주제 : 고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매장문화재 훼손방지대책

〈참 석 자〉

사회	반	영	환(서울신문 논설위원)	임	효	재(서울대 박물관장)
발제	신	찬	균(국민일보 논설위원)	유	덕	향(전북대 교수)
	김	중	철(계명대 교수)	이	응	조(충북대 교수)
토론	안	희	주(서울대 교수)	신	경	철(경성대 교수)
	박	병	주(홍익대 명예교수)			

반영환 : 경주, 부여 등 고도시는 사마르칸트나 로마 등과 같이 일부가 아닌 고도 전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고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지정 토론을 순서 없이 해주기 바란다.

임효재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도보호를 위한 특정지역의 개발제한보다 고도 전체의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주변에 고도 거주자를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공주시 주변에 신공주시, 경주시 주변에 신경주시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 고도보호에 환원시켜 고도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병주 : 고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문화부의 힘이 약하고 예산의 뒷받침 부족으로 인해 차선택으로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고도보호에 투자하려는 의도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고도보호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고도보호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별도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이익 환수는 어렵다고 봄으로, 정부의 별도 예산 지원에 의존해서라도 고도보호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고도개발위원회' 보다는 '고도보존위원회'가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개발이라는 용어보다 보존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고 저항감이 없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는 심의기능 뿐 아니라 조사기능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고도보호를 위한 점적인 규제보다는 환경보호와 병행하는 역사적 공간 보존이라는 면적인 사고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면적인 사고란 역사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을 아울러 고려하여 그것이 고도보호에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의 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자연환경보존지구 등이 있으나 문화재 보호법, 도시계획법으로는 고도보호를 위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고도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강력한 실행이 시급히 등장해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여러 번 경주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경주 도시계획은 문화재 관리상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다. 오늘날 역사적인 경주의 환경이 그나마 살아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계획의 성과라는 점을 명백

히 재인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초공사 깊이 제한, 고도제한, 단풍한옥 의무지구가 많은 점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완화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도보호에 따른 거주자들의 불이익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안휘준 :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며 이의가 없다. 원칙론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고도보호는 문화 전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질적 문화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접적 문화인식 재고,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역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도보호는 시급한 대책에 병행하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선진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비교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과 문화재·문화유적은 항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자께서 위원회 설치를 말했는데, 여기에는 문화재 전문가·도시계획 전문가만이 아니라 교통문제 전문가·사회과학자 등의 공동 참여로 다각적 측면에서의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유적지를 발굴해야 하고, 모든 것이 밝혀진 유적지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관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경희궁지 같은 경우 건물이 백채이상 있었던 유서 깊은 곳인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다. 서울시는 여기에 시립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왜 하필 궁터에 지어야 하는가가 의문이다.

토지 문제는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다. 토지가 부의 축적 수단화되는 부동산 투기 등에 정부가 대처하여 고도 거주자들의 상대적인 손해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 서울, 공주, 부여, 김해 등 특정한 고도 외에도 기타 군현까지 고도보호지역을 확대하여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는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선 고도 몇몇에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자는 식의 발상은 금기시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김일윤(경주시 출신 국회의원) : 오늘 토론 중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겠다.

고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동기는 고도 거주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장기간의 민원에 의한 것과 문화부의 유적보호·보존 의지가 합쳐져 오늘의 토론이 있게된 것으로 생각한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란 용이하지도 않고 가능상 여부도 불투명하다. 개발이익을 고도보호에만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주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만이라도 싯가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하며,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주시 관광국장 : 우리 시의 상황은 문화재를 가진 시민의 자긍심보다는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문화재 보존은 시일이 급하다. 문화재 보호법만으로는 문화재 보호와 도시의 개발 정비를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의 극복이 고도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닌 취지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꼭 필요하다. 문화재 보존의 1차적 책임은 국가이며, 그 다음이 지역 정부, 국민이다. 여기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기금조성이 개발이익 환수를 문화재 정비에만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곧 개발이익금을 문화재 분야라는 목적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예산확보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영환 : 고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찬성하는 것이 전체적 의견이다. 실현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도보호는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있다. 또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는 제 3주제인 매장문화재 훼손방지 대책에 대하여 제 2주제에서와 같이 순서 없이 지정토론을 진행해주기 바란다.

이용조 : 유적의 파괴현상은 도굴과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한 것 보다 심각하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의 조성이나 지방 국도의 착공, 경지 정리를 위한 포크레인의 사용, 동굴을 막는 경우 등에서 유적 파괴현상이 나타난다.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한 유적의 파괴는 문화재 관리국의 협조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 행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문화유적에 대한 기본적 국민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군 단위의 향토 박물관을 학교에 설치하기 위한 교육부와의 협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유적보호를 위해 문화재에 대한 인식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홍보물의 제작 배포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각 시도 문화재 전담 직원의 확충과 전문적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 관련 대학 졸업자의 제도적 활용 방안을 문화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977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 총람〉이 간행되었다. 이후 많은 유적이 더 발굴되었다. 전국적 규모로 문화 유적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지방별로라도 조사와 기록이 실시되어야 한다.

대단위 토목 공사 시는 기념관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적의 현장 보존 역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경철 : 문화재 훼손은 제도적 장치와 인식의 문제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공보실 직원들의 패배의식과 책임의식 결여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도굴 방지를 위해서 관에 의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기타 매체를 통해서도 국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향토자료관에 전문가 배치 및 자료관 설립이 군 단위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도 시급하다. 문화재 관리국의 예산이 잔디 입히기 등의 업적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적의 보호와 보존에 사용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유물 발굴과 연구는 그 지방 연구자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도굴보다 유적파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직접적 책임자는 해당 지역의 문화재 담당관이 될 것이지만, 그 책임은 결국 우리들 전체에게로 온다. 이러한 유적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 담당관의 전문가화 및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 또 대학과의 긴밀한 관계도 중요하다.

긴급 발굴의 경우 발굴 전문직을 각 시도에 만들거나 발굴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윤덕향 : 도굴의 원인은 직업적 도굴꾼과 주민 도굴의 두 가지이지만 심각한 것은 주민에 의한 도굴, 훼손이다. 그러므로 도굴꾼에 대한 방지 대책도 중요하

지만, 주민 도굴을 막기 위한 의식교육과 홍보가 더욱 절실하다.

문화재 관리국의 위상강화도 실질적인 문화재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가 되리 라고 생각한다. 상부구조만 존재하는 문화재 관리국으로서 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전문가인 말단 행정기관의 문화재 관련 관료의 교육이 필요하며, 문화재 관련 관료의 준사법권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대단위 토목공사에서는 유적 발굴 불이행의 처벌 제도와화 감시기구 및 개발과 훼손이 반대개념이 아닌 공존개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훼손시 처벌이 미약하여 쉽게 훼손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철저한 지표조사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개발 주체와 문화재 관련 주체의 조화방안을 모색하는 어떤 종류의 기구설립 혹은 문화재 관리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도 모색되어야 한다

정명호(동국대 교수) : 도굴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첫째 대책이며,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는 신고체제의 원활한 활용 및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규 문화재 발굴을 신고하여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얻기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며 보상금은 이 실질경비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골동품상 제도를 폐지하면 음성화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김종철 : 국민운동은 관주도로 될 수 없다. 관주도의 국민운동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속적 교육과 민간주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골동품상 제도를 언급한 것은 매매금지가 어렵긴 하지만, 도굴품으로 의심되는 것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고학 전공 학생들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 공무원 시험을 통해 가능하다.

반영환 : 오랜 시간 경청하시고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것으로 문화정책 대토론회를 모두 마치겠다.

VII. 지방화시대의 도시문화환경과 개선방안

지방 도시문화환경의 경제·사회적 의미	177
외국의 도시문화환경 조성정책	186
우리 라의 도시문화환경과 개선방안	194
'93대전 EXPO와 광역 도시문화환경 조성	201
토론 내용	217

* 본고는 1991년 10월 28일(월)에 대전 상공회의소(3층 회의실)에서 열린 「10월 문화의 달」 문화환경토론회의 발표요지 및 토론내용을 전제한 것임

지방 도시문화환경의 경제·사회적 의미

黃 琪 源*

1. 地方化時代와 都市文化環境 : 상황과 개념

1) 發 題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사회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地方과 文化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이다. 地方化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고, 文化化는 문화의 適合性·正體性·統合性の 결여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다(임희섭, 1984). 이 두 가지 현상은 각각 다른 연원과 정도를 거쳐 나타난 것이지만 도시, 특히 지방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통합되고 있다.

도시의 문화적 국면, 특히 환경의 문화적 국면에 관심을 두는 현상은 새로운 지역개발 추세의 일환으로서 해석되며,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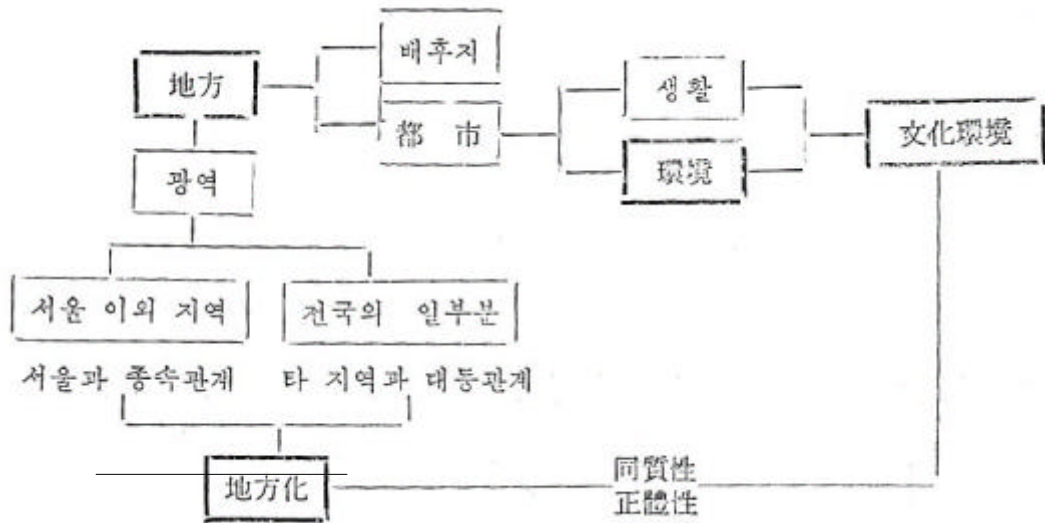
- 1) 都市는 여전히 지역의 발전에 중심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經濟成長의 據點이라는 역할 못지 않게 社會의 文化發展의 媒體라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 2) 文化는 그 자체로서 생활과 환경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3) 文化를 매체로 지역발전이 추구하는 생활과 환경의 질은 創意性으로서, 경제 성장을 통한 作動성(workability)과 適住性(livability)확보에 의해 뒷받침된다(황기원, 1986, 58~59).
- 4) 創意性的 함양은 전국이 도시화되고, 각 지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과의 불필요한 경쟁과 질서를 해소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正體性을 확보함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을 촉진하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토양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地方都市의 文化環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내포된 經濟·社會的 意義를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地方化時代의 地域開發과 地方都市



3) 都市文化環境

도시문화환경의 개념은 다의적이나 도시라는 지리적 상황을 전제로 할 때, 문화화된 環境(cultured, cultivated environment)과 “문화를 위한 環境(environment for the cultures)”으로 정의할 수 있다(황기원, 1986, 55~38).

	문화화된 환경	문화를 위한 환경
주 의	· 환경의 문화화	· 문화의 환경화
문 화	· 인간사회 전체의 생활양식의 총화 · 보편적이며, 가치중립적임.	· 지적 발달과 예술 · 비보편적이며, 우열이 있음.
환 경	· 인간생존의 모든 조건이자 사회전체의 일상적 현실생활을 담기 위한 보통의 그릇 · 자연 발생적으로 천천히 발생, 형성	· 특정활동을 위한 전용의 容器 · 특정활동을 위한 배경 · 의도적·계획적으로 급속하게 조성

문 화 환 경	· 문화화된 보통환경 · 보통사람의 일상생활(시간)을 위한 평범한 환경(공간) · 인간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모여서 만든 복합체 · 도시환경과 동일한 개념 · 문화행사용으로 轉用 가능	· 조성된 비범한 환경 · 학문이나 예술을 위한 특정환경 · 도시환경의 일부분 · 환경 자체의 문화적 수준 보유 · 문화행사 專用
------------------	---	--

2. 都市文化環境의 經濟的 意義와 役割

1) 經濟環境의 文化的 解釋

· 현대의 도시환경은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경제환경의 기반이자 현장으로 인식 된다.

· 財貨 流通과 資源 配分에서 으뜸인 기준은 利潤 추구다. 도시환경은 경제공간으로서만 인식되고 또 그렇게만 조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환경은 이윤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여 그것을 조성·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 배분의 우선 순위가 극히 낮다.

· 이 현상은 경제와 문화를 분리할 뿐 아니라 문화 본질의 오해에 기인한다. 즉 “文化는 인간이 自然을 경작하여 그 價値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고전적 정의를 해석 함에 있어, 그 추구되는 가치가 경제적 이윤이라는 가치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가치 증진을 文化라고 정의한다면 문화와 경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문화 속에 경제가 내포되는 관계가 성립된다. 즉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經濟”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文化다.

·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문화와 괴리된 경제현상이다. “경제적(정치적) 결단이 문화 창조에 중요하다면, 그것 자체가 문화적 충동과 이해에 깊이 배어 있어야만” 한다(김우창. 1984. 179).

· 문화 내지 예술은 일종의 公共財(public goods)로, 문화환경은 도시의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Harris. 1979 ; Mulcahy. 1982).

2) 經濟 論理에 의한 도시문화환경의 유형

유 형	경제활동의 보완	문화산업의 장치	기업이미지 고양
동 기	·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증대 · 기업 이미지 향상	· 문화산업의 제작, 판매의 수단	·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 이윤에 대한 반대급부
성 격	· 공급자>향수자 · 수명 짧음(패션화)	· 공급자>향수자 · 고정시설과 가변시설 · 전용, 겸용 시설	· 공급자>향수자 · 공급자 의향 강화 · 기념성 강화
환 경	· 환경장치의 문화화 · 환경내용의 문화화	· 제작시설의 문화화 · 판매시설의 문화화	· 특정시설 편중
사 례	· 쇼핑 몰 · 백화점, 쇼핑센터 부설 문화교실, 화랑, 소극장, 공연장 등 · 박람회, 컨벤션 등 · 도시의 보통환경	· 공연장, 극장, 영화관 · 서점, 오디오점 등 · 박람회, 견본시 등 · 방송국 스튜디오 · 영화제작 스튜디오 등	· 사설 미술관 · 사설 박물관 · 사설 도서관

3) 文化環境의 경제적 의의

보편적 문화환경의 경제적 의의를 지역개발 내지 도시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유 형	내 용	효 과	사 례
後 光 效 果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후광을 지역발전에 활용	· 신생지역의 활성화	· 裏里 金馬(馬百文化) · 大田과 大德(과학, EXPO) · 잘츠부르크와 모짜르트
開 拓 效 果	· 문화창작자의 낙후지역 개척에 따른 파급효과 활용	· 낙후지역의 활성화	· 丁若鏞과 茶山 · 빠리의 몽마르뜨 지구 · 뉴욕의 소호지구
重 疊 效 果	· 경제 환경과 문화환경의 중첩에 따른 상승효과를 활용	· 활성화지역의 문화화	· 일반 쇼핑환경의 教室化/工房化/廣場化

3. 都市文化環境의 社會的 意義와 役割

· “사람들의 生活樣式으로 풀이되는 文化”는 개인을 통해 포착되고 표현되지만 개인의 모임인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문화는 ‘超個人的 存在’다. 그리고 그 문화는 생래적 유전이 아닌 후천적, 사회적 유전에 의해 습득, 전달, 보존된다. 이처럼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문화를 통하여 社會化(socialization)되고, 사회를 통하여 文化化(enculturation)된다. (이광규. 1983. 3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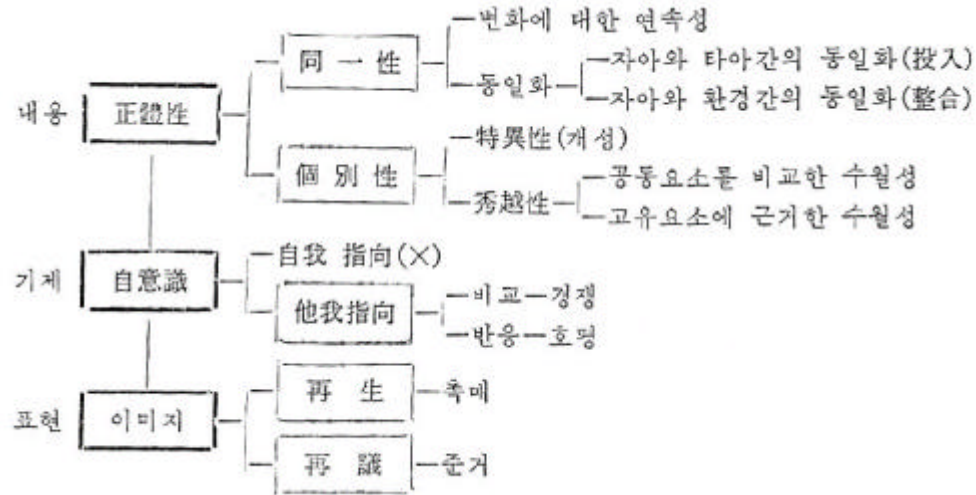
· 도시는 그 발생에 있어 복수의 인간이 군집생활을 하는 사회를 전제로 하므로 都市環境은 본래적으로 社會環境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도시는 인간 개체의 존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형식의 생활환경에 비하여 풍부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도시는 그러하여야 한다(Doxiadis, 1974).

· 도시문화환경은 단순히 도시의 사회적 환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인간이 문화화되고 사회화되는 현장이다. 그것은 좋은 집에서는 문화화를 위한 교실이며, 나쁜 점에서는 교도소가 된다(Lynch, 1977).

·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구성인의 사회적 필요충족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이질성은 경제적 환성과 사회적 쏠림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도시에 있어 사회적 문제는 가치체계-문화의 본질인-의 붕괴와 혼란일다.

· 이와 같은 사회적·문화적 문제는 正體性(identity)문제로 귀결한다. 도시문화환경은 도시사회 전체의 정체성과, 도시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유변림·황기원. 1991. 12~17).

2) 문화환경을 통한 社會的 正體性 구현/전체



1) 도시는 “그 도시답다(同一性).

- 1-1) 그 도시답다는 것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連續性).
- 1-2) 그 도시에 사는 한 개인인 나는 그 도시와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진다(投入에 의한 同一化).
- 1-3) 그 도시에 사는 한 개인인 나는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整合에 의한 동일화).

2) 도시는 그 도시다울 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다르고 더 낫다(個別性).

- 2-1)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特異성에 의한 個別性).
- 2-2)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면서 그 무언가가 뛰어나야 한다(秀越성에 의한 個別性).
 - 2-2-1) 다른 도시에도 있는 공동요소(예 가로)를 비교해 볼 때 더 낫다.
 - 2-2-2) 다른 도시에는 없는 고유요소가 있어 더 낫다.

3) 生活設計와 文化環境

· 대중소비사회는 財貨의 소유와 보유와 보유를 기반으로 하는 욕망충족의 사회다. 欲望이라는 것은 미리 알 순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충족시키는 행동은 目的指向의이다. 그러나 미래에 도래하는 新社會는 이러한 욕망 및 목적보다는 趣味指向의 사회일 것으로 예측된다. 취미는 욕망과는 달리 미리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본인이 자각할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따라서 취미지향의 인간은 自己探究的이고 自己發見的 성향을 띠게 된다(일본유통, 1989, 24~6).

· 이런 유형의 인간은 획일화를 거부하고 다양화를 추구하며, 집단화를 배제하

고 개별화를 모색하게 된다.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새롭게 설계하고자 하는 이른바 ‘生活設計(life design)’가 인간들의 중요한 일로서 등장한다. 생활설계는 가사나 노동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초적 생활수요를 합리화·간편화·효율화하는 生活管理(life management)의 차원과, 잉여 재화와 시간을 활용하여 생활의 창조화·개성화·위락화를 도모하는 生活享受(life entertainment)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 이 생활설계는 다른 아님 文化의 다른 표현이고(이광규/Kluckhohn, 1931. 86), 그 생활설계 중에서도 生活享受의 국면은 문화환경이라는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 현대 도시의 거대한 空間(space)을 적절한 소단위로 분절하며, 그 공간을 인간개체의 體驗이 용해된 ‘場所(place)’로 가꾸어야 한다.

4. 統合의 가능성

- 이처럼 도시 문화환경을 문화적으로만 보든가, 경제적으로만 보든가, 또는 사회적으로만 보는 것은 그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 경제와 사회가 문화의 하위개념임을 전제로 하여 도시문화환경의 존재의의는 어디까지나 광의의 文化를 중심으로 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 도시문화환경을 문화적으로 보게 될 때 좀더 실천적으로 유용한 개념의 틀은 生態學의 개념이다. 經濟學을 뜻하는 *economics*와 生態學을 뜻하는 *ecology*는 모두 *eco-*, *oikos*, 즉 살림살이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니, 경제학과 생태학은 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경제학이 주로 인간의 살림살이라면 생태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살림살이라는 차이가 있고, 경제학(고전적)에서 자연은 인간이 마음껏 활용해도 좋은 자원으로 생각하지만 생태학에서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반으로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한편 생태학적으로 보는 생태계에서는 모든 구성요소들간의 調和로운 關係가 전제되고 있으니 이는 또한 사회적이기도 한 것이며 바람직한 사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모두 도시문화환경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종이 多様할수록 그 생태계는 安定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생활환경은 구성원인 시민들의 役割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돈독하게 하며, 이는 多樣性和 安全性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김우창 /Mumford.
1961. 197)

· 都市文化環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결국 모든 국면이 균형 잡힌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유지하기 위한 環境의 質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다.

인용 및 참고문헌

- 김문환(1991), 〈문화전통과 문화발전〉, 《문화전통과 사회 발전》, 미원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pp.234~236.
- 김우창(1984), 〈사회공간과 창조〉, 《한국사회의 발전논리》, 서울 : 홍사단 출판부, pp. 178~217.
- 박서호 외(1988), 《지역 발전론》, 서울 : 녹원출판사.
- 박영한(1985), 〈문화와 지역주의 : 지방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발〉, 《지방의 대발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서울 : 민음사, pp. 209~228.
- 유병립 · 황기원(1991), 《대도시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문화발전연구소.
- 이광규(1983),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 일조각.
- 이중환 · 김문환(1987), 《문화축매운동론》, 서울 : 현암사.
- 임희섭(1984),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서울 : 현암사.
- 황기원(1986), 〈도시 문화환경 조성 계획의 접근방법〉, 《환경논총》 19, pp. 51~70.
-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환경문화〉, 《공간》 1988. 7~1989. 10 연재기획.
- 유네스코(1982), 《문화산업론》, 도정일 역, 서울 : 나남, 1987.
- M. 샬린즈(1976), 《문화와 실용논리》, 김성례 역, 서울 : 인간사랑, 1991.
- R. 윌리엄즈(1982), 《문화사회학》, 설준규, 송승철 역, 서울 : 까치, 1984.
- A. 포틀러(1980), 《제 3의 파도》, 김태선, 이귀남(역), 서울 : 홍성사, 1981.
- 堺屋太一, 《知價革命》, 김영진(역), 서울 : 대광서림, 1986.
- 日本流通産業研究所(1989), 《流通産業의 情報革命》, 편집부 역, 서울 : 명지출판사, 1990.
- 瀬沼克彰(1978), 《地域文化の展開》, 東京 : 大明社.
- 梅澤正(1978), 《企業文化の革新と創達》, 東京 : 有斐閣.
- Doxiadis, C.A.(1974), *Anthropopolis: City for Human Development*, New York : W.W. Norton & Co. Inc.
- Gosling, David & Barry Maitland(1984), eds, *Urbanism: Architectural Design* 54 (1/2—1984)
- Jacobs, Jane(1963),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 Harris, Janet I.(1979), “Planning for the Art”,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Planning*, Frank S. So, et al, eds, JCMA,
- Lynch, Kevin(1977), eds, *Growing Up in Cities*, Cambridge: The MIT Press.
- Mulcahy, Kevin V.(1982a), “The Rationale for Public Culture”, Kevin V. Mulcahy & C. Richard Swaim, eds, *Public Policy and the Arts*, Boulder: Westview Press, pp.33~58.
- Mulcahy, Kevin V. (1982b), “Culture and the Cities”, Ibid, pp. 213~238.

외국의 도시문화환경 조성정책

—독일의 공간정책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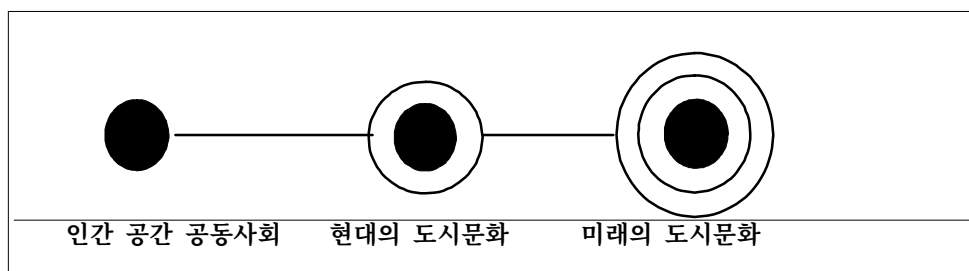
문 정 희*

1. 공간정책과 문화정책의 본질

도시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이다. 이는 자연공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후자가 생태계의 근간인 자연적 인자 상호간의 연쇄적이고 유기적인 순환시스템을 형성하여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공간임에 비해, 전자는 인간·공간·공동사회로 한데 어울려서 사회공동체가 경영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문화 형성은 인간이 모인 하나의 뚜렷한 도시공간 영역을 형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연공간영역의 활용(토지이용)범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건설계획(3차원의 도시환경) 등 도시발전정책은 인간공동체가 자연환경과 더불어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게 하고 보다 편리한 환경을 만듦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서의 소속감을 갖게 한다는 의미는 문화의 삶이며, 도시문화의 형성근간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미루어 볼 때 현재의 도시문화는 과거의 도시문화를 수용(전통문



도 1> 도시 도시문화의 생성근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화의 승계)해 오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문화 형성은 현재까지 축적되어 온 도시 문화를 근간으로 계승·발전시켜 생생한 도시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문화의 출발 근원인 인간·공간·공동사회의 조화된 점에 관하여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짧게 60~70년 전에서부터 수많은 이데올로기를 내건 정치적 슬로건을 기억한다. 그것은 한결같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녕과 복지를 제공해 주겠다는 문화적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먼저 국가를 위해야 하고, 민족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공동사회의 부와 공공이익에 전념하도록 온갖 충성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결과는, 먼저 공산주의 체제를 그 근본 바탕에서부터 흔들어 놓았고 자본주의 마저도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처방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기에는 다분히 인간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공동체라는 대단위의 조직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역량이 더욱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대 우리의 도시문화를 창출해 내는 우리 공동체내에는 기획과 정책의 과정이 있어서 서구지역 등 선진국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윤곽만 답습해 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른바 전문가·정치인들만의 구상과, 펼쳐지는 제도적 틀 속에서 나타나는 방향과 내용들에 국민들은 잘 따라만 오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관념들이 습관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갖게 한다. 기획과 정책은 문화창조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이 재인식할 때가 온 것이다. 즉 문화의 원동력이 단체를 위해서는 먼저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 개개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오늘의 중요한 토론의 제목이 되기를 바란다.

2. 독일 바덴 뷔템베르크주의 공간정책

독일의 도시공간정책이 어떻게 도시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가 하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독일은 통독되기 이전 즉 2차 대전 이후의 동서독 분리 이후 정치체제를 연방공화국의 형태로 출발하여 자치권이 부여된 2~3개의 시의회가 포함된 11개의 주 정부가 있다.

여기서 본인은 바덴 뉘템베르크 주정부의 공간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덴 뉘템베르크주는 그 공간적 범위가 우리 나라 서울시에 비해 약 7배인 3만 6천km²이며 인구규모는 서울보다 적은 933만 명으로 적정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바덴 뉘템베르크주에는 주정부가 있는 인구 60만인의 도시(SUTTGART 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1) 정책 목표에서의 문화성

1971년 6월 발표된 BADEN WEURTEMBERG 주의 지역발전 목표는

첫째, 정신적 문화예술의 함양, 지역 개체성의 발굴

둘째, 자연환경과 조화를 우선으로 하는 도시지역 개발

셋째, 생물학적·기상학적 균형과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노력

인간은 생태학적인 생활을 기초로 위의 사항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 인간들이 자연생태계의 영역을 우선적으로 유지·보전하면서 개발해 나갈 때 인간 개개인의 정신문화적 바탕이 조성되고 예술 등의 창작력이 보장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2) 정책 실현에서의 문화성

앞에서 논한 정책목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몇 가지 정책과제로 구분·설명하고자 한다.

① 토지이용 정책에 나타난 문화성

토지이용정책은 평면적(2차원적)인 생태계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문화환경 조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토지 이용정책은 자연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자연생태계의 특성과 인간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획지어 줌으로써 두 이질적인 성격의 것이 상호 공존의 원리를 발전할 수 있게 하며, 토지를 그 특성별로 분류, 이용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실험결과 나타나는 토지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역 특유의 아름다움이 형성된다.

첫째,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의 관계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나 마을은 그 형태구성이 대부분 하나의 중심으로

부터 외곽으로 확산해나가는 이른바 녹지체계를 겸비한 방사형태를 이루고 있다. 지리적 환경조건에 의하여 대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 역시 지역과 지역의 연관은 녹지대로 연결되어 있어 도시와 마을들은 그들의 특징이 녹지계로 위요된 생태계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

둘째, 도시의 구조적 위계성

녹지대로 위요된 도시나 마을은 모두 그 단위지역에 중심부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영역은 중심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생태적인 지역특정을 유지시키면서 동심적이며 외연적인 확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외곽지역과 주위를 연결하는 산림지대 사이에는 농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도시기후적 의미에서나 시각적 예술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셋째, 도시 문화시설의 공간구성

도시내의 대소공원, 사회적 중심성이 강한 공공광장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여가활동의 장으로서 사회공동체간의 사교, 상품매매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심시설들은 대부분 도시 문화를 구성하는 근본적 원형으로서 시설의 종류, 장소적 의미에 따라 문화유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 기능과 공간적 위치선정에 관하여 토지이용계획시 확정해나간다.

② 건설정책에서 나타나는 문화성

첫번째의 과제가 2차원적인 면 구획에 해당되는 예술작품이라면 두번째의 계획은 그 면 위에 입체적 형태구성으로 나타나게 하는 조형예술작업과정을 뜻한다. 이는 보이는 면으로 만들어지는 면구성의 공간과 보이지 않은 공간 사이에 교류하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의 조형활동예술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형태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역시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양의 규제조건들이 있지만 이러한 규제조건들이 조형적 전문성, 이른바 도시형태 구성학적인 전문성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규제이다.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 제정되었다면 도시의 형태구성에서 나타나는 조형미는 이미 그 가치를 보존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독일의 계획청에 속한 전문인, 이와 동등의 자격을 보유한 계획전문인—나름대로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인들에게 창작적인 활동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③ 인근지역과의 통합정책에 나타난 문화성

자치적 시의 운영체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나타나는 당해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가능한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공간정책이다. 이를 통하여 대도시 집중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또한 대도시에서 넘어오는 농촌지역에의 침투현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던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다.

3) 독일의 도시조경 전시회

이 전시회는 도시민·농민 모두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에서 구상,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진행하는 격년제 프로그램이다. 이 전시회는 전시장소가 주로 도시 전지역이 되고 있다. 1951년 HANNOVER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40여 년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즐거움, 도시민의 자랑거리, 도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있으며 정신적·정서적 측면에서도 도시문화의 건전한 인식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 주내용으로서는 1990년 SINDELFINGEN시에 서 전시된 조경전시회는 바덴 뉘템베르그주 내의 비교적 인구가 적은(2만~10만 인) 중소도시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진행하였던 바 전시기간 중 100만인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한 대성공을 거둔 문화행사로 도시문화환경조성에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하였다.

첫째, 생태학적인 도시발전예의 공헌

둘째, 근거리 휴양과 주거환경 개선예의 공헌

셋째, 여름휴가기간을 이용 문화, 예술제(콘서트, 극장)에 방문객과 함께 문화적 프로그램예의 참여

넷째, 전시프로그램에서 방문객(외국인 방문객 포함)의 직접 참여

다섯째, 경제적 도움(숙박, 음식업 등으로 인한 시수입)

여섯째, 정보교환(세미나 등)

#도시 중심부지역의 보행공간 조성

3. 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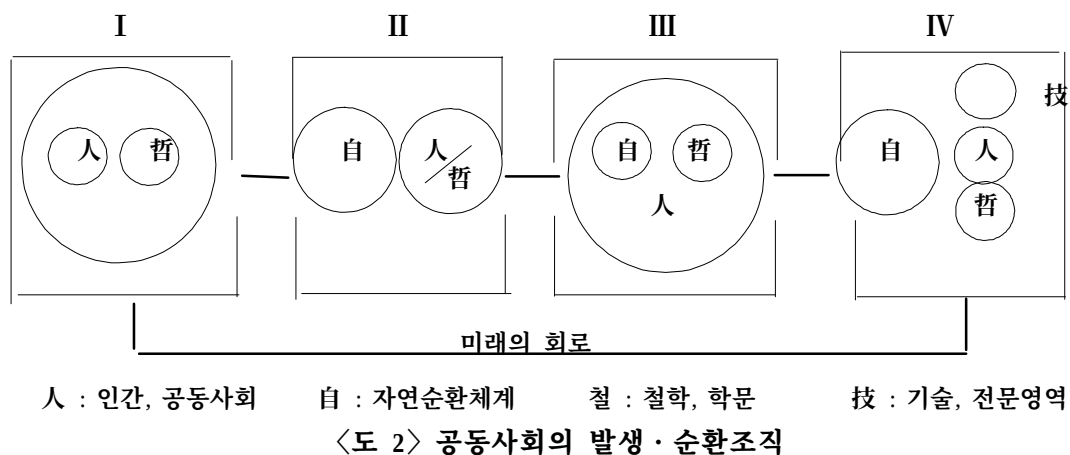
1) 우리 나라의 도시문화환경

독일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현실적 공간정책은 그대로 독일도시의 문화적 특성

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이 우리의 경우 이조시대의 삶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풍수지리 이론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 이해되며, 우리 선조들은 이보다 앞서 이를 이론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공간적 위치를 확장시켜주는 공간 정책론을 유산으로 남겨 놓았다.

이러한 선조들의 문화는 도시정착의 발생근원으로 남아서 도시의 발전과 문화의 맥락을 지금까지 이어지게 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문화의 원동력이 바로 '정주의 발생'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현재의 도시문화는 자연 생태계의 순환에서 나타나는 조화의 현상과 같이,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순환체계를 이루면서 본래의 출발 근원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연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정착사상(I)에서 인간공동체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면서, 자연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소홀히 해왔다.

이와 같은 순환체계의 원리를 생각할 때, (I)의 범주를 떠난 인간 공동체의 도시문화 창출에 새로운 철학과 기술을 도입하여 인간 공동체를 전환해보려는 시도(II)를 하였지만 현 세대의 우리 대도시 문화는 과거의 지혜를 담지 못하고 현대의 기술문명의 불협화음 속에 환경의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원점으로의 전환에서만 그 해결의 매듭이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경우, 그 대표적인 예가 종합계획이 결여된 일단의 단지 조성사업들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정책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 싸인 단조로운 아파트 문화를 형성함으로 도시내에서 격리된 섬지역을 만들어놓았

고, 도로의 화장을 요구하는 자동차 문화는 인간에게 편리를 도모하기에 앞서 보행, 인간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어 짜증스럽고 체류하기 싫은 불모의 도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2) 도시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시대에 대처할 몇 가지의 방안

이미 소개된 독일의 BADEN WEURTEMBERG주의 정책내용을 근간으로 자연과 순환되는 범위내에서 인문위주의 정책이 토론됨으로 나름대로의 우리 나라 지방 도시 정착에 필요한 계획 착안점을 끄집어내기 바라며 아울러 몇 가지 이론적 착상과 실행적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 도시 문화정착을 위한 인식의 전환

도시의 공간 접근 정책 그 자체가 문화 정책의 근본이라는 인식 전환이 정책가는 물론 문화분야의 전문인, 시민들에게도 요구된다. 따라서 공간 정책이 끝난 후 문화 정책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접근의 차원 자체가 문화정책의 뿌리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ii) 공간 접근 목표는 사회 구성원 개체성 존중

공간 접근 정책의 목적은 먼저 인간 개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건전한 가족관계형성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한 지역내에서의 편리한 삶(충분한 주거 공간, 주거 환경), 안정된 생활(직장의 안정성, 생활 활동의 편리성), 개인과 가정들이 인간 본래의 고향 감각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주위 환경의 조성은 먼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개개인의 정신적이며 예술적인 문화를 함양함에 이바지함으로 개개인에 잠재해 있는 창의력을 도출하게 하여 적게는 가족에게 크게는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iii) 실현방안

(1) 정치적 계획 운영제도 설정

기초 단위의 의회 영역에서도 주민의 생활패턴이나 언어, 문화, 교육 등 인간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질성의 영역을 구분하여 (예 면 단위 등) 정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2)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건설계획 등이 자치적인 해당기관에서 계획, 실행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3) 시민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제도

장기계획은 광역의회나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집행하되, 중·단기 계획범위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예, 사회봉사클럽 등) 또는 전문인들이 참석한 반성회 등의 시민 자주의사에 따라 구성된 모임을 통하여 토론·의결된 의사의 취합 등으로 지역내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형성 여건을 조성한다.

일련의 모든 계획과 정책의 시행들은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주민 개개인을 위한 편하고, 오래 살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함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이 도시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근본 정책 방향이라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都市文化環境과 개선방안

俞 柄 林*

1. 도시환경의 문화화

도시문화환경이라는 뜻에는 도시에 文化環境을 造成하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고, 한편으로 도시 환경을 문화적으로 개선하자는 말하자면 環境의 文化化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앞에서 말하는 문화환경은 좁은 의미에서 박물관, 미술관, 공연극장, 음악회관, 각종 옥내의 전시관 등등 文化活動의 분야별 空間 및 施設을 확충하자는 의미에서 문화적 활동이 활성화되게 도시의 공간을 개선하자는 뜻이 된다. 그러나 후자는 다소간에 넓은 뜻에서 都市環境의 전반적인 質的 水準을 (야만적인 상태에서) ‘문화화’하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 환경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질적으로 한층 높은 수준에 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송전탑, 항만의 접안시설, 도로의 광고 표시판, 위락지구의 네온싸인, 주거지역에서의 도시의 색채, 도시의 夜景, 街路의 장치물, 철도의 驛 舍, 터미널 시설의 모양, 관아지구의 창문 패턴, 학교건물과 조경, 나아가서 포구의 등대나 도시의 진입부 표시물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도시가 각자의 독특한 個性을 갖도록 도시의 기반시설이나 公共施設 나아가서 환경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媒體를 좀더 세련되게 하는 각종의 試圖나 改善方案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은 모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도시환경이 문화화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潛在力을 파악하여 이를 도시의 與件에 알맞게 啓發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도시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그러한 잠재력과 도시의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여건의 파악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다.

지방도시의 주민의 協議體로서 발전하여 주민 자체에 의하여 문화환경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점진적인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프랑스에 처럼,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국가적으로 벌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도시의 새로운 契機가 있을 때마다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전통과 관례가 된다면, 이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 도시문화환경의 활성화 내지 개선은 따라서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입장과 특정지구나 文化空間의 戰略的인 造成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이 검토되어야 된다.

2. 우리 나라 도시문화환경의 실상

우리 나라에 있어서 도시의 문화활동은 서울을 위시한 지역의 거점도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문화예술활동이 경제성장과 지방화 등에 힘입어 괄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공연과 전시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 대도시에도 점차 확대되어 전국적인 문화예술 행사나 공연도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른바 문화예술 활동의 階層性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할만하다.

우리 나라는 도시별로 볼 때, 文化 관련 활동은 다음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의 대도시와 비교해 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특히 질적 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컨대, 공연횟수나 전시횟수 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基層化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 국민의 연간 문화시설 이용 횟수는 1회가 채 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문화시설도 歐美 都市에 비해서 약 25배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양적 지표일 뿐, 질적 수준은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도 대도시의 경우이고, 지방도시나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 질적 수준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약한 시설마저도 현재는 단위 건물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하나의 총체적인 도시환경으로서 문화활동이 향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아진다. 도시의 문화공간은 하나의 분위기로서 하나의 총체적인 환경

〈표 1〉 세계 주요도시의 문화시설

단위 : 100만명당 개소

	공공도서관	박 물 관	(연)극장	영 화 관
1. 미 국 시카고(1986) 뉴 욕(1985)	29.24 28.26	2.33 20.78	39.87 54.03	14.95(1984) 55.41(1983)
2. 영 국 런 던(1983)	62.33	7.11	—	34.20
3. 프 랑 스 파 리(1980)	—	40.00	28.03(1979)	243.36
4. 독 일 뮌 헨(1986) 서베를린(1985)	18.85 72.56	13.76 22.04	18.55 12.44(1984)	20.95 44.90(1984)
5. 이 태 리 밀라노(1985) 로 마(1986)	— 14.21	7.92 4.26	26.40 25.03(1980)	110.87 77.49(1980)
6. 일 본(1986) 도쿄 교토 나고야 오사카	20.17 10.13 7.51 9.08	16.23 31.07 9.86 6.03	9.43 — — 10.97	25.54 16.80 34.73 39.72
7. 한 국(1989) 서울	1.51	2.46	2.74 ¹⁾	27.23

1) 시민/문화회관을 말함.

*한국토지개발공사, 《도시통계(III) 국외편》, 1989에서 발췌, 재작성

〈표 2〉 국민의 연간 문화시설 이용실태²⁾

문화시설	이용횟수
박물관	0.7회
전시장	1.3회
공연장	0.8회
문화원	0.2회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 1988.

으로서 작용될 때,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 도시문화환경은 한 마디로 총체적 환경의 문화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말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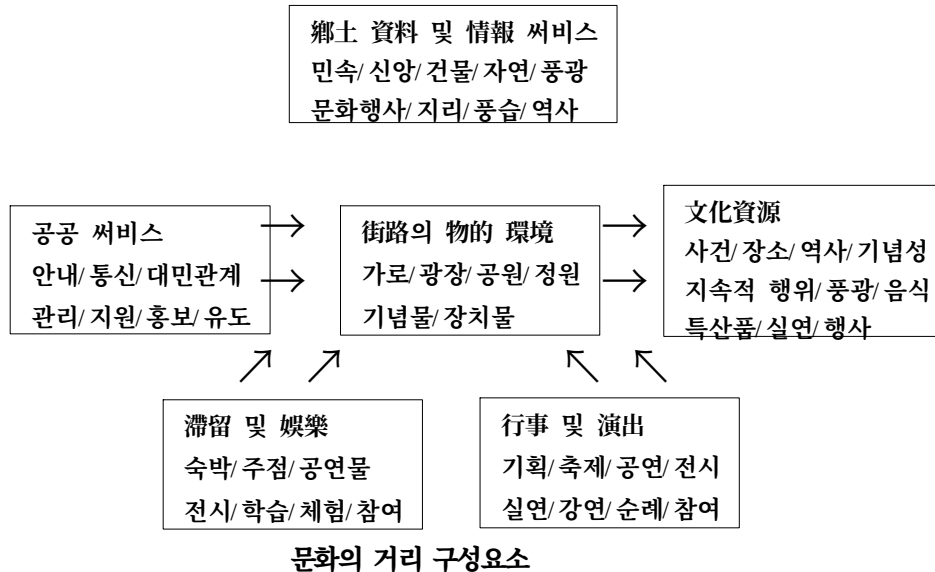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文化部에서 추진중인 文藝會館 건립, 특장전문시설건립, 中小專門文化空間 신축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지역문화시설 확충지원사업은 지원의 폭을 대폭 신장하여 ‘點’적인 확충에서 ‘面’적인 확충으로 그 방향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문화원 육성책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일련의 투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특정 가로환경으로서 ‘문화의 거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문화활동의 거리화

’91년 현재 제 7차 5개년 계획안 중 문화부문계획안에는 도시의 문화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民俗工房村, 傳統工藝傳授館, 文化藝術情報供給基地, 나아가서 문화적 거리, 文化장터 조성 등과 같이 여러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 이들 사업은 사업내용이 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이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지는 계획의 성격상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文化媒介 空間의 신설과 擴散據點 構築이라는 구상에는 각 시도별로 향후 9년간 문화의 거리나 문화장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지역문화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도시나 읍면지역에 ‘示範文化 마을 가꾸기’ 같은 전 국토의 문화공간화를 꾀하는 전략적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계획에서는 성격상 部門的인 目標 달성이 위주로 되어 있어서, 각 해당 시도군에서 이를 어떻게 地域的으로 그리고 空間的으로 구체화할 것인지는 다분히 해당지역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될 것은 그러한 각종 文化空間을 綜合化하는 일일 것이다. 말하자면, 산발적인 문화공간의 개별적인 투자와 조성보다는 전략적으로 몇몇 特定地區 街路에 이를 집중적으로 誘致하여, 새로운 名所로서 하나의 종합적인 문화환경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도시마다 도시 전체가 환경의 질서수준이 뛰어나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장기간의 세월을 요하기도 하며, 또 현실에서도 그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시의 일각에 그 도시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이 순서 상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이것이 실제 實現 可能한 일일 것이다. 그러한

특정기구를 일컬어 ‘문화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시가 새로운 문화사업을 전개할 때 의도적으로 文化活動이나 施設 등을 이곳에 集中하여 길거리를 의미 있게 정비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거리는 내용상 가로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요소별로 문화환경의 조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들 요소는 각각 별도의 조직과 구상,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특정의 가로나 구역이 발견되고 확정된다면, 하나의 총체적인 사업으로서 문화환경의 조성이 시도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地域住民의 자발적이고 有機的인 協助體制가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협력관계도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업은 특정지구나 가로의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行事나 祝祭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郷土愛의 확산이라는 여러 가지의 사업효과를 수반할 것이다. 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住民協議體가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주체로 도시의 전반적인 景觀을 改善하고, 특정 가로의 환경을 특화시키며, 새로운 문화시설이나 공간의 조성과 유치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리에는 공공도서관, 문화학교, 민속공방촌, 전통공예장, 극장,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행사광장, 문화예술안내기지, 문화장터 등 각종시설과 공간이 집약적으로 배치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공간과 장소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크게 보아 아트센타와 같은 센타형의 가로와 선형적인 거리의 모습을 갖는 街路型의 거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도시는 지역주민과 행정당국, 그리고 향토문화예술 및 역사에 능통한 인사를 중심으로 가능성이 있는 가로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로 가능성이 있는 가로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로 추진한다면, 도시의 문화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계획의 목표는 戰略的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내용과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적이고 전략적인 문화의 거리를 구상하여 事業을 先導的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반적인 도시의 문화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개선방안

도시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각종 요소를 예를 들어 도로, 주거지, 관아건물, 학교, 종교시설, 전신주, 간판, 도로의 포장, 건물의 面相, 표시물의 형태 등등 실로 수많은 물리적인 장치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 가장 기초적인 일이 된다. 이러한 일은 주민 개개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나 그것은 이론일 뿐, 실제 그러한 水準提高는 관심 있고 이해 있는 이해 당사자 집단의 良識에 달려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 環境文化賞과 같은 施賞制度를 통해 뛰어난 환경개선의 작업을 격려하고 홍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시상제도와는 달리 이러한 제도에서는 그러한 개선 작업을 주도한 사람의 업적을 可視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해서 여타 관련 개선사업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거리는 특정지구나 가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구역은 문화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 예컨대 조세 감면조치, 보조금, 장려금 지급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특정구역에 대한 물리적 개선을 위한 통제, 유도장치로서 도시계획, 건축, 조경, 조각, 기타 관련부분의 종합적인 개선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制度改善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당면 과제일 것이다. 특정구역이나 가로에 적용될 수 있는

도시 文化環境地區의 지정도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도시의 문화환경은 한마디로 간단히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주민 자신의 의지를 원칙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결코 사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참고문헌

- (1) 문화부, 《제 7차 5개년 계획 文化都市計劃(안)》
-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 자료집》, 1989.
- (3) 李鍾仁, 〈문화행정과 국가발전〉, 《예술과 행정》, 평민사, 서울, 1988.
- (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 공연예술총서 1, 예니, 서울, 1990.
- (5) —————, 《문화공간》, 문화예술총서 2, 서울, 1987.
- (6) —————, 《아트센터》, 문화예술총서 6, 서울, 1987.
- (7) 張俊鎬(역), 《世界都市再開發 NOW》, 關西情報센터 국제, 서울 1990.

'93대전EXPO와 광역 도시 문화환경 조성

정 순 오*

1. 서론 : '93EXPO와 대전

'93대전 EXPO는 직할시 승격이후 대도시로서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전에 있어서 도시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부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행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대전엑스포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준비없이 발상되어 정기적인 공인엑스포개최 스케줄에 끼어 들게 된 탓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따라서 단기간 내에 다방면의 지혜를 모으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산적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93대전엑스포의 개최에는 엑스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가 참가국가와 기업들의 전시 내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전문엑스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책임을 지고 있다면, 개최도시인 대전은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가 치뤄지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이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이러한 기회에 투자되는 재원이 향후 도시발전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준비하는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대전은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도시구조적인 측면에서 교통과 숙박시설의 확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 투자재원과 절대 공기상의 문제만을 제외한다면 단기간에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면, 대전을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더불어 품격 높은 도시문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엑스포개최를 통한 도시홍보의 과제야말로 시간이나 투자자원만으로

* 한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써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지역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으고 협동하여 이뤄내야 할 연출의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대전은 그 동안 수도권지역의 과밀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적인 지역으로서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구상과 계획에 의한 개발의 비중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도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특성이 큰 도시이다. 과거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대덕연구단지건설이나 중앙부처 산하의 11개 외청을 이전하여 제2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둔산신시가지 개발사업 등이 대전엑스포 개최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차원의 개발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충분한 대비와 수용 대책 없이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거나 지방정부의 능력으로는 그 개발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개발이 지역기반산업의 확대를 가져오는 순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비정착 유통인구의 증가에 의한 주택시장 교란과 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화, 교통시설의 비효율화를 가져오는 기능을 원활히 분담 수용하고 이를 지역기반산업으로 활용하려면 흔히 제 4차 산업으로 불리우는 정보지식산업의 생산유통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고급 인력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대전직할시는 상업, 서비스, 교육기능이 복합된 구대전을 중심으로 위락 중심인 유성, 연구 중심인 대덕단지, 공업생산 중심인 회덕·신탄진, 주거와 농업생산 중심인 가수원·진잠이 통합되어 출범하기는 하였으나, 직할시 승격 이전에 각 기능 중심간의 연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시설투자가 미약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확대 개편된 시역내의 연계도로망구축과 동시에 지역 외부로부터의 엑스포물동량의 유출입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서 안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차원 높은 도시환경조성 대책은 사실상 단기간내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쾌적한 정주환경의 완성단계라고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도시문화환경의 조성은 외형위주의 물질적인 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시민들의, 衣食住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표출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형성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공감대형성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점진적인 접근과 꾸준한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93EXPO를 계기로 대전이 국제수준의 차원 높은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가적인 도시 개발목표에 부합하면서 중부권의 지역중심도시로서 광역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문화환경조성의 파급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로 한 바람직한 도시문화환경 조성대책을 모색해 보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도시문화환경

1) 도시 문화화

모든 도시는 집적의 경제성 추구라는 도시화의 공통적인 목표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입지하여 지역고유의 역사적 전통의 산물인 사회문화적 특성을 갖게 됨으로서 다른 도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게 되며, 또한 그러한 지역정체성의 추구를 통하여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국민의 거주환경에 대한 선택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문화의 발전에는 먼저 세 가지 측면에서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노춘희 1991 : 112). 즉, 도시정부는 도시관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지방화와 인간화 그리고 문화화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를 실천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사안별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환경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지역의 전통과 문화 또는 지역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도시관리에 있어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가능한 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먼저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화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연구개발 투자 없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어떠한 작은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동시에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흔히 예산절감과 시행착오로부터 올 수도 있는 책임회피의 측면에서 의도된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행정풍토가 지방화를 더디게 해온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시환경의 문화화는 도시화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만인 대 만인의 경제적 투쟁장소로서 인식되는 까닭에 사회저변에서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다중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정부가 개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의 도시가 추하고 야만적이며 이기적인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도시환경의 문화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규제장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먼저 공공기관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 자연스러운 사회적 파급효과의 영향력을 기대해야 옳다. 도시정부부터 솔선해서 공공건축물의 미화에 힘쓰고, 각종 공공문화행사를 지원하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문화적인 감각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끝으로 도시환경의 인간화는 흔히 거대화, 과밀화, 고속화해 가는 도시의 기능적 효율화를 구실로 만들어지는 각종 비인간적인 측면들을 경계하고 모든 시설이 이용자인 인간중심으로 설계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특히 ‘인간적 척도(human scale)’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차량교통 위주로 각종 도시 시설물들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정작 최종 이용자들인 보행자들이 소외되고 보행공간이 추하고 불편한 뒷골목쯤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2) 도시 문화 환경 체계

도시문화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服部(1982)는 8가지의 지표를 들고 있다. 그 첫째는 도시관문 역할을 하는 역이나, 버스터미널, 또는 공항과 항구부근의 도시정비상황, 둘째는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의 건축과 환경설계, 그리고 공공시설의 종류와 질, 셋째는 도시중심가의 경관정비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간(mall)의 개발상황, 그리고 도시조형물이 도입된 공원의 양과 질, 넷째는 도시의 경제적 기반, 다섯째는 향토문화의 전승과 현대화, 여섯째는 문화적인 인재들의 정주로 인한 보이지 않는 도시민들의 자긍심, 일곱째는 도시자연환경과 도시민들의 정신적인 풍토, 여덟째는 도시상징이다.

이러한 도시문화환경 지표들은 크게 시설적인 요소와 활동적인 요소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도시 문화활동을 자극하거나 또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도시시설이라면 그러한 도시문화환경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도시의 기반산업과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문화환경의 조성에는 도시화의 근본동기가 되는 건전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들이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제도와 사회적인 연계,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자극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시설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그러한 도시문화환경의 조성에 관계되는 것들을 분류해서 체계화 해 본 것이다.

- 1) 도시기반시설과 경제기반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시설체계의 구축과 고도기술산업의 육성
- 2) 도시활동 :衣食住行에 관련된 도시활동, 문화활동(창작과 향유), 위락활동
- 3) 도시환경 : 도시경관의 관리(건축물 및 가로정비), 전시관람공간의 확대, 휴양공간(도시공원)의 확충

표 1> 도시활동과 문화활동시설의

문화활동시설		도시활동체계			
		경제기반	도시활동	문화활동	휴양활동
연관 도시 환경 시설	기반시설	●	●	■	■
	경관관리	○	●	■	■
	전시관람공간	○	○	●	■
	휴양공간	○	■	■	●

● 밀접한 관련성 ■ 비교적 높은 관련성 ○ 관련성

도시문화환경은 활동, 향유적인 부문과 이를 수용하고 전파하는 지원시설과 제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 는 그러한 환경의 구체적인 구성과 그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항목의 일람표로서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J. Harris 1979).

표 2> 도시 문화예술자원과 시설환경

1. 문화예술자원

○ 예술주체

- 공연예술주체 : 음악, 무용, 연극, 오페라단체
- 시각예술주체 : 화가, 조각가
- 매체예술주체 : TV, 라디오방송사
- 실질예술주체 : 실험예술가, 전위예술가(집단)

○ 문화활동주관기관

- 박물관 : 현대 미술관, 고고미술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 문화행정기관
 - 문화예술지원재단
 - 공교육, 전파매체, 전시회를 통한 문화교육
 - 초중고의 교양예술교육
 - 대학의 전문, 교양예술교육
 - 각종 전시회
 - 문화예술산업
 - 화랑, 미술경매장
 - 문화관광여행사
 - 문화예술금융제도, 기관
2. 문 화
- 박물관 : 현대미술관, 고고미술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 도시환경의 미와 자연경관미 보존
 - 자연경관 보호
 - 도시환경미의 추구 가로조경, 건축물미관심의, 간판규제, 도시미화
 - 역사적 유적보존
 - 휴양문화자원
 - 여가문화시설
 - 공원
 - 박람회
 - 축제
 - 정부시설물, 시설공간의 수용과 활용
 - 정부건축물, 재정지원 건축물설계의 수월성 확보
 - 공공건물에서의 공공예술활동 및 전시지원
 - 공공건물의 문화시설 부설
 - 역사적 기념 공공건물의 보존

3. 대전의 문화와 전통

1) 地名과 由來

오늘의 大田直轄市域은 대전의 도로원표가 있는 서대전네거리와 대전역을 잇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구대전과, 북쪽 방향으로 오늘에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懷德과 新灘津, 서쪽 방향으로 階伯路를 중심으로 하는 佳水院, 鎭岑 그리고 북쪽 방향으로 계룡산을 잇는 鷄龍路上의 儒城으로 구성되어 있다.

大田은 우리말 ‘한밭’의 漢字式 이름으로 일제시대에 지어진 이름이다. 한밭은

원래 현재의 大田驛과 大田川사이에 위치하는 현재의 中洞과 貞洞, 그리고 元洞에 이르는, 大田川이 범람하며 이뤄진 넓은 갈대밭과 모래밭을 지칭했던 이름으로 큰콩밭을 형성하였으므로 一名 ‘太田’이라고도 불리웠다.

한밭의 뿌리는 《삼국사기》 권 34~37(지리 1~4)에 등기되어 있는 고대의 삼국지 명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지리지는 종래의 吏讀式 表記의 漢字 地名을 신라의 景德王(757)이 利子 單位의 漢字 地名으로 改名 整理한 新舊地名錄이기 때문이다.

백제시대의 고지명으로 현재의 대전직할시역에 속하는 지명은 雨述部, 奴斯只縣, 所比浦縣, 眞峴縣 등이다. 백제의 우술군은 신라 경덕왕 ‘6년에 비풍군으로, 고려초에는 회덕군으로 개명되었다가 1914년 대전군에 편입되었고, 1931년 대전읍으로 승격하자 대전과 회덕의 명칭을 合字하여 대덕군으로 개칭되었다.

語源學者들의 풀이에 의하면 우술의 雨는 ‘위-맑음’을 뜻하는 말의 訓音借字이고 述은 ‘수리(峰)’의 音借로 暎수리(陽峰)의 뜻이며, 比豊은 ‘별’의 음차이고 豊은 醴(예)의 略字로 훈이 술이므로 ‘수리’의 音借로 해석되어 ‘暎수리’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밭과 신탄진 사이에 위치하여 지명이 남아 있는 懷德도 ‘회’의 훈이 ‘배’로서 暎의 음차이고, 덕은 훈이 ‘바르→불(原)’에서 訓借한 것으로 유추되어 暎 불(陽原)을 뜻한다는 풀이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雨’나 ‘比’의 의미가 ‘비롯(始)’이라는 의미로 고대 국가시대의 민족들이 이동하는 경로상의 변방으로서 각 고을이 시작되는 봉우리나 들을 기념하는 말로서 그 말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풀이도 있다.

오늘날 儒城의 옛 이름은 백제시대의 奴斯只로서 신라 경덕왕 16년에 개명된 것으로 그 어원은 ‘노스기’ 즉, 느슨하게 퍼진 지형을 가리킨다는 학설이 있다. 所比浦는 오늘날 廢縣된 옛 이름으로 그 어원의 뜻은 ‘새빛개(新陽浦)이다’. 현재 鎭岑의 옛 이름은 眞峴으로서 ‘鎭고개’, 또는 ‘鎭바위’쯤의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원의 풀이에 의한다면 오늘의 대전지역을 가리키는 지명들은 밝은 빛을 받는 산봉우리와 여기에서 퍼져 내린 나지막한 언덕배기를, 그리고 하천의 범람으로 이뤄진 넓은 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룡산계와 금강수계를 바탕으로 분지지형을 이루는 모습의 형용에서 비롯하고 있다.

2) 風水地理的 形容

풍수지리설에 의한 대전의 모습은 태백산과 지리산에서 逆龍七百里를 하여 山汰極의 힘이 모인 곳으로, 水太極인 錦江과 陰陽의 調和를 이루고 있으며 계룡산은 精氣를 금강은 神氣를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대전은 남쪽의 大屯山에서 逆龍七十里를 하여 鷄足山에 이르러 산태극을 형성하고, 甲川이 이를 감싸 돌아 수태극을 이루고 있으며, 三山과 三川 조화를 이루는 吉地로 묘사되고 있다.

三山은 東의 食藏山이 북으로 뻗어 계족산에서 마감되고 있고, 西의 九峯山이 북으로 屈曲하여 金屏山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南의 寶文山이 중앙의 寶頭를 형성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三川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대전천, 柳等川, 甲川로 삼천동에서 합류하여 금강으로 유입되는 모양이 그물의 버리를 닮았다고 풀이되는 것이다.

대전의 삼산은 각각 유불선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는데 식장산이 儒를, 보문산이 佛을, 구봉산이 仙을 상징하는 유적과 연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三山設의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屯山洞이 대둔산의 줄기가 북주하여 둔산이 되었으며, 둔산을 중심으로 계룡산, 대둔산, 서대산이 균형을 맞추어, 좌정하는 가운데 금강이 이 세 산을 감싸고도는 것이 조망되는 길지로 옛 鳴鶴所와 文政이 이곳에 자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陶山書院이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 朝鮮시대의 炭翁 권시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 길지를 아껴 머물렀던 곳이라고 풀이되기도 한다.

3) 지역문화와 전통

현재의 대전직할시는 옛 행정구역상으로 보아 고려, 조선시대의 공주목의 일부와 회덕현, 진잠현이 모여 이루어진 곳으로 우리 나라 최고의 구석기 유적인 공주장기면 석장리와 반포면의 마암과 인접한 지역으로 구석기문화권에 속했던 지역이나 그 유적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최근 둔산지구 개발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과거부터 하천변 구릉지에서 청동기시대의 유적들과 함께 유물 등이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유적 중 중요한 것은 가수원, 진잠지역의 지석묘와 괴정동의 석관묘이다.

三韓時代 대전지역은 마한 54국 중 신흠국이 위치했던 곳으로 현재의 진잠부근으로 추정된다.

대전은 백제가 서울을 고구려에 밀려 熊津, 泗比로 옮김에 따라 신라와의 接境地域을 이룬 곳으로, 백제가 고대 삼국 중 유교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탓에 유교적 전통의 뿌리가 비교적 깊은 곳이 되었으며 유교의 禮義와 節義精神이 바탕을 이루고 그 영향을 받아 백제 부흥군이 봉기거점이기도 하였다.

고려 태조는 혼요십조를 통해 차령산맥이 고려 수도 송도의 산세를 위배하는 반역의 땅이므로 이 곳 이남의 인물을 등용치 말라는 유훈을 남겨 역사상 지역적 편견을 낳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으나 고장 인물들의 출세나 행정구역 개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조선조에 이르게 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백제의 옛 터전인 충청도는 백제의 절의정신이 조선의 유교에 접목되어 부활하는 터전이 되었으며 충효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고장이 되었다. 조선의 儒學은 浪溪와 栗谷을 정점으로 嶺南學派와 畿湖學派로 크게 나뉘며 기호 학파는 17세기이후 湖西士林에 의해 학문적 정통성을 잇게 되어 조선의 정치와 사상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호서사림의 중심지는 한밭으로, 율곡의 학통은 連山의 金長生으로 다시 懷德의 宋時烈, 宋濬吉로 이어진다. 조선 유학의 五賢을 특징지을 때, 道는 李滉, 學은 李珣, 治는 趙光祖, 禮는 金長生, 義는 宋時烈로 지칭될 만큼 尤庵의 사상은 대단하여 韓末의 衛正斥邪의 바탕을 이루고 한말 義兵運動의 情神의 支柱가 되었다.

4. 대전의 도시특성과 문화환경

1) 인구 · 산업 · 공간구조

대전은 6대도시 중 가장 급속한 인구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로 인구의 급속한 이질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지역전통문화의 전승기반의 약화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될 우려와 함께 저급한 대중문화의 범람장으로 변질되어 갈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도시 기반산업이 지나치게 3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고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기반시설의 미비와 더불어 투자 또한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화창달의 기반을 형성해야 할 시민층이 지역연고성이 약한 관계로 대단히 얇아 문화적 고아지역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하겠다.

대전은 또한 격동기에 많은 유입인구가 정착한 도시로도 유명하여 도시 전체로서의 자연적 동질성이 발휘되기 쉽지 않은 도시이기도 하다. 인구유입의 주요 동기는 6·25동란기의 실향민들의 남하 정착, 70년대 경제급성장기에 수도권으로의 上京過程에서의 정착, 80년대 중앙정부정책에 의한 대전개발기에 유입된 인구 등으로 대전의 인적 구성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표시 가운데에서는 가장 다양한 실정으로 지역적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필요한 동질성의 회복이 도시성장에 따라 더욱 어려워질 전망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서울지역과의 일일생활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문화와는 달리 양적, 질적으로 빈약한 대전의 향토문화는 그나마 외래 문화의 범람과 더불어 사멸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전의 도시공간구조는 연계성이 미약하였던 유성, 신탄진, 대덕단지, 가수원 진잠지역 및 남부 고립산간 지역이 행정구역으로 통합된 탓으로 도로망의 확충과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개발지역이 산재하여 공간의 계층적 위계화와 체계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 서비스기능이 남부의 구대전 도심에 밀집하여 있고 유성, 신탄진, 대덕단지, 둔산지역이 모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투자 초기의 특성상 문화환경시설의 확보가 어려워 구대전의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지역적 편중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표 3> 인구증가추세와 전망

연 도	인 구		인 구 증 가 율			
	대전(만명)	주변지역*	서 울	부 산	대 구	대 전
1971~1980	65.2	91.4	4.2	5.1	5.0	4.6
1981~1990	108.5	75.2	2.2	2.0	2.7	5.5
1991~2000	144.5	—	1.6	0.8	1.6	2.9
2001~2010	168.5	—	0.9	0.7	0.9	1.5

* 주변지역은 대덕, 연기, 공주, 논산, 금산, 옥천, 영동, 보은. 인구는 1980, 1988각년도

표 4> 대전의 지역총생산추이

구 분	구성비(1986)		연평균증가율	
	전 국	대 전	전 국	대 전
농 임 어 업	13.7	2.0	8.0	13.6
광 공 업	34.7	31.0	7.1	45.0
제조업	51.6	67.0	10.6	13.8
총 생 산	100.0	100.0		

2) 문화환경시설 : 현황과 분포

대전의 문화환경시설은 그 기반이 지극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시설공급은 집회행사용의 시민회관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형편으로, 그나마 대학의 강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와 수준이다.

최근 5, 000석 규모의 시립 한밭도서관이 개관하는 등 앞으로의 문화환경시설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 동안 문화활동은 구대전시대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 의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독립도시로서는 필수 구비요소인 박물관, 미술관, 상설공연장 등의 건립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실정으로서 EXPO 대비 기반시설투자 재원의 염출에도 어려

표 5> 문화환경시설 현황

구분	공 연 시 설		전 시 공 간		도 서 관	박 물 관	문 화 원	국 악 원
	종합	일 반	상설	일 반				
공 공 시설학교	0/	3/ 2,530석 5/ 2,280석	0/	3/ 442평 8/ 742평	3/ 6,884석	0 5	1/ 359평	1/ 335평
계	0/	8/ 4,810석	0/	11/ 1,184평	3/ 6,884석	5	1/ 359평	1/ 334평

표 6> 문화환경시설 계획

시 설 명	개소	규 모	비 고
문예공원	1	20만평	둔산지구내 추진중, 착공 1993년 이후로 예상
조각공원	1	780평	중구 대흥 1동(조각물 6점)
쌈지공원	5		'92—5개소 조성계획중
문화의 거리	1	1.1km	'92 '93, 대전역—시청구간에 조성예정
상징조형물	3	계획중	EXPO Tower, 市象徵조형물, 市鳥조형물

표 7> 공 원 현 황

시 설 명	조 성		미 조 성		개소	계획면적	구성비 (%)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도시자연공원	1	6,014,000	4	19,605,000	5	25,619,000	70.0
근 린 공 원	6	58,041	24	7,431,965	30	7,490,066	20.5
어린이 공원	71	139,043	46	119,940	117	258,933	0.7
묘 지 공 원	1	3,216,750	—	—	1	3,216,750	8.8

움을 겪는 대전시의 재정으로 보아 93년의 엑스포개최 이후에나 그 건립추진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현존하는 공·사립의 문화시설마저 남부 구대전 도심을 중심으로 중구에 편재하고 있어 여타 자치구들의 경우 문화환경시설에 대한 지역적 자구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시 문화환경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원의 형태는 근린공원이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성실적이 미미하고 그나마 그 내용도 빈약한 실정이다.

3) 문화예술활동 현황

대전은 현재 '81~'86 사이에 창단된 5개 시립예술단과 예충산하 각 부문별로 모두 1,481명의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재정취약과 저변인구확대 부진으로 미약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시립예술단체는 교향악단('84.1, 창단, 단원 67명), 무용단('86. 6, 32명), 합창단('81. 12, 66명), 소년소녀 합창단('82.4, 56명), 연정국악원('81.7, 57명) 등으로 매년 20여억원의 예산지원으로 연간 149회의 발표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공연장은 물론 연습공간의 부족, 지원기구와 인력 미비 등으로 국내 정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예충산하의 예술단체들의 활동도 여건미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의 1차 목표액 20억원의 달성전망도 지역 기업 및 시민들의 호응이 미흡하여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역종합축제인 한밭문화제 역시 9회째 개최되고 있으나 범시민적인 축제로 승화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모에 비해 전국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특징을 지

니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5. '93대전엑스포와 광역 도시문화환경 조성 방안

1) '93대전엑스포와 도시 개발

'93대전엑스포는 대전의 도시개발 전반에 걸쳐 큰 파급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교통시설의 경우 대덕단지와 고속도로를 직접 잇는 새로운 접근로가 개발되어 기존의 동부, 서부, 유성관문(TC)과 더불어 대전은 북부지역을 통해 시내로 접근하는 새로운 외부통로를 얻게 됨과 동시에 이 통로는 한밭대로를 통해 동부와 유성을 잇게되어, 엑스포회장이 삼남지역을 잇는 교통요지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엑스포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문지동, 전인동 지역이 새로운 전원주거지를 형성하게 되며 엑스포회장이 개최 후 과학공원으로 존치됨에 따라 둔산과 유성지역이 과학관광산업을 기반산업으로 하여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엑스포회장은 대덕 연구단지와 개발이 진행중인 신탄진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양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도 기능하면서 산학협동의 교류의 장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에 대한 엑스포의 기여는 엑스포를 통해 제시된 미래상으로 도시민들에게 도시개발의 방향에 대한 상징적인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점일 것이다.

2) 광역 문화환경 조성 방안

흔히 문화환경의 불모지로 불리워 온 대전은 '93엑스포를 통해 항구적인 과학공원 시설을 갖추게 됨에 따라 대덕연구단지의 완공과 더불어 첨단과학분야의 선진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전은 백제시대 이래로 儒學의 先進地域으로서의 학문적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과학을 통해 충절의 정신을 미래 세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향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산들은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이 지역을 동경하게 할 것이며 우수두뇌들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긍심의 바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88올림픽을 치뤘내면서 국제적인 행사의 뒤끝이 막대한 투자재원의 死藏으로 이어지고 민간부문의 막대한 숙박시설투자가 과소비의 온상이 되어 온 것을 목격하고 있다. '93대전 엑스포가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엑스포의 시설이 유희화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개최도시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전국민의 성금으로 세워진 독립기념관이 주변지역 문화자원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관람객의 격감으로 자체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또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관광개발계획으로 이어져 독립기념관의 신성한 건립취지와 입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과제이다.

그러므로 엑스포 이후 대전이 엑스포의 자산을 항구적으로 증진시키면서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대전과 주변지역들의 격조 높은 지역문화환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내부적으로는 자긍심이 굳건한 도시로서 성장하고 외부적으로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다음은 그 방안에 대한 아직 정리되지 못한 대안들이다.

1. 장기적인 목표

엑스포수준의 도시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산업기반의 확충을 통한 자발적 기여재원의 형성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장기적인 도시개발구상과 준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대전의 5개구는 모두 특징적인 산업기반을 갖고 있으므로 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문화환경시설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중구는 상업과 교통, 유성은 관장휴양, 서구는 행정, 동구는 교육문화, 대덕구는 공업적인 특성에 맞는 문화환경시설을 구상한다.

2. 협동과 조성

도시 문화환경의 조성은 활동과 지원시설이라는 큰 구분이 필요하면서도 양자간의 조화와 협동발전이라는 표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두 부문을 주관하는 주체들간의 유기적인 대화의 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매체는 높은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정부의 조정역할이다.

지역전통문화의 연구와 계승발전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대덕, 연기, 공주, 논산, 금산, 옥천, 영동, 보은, 청주)을 포괄하는 광역적인 문화협의기구의 창

설이 필요하며 지역내 문화환경시설의 상호보완적인 이용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요청된다.

도시환경의 창조는 건축, 조경, 토목분야 인사들의 안목에서 비롯된다. 격조 높은 도시환경미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들간의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도시환경미 추구를 가로막는 여러 제도적 장치와 관습을 타파하도록 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조정역할은 물론 도시정부나 사회단체도 좋지만, 그 동기 부여의 선봉은 지역언론이 바람직하다.

도시문화환경을 총괄 파악하고 조정하며 한정된 도시정부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반관반민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엑스포자원활동

엑스포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 특별 교육과정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마련되므로서 단순 관람이 아닌 배우고 익히고 창조할 줄 아는 산 교육의 과정이 되게 한다.

엑스포의 시설 중 일부를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적인 문화교류와 발표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도시문화환경의 조성

대전이 광역적인 문화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 전체가 도시환경의 미를 추구하는 정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가로경관의 정비를 연구하고 조정하는 행정기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며 도시문화환경시설을 계획관리하는 부서간의 협조관계도 필요하다.

도시문화환경의 조성에는 공공기관의 수범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이제까지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온 공공건물들이 시민들에게 개방된 모습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심으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내외부 공간의 수식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대전직할시, 1991, 한밭문화예술진흥 5개년계획(안).

_____, 1991, 대전도시기본계획.

_____, 1991, 한밭정신의 뿌리와 창조.

노춘희. 1990. 도시행정총론.

Harris, Janet. I., 1979, Planning for the arts in ICMA,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Planning. 330—353.

토 론 내 용

〈참 석 자〉

사 발	회 김 원(서울시립대 교수)	조 철 주(청주대 교수)
	제 황 기 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 창 영(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토 론	문 정 희(한양대 교수)	이 범 재(단국대 교수)
	유 병 립(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 성 남(시사저널 문화부차장)
	정 순 오(한남대 교수)	이 영 길(목원대 교수)
	이 대 희(광운대 교수)	이 길 주(정주종합건축사무소 소장)
	송 형 섭(중도일보 편집부국장)	

김 원 : 약1시간 동안 여덟분의 지명토론을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 진행하겠다. 먼저 지역의 목원대에 계시는 이영길 교수의 의견부터 듣겠다

이영길 : EXPO와 지역문화 환경에 대해 말하겠다. 우선 EXPO라는 비중이 큰 행사를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가가 염려된다. 두번째로는 시 문화환경에 있어 대전지역은 전반적으로 빈약하다.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공간과 발표의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지방의 특색과 전통문화 환경이 빈약하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후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EXPO는 대전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범재 : 우리 나라 도시환경과 개선방향에 대해 유병립 교수의 발표를 들었다. 지방화시대의 의미가 중요하다. 전국적 도시환경의 평등성·보편성이 필요하지만 지역의 역사성·지역성의 발굴이 시급하다. 지역특성 규명을 위해 문화적 요소 체계의 발견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중앙의 모델화, 고정화된 것이 지방에 무분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하드웨어 쪽에서 볼 때 대규모 집중시설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단계적 환경개선, 문화적 수준 향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단계적 하드웨어의 투자와 기존 하드웨어에 문화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된다. 같은 의미를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독특한 통일성을 이룩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event를 조성해야 한다. 도시문화

환경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집중된 시민운동 등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장소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선된 환경을 손쉽게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장소선정이 필요하다. 이때 시차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업적 의미도 부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적 향상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문화환경 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된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야기된 부작용을 완화시키며 추진하여 처음의 계획을 잃지 않으면서 지속성·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도시환경 개선의 본래의 개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철주 : 문정희 교수의 독일에 있어서의 공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순서이지만 친숙한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즉 문 교수의 우리 도시문화의 근본 문제점으로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해방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인간을 물질주의 국가의 과도한 통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대안정책을 크게 5~6가지로 본다. 문화정책을 생각할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선호성 및 문화향수의 욕구는 종류와 수준에 있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말하겠다. 먼저 토지형 규제와 개선이 필요하다. 즉 노선상가를 조장하고 있는 도시법, 건축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시민운동이나 학회 차원의 운동이 요구된다. 둘째로 시설의 제공에 있어 중앙정부의 보상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민간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보상적 지역제와 개발 이익권, 조세정책 등의 방법으로 공공의 필요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이 추구하는 수익성 경제성을 만족시키면서 공공성을 충족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즉 미국의 브로드웨이의 경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의 자발적 의지와 창의력의 존중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화로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상품화, 시장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장되고 있는 자원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 지역에서의 문화행사가 1년 내내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가능하다.

김 원 : 건축학회나 조경학회, 도시계획학회 등에서도 법개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 건설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좋은 제안으로 생각된다.

이대회 : 황기원 교수의 지방도시 문화환경의 경제·사회적 의미를 통해 문화정책에 관한 일반론을 말하겠다. 첫째로 특수성을 띤 문화를 위한 환경은 보편성을 띤 문화화 된 환경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경제·사회·문화의 삼자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의 문화관련 학자나 정책 입안자의 시각을 보면 여전히 특수성을 띤 문화를 위한 환경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화, 다양화, 개성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각은 특수성을 띤 문화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적 시각에서 보편성을 띤 문화환경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의 변화에 대한 선진국 기준이나 엘리트적 기준에서의 비판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보통사람 나름의 문화를 형성해 가던 생활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삶의 수준과 그에 맞게 일어난 가치관 변화를 잘 포착해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개정화, 지방화, 문화화 차원에서의 생각과 괴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나름대로의 관심 사항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의식의 민주화 즉 비강제화, 비획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 정책담당자의 창의력과 그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정책적 여유와 장기적 시각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생활과 괴리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형의 가시적 시설 행사 치중은 곤란하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송형섭 : 이 지역주민은 30%정도에 지나지 않아 단합이 안된다는 인식과 대전은 뿌리가 없는 도시라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결국 좋은 문화·역사유산을 방치하고 자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된다. 학교의 연구 부족과 행정당국의 조직적인 문제 즉 전문연구위원의 절대부족 등과 지역언론 등의 선도적인 역할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대전시에 건의한다. 도시개발을 시에서 주도하는 획일적인 도시개발을 막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위한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향토 사학자의 유물전시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역광장의 활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상적인 대안보다는 1년 반 동안의 준비로 EXPO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여러 학자들에게 바란다.

임창영 : EXPO와 관련하여 대전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말하겠다.

기능 기술적 도시계획은 거의 실시되고 있다. 여러 요소들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도시의 문화적 발전 방향은 제시하지 못했다.

시의 특징을 만들기 위한 물리적, 기능적인 환경개선과 예측의 도시계획은 무리가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문화적 발전 방향에서 제시한 시의 통합 작업(City identity)이 진행되고 있다. 시의 이미지 통합이 필요하다. 부천시에서 도입한 경우는 외형부터 정리하는 작업을 한 후에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동 창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에서 느꼈던 점을 말하면 먼저 도시의 이미지 making에 관심을 가졌다. 중소도시를 살핀 결과 유일하게 경주만이 다른 이미지를 느끼게 했다. 이는 중앙의 획일화 된 통제로 모든 도시가 자체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도시의 특성을 드러내는 측면으로 가장 먼저 내용적인 틀을 개선해 시민들이 identity를 느낄 수 있는 상징이나 행사가 있어야 한다. EXPO를 대전의 상징으로 만들려면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를 지엽적으로 자기 분야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에서 탈피해야 한다. EXPO를 통한 상징적인 발전을 위해 과학박물관을 건립하여 대전의 독특한 이미지를 개발할 수 있다.

발전 방향에 있어서 지방적 개성이 강조되고,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체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느꼈다.

대전이 가진 원래의 기능과 이념을 잘 살리면서 새로운 시설, 기능을 부합시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성남 : 문화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말하겠다. 우선 문화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도시문화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전이 서울의 외형적인 형태만을 모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문화환경을 건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와 EXPO가 끝난 후 대전시가 어떤

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느냐가 논의되어야 한다.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요소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주의 경우처럼 대전이 배출한 문화 예술인들을 정신적 상징적인 인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매개공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문화예술공간과 향유하려는 기억주민과의 괴리감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둔산시가지를 중심으로 종합 문화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에 부설 탁아시설 등의 건립으로 문화향수계층의 편의를 돕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주회를 비롯한 행사에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길주 : '93 EXPO와 지역 도시문화 환경의 개선에 대해 말하기 전에 건축이나 예술인에 대해 문화환경의 입장에서 위상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인·예술인 협회가 대전 EXPO에 참여 못했던 것이 실상이다. 문화의 거리 조성에 있어 정책적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전역 광장~도청 1km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전 역사에 대한 문제, 동서 관통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방향의 검토가 없었다. 즉 어떤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를 그곳으로 설정했는가의 문제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두번째로 광역 도시문화 환경 개선에 있어 1년 반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문화환경과 시설을 유도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의 중점적인 내용이 많이 생략되었다.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이 선행요소이고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능동적 의식이 있을 때 도시 문화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김 원 : 짧은 기간동안 EXFO를 위해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은 양의 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네 분 주제발표자 중에 우리 나라의 문화거리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해주신 유병립 교수가 답변을 하겠다.

유병립 : 1년 반의 기간 상 시민의식의 함양도 어렵고,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표준형을 찍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국외자로서의 몇 가지 견해를 말하겠다. 영구건물 보다는 일시 건물을 세워 우선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대전 부근의 광장 주위에 일시 건물을 잘 만들어 전시·문화의 장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민에게 호응이 좋으면 영구 건물화하여 민자 유치에서 오는 역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전역—도청까지 가로이 이면 도로를

활성화하여 축제 행사를 위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둔산지구는 대규모 개발, 활동이 가능하므로 역사 문화촌이라는 주제를 갖는 넓은 의미의 공원이 필요하며 문화 활성화 기반으로서의 콘벤션 센터가 필요하다. 민자유치로 어뮤즈먼트 즉 과학 공원, 군사 land등을 동원할 수 있다. 임시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주제를 갖는 가로가 필요하다. 행정당국은 대전을 물리적 도시계획 위주에서 벗어나서, 도시의 문화 발전을 위한 장기 종합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규호(게스트) : 대전시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환경에 필요한 단체의 사무소를 시공관에 설치하여 행정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시 인구의 30%정도의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휴식처 마련이 시급하다.

김 원 : 오늘 모임은 문화부의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대전시가 행사를 유치하고 대전시의 지원을 통해 '93EXPO를 위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부분이 빠진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발표토론을 살펴보면 대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전지역의 획일성의 극복과 이미지 형성을 위해 문화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문화시설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하며 새로운 자부심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간접적인 참여가 좋을 듯하다. 직접적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오늘의 토론을 종합할 수 있다.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국토개발에 있어서 중부권의 중심지이며 여러 가지 정부의 국토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될 것을 인식하여 '93EXPO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VIII.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 개발 보급방안

시작말	/225
연구과정 개요	/228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의 개발	/236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의 보급방안	/244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원성	/251
이후 발전을 위한 제언	/252
맺음말	/259
토론 내용	/260

* 본고는 1991년 12월 13일(금)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제1강의실에서 열린 문화정책과제 연구편과 설명회의 발표요지 및 토론내용을 전재한 것임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 보급방안

이 연 숙*

1. 시작말

오늘날 현존하는 많은 사회문제 그리고 다가올 사회문제를 해결 혹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그 중 이 설명회는 주택을 새롭게 계획하는 방안을 다룸으로써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인위적인 환경은 우리 생활환경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잘 계획되면 인간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잘못 계획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임을 나타낸다. 공간적 질서는 정신적 질서와 부합됨으로 인위적 생활환경의 디자인은 곧 인간의 삶을 디자인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때이다. 이 인위적인 환경 즉 건축물은 크게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되게 만들어져야 하고, 이 사회적 요구는 그 건축물이 주택일 때에는 곧 주생활적 요구가 모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은 단순히 물리적 형상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거문화를 표현하고, 또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생활의 장(field)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것을 통해 어떤 주거문화가 펼쳐져야 하는가를 보다 깊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의를 받기는 어려우나 간과하면 사회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설명회에서 소개하는 모델은 바로 이 주생활적 요구를 분석하여 건축의 형상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들 ‘가족복지를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 가족복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가족간의 관계차원에서의 복지일 것이다. 이 가족관계 중 지속적으로 가장 문제시되어 왔던 것은 고부관계였고 이는 마치 ‘인간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적응해야 하는 부분’, ‘적응이 될 부분’ 그리고 ‘적응이 되면 바람직한 부

* 연세대 주생활학과 교수

분'이라는 시각으로 의례히 겪고 적응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만 보아져 왔을 뿐,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깊숙히 내재해 왔던 문제였음에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그 문제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는 인색해 왔다. 우리 나라의 가족차원 노인문제는, 아들과 사는 비율이 딸에 비해, 편부보다는 편모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곧 고부간의 관계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문제를 가족으로부터 풀어야 한다는 하면서도 정작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족관계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접근의 거론을 경시해 왔기에 오늘날 노인문제는 더 사회문제화 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제 이 만연한 문제를 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드러내 놓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풀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시되어야 함에도 그것을 강요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힘든 현대사회이다. 노부모는 사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나 잘 모셔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바람직하게 되기에 현대생활은 자녀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불편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노부모의 삶도 자녀의 삶도 모두 한번밖에 없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은 우리 주변에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던 생활 속의 요구를, 윤리적인 규범 때문에 드러내어 놓고 다루어지는 것이 금기시 되어왔던 문제를, 또한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계속 밑으로 덮어두려고만 함으로써 결국 세대간 동거를 부정적인 생활문화로 확산시켜온 그 문제를, 보다 드러내어 놓고 인정하며 현대적으로 수용 반영하기 위해 주거디자인으로 접근한 것이다.

한편 노인의 주거는 노인복지의 반 이상을 해결했다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큰 것인데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실버주택 산업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잘못되어 서구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문화권에 맞는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봄으로써 이 분야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노인복지 주거대안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선진사회와 같이 유료양로원이나 노인 집합주택들이 개발되어 있다 가정하더라도, 보다 주체성 있게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어야 할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주거문제에 이용되어온 개념으로는 건강과 여가활동이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복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환경에서 가족과는 떨어져 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부분 노인의 주거문제는 건강, 여가활동 외에 경제적 여건과 가족을 함께 고려해서 풀어주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많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시작신호를 알리는 깃발만 내리면 금방이라도 실버주택 상품을 내놓을 것 같은 관심과 의욕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거 문화가 과연 어떻게 주체성 있게 형성되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특히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우리의 주거환경이 과연 인간의 복지를 위해 적합한 것인가, 노인에게는 삶의 자취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데 도움을 주고, 성인자녀에게는 삭막한 도시 속의 자극들로부터 편안한 환경이 되고 있는지, 손자녀들에게는 정서적 따스함을 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 되고 있는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의 주거환경은 이제까지 차지하고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더 편리한 것만 추구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주거환경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지원성은 아니다. 이것만 강조해 왔기에 오늘 우리사회에 공동체의식이 부족하고 뭔가 한 쪽이 비어있는 불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성 회복은 이러한 맥락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는 인간성을 교육하고, 문화적 전달 기능을 하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더욱 멀어져 가는 세대간의 융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로 중요하다. 특히 가족을 통해 정서적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이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노인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이들의 생활을 보다 잘 수용해 줌으로써, 이 가족형태가 문화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받으며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물리적 지원체제가 이들을 위해 일반가족과는 다른 체제로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가 단위주거 공간의 축소경향과 지역사회 공간의 역할이 커지는 경향에서 이들에게 주거문제는 더 심오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잘 개발될 경우, 환경디자인을 통한 공간문화적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한편 집합주거 형태는 단독주거 형태보다 지역문화를 효율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됨으로써, 노인 노동력 등 지역 내 유희노동력을 활용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며, 사회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역의 형성에 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특성을 보다 잘 제공해 주는 체제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산업사회의 위기를 논하는데 가치관 문제가 흔히 거론된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형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의 불균형은 지적되어왔고, 이 불균형을 초래해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노인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험전수와 경제력이 가치판단의 주요 기준이었던 산업사회에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인은 그 사실을 자타가 인종함으로써, 노인의 위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평형구조를 깨트리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잃지 않고 또는 더 새롭게 부각되는 다른 긍정적 국면, 즉 드러나지 않게 존재해 있는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있다면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사회적 가치구조 평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만약 이러한 점이 재발견되면, 이는 노인의 위상을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에서 높여줌으로써,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오늘의 주제는 현존하는 가족문제, 그리고 노인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회적 문제에 주택의 디자인도 그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된 것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감추려 해왔던 주제를 하나의 문제로서 인정하여 현대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였고, 노인주거 문제를 우리 문화권에 맞게 보다 주체성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 얽혀있는 문제를 해체하여 독립적으로 풀려하지 않고 얽혀있는 구조 내에서 풀려고 한 것이다. 노인문제가 가족과 격리되어 거론될 수 없으며, 생활문화가 가족복지, 노인복지와 떨어져 거론될 수 없으며, 주택계획/디자인이 생활문화와 별개로 인식될 수는 없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이 디자인되는 미래사회에서, 주택은 하나의 결과적 형상으로서 그것이 바람직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용되어야 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는 선행되어 나온 결과물을 기반으로 앞으로 문화부·건설부·보사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 설명회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대부분 90년도 문화정책과제 연구의 내용이지만 여기서 나온 주요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료는 그 이후 후속연구로 진행한 계획연구(도심지역 : 연세대학교 이경희 교수연구실, 도시외곽지역 계획안 : 경상대학교 박태환 교수연구실, 실내디자인 :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연구실)의 부분이며, 이것은 개념적 발전단계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형상화된 것일 뿐 현행건축법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내놓은 안이 아님을 밝혀둔다.

2. 연구과정 개요

산업사회는 인간의 의식주를 비롯한 가족의 기본생활을 급격히 변화시켜왔다. 특히 산업사회의 대명사처럼 쓰일 정도로 핵가족은 우리사회에 깊숙히 파고들었고

현대인들은 이를 현대사회에 당연한 가족형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주거문화는 자연히 핵가족 주거문화로 점차 변모되어 왔고 합리지향적, 편리지향적인 현대인에게 도시의 협소한 주거환경은 확대가족제도의 유지를 더욱 어렵게 하여 종래의 확대가족은 점차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어 더욱 핵가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가족적, 인간적 문제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지적되고, 과연 핵가족주거문화가 산업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도록 방치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각성과 지적이, 삼대 가족이 동거하며 이루었던 전통주거문화를 아쉬워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또 핵가족이 보편화됨에 따라 드러나기 시작하는 현대 가족 및 사회문제를 인식 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자녀교육의 부재, 윤리관 및 인내심 저하, 이기적 성향, 정서적 결핍, 세대간 연결성 부족 등이 부정적인 면으로 지적되는 예이다. 즉,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산업사회의 삶을 적응해 나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로 생활의 기능성 및 편의성 때문에, 급속히 파급된 핵가족 주거문화는 이제 그 장기적 효과를 다시 평가해야할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삼대가족 동거주거는 노인과 기혼자녀 부부 및 손자녀로 이루어진 직계 삼대가 함께 동거하는 곳으로 노인과 기혼자녀와의 동거율이 높은 우리 나라와 일본 등 동양권 국가에 많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삼대 동거가족 주거문화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진 부모세대와 기혼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편안해야 할 주거가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근원처로 인식되어 실제 이상으로 왜곡되게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런 이유로 삼대 동거주거는 실제 많은 교육적, 문화적, 인간심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인간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고 주체의식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오늘날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성향으로만 치닫고 있는 핵가족 주거문화가 우리의 민족 주체성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또 다른 측면의 변화로 노인문제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이 노인문제는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관심을 받아 여러 형태로 연구가 진전되어 왔다. 여러 노인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노인주거의 개발은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각국의 노인부양제도와 거주자들의 가치관 및 경제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노인주택의 종류와 운영체계가 정립되어 모든 노인들에게 그 해

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주거의 개발은 각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기본 노인복지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가 개발되어 오지 못한 실정이다. 즉 현재까지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적 및 국민개인생활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전통적 의미의 경로효친 가치관을 고양하여 노인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무의무탁한 노인만을 부양 보호한다는 극히 소극적인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이라는 틀 속에서 노인의 문제와 욕구가 저소득층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노인전체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왔고 보호의 방법도 시설복지에 치중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핵가족의 꾸준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노인의 상당한 비율이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어 삼대동거가 주요 가족체제 중의 하나이며, 또한 노인 복지체제가 미비하고 한국인의 인식이 노부모 부양을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이라는 정책 방향과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주거유형을 달리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상은 이를 원활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 다양한 시책이 더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대 동거가족을 위한 삼대 동거주거 유형의 개발과 보급이 우리 나라 노인 주택의 공급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간 문화전달과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 그리고 우리사회 노인 복지문제의 한국적 해결을 위해 삼대 동거주거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은 인간의 생활행위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리적 환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지만, 오늘날 거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택은 거주자 스스로 건축하지 않고 계획하는 사람들에 의해 건축, 제공되는 상태이므로 이미 만들어진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생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택은 거주자인 가족형태의 특성이나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행동적 측면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의 기능적 편리성만이 계획 시 중요하게 생각되어왔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반적인 주택의 물리적 특성은 삼대가족이 동거할 경우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갖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세대간 다른 주생활 의식, 주거행동으로 인하여 세대간 가능한 한 동일 주택에서 기거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건설부와 주택공사가 서울의 상계동 지역에 삼대 동거가 족을 위해 삼대동거주택 개발 건설을 시도하였다. 이 시도는 삼대동거를 위한 계획적 대안의 하나로 이제 초기 단계이므로 앞으로 많은 과제가 이 삼대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아있다고 본다.

일례로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이 계획주거의 대상은 공영이라는 특성으로 서민층 특히 중하층 대상들이며, 이들은 경제적 제약점을 비교적 적지 않게 안고 있는 계층이다. 즉, 어쩔 수 없이 노부모와 같이 살 수 밖에 없는 비율이 높은 계층으로 이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계획 주거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범위수준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대상특성으로 인해, 평형규모가 제한적이고 이 규모 내에서 평면유형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즉, 같은 집이라고 볼 수 있는 최대범위인 복층과 수평인거의 개념까지 도입해서 지금까지의 동거개념을 발전시키기는 하였으나, 과거의 편협한 동거개념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동거개념으로 비약시켜주는 동거평면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발전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규모 자체의 제한성이 있으므로 현대적인 개념의 수용을 위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주거유형 중 집합주거인 아파트는 2,000년대의 주거모델로서 한국 사회에 선진 외래문화를 보급해 온 주체로서 핵가족화를 촉진하고 한국의 주거문화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의 아파트는 산업사회의 흐름을 타고 급속히 보급 되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게 계획되기보다는 외국의 주거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주거형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의 필연적 보편적인 주거모델로 인식되는 아파트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보다 잘 조성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문화적 민족주의는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아파트 주거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사회의 관심사로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을 예측하게 하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건설부는 1987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거문화 발전 종합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주거를 통한 건

전한 중산층 육성시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것은 주거를 국민 의식의 기반을 형성하는 문화적 실체로 접근하려했던 중요한 개념적 비약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심리 형태적 측면을 도외시해 왔다는 반성을 한 것은 이 측면이 미래에 더 중요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한 중산층 주거생활 복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계획 및 운영을 하였는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1989년 YWCA 사회문제부는 아파트 주거문화의 공동체적 의식 고취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복리시설 운영 및 실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사회 시설이 형식적인 설치나 운영비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식도 낮음으로써 주거문화 활성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주거의 문화적 기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즉, 단위주거 공간과 단지 내 지역사회시설이 그것이다. 이 두 차원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라는 근본적 개념에는 차이가 있으나 미래사회에서는 하나의 세트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주거발전 역사를 통해서 가족의 기능이 보다 축소되고 점점 주변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있다는 관점에 기인한 것으로, 초기에는 구매, 교육, 의료시설 등이 분화되었으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공부나 취미생활 등 주된 생활의 일부까지도 지역사회로 이전되고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내 공간은 단위 주거공간의 연장 개념으로 발전하여, 각 단위주거와 단지 내 시설은 더욱 통합적으로 결합될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위주거 내 가족의 차원에서 보면, 단위주거 내 가족은 문화적 기능의 가장 주된 주체로서 가족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문화적 기반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삼대가족과 관련되어 단위주거 공간의 문제를 제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문제 중 고부간의 갈등은 삼대가족에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였고, 이 가족 내 고부간의 갈등은 대도시의 고학력자일수록, 주택형태에서는 단독주택 거주자보다는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단조로운 공간으로 인한 무료함과 고독감과 건강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 외에 무엇보다도 아파트 단지나 실내구조가 대부분 삼세대 이상 가족이 동거하기에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도 받음으로써 현재의 아파트가 긍정적인 주거문화의 형성에 일차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지 내 지역사회시설 차원의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단지는 도시의 익명성을 강화시켜 주어 보다 인간적인 이웃관계, 공동체 의식을 돈독히 해주는 역

할을 하는데 부적합하게 계획되어 왔다. 가족의 생활영역을 아파트 단지 외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시간적으로는 더 여유가 없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일례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아침마다 자녀를 탁아소, 유치원, 체육관 등에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독서실에 보내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부모들의 시간과 심리적 상태를 긴장시킴으로써, 주부들로 하여금 미래 지향적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할애하게 하여 과거 지향적인 노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서적 시간적 여유를 없게 하고 있다. 진실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 잘 디자인된 주거환경이라면 성취감과 노인부양 갈등 속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여유를 되찾게 해줌으로써 보다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미래의 아파트는 삼대가 어우러지는 자연스런 삶의 현상이 됨으로써 국민의식에 문화적 연계성을 유지하는 국면을 보완하여,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확산할 뿐 아니라, 노인과 주부와 같은 유희인력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공간적 구심점이 되는 등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 상태보다 결속력이 강화된 체제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산업사회의 흐름을 타고 이상적 가족모델로 발전 확산되어 왔던 핵가족은 단기적 장점으로 인해 긍정적 평가를 받아오던 상태에서 이제 장기적인 영향 관점에서 재평가를 받는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핵가족화 경향으로 소외되어 오던 삼대동거가족의 장점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한편, 노인복지 관점에서도 ‘선가정 후사회보장’ 원칙의 정책방향에서나 국민적 의식에서 삼대동거 주거는 중요한 노인주거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계획되어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가족갈등과 나아가서는 사회문제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해 오지 못해온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는 핵가족화를 촉진하고 한국적 주거문화를 왜곡되게 확산시켜 온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미래 주거모델로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거형태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전용아파트의 개발 및 보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각적 접근을 하되 주로 주거의식 및 공간적 욕구를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환경심리 행태적 관점에 비중을 더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적을 단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삼대가족 전용아파트가 한국의 주거 문화 모델로서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둘째, 삼대가족 전용아파트에 적절한 주거유형을 개발하며,
셋째, 삼대가족 전용아파트가 바람직하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조사대상은 계층으로는 중산층을, 가족형태로는 삼대가족을, 주택 형태로는 아파트로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중산층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문화적 주체 의식, 욕구, 생활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오늘날의 중산층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사회의 경향을 이끌어 가는 영향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 크므로, 한국형 주거문화를 바람직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가족형태의 경우, 삼대가족은 한국적 주거문화에서 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문화의 핵심으로 이 가족형태가 가장 문화를 논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주거형태의 경우 집합주택은 많은 중산층들을 수용하고 있고, 미래산업 사회의 주된 주거형태로 지속 발전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제반 사회적 상황에서 미래 노인주거문제, 주거환경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었다.

위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의 범위를 모델 개발과 보급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모델개발에 관한 부분은 실제 수요자인 삼대가족을 통하여 필요성을 확인하여 개발의 내적 타당성을, 그리고 실증적이 아닌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반 학문적·사회적 시각을 종합하여 외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개발대상인 주거유형의 이론적 유형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형들을 추출하는 부분으로 구성 되었다. 모델 보급방안을 위한 부분은 정책적 후원과 건축계획적 방안, 그리고 출현 이미지와 지속적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안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방향이 기획되었으며 이는 문헌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 전문가적 접근 방법으로 이를 구체적 연구내용과 연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모델 개발의 내적 타당성은 주로 실증적 접근을 통해 확인하여, 외적 타당성은 문헌적 접근과 전문가적 접근을 통하여, 이론적 주거유형의 개발은 문헌적 접근으로, 실질적 주거유형의 파악은 실증적 접근으로 하였다. 보급방안에 있어서 정책

적 후원은 문헌적 접근과 전문가적 접근으로, 계획적 방안은 문헌적 접근, 실증적 접근, 전문가적 접근으로, 출현이미지로서 시범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적 접근으로 하였다.

이 세 가지 접근방향은 다시 6단계의 연구로 나뉠 수 있으며, 문헌적 접근에 속하는 연구단계는 ‘삼대가족 아파트의 한국적 주거 문화 모델로서의 타당성과 전망’ 부분과 ‘삼대가족 아파트 내 주거유형의 이론적 유형범위 파악’ 부분과 ‘유형화된 대표적 생활상을 만족시키는 사례의 종합적 기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적 접근은 ‘주제관련 제반 전문가 시각에서 본 삼대가족 전용아파트 개발 및 보급방안에 대한 의견종합’ 부분이다. 이 중 ‘삼대가족 아파트 주거유형의 이론적 유형 범위 파악’, ‘삼대가족 생활상 심층파악 및 포괄적 파악’ 그리고, ‘유형화된 대표적 생활상을 만족시키는 사례의 종합적 기술’ 부분은 ‘삼대가족 생활상의 일반화 및 선호하는 주거유형 파악’ 부분을 위한 보조적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크게는 6단계 중 이들 3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3단계가 모델개발 보급방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삼대가족들에게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잠재적 효용성이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삼대가족의 생활을 공간과 대응시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주거유형을 개발할 필요성과 그 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삼대가족의 생활배경이 되는 주택의 생활특성과 대응되며, 이때 주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양세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거주함으로써 원하는 가족분위기와 현재의 가족분위기와 차이가 발생하는 정도, 그리고 삼대가족의 동거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의 인식정도의 영향을 받아 현 주택에서의 생활감정, 즉 동거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와 이상적인 거주거리에 대한 응답을 통해 나타나는 스트레스 상황이 형성된다. 이 스트레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일으키며, 삼대가족 주거대안에 대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가 있는 가족일 경우, 만약 적합한 주거유형에 거주하지 못한다면 삼대가족은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생활이 순환될 것이다. 만약 이 삼대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거유형(계획주거)이 개발 보급된다면 이들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다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주택 내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틀 속에서 삼대가족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 공간상을 설명해 주는 생활변인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3.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과연 현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삼대가족형 아파트의 개발이 제반 사회적·학문적 분야의 외부시각에서 타당한가를 2차적 자료인 문헌을 통해 검토하고, 실제 삼대가족의 실증적 생활상을 통하여 이것이 타당한가를 내적으로 즉 1차적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외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하여 개발의 타당성을 추가 확인하였다. 이 결론이 나온 근거를 연구의 각 단계와 연결 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삼대가족형 아파트는 노부모와 동거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노인주거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노인복지적 시각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그 절대적 수와 상대적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지 못한 현 상태에서 사회적 문제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짙으며, 산업화 사회로 인한 가족 구성상의 변화는 인구구성상의 변화 위에 노인문제를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등의 제반 차원에서 더욱 심화시킴에 따라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보다 진지한 자세로 다루어야 할 시기에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선가정, 후사회보호 방향으로 설정되어 전통적 가치관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산업사회 진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중을 두고 발전해야 하는 유료양로원이나 노인복지 주택 등이 활성화 되는 데에 제약이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국민에게 부담 지우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실제 생활면에서도 과거와 같이 노부모 부양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기대하기에는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노부모 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의식 및 생활양식 차이가 심화되어 가족원간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킴에 따라 정책방향대로 무조건 한집에서 사는 삼대동거를 강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선가정 후사회 보장개념에서 선가정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책적 후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선·후 원칙에 매이지 않고 가정과 사회가 상호보완적인 노인부양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즉 재택노인의 복지를 위해 가족복지는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이 되어 삼대동거는 가치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대의 주택개발 경향에서 개념적 비약을 한 주거대안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한 재택노인에게 제공되는 제반 노인복지 서비스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이를 계속 장

려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삼대가족을 위한 새로운 주거대안과 노인복지 서비스 체제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 중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시도할만하며, 이 방법이 곧 삼대가족 전용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대가족아파트는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그 흐름을 같이 하며, 이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들과, 이 방향을 그대로 강조하기에는 실제 생활상을 통해 드러나는 모순점들을 수용하는 개념적 도약을 보여주는 방안이고, 보다 재택노인의 서비스 혜택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타당하며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2) 고령화 사회를 먼저 대비해 나간 선진산업국가나 국민복지에 보다 관심이 컸던 국가들에서 발전해 왔던 노인주거에는 국가나 사회보장 정책아래 노인들을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집합적으로 수용 혹은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개발의 관심이 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유형은 제 2의 물결인 공업화 시대에서 핵가족이 이상적 가족형태가 되어버린 사회에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발전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여러 모순적 개념이 발견되었고 최근 이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이 생기고 또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노인을 집합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하려던 방향에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주거지역 내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노인들을 젊은 세대와 분리하려는 경향에서 젊은 세대 및 지역사회와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시설주거 내에서도 의존이나 건강정도에 따라 그 단계에 맞는 주거로 이동하게끔 하던 경향에서 거주지를 정착시킨 후 의존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제공하는 Flexi-care의 방향으로, 재택일 경우에도 혈연가족에 근접시키려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지 못한 한국의 실정에서 선진산업국의 일반적 발전흐름에 의존했을 경우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게 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미래 노인주거 대책에 대한 지혜를 갖게 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보다 한국적 의식에 가깝고, 시설주거나 병원 등의 본격적 노인 보호대책이 활성화될 수 없는 한국적 여건을 염두에 둘 때 가족외적, 지역사회 밖으로의 장소이동성이 없는 Flexi-care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현대 우리사회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체제의 확립과 보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하여 노인이 가족 내에서 지역사회의 지원

을 받으며 부양되도록 함으로써 노후 불안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자녀세대에게는 전래 당연시되어 왔던 부양의 전적인 책임을 지역사회를 지원 받으며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절충적인 정책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문화적 주체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최근의 경향이 더욱 그 중요성을 후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주거문화 모델로서의 삼대가족 아파트 주거 개발을 위해 전통주거문화의 재고 즉, 단위주거가 지원하였던 전통적 가족형태와 전통주거의 환경 및 건축적 특성에 대한 검토 결과, 현대에 재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족형태적 특성에 있어서는 제 2물결인 공업화 시대의 이상적 가족형태 모델이 되어왔던 핵가족이 부정적 시각으로 언급되고 특히 가족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병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낳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한편, 전통가족은 가족내의 보호기능, 정서적 안정기능, 경로효친이 들어 있는 사회적 기능 등에서 원숙함을 가지고 있음이 검토되었다. 즉,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형태가 가족의 제반기능을 보다 성숙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적 특성에 있어서는 전통적 주거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의 여유 있는 배치와 구성 특성이, 현대 집합주거의 여유 없는 중앙 집중적인 직사각, 정사각 평면 형태로 부터 개념적 비약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제공하며, 한 울타리 내에 별개의 건물로 구성된 형태는 현대적 동거개념이 반드시 같은 평면에 살아야 동거한다는 것으로 일관된 데서 하나의 계획단지나 건물 내에서 서로 다른 평면에서 같이 산다는 것으로 개념적 확대가 가능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문화적 민족주의 흐름에 대비하여 또한 민족의 주체성을 주거를 통해 찾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주거문화에서 단위주택 문화 외에 주거환경 문화를 논할 수 있는데, 오늘날 한국은 아파트가 정착 된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역문화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개발,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현대적 주거환경에 대응되는 전통적 마을은 외부적으로는 폐쇄적이나 내부 마을 주민들에게는 개방적이었으며, 이 특성은 곧 마을의 공동체 의식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마을이란 환경의 지원성은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욕구 및 흐름과 제대로 부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공동체 의식과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마을의 내부 개방성—외부폐쇄성의 개념을 응용하여 재현시켜 볼 가치가 있다고 보아진다.

요약하면, 전통을 찾아 현대에 재조명하자는 의식의 경향에서 전통 주거문화에 존재하였던 가족형태적 특성과 환경 및 건축적 특성을 현대에 재조명 할 가치가 있다는 것과 이 둘이 현대적으로도 잘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현대 핵가족 체제에 확대가족의 체제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보완된 개념이라 볼 수 있는 수정확대가족 체제를 제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는 과거 전통 건축 및 마을에서 찾을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여 적용시킨 형태인 삼대가족형 전용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서 이 방향으로 삼대주거 문화를 개발 보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문화적 민족적 주체성이 강조될 미래사회를 내다 볼 때 그 전망은 밝다하겠다.

4) 노부모의 유형은 편모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우리 나라에선 아직까지 딸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 보다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동거상황에서 동거기간은 비교적 다양한 편이며, 동거 이유에선 자발적인 성격을 띄는 것이 극히 적은데 비해 의무감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 현 삼대동거가족의 위상이 다소 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동거유형은 결국 편모와 며느리의 동거가 일반적임을 보여주어, 이 두 관계가 원만하면 동거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부가 느끼는 전반적인 생활 및 현 아파트에 대한 만족정도가 만족하는 비율이 많은데 비해 노부모세대와 생활할 때 느끼는 심리적 상황은 부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난 점은 삼대동거로 인한 주부의 심리적 갈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현상은 삼대동거가족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즉 삼대가 같이 모여 삶으로써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종교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대가족의 생활이 더욱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만을 강조할 수는 없으며, 종교 또한 강조한다고 쉽게 받아들여 질 수는 없으므로, 주택 개발과 같은 다른 객관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주부들의 생활 중 삼대동거 생활을 위한 적응행태가 다양하게 일어났는데, 이러한 적응행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로서 전반적인 생활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주저하거나 자신이 내는 생활소음에 신경이 쓰여 줄이는 행태가 많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축행태가 경감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적 프로그램과 주거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의 긴장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주거개발 부분

에서 근거, 인거 신호경향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동거에서도 부분분리 형태를 다수 선호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가족환경분위기 특성에서 성취지향성과 통제력이 현재나 이상의 분위기 둘 다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났으며, 적극적 오락지향성은 이상적인 것에 비해 현재의 분위기에서 지적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대 가족의 일반적인 가족환경분위기 특성은 삼대가족에게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현재의 가족환경분위기와 이상적 가족환경분위기 차이를 본 결과 현재 삼대동거 가족은 도덕적·종교적 지향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그 외 제반 측면의 가족분위기에서는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족분위기상의 차이가 반드시 노부모와 같은 주택에 동거하게 됨으로써만 나타난 것이 아닐 수 있으나 다른 가족에 비해 노인과의 동거가 원인이 될 가능성은 높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적 요소는 다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6) 주택 내 의사결정과 경제력 그리고 가사역할을 자녀부부세대가 주도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점으로 보아 과거에 비해 가정 내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피동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노부모를 대하는 중시도는 비교적 중간 이상은 되는 반면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나, 효 사상에 대한 의식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균형돼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삼대동거시 장단점 인식정도에서 아직도 한국사회가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사회적·윤리적으로 바람직하고, 심리적·정신적으로 좋은 면을 느끼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서로 눈치를 보거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견충돌이 동거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삼대동거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장점은 다시 재확인하여 부각시키고, 이 장점이 노인의 위상을 달리 정립할 수 있는 교환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재인식하도록 하고, 단점은 양세대 모두에게 계몽하여 세대간 이해가 쉬워지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견지를 넓혀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경감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현재 삼대가족의 경우 장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이들 노인의 위치를 평가하는 데에, 경제력과 경험전수가 절대적으로

이용되었던 산업사회의 기준을 재고해 보아야 함을 암시한다. 즉 현대 핵가족에서 정서성, 문화전수, 심리적·교육적 차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보면, 실제 삼대가족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차원은 교환이론적 차원에서 노인의 위상을 높여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삼대가족의 동거를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7) 현재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자녀부부 중에서 90.0%가 같은 집이 아닌 거리에서 떨어져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63.2%가 단지 외에서 멀리 살고 싶다고 하였는데, 단지 내 근거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동거개념의 주거형이 개발되면, 70.0%가 이 주거에서 살 것이라고 응답하고, 이 중 89.6%가 현재의 일반아파트와는 다르게 개발된 새로운 주거유형에서 살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현재 동거생활의 스트레스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삼대동거형 아파트의 잠재적 효용성을 암시한다.

삼대가족의 거주공간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거의 장점 대 단점의 비율 인식정도, 동거의 심리적 부담감, 노인의 생활의존도, 노부모의 학력, 편친/양친여부와 부모동거로 인한 주택에서의 스트레스였다. 즉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인식할수록, 심리적 부담감을 더 느낄수록, 생활의존도가 낮을수록, 노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먼 거리의 주거를 원하였다.

또한 위의 요인들 중 정책이나 계획을 통하여 거주공간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는 장점 대 단점의 비율인식도와 동거의 심리적 부담감, 부모동거로 인한 주택에서의 스트레스라 볼 수 있다. 즉 장점이 단점보다 월등하게 느껴지도록 단점을 경감시켜주거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동시에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보다 나은 주거조건 개선 프로그램을 통하여 삼대가족을 현대적 개념의 동거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장점 대 단점의 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삼대가족의 경우 장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높아진 장점의 상대적 비율은 노인동거문화를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삼대가족에 적합한 주거유형 개발과 노인복지 서비스체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보아진다.

한편, 노인의 독립적 생활 가능 정도와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점으로 보아 미래의 노인은 현재보다 더 독립적이고, 학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을 때, 미래를 위해서는 평면에서의 동거가 아닌 근거 쪽의 개발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 비율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노인들의 상당 비중이 건강하고 동거가족이 주거 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점은 절충적 주거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건강으로 인해 생활의 의존도가 높지 않은 노인 동거가족은 고부간의 의견충돌 등의 심리적 갈등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의존도가 높은 노인 동거가족은 주부에게 시간적, 신체적 희생을 필요로 함으로써, 노인동거에 대한 가치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독립적 생활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공간을 분리해서 제공하는 유형도 개발해야 하며, 의존적 생활을 하는 노인과 동거하여 부양부담을 전적으로 맡게 되는 동거가족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또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을 모시고 있을수록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었고, 의존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접근성이 더 가까운 곳에서 살 것으로 응답하는 경향에서, 이 때 주부가 동거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때, 양 세대간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내에서 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따라서 가족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가 전반적으로 갖추어진 아파트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지역사회에 장기적 질환을 위한 입원시설을 갖추는 것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 외로 이동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자녀세대를 위해서나 노인을 위해서나, 또 의료병원시설이 노인의 장기간 입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현 상태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9)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동거의식면에서는 자녀의 대다수가 별거를, 노인은 대다수가 같은 집 동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삼대동거 가족에게는 동거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느끼는 갈등양상을 안고 있어 장점을 취하고자 하여 동거하면 단점을 받아들여야 하며, 단점을 제거하고자 하여 별거하면 동거 시 장점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서로 가까이 같이 산다는 의식이 들면서, 동시에 서로 원하는 만큼 공간적 분리가 된 상태에서 거주를 원하고 있는 성향이 있었다. 이럴 경우, 동거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문제 즉 같은 공간 내에서 삶으로서 행태적으로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불안한 점들을 경감시킬 수 있고, 보다 성취지향성이 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으면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며 손자녀와 노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문화적, 정서적 안정 측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결론 : 이러한 제반시각을 종합한 결론을 정리하면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계획이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하는 것이므로, 미래사회의 성향은 무시할 수 없으며, 관련 분야 학문적 선진개념을 파악하면 지혜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기에 이 부분 또한 중요하고, 아무리 선진개념을 파악하였다 하여도 현재 상황이 제약되는 실정이라면 전개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중요한 것이다. 즉, 미래 사회의 성향에서 보았을 때, 2000년대에 중요한 움직임은 보이리라 예측되는 지역 공동체의 식 강화 현상과 문화적 민족주의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집합주거 형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것이다. 그리고 학문적 추이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가족학 분야에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절충적인 양상으로서 현대적 가족망이라 할 수 있는 수정 확대가족 개념이 현대 가족에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해 줄 수 있는 잠재성이 큰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노인주거 계획분야에서는 선진 노인계획 주거에서 ‘서비스 고정—장소이동 체제’의 보호보다는 ‘장소 고정—서비스 이동체제’라는 Flexi-care 개념이 미래 노인주거의 잠재력 있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노인복지 정책에서는 국가사회 보장이 절대적이던 경향이 가족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보다 거주인 특성 즉, 생활상에 맞는 공간상 계획을 강조해 오는 추세에 있다. 한편, 현대 한국이 처한 사회적 상황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선가족 후사회 보장제도가 원칙이며, 실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동거 의식면에서는 자녀는 대다수가 별거를, 노인은 대다수가 같은 집 동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삼대동거 가족에게는 동거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느끼는 갈등 양상을 안고 있어 장점을 취하고자 하여 동거하면 단점을 받아들여야 하며, 단점을 제거하고자 하여 별거하면 동거 시 장점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하는 단계에 와 있다. 또한 현 사회 인간성 상실, 윤리성 부재, 청소년 문제 등 제반 인본적,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산업사회 발달로 급속히 확산해 온 핵가족화로 지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시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대가족은 그 장점이 부각되고 장려되는, 이른바 가치의 재발견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현대적으로 수용해주기 위해서는 종래 동거개념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재정립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 배경에서 전통 주거문화를 하나의 지혜 출처로 삼고자 되살려 보았을 때, 진통마을이나 건축적 특성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유지되었던 전통 가족적 특성에서도 현대적 주거문화를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특

성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삼대가족 전용 아파트가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내적, 외적 타당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새로운 주거문화 의식을 보급하는데 기여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 : 한국의 중산층을 위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는 일련의 주거 환경 중 제 1단계 모델인 삼대가족형 아파트(단지)는 노인을 모시고 사는 삼대이상의 혈연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각 가구의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원하는 거리 및 평면 유형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대안이 제공되어 있으며, 각 주거 내 뿐 아니라 건물, 외부환경 등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고, 삼대가족 모두 즉 노인세대를 위한 노인복지회관이 있도록 계획된 곳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특히 종래 같은 평면 안에 사는 것을 동거, 그렇지 않으면 별거로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같은 단지 내 사는 것까지를 ‘같이 산다는 의식’이 든 동거로 풀어 가능할 수 있는 주거유형을 ‘같은 집에서라도 노인영역과 자녀영역을 어느 정도 구분한 것’, ‘이층구조로 된 것’, ‘인접한 집에 서로 내부통로가 있는 것’, ‘같은 건물 내 서로 다른 층에서’, ‘같은 단지 내 다른 건물에서 사는 것’ 등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삼대가족의 가족주기별 필요한 생활시설인 탁아소, 유아원, 독서실, 생활문화교실, 노인복지회관, 체육관, 재택근무지를 위한 사무실, 성인 도서관 등이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주민생활과 긴밀한 체제로 갖추어질 새로운 집합주거 환경이 될 것이다. 이때 지역 공동체의식과 안전성을 위해 영역성이 강조되는 방어적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 소규모 복지시설은 주민 전용으로, 대규모 복지시설은 외부에도 개방하는 개념이 적용될 곳이다.

4.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의 보급방안

■ 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

1) 삼대가족형 아파트는 한국의 주거 문화 모델로서 적합하며, 국민의 새로운 주거문화 의식을 보급하는데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삼대가족형 아파트는 한국의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적합하다. 이때 아파트의 주거개념은

일반주거와는 달리 노인과의 동거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노인 주거 대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내에 노인들을 위한 제반 시설물의 안전기준을 높인다거나,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주거문화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의 시도에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때 중산층의 범주는 아파트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30평, 최대 60평 기준이 적합하므로 이 범위의 평형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평형범위를 좁혀 효율적인 공급을 원한다면 이중 36~45평을 집중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삼대가족이 동거함에 따라 커질 수 있는 평형의 후원을 위해 호화주택 개념은 변경시킬 의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한국의 사회적 이미지상 어떤 경우라도 60평 이상은 공공의 이미지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삼대가족 아파트는 비록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의 수가 적을 경우에도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들을 현대적으로 재현시킴으로써 그를 통해 민족적 주체성을 느낄 수 있듯이, 이들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주거문화를 통한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게 해야한다. 즉, 우리문화에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예제를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반적 국민의식의 형성을 위해 대표적 계층인 중산층에도 후원하는 것이 종래의 복지개념이라기 보다는 이를 뛰어넘는 주거문화차원에서 가치로 느끼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삼대가족 전용아파트는 노인복지 및 가족복지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건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이미 그 타당성이 증명된바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건설 시 일정비율을 할당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관련 법규에 삽입될 필요가 있다. 이 비율로는 현재 도시의 삼대가족 비율이 대략 12.0%정도이고, 본 연구에서 70.0%정도가 단지 내 근거를 택한 결과를 참고하면, $8\%(0.12 \times 0.7 = 0.08)$ 정도가 최대기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는 첫째, 노인문제의 한국적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주거대안의 기능을 충분히 하도록 계획하여 노인복지에 공헌하는 실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 서비스 체제가 철저히 준비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복지 서비스 체제는 의료 건강 검진 서비스 센터, 간호 간병 서비스 센터, 노인공동작업장, 휴식실, 오락실, 노인교실, 채소원/원예시설 등을 포함하므로 이것을 활성화하는 체제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복지를 위해 단위 주거공간 및 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성이 높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이웃관계를 재정립하고 주민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아파트 단지가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주거를 통한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해 오지 못한 점을 감안하고 또 미래 지향적 시각에서 재택근무, 전자주택 등의 보급으로 이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는 점도 감안하면 주민 복리시설은 더욱 결속력 있는 체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단위 주거가 제 1의 생활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는 제 2의 생활공간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요구되는 공통적 욕구를 1차적 공동요소로 뽑아내고 가족주기마다 다른 욕구는 2차적 공동요소로 뽑아 큰 규모의 것은 중앙복리시설로 작은 규모의 것은 분산된 복리시설로 집결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가족주기의 공통적 욕구를 위해서는 결혼·회갑·장례 등과 지역공동체 행사를 할 수 있는 중·대형 강당과 사회체육을 육성하는 옥내 외의 체육관 그리고 재택근무를 대비한 사무실 공간, 부녀자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지적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등을 확보하여 계획해야 하고, 가족주기별 욕구를 위해서는 확대 초기 가족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놀이터확대, 중기/말기 가족을 위한 독서실, 부녀자 생활문화 센터, 각 가정의 중간 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같은 중형 규모의 사회적 공간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주민복리 시설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제 2의 우리 공간이라는 영역적 의식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문화육성 요소이므로, 외부로 개방을 허용하는 개방성 있는 복리시설과, 주민들에게만 개방되고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특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건설 촉진법의 의무시설 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가족복지 시설도, 모든 주거 단지에 강조할 수는 있으나, 일차적으로 이 삼대가족 아파트를 통해 조건을 강화 시킴으로써, 실험적 단계를 거칠 가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단지계획의 방향을 바꿔 시도하는 것은 좋다. 즉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방지를 위해 개방적인 개념을 강조한 것을 반 폐쇄적 개념의 공간과 절충시켜 전환 시도해 볼 수 있다.

3) 삼대가족형 아파트는 삼대가족을 위해 특별히 계획되었기 때문에 공적재산 개념을 부과하여 삼대 가족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아파트 제공방법은 일부 임대·일부 분양이 바람직하며 삼대가족만 살도록 하는 규제에서는 삼대가족 해체 시 임대인 경우 정해진 기간 내 퇴거를, 분양할 경우는 삼대가족이 해체되더라도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고, 전매할 때는 삼대가족에게만 전매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의 경우, 규정은 비교적 쉬우며 이것이 문화적 순환의 기본장소로서 그 역할을 하기 쉬우나, 임대에 대한 개념이 긍정적이지 않는 중산층에게 새로운 ‘임대’ 개념이 확립되도록 그 접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은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어 있는 사회에서 규제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하여 실질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진정한 모델로서의 역할이, 공급될 당시 뿐 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지역을 통제하듯이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때 구체적인 규제는 법률상, 세무상, 관리운영상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근거형의 양 세대가 독립된 두 유니트를 임대할 경우에는 1세트 개념으로 순환시키고, 분양인 경우에는 1세트로 분양하되 전매시에는 그러한 공간적 사용혜택이 다른 삼대가족에게 순환되도록 규제 혹은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4) 삼대가족형 아파트 단지의 관리운영 규정은 법제화 되어야하며, 이 법제도에 하에 감독을 받도록 관리공단 설치를 해야 한다.

이 때 임대를 위한 아파트와 분양아파트에 대한 관리 영역은 다를 필요가 있다. 이 법제화 및 관리공단의 관할처는 건설부와 보사부가 바람직하며, 어디서 주관을 하든지 두 부서가 상호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 지역의 복리시설을 하나의 공동체시설로 그 관리체제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세부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이 다를 수 있으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집중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거문화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삼대가족형 아파트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삼대 가족에게 세금혜택을 주어야 하며, 그 세금혜택의 종류로는 재산세 감면이나 면제가 가장 좋으며, 상속세, 양도세, 취득세 등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삼대 가족형 아파트의 보급방법으로 일부 분양, 일부 임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의 경우 정부주도가 아닌 일반 건설업체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 때 건설업체의 삼대가족형 임대아파트의 건설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이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제공, 융자혜택, 세금면제 등이 배려되어야 한다.

5) 삼대가족 전용아파트 단지내의 조경계획은 노인을 위한 보다 넓고,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30%의 녹지 비율을 40%정도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목의 종류, 배치, 높이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는 등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6) 시범아파트는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후원하는 중산층 주거문화모델이 시각적으로 첫 출현을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적합한 이미지를 갖도록 구상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산층의 생활규모에 맞아야 하고 곱곰이 생각하는 중산층 이미지에도 적합해야 하며, 이들로부터의 수요패턴도 적중할 필요가 있다.

삼대가족형 시범아파트의 입주자는 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두어 추천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며, 노부모와의 실제 동거기간 및 노인 연령과 건강상태, 소득수준, 무주택자, 가족구성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삼대가족형 시범아파트 입주자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실수요자가 입주 가능하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보급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며 제도적인 기준이 강구되어야 한다.

시범아파트 단지의 적정 규모는 이 아파트가 도시지역 내에 건설될 경우, 대지여건에 따라 최소 100세대에서부터 최대 1,100세대 정도가, 도시근교 지역에 건설될 경우 최소 300세대에서부터 최대 2,000세대가 바람직하며, 아파트평형은 40평대가 적합하다.

■ 건축계획적 관점에서의 제언

1) 중산층 주거문화 모델로서의 삼대가족 전용 아파트 단지규모는 도시지역 내에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최소 100세대 규모로부터 최대 1,100세대 정도가, 그리고 도시 근교지역에 건설될 경우, 최소 300세대 규모로부터 최대 2,000세대 정도가 바람직하다.

또한 아파트 평형은 최소 30평에서 최대 60평 정도가 바람직하므로 이 범위의 아파트 평형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 범위 내에서도 36평에서 45평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급한다면 평형범위는 적으면서 최대한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언급한 공동지역내의 문화조성 외에 각 단위주거 차원의 주거문화 육성을 위해 노부모와 자녀부부세대의 보다 원만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내의 사회적 관계차원을 중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 삼대가족형 아파트 내에 제공되어야 할 주거의 유형 및 그 특성은 <표 1> 과 같고 각 유형이 제공되어야 할 비율

표 1> 삼대가족형 아파트 내에 제공되어야 하는 주거유형

1) 동거형A(수평부분 분리 동거)	현관이 한 개인 같은 집인 경우 —일상적인 생활은 함께 하나 간단한 접대나 식사 등은 간이부 역을 이용 별도로 할 수 있는 유형 —대개 노인용에 침실, 욕실, 전용거실, 간이부역을 고려
2) 동거형B(수평 완전 동거)	현관이 한 개인 같은 집일 경우 —식사, 단란, 접대 등의 일상생활을 모두 함께 할 —대개 노인용에 침실, 욕실을 고려
3) 동거형C(수직부분 분리 동거)	현관이 한 개이고 2층으로 된 경우 —일상적인 생활은 함께 하나 간단한 접대나 식사 등은 간이부 역을 이용하여 별도로 할 수 있는 유형 —대개 노인용에 침실, 욕실, 전용거실, 간이부역을 고려
4) 인거형(수평 부분 분 리 인거)	옆으로 붙어있는 두 집으로 각각 현관이 있고 두 집 사이에 내 부를 연결하는 문이 있는 경우 —일상적인 생활은 함께 하나 간단히 접대나 식사 등은 간이부 역을 이용하여 별도로 할 수 있는 유형
5) 근거형(수직 분리 근 거)	같은 건물에서 살되 서로 다른 층의 완전분리된 주택에서 사는 경우 —일상적인 식사, 접대 등은 별도로 함. —대개 침실, 욕실, 거실, 식당, 부엌이 양쪽에 다 갖추어져 있 어야 함.

표 2> 삼대가족 시범아파트 건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주거유형 비율에 대한 계획지침

구 분	고 려 사 항
주거유형 분포	건물내 동거 49% 건물내 인거 19% 건물내 근거 10% 건물의 근거 22%
동거,인거인 경우 선 정된 주거유형 및 분 포	동거형 중 (전체 49%에 해당) 수평(공용) 동거 27% 수평부분분리 동거 32% 수직부분분리 동거 41% 인거형으로는 수평부분분리 인거 100%

은 <표 2> 와 같다. 그리고 이들 평형에 적합한 방의 갯수는 최소 4개는 되어야 하
며, 그 중 평형규모가 클 경우는 5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대가족 전용아파트의 높이는 아파트가 도시지역 내에 건설될 경우 최소 5층에서 최대 15층 정도가, 그리고 도시근교지역에 건설될 경우 최소 5층 이하로부터 최대 10층 정도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내에서는 고밀도 조건 등으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으나 도시 근교라면 고층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파트 형태는 계단실과 한편 복도형이 바람직하며, 아파트 배치 형태는 주거용 아파트를 몇 그룹으로 나누어 분산배치하고, 소규모 필요시설을 그룹 내에 위치시키며, 대규모 시설을 중앙에 두는 형태가 바람직하고 지역사회를 더욱 결속력이 있는 체제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건물과 주거용 아파트 간의 유기적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건설하여야 하며 지역 내 사회적 관계차원을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이 기후, 계절에 상관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통로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삼대가족을 위한 평면계획시에는 기존공간 구성에 관한 규범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공간별 수적 개념에서 일반규범과 달리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거실, 베란다, 현관, 부엌, 식당 등이 융통성 있게 재고되어야 한다.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영역의 공간계획시 모두에게 향, 방의 크기와 전용욕실을 중요하게 배려해야 하며, 이외에 자녀세대들을 위해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배려를 더 해주어야 한다. 평면계획시 근거형인 경우, 양 세대의 생활교류가 단지 내에서 서로 원활히 잘 이루어진다 하여도 작은 규모의 공간은 7평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그 공간 구성도 방 1개, 부엌, 욕실 등은 최소한 갖추어 지도록 하여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공간 사용특성에서 거실사용을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볼 때 조부가 조모보다 주택내 사용공간이 보다 덜 개방적으로 생각된다. 이는 외출유형에 있어 조부가 조모보다 외출 경향이 더 많았던 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편부로 구성된 삼대 동거 가족인 경우 노인 측면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주부의 측면에서 사생활 보호가 되면서도 가족간 접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주택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주거공간 사용특성에서 자녀부부가 노부모보다 여건이 좋은 방을 사용하고 있고, 주택 내에서 좋은 방의 기준으로 방의 크기, 방의 위치(주택의 안쪽에 위치),전용화장실, 향/채광/일조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납물품이 많고 2인 사용이 고정된 이유로 방의 크기가 큰 방을 자녀부부가 사용하더라도 노부모 방도 기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대간 균형이 깨어지지 않게 계획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삼대동거 가족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수납공간 부족이며, 노부모 동거로 인해서는 사생활 침해의 공간구조, 규모, 방의 수, 욕실 수, 방음 등이 지적 되었다. 따라서 삼대 전용아파트 계획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고 세대간 사생활 보호가 원활히 되는 공간구조를 계획하고 그 외 방음, 방의 수, 욕실 수 등도 적절히 계획해 주어야겠다. 한편 규모면도 중요하나 이는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과 절대적으로 관련 있기에 계획에서 규모를 반영할 수는 없으나, 같은 면적이라도 더욱 공간감 있게 처리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모든 사항들은 건축계획시 고려하는 것 외에, 특히 삼대가족의 수납공간에 대한 스트레스는 생활의 누적용품이 많은 것을 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경감시켜 주도록 배려하며, 일반 가족과는 별도로 단위 주거와 옥외 창고나 단위 주거 내 옥외 창고의 면적에 대한 배려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원성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삼대가족 아파트(단지)란 과거 같은 평면에서 살던 것을 동거라고 생각하던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의 집합주거 단지 내에 같이 사는 것까지도 현대적으로 재정립하여, 노인세대와 자녀부부세대가 서로 원하는 거리에서 살 수 있도록 선택이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급되어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체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기존아파트와는 달리 효율적으로 제공된 아파트(단지)이다.

우선 가족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단지의 영역성을 높여줌으로써 이웃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범죄사회로부터 안전을 더해 줄 수 있고, 노인과 삶의 현장에서 어우러져 삶으로써 청소년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미래 사회 재택근무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으며, 노인을 적어도 가까이 모시면서 특별한 교통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서로간의 프라이버시를 적절히 지킴으로써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되찾음으로서 보다 인간적인 국면을 지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복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역 내 유희 노동력을 활용 할 수 있어 경제적 여건과 정서적 여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 특히 주거를 통한 복지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있는 특성은 노인 의료 프로그램과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이들은 노인이 집합된 환경 내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 내 제반 역할을 노인의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정서적이며 경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노인이 경험이 많은 정서적 실체임을 생각할 때 공장, 사무실 등의 직업보다는 지역사회내의 삶을 정서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내 노인복지 서비스 센터 내에 있는 의료서비스에는 노인 데이케어나 정양시설을 갖추고 있을 수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병원에 가지 않고 노인을 돌볼 수 있는 특성도 있다. 그리고 가족과 가까이 살지만 부득이하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세번째로 문화적 주체성 차원에서의 지원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은 지역내는 더욱 결속력 있는 개방적 체제로, 지역 외에 대하여는 그 폐쇄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공동체 삶을 증진시킬 수 있고 지역문화를 육성하는 구심점이 되며, 특히 노인이 집합되는 지역으로 전통적인 문화전수를 위한 구심적 장소가 될 수 있고 노인문화를 형성하는 주된 근거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근거가 현대적 동거개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노인복지 집합주택과 유료양로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의 특성이 있으며 이때까지의 주거환경 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지원성이 최대로 제공된다고 반드시 그 안에서 그 지원성이 제대로 발휘되어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주거환경은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위해 물리적 체제가 가져야 하는 지원성을 제대로 충분히 제공해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문제, 가족복지 문제 등은 다각적인 것으로 여러 방면의 접근이 필요하고 매우 추상성이 있는 것으로서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그 효율적 방향의 하나로써, 물리적 체제의 지원성이 높게 계획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이후 발전을 위한 제언

■ 본 연구 이후 지속적 보급을 위한 제언

1) 어떠한 안이 시기적으로 적합한 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해도 이것을 사회에 보급시키는데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기대효과에 근접할 수 없고

사장되어 버릴 수 있다. 특히 사회로부터 정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전개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유인가가 높고 관심이 지속되도록 분양과정에 신뢰성이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하고, 삼대가족 주거문화의 충실한 정착을 위해 물리적 시설제공 차원을 넘어 그 단지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연구시행 평가되어야 한다 삼대가족 전용아파트 계획시 물리적 건물에 대한 사용자 요구 반영 뿐 아니라, 이 물리적 체제가 그 지원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과 손자녀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고 문화적 계승을 위한 시설 개발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보급과정 상의 문제발생이 근본적 안의 개념을 왜곡시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현재 삼대가 동거하고 있는 가족으로서 현 주거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대안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가족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대상을 넘어 현재 삼대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와 현재 삼대가 같이 살고 싶어하나 현재의 주거공급 상황으로 적절한 주거대안을 찾을 수 없어 그냥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이들도 목표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나아가서는 동거를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가족들에게 동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해 볼 수 있다는 데에도 기대를 가졌다. 삼대가족의 생활복지는 주거만으로 풀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계획주거가 그 가족의 복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별거함으로써 더 바람직하게 잘 살고있는 가족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급초기 이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할 때 그 취지가 왜곡되게 전달되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재 노인세대와 별거하고 있는 핵가족 등에게 같이 살도록 또는 현재 모든 삼대가족에게 지속적으로 같이 살도록 강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3) 본 연구의 범위는 삼대혈연가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는 삼대가족들만이 집중거주 할 수 있는 소위 ‘삼대가족 전용아파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범위제한의 방법이지 앞으로 삼대가족 주거문화의 유일한 방법이 이 전용아파트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계기로 부양할 자녀가 없는 노인세대, 부양할 노인이 없는 자녀세대 등이 비혈연 노인 단

독가구와 한 단지 내에 같이 살 수 있는 ‘비혈연 삼대’ 주거문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노인복지를 위한 미래의 다양한 주거 중 가족과의 동거로 풀 수 있는 부분을 다룬 것이므로 이 관점에서 혈연삼대의 전용아파트가 우리 나라 노인복지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잘못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자녀부양이 어려운 노인 독립세대들을 위해 주거생활 지원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 중 이들의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게 노인들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프로그램 즉, 노인집합주택 및 유료양로원 등의 보급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들도 지역사회에 통합시켜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룬 삼대가족 전용아파트 내 새로운 현대적 동거개념으로 푼 근거형 중 노인세대 주거단위들을 집합적으로 제공했을 경우 결국 노인집합주택이 되므로 이 단지를 통해 노인주거 대안이 다양하고 순조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본 연구는 동질적 이웃들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시설을 각 주거에 보다 긴밀한 체제로 연결하면 바람직하다는 시각으로 일단 그 지역사회 서비스시설을 그 지역 내 삼대거주자들이 전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의 삼대가족 전용아파트 내 단지의 시설을 주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그 단지 이웃과의 결속력 증진이 지속된다는 기준에서 융통성 있게 시설의 사용이 개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복지 시설은 주변 재택노인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 사회적 상황이 모든 구역에 이 서비스 체제가 전달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단지 내 이러한 시설은 더욱 개방 될 필요가 있으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 단지보다는 보다 공동체적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지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기재 및 지원성 기능의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5) 본 연구가 ‘삼대가족 아파트 단지’로 접근한 것은 그 단지 내 주민들의 거의 모든 생활이 그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단지 내부지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앞으로 토지가 제한된 도시지역 내에 개발될 경우 그리고 지역주변 환경이 반드시 생활편익 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거지역이 아닐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단지의 제반시설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파트 단지가 놓이는 상황에 따라 즉,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 내에 부분으로 위치할 경우, 보

다 긴밀한 생활보조시설만 내부에 갖추고 그 외 구매시설, 서비스 센터 등은 그것이 놓이는 큰 단지 내 시설과 공용토록 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삼대가 즉 이웃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이 보다 큰 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와 같이 결속력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족문화, 지역문화를 확립하는 모델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

6) 아무리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잘 계획된 주택이라도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계획주거에 대응하는 생활상을 가진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고, 이것이 적어지면 계획주거의 효율적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홍보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삼대주거 가능성이 국민에게 충분히 인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계획을 시행할 때는 긍정적 가치가 월등하기 때문이지 긍정적 국면만 있기를 기대하고,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설 후 입주자가 거주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이 중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의 접촉이 불필요한 자녀세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자기 가족을 다른 가족과 비교하게 되는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삼대가족 아파트에 이주해 오기 전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세대간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8) 이 아파트 단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전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노인의 상태에 따라 그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성이 있는 역할을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감 뿐만 아니라 경제력까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 뿐 아니라 지역의 유희노동력을 가진 주부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의 경제활동 및 소속감/애착감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9) 문화적 전수기회가 해체되어 가는 사회에서 이러한 삼대가족 전용아파트는 전수할 만한 가치를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수용하고 보급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야 한다.

10) 본 연구는 변화해 가는 사회에서 삼대가족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지원체로서 삼대가족 전용 아파트 단지의 개발을 강조한 것이다. 물리적 형상은 그 지원성이 높게 계획되었다해도 그것으로 인해 그 내부생활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생활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으면 이 아파트 단지의 효용성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11) 본 연구는 미래 한국의 노인주거 계획을 위해 1차적 연구로서 삼대가족 전용 아파트를 다루었으며, 모든 노인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조사하여 전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현재 노인주가 대안이 없는 한국에서, 이미 이들이 발전해온 선진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주거대안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들 중 한국의 노인주택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을 선별하여 정책적, 건축적으로 지향해야 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본 연구는 현재 아파트에 사는 삼대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거나 미래 발전의 기본적 자료로 활용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했던 가구 및 주택특성을 넘어 현재 아파트에 사는 비삼대가족과 단독주택에 사는 삼대, 비삼대가족에게 이러한 주거대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파악하여, 이 모델의 효용성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더욱 안정적인 정책의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즉 삼대동거를 위해 단독주택이 아파트 보다 더 선호되는 현상은 일반적이라 인식되어 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인가(valence)를 지니고 부각되는지를 파악하고, 또 현재 비삼대인 가구들에서는 어떤 유인가를 지닌 것으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 파악되었을 때, 이 아파트 단지의 진정한 효용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13) 본 연구는 문화적 주체로서 중산층을 중요시하여 연구대상을 중산층으로 하였으나, 이 계층의 주거문화 육성을 위해 시도한 제반노력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저소득층에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실험적 단계로서도 유용할 수 있다.

■ 미래지향적 환경디자인을 위한 제언

1) 삼대가족 아파트 단지는 전통적 삼대가족의 장점을 현대적으로 수용하고자 계획된 주거생활의 모델로서 그것에 내재하는 의미자체에서 이 시대 포스트 모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가 시각적으로 표출 창조된 건축공간이기 때문에 하나의 비언어적 의사전달 체제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적 디자인의 흐름도 반영하면서 주체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을 따르되 그 하위경향 중 전통주의적 맥락에서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건축물 자체에 '삼대가족 문화'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2) 보도, 차도를 건물을 경계로 하여 구분하면 바깥을 앞서가는 산업사회의 시각물로서 이미지를 갖도록 디자인하고, 내부환경이 되는 단지 안쪽을 정서적 형상으로 드러나게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오늘날의 환경은 인간의 정서감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창조되지 않음으로써 산업사회의 삭막함을 더해가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어느 환경보다 정서적 안정감, 인간적 따스함을 느껴야 하는 주거 환경에서 이 특성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것은 바깥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산업기술의 상징인 자동차는 건물 바깥으로 두도록 주차장을 주변으로 계획하고 일단 주거단지 안으로 오게 되면 비인간적 비자연적인 요소들이 시각적 환경권밖에 있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이 단지는 ‘방어적 공간’ 개념이 최대한 이용되어 단지 자체에 안전성이 철저하게 특히 경비실의 위치, 디자인, 그리고 하이테크 시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에 집단주거지역 사회가 현재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므로 그 자체에 범죄예방성, 지역 내 이웃결속력 증진 기능이 강화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이 단지에는 그 자체 내에서 노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거의 모든 생활기능이 해결되도록 구매시설 뿐만 아니라 각 가족생활주기에 필요한 서비스 즉 유아원, 탁아소, 독서실, 체육관, 부녀자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등이 보다 긴밀한 체제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미래 전자주택의 예견에 따른 재택 근무를 위해 주거 내 사무 작업공간이 필요하나 주거규모의 축소경향으로 이를 지역사회시설 내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시무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주거용 아파트는 지역 내 서비스 복합건물과 옥내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면 바람직하다. 그 지역의 서비스 시설은 주거기능이 분화된 것이므로 기후에 상관없이 접근 용이해야 하며, 심리적으로 지역시설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웃공동체와의 결속력을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연결통로는 외부에서 특히 경비실에서 감시가능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결통로의 건축재료가 투명/반투명과 조명시설 및 조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길어지는 통로에서 지루한 감이 들지 않도록 디자인이 각별히 배려되어야 한다.

6) 지역시설 중 노인복지회관 내 노인의 휴식실 중 일부영역은 어린이를 동시에 돌보는 노인들을 위해 유아원/탁아소/놀이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공간도 옥외(노천)놀이터—옥외 천정이 있는 놀이터—실내 놀이공간(유아원)—노인휴식실 일부영역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후의 영향

으로 옥외 놀이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후에 관계없이 옥외에서 놀 수 있게 투명 혹은 반투명 천정이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어린이 놀이 특성에 따라 실내외를 원활히 사용하도록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실외먼지 등을 제거하고 들어올 수 있는 처리를 하는 연결공간이 원활히 마련되어야 바람직하다.

7) 이러한 단지는 미래 사회의 발전과 그 속도를 예측해 볼 때 현재는 안쓰이더라도 전자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기본 설치는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모든, 시설물의 사용시 카드제, 중앙 관리사무실 및 각 경비실에서 보안 통신제를 통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특히 각 가정에서 부재중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안전을 위해 관찰을 의뢰할 경우 스크린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관찰하여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특히 단지 내 자녀세대와 노인세대의 통신은 직접적으로 가능, 용이하게 해야 한다.

8) 시각적 물체는 환경지각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모든 중요한 벽, 개구부, 문, 스크린 등에 전통적 디자인 특성을 현대화하여, 이용하는 시도로 시각물을 통한 문화적·정서적 감응이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노인의 유희노동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일의 종류에 대해 가졌던 관습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아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 일의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디자인적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비, 관리인 등의 일은 은퇴노인 중에서 맡을 수 있으며 이들이 지역 내 아동들의 보호 및 지역교육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분을 고취시켜 주려면 우선 종래의 경비실과 관리실의 환경이미지를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적 이미지로 직업과 직업인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환경심리적 지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센터에는 일정량의 입원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입원실은 일반 가정에서와 같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단지에는 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예측되어 사망의 경우도 만성적 병환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고 이럴 때 가족 내 지역 사회 내에 있는 보다 적극적인 Flexi-care System이 되기 때문이다.

10) 이 단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Urban System이 되는 것으로 마치 Paolo Soleri의 개념과 유사하며 이것이 널리 보급되었을 때는 교통, 공해 등의 제반 도시문제가 해결, 경감될 수 있다. Soleri는 건축환경을 생태학적 환경으로 보고 이를 통해

인간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그가 계획한 초대형 도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건축적 체제로 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는 자동차가 없고, 대신 에스카레이트 등의 교통시스템이 계획되어 있는 등 고도의 기술을 극도로 이용한 새로운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단, Soleri의 그것에는 고도의 기술적 국면이 중심이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그것이 사용되거나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해 있고, 드러나는 것은 정서적 감동을 줄 수 있는 보다 인간적 자연적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관리소와 주거동 중심의 관리소, 그리고 각 주거단위는 전자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지역 내부 환경은 에스카레이트 대신 자연적 정서적인 보도블럭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국면이 편익성 위주로만 일관되지 않고 환경지각적·정서적 국면이 보완되어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고향의 존재와 그 고향의 정서적 이미지는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바, 병원이나 삭막한 아파트를 서슴없이 고향이라고 말하는 미래사회 주인공들의 마음에 보다 인간적인 고향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 단지내부에는 정서성 높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7. 맺음말

우리는 좋고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을 흔히들 유토피아라 한다. 이때의 유토피아는 비현실적이라는 단어와 상통되어 사용된다. 비현실이란 현실적으로 수용이되기 어렵다거나 그것이 실행되기에는 제약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또한 정말 좋은 것을 가져보지 못한 경험으로 가득 찬 우리 세대의 심리적 상태, 시야를 반영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모델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서 나왔으며, 수용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적 기반 위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면, 그 유토피아는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토 론 내 용

		〈참 석 자〉	
사 발 토	회 제 론	김 용 범(문화발전연구소)	한 양 순(연세대 교수)
		이 연 숙(연세대 교수)	서 재 웅(전 목동계획단장)
		오 시 덕(대한주택공사 설계개발부장)	김 태 현(성신여대 교수)
		이 정 섭(보건사회부 노인복지과장)	송 정 숙(서울신문 논설위원)
		박 재 간(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	이 상 철(청구주택 전무)

이종인(문화발전연구소 소장) :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모델의 개발과 보급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를 설명 드리고, 이에 대한 전문관계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현재 문화발전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조사 연구하거나, 정책적인 대안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0여 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다.

작년 '90년도는 문화부의 출범과 더불어 문화행정에서도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선정된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 개발과 그 보급방안〉이라는 것이었다. 이 과제는 오늘 주제를 발표해주실 연세대학교의 이연숙 교수님이 연구책임자가 되셔서 작년 12월~금년 9월까지의 10개월간의 기간동안에 진행된 것이다.

우리들이 이 과제를 연구한 목적은 전통주거문화의 장점을 계승하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한국형 주거모델'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택분야의 문제를 문화정책차원에서 다루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한다면, 단순한 주택난의 해소나 노인복지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3대 영역인 의·식·주중에서 주생활이 국민생활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생활의 미덕과 가치관을 되살리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도 큰 효과

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당초에는 단독주택과 농어촌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의 유형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연구예산, 연구기간 등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 치 않아서 현대도시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며 그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아파트만으로 범위를 좁혀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는 다행스럽게도 주식회사 청구의 도움을 받아 이연숙 교수님과 연세대 이경희 교수님, 경상대 박태환 교수님, 김정근 디자인팀들이 공동으로 설계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까지 되어서 더욱 뜻 있는 사업이 되었다.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런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과 현실적인 적용의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델을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의 설명회에서 그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 드리기 위하여 모형제작과 CP애니메이션 등 시각자료를 병행하여야 하겠으나 제작기일이 맞지 않아서 소개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주기 바란다.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생각되는 것은 흔히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분야에서 훌륭한 연구가 생산되더라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응용하고 실천하는 예가 드물어서 많은 연구결과가 사장되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관련되는 정부당국과 건설 및 주택관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한국형 아파트 모델'의 보급과 활용에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을 가져주리 라고 믿는다.

끝으로 이번 발표회를 주최해주신 문화부와 보건사회부 그리고 연구발표에 수고해주실 이연숙 교수님과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 방청해주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김용범 : 이연숙 교수의 설명에 이어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다.

오늘 토론은 찬반의견의 토론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충과 발전적 제안 및 추가할 사항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본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청회라 할 수 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고견들은 차후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해 훌륭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오시덕 선생님부터 의견을 말씀해주기 바란다.

오시덕 : 주택공사에서 86년에 삼대 동거형 아파트에 대한 연구 및 공청회를 거쳐 88년에 690호의 시범 건설을 했다. 25, 27, 30평의 3종류를 건설했고 거주

형태로는 동거형과 인거형으로 나눌 수 있다.

건설을 한 후에 거주자가 공급의도를 달성했는지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아파트에 삼대가 거주하는 비율이 13%정도였다. 그에 비해 삼대동거형 아파트에는 약 40%의 거주율을 보였다. 이로 보아 공급 의도면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개발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설계에 있어서의 만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좁은 공간에서 삼대가 동거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한 공간계획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노인 세대와 자녀세대의 공간을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건설 중에 있고 일부는 계획중이다.

보급문제 보다는 건축적인 분야에 있어 설계의 측면 등을 국한해서 말하겠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대가족의 구성 내용이 다양하다. 즉 양친이 있는가, 편친인가 또는 경제력이 있는가와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설계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평형의 문제를 볼 때 보다 큰 평형이 공급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세대구성을 볼 때 그만한 구매력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20평정도의 작은 평형부터 모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내의 시설을 보면 전용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용시설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단지의 규모와, 전용단지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 형태가 혼재된 형태가 좋을 것이며 단지가 커질 때 비롯되는 비교갈등의 최소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살핀 결과 중규모 정도의 단지가 적합하겠다.

서재웅 : 산업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 익명화 등으로 인해 부모님 모시기를 싫어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국민의 78.1%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 노인인구의 추정결과 현재 약 5%, 2003년경 15%, 2020년대에 13%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가족구성형태에서도 자녀가 하나나 둘 뿐인 것이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5%정도 되는 노인의 약 8%가 가족과 동거한다면, 노인비율이 15%나 13%정도 되었을 때 동거비율은 약 25

%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노인복지에 있어서 연금제도 등의 시행과 정착으로 노인의 경제권 확보가 가능해지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택보유율이 1991년에 74%라고 나와있다. 여기서 모자라는 25%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한다. 목동에서의 경우 본격적인 임대와 동거를 위한 주택양식으로 건설하였다. 분양 결과 인기가 없었다. 원인분석 결과 두 가지 결론이 나왔다. 하나는 임대했을 경우 두 가구가 한 거주공간에서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부모와 한 거주공간에서 동거 할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건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좀더 실험적인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한 세대 후 24~25%가 부모와 동거하게 되었을 때를 충분히 대비하고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거주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거모델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교수가 앞서 발표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주거모델 등에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야겠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는 사회간접자본이므로 건설업체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재원의 확보와 주거모델을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철 : 주택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3세대 아파트 사업의 실수요자의 허용도 등을 조사해본 바는 없다.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의 수와 노인복지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건설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라 생각한다.

3세대 아파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층의 절대적인 선호도와 경제적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3세대가 동거하는 생활형태에 맞는 평면 및 공간계획을 연구 수립하고, 쾌적한 거주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설업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택지공급이다.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공급하고 있는 택지형태가 조사원가의 100~120%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녹지공간을 증가하거나 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본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 공급이 성공을 위한 첫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급제도 및 아파트단지 관리운영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 점은 연구과제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 공급제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각종 세제라든지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박재간 :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조사 및 노인을 모시고 있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대부분 자녀에 의해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을 조사해서 드러났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에 7%, 1980년대에 14%, 1989년 서울지역에서 26%, 1991년 10월에 30.6%로 조사되었다.

노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의견과 모시고싶어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그것이다. 지금의 젊은이는 의무감 때문에 노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모시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젊은이들에게 조사해본 결과, 70~80%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대답하고, 90%이상은 나는 늙어서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노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것이 단지 의무감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대 동거형 주택은 바로 우리 나라 가족해체현상의 심화에서 서구식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다. 목동 아파트단지 등의 인기가 나뉘었던 것은 3대 동거형의 개념을 잘못 설정한데 있었기 때문이다. 3대 동거에는 근거, 인거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수정확대가족제도와도 유사한 형태가 되지만, 우리 나라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제도가 될 수 있다.

3대 동거형주택은 반드시 임대형이어야 하리라고 본다. 3대 동거형주택의 필요성은 시간이 지나고 노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비 조달문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3대 동거주택단지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정섭 :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과가 생긴 것이 아직 1년이 채 안됐다. 실무자로서의 어려움은 있다. 노인복지의 종합대책을 다룬 회의나 방안에서 정부의 타 부서나 중년의 일반인들도 막상 하나의 안이 나오게 되면 그 필요성을 인정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교수님의 안 중에서 주거와 노인복지시설을 같은 단지 안에 건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주거와 복지시설을 분리한다면 노인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주택의 확대공급방안에 대한 이교수님의 안은 매우 긍정적이다 건설부에서는 저희와의 협의에서 주택분양시 노부모 부양세대에 우선권을 주자는 방안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한양순 :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다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거나 간에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 연구의 목적은 그것을 풀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3세대 동거형주택이 팔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 생각한다. 그리고 상계동에서 이미 3세대 동거형주택이 팔렸었고, 오늘 토론에 청구주택 관계자가 나오신 것도 이미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본다.

기왕에 문화부가 손을 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천에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이런 문제는 주택공사가 앞장서서 모델개발을 해야겠다.

긍정적이고 적극적 입장에서 이러한 작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다세대주택에는 복리시설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해 서울 YWCA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즉 건축허가 당시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을 지라도 나중에 용도변경으로 다 없어지고 말았다.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은 적어도 그 주민이 요구하는 건물을 지어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주택공사에서 장사에 치중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복지정책과도 어긋난다. 복지를 위한 건설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 시설해야 한다. 상의하달식의 복지사업은 실효를 얻기 어렵다. 많은 조사와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각각 실시하는 복지정책을 종합하여 다용도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고, 예산의 중복을 막으면서 노인의 인적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복지시설의 시범단지 같은 것을 주택공사가 꼭 하나 건설

해주기를 바란다.

김태현 : 본 설명회에서 경제적 여건과 가족을 함께 고려하여 가족이나 지역사회
의 주거지역내에서 노인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논지는 동감한다.

서구의 경우 국가사회보장이 지금까지의 경향이였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
으로 접근 방향을 돌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선가정 후사회 보장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인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가족과 사회보장
이 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모델이 미래사회에서 상당히 적응성이 많으리라고 생
각된다. 본인 생각에 미래의 노인들은 더욱더 고학력이 될 것이고, 더욱 자
립성이 강해질 것이고, 더 건강해질 것이며, 미래사회 자체가 좀 더 다양화
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노인들이 다양한 삶을 선택하는데 폭을
넓히는데 이 모델이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미래사회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할 것이다. 여성의 취업활동
확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게 된다. 이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를
키우는 일이 된다.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노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3세대 동거를 원하는 비율이 늘어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지금의 젊은층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단독
가옥의 경우는 일거리가 많게 되어 노부모를 모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3세대 동거형 주택은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다.

그리고 한가지 보완할 점은 앞서 설명한 계획적 요구사항에서 가족상담 기
능이 추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노인의 역할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담하고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어 줄 기능이 고
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의 복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 기능도 좀 더 추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노인용 침실이나 욕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
야 한다. 또 입주자의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일 때 어떤 모델을 적용시킬 것
인가하는 문제도 차후에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극복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노인과 자식세대의 근거리 거
주에 대한 가부장적 가족체계가 유지되어 세대간의 독립성이 주어지지 않는
다면 오히려 근거리 거주가 더 많은 갈등의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서로가 독립되어 가부장적 가족특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모델이 정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극복을 위한 문화규범까지를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송정숙 : 이 모델을 성공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가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노인을 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형적 거부감은 없는가, 곧 노인을 모시는 것을 귀찮아한다든지 노인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 같은 것은 없는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봐야겠다.

상계동에 지었던 다세대 아파트가 30%가 실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였으나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신빙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상계동이나 목동 외에도 현실적으로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모형이 아주 이상적이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우선 제일 급한 게 복지시설이 충분하다는 전제아래 이러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복지시설을 전제한 시설이 대강 지어진다면 다시 목동의 경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볼 때 실천에 몇 가지 단계를 두어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곧 시험모델로서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복지시설을 부분적으로 실시해볼 수는 없겠는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함께 기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이러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왕이면 작은 단계라도 착공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인력개발이나 자원인력의 확대 등을 함께 노력하는 방법으로 착수해준다면 더 믿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 말씀 드렸다.

이연숙 : 목동계획은 당시 3대 동거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당시로서는 선진주거 개념이었다. 문제는 그것을 중산층에 공급한 데 있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은 홍보실패에 있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전혀 홍보하지 않았었다.

상계동에 관련해서는 주공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는 동거가구가 타 지역보다 많이 살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공급하여 결과적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임대

를 하여 최초의 기대효과와는 멀어지게 되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주거유형보다도 지역의 근린시설 환경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체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계층 욕구의 차별성을 무시해온 것으로 생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공동체의식이다.

올림픽 아파트의 경우 세대간의 프라이버시 욕구였다.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시행한다면, 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필연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복지시설의 경우 전문시설기관이 맡아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을 동거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단지 내에서 사는 것까지도 동거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환경을 세트로 판매해야 한다. 곧 주민복지시설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목욕시설 등의 서비스시설도 노인에게 알맞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임대와 분양은 다 필요하다. 특히 임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자원의 낭비를 막고 중산층의 주거문화의식을 새롭게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이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른 주거문화가 싹터야 한다. 노인의 역할도 충분한 가치가 된다.

김용범 : 여기서 문화정책 연구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 부 록

[부록 1] : 문화발전연구소개발정책연구보고서 내용요약	271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문화행정 방향에 관한 연구	271
문예진흥을 위한 매스미디어 기능 연구	273
공산권예술 수용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응방안 연구	276
지역문화환경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활용과 확충방안	277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 개발보급 방안 연구	282
문화향수 실태조사	289
퇴계의 활인심방을 활용한 한국적 민속체조의 개발	295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298
여가놀이 문화 개발 및 확산방안 연구	302
국립예술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음악·발레분야)	305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법제 연구	310
한국전통문화 영상프로그램 개발 연구	314
1991년도 연구과제	318

[부록 2] : '90년 유럽한국학회(AKSE)자료 요약	319
1920년대 조선시문학에 형상된 조국애	319
조선의 청동기시대 유물유적	3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어휘정리 사업에 대하여	322
서민시인 조수삼의 문학사적지위에 대하여	324
발해동경릉원부—훈춘팔련성설 재검토	32

▣ 부 록 1>

1.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문화행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연 도 : 1990년

* 연구진 : 김동현, 한원택, 김흥기 외 3명

1) 문화수준

—문화수준의 현황

- 전반적으로 문화수준이 낮음
- 지역간의 문화수준에 있어 격차가 심함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행정이 구상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방향을 회귀 분석을 통해 입증

2) 회귀분석

—문화시설, 예술인 수, 문화제 행사, 자동차 수, 도서관 수 및 기업 수 등이 각 지방의 문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문화시설의 대도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의 유휴 건축물 등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를 수행 할 조직체계가 필요

—대도시에 밀집된 예술인들의 소규모 자치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 강구, 광역문화행정조직 필요

—지역별 전통문화제 행사 발굴과 기존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이 필요

—자동차 수는 문화수준과 부정적 관계를 보인다. 이는 문화지체현상의 하나 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절실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설치되어야 함

—도서관 수와 문화수준과의 부정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 모색.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정방향의 개발

—기업의 문화참여 유도과 제도적 참여장치 고려

—각 지역별 문화행정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안 필요

—문화현상의 변화를 추적, 대응하기 위한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구가 필요

3) 지방자치제와 지방문화

—지방자치제 시행이 지방문화행정에 미치는 영향

- 문화부문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방정부의 경쟁을 통제할 기능 필요
- 지역간 문화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의 차등적 재정지원과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
- 중앙정부의 가장 효율적인 재정지원 형태필요. 중앙정부예산의 1% 수준; 무조건적 Unconditional grant 보조금과 不比例的 non-matching 보조금으로 지원
- 집단이기주의 극복, 편익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조직체계 필요

—지방문화행정 방향제시를 위한 정치적 선행요건

- 지방의회에 문화부문 담당 소위의 설치 필요
- 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인식강화와 원활한 지방문화행정을 위한 지방문화세의 신설이 필요
- 문화부문의 지방자치단체간 협조를 진작하는 기능을 담당할 광역 문화행정 조직이 필요

4) 현행 지방행정의 조직, 인원, 재정 및 정책상의 문제

—이원적 행정구조에서 비롯되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의 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이원적 정책구조의 경우 바람직하므로 이를 활성화를 위한 방법 모색

—대중문화의 향상을 위한 규제적 성격의 정책과 동시에, 문화에 관심(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권장적 정책의 시행

—문화행정의 영역문제를 정책과 관련하여 조정

5) 외국의 문화정책과 방안

—문화정책의 방향 : 自由放任的 政策과 中央集權的 政策으로 대별. 미국은 전자, 일본·프랑스 및 한국은 후자에 해당

—관 주도의 문화행정은 조정 및 지원기능에 국한, 조화의 방안 모색

—지방문화 전담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기업의 문화 지원책 강구, 지방 문예진흥기금법의 제정 고려

—기존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와 활용의 극대화

6) 지방자치와 문화행정 방향에 대한 제언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

- 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 대안적 장치로서 지역문예정책위원회(가칭)의 설립
- 지방문화행정의 독특성, 전통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모형 제시
- 지방행정을 문화행정중심으로 전환

2. 문예진흥을 위한 매스미디어 기능 연구

* 연 도 : 1990년

* 연구진 : 임상원, 오택섭, 김승현,
유선영, 유종원

1) 우리 사회의 문화와 대중매체

- 우리의 문화토양이 단단하지 못하다. 즉 우리의 대중취향이 고급문화에 길 들여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과거 역사의 단절과 공백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성숙도가 문제시 됨
- 대중매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보전달의 기능에 치우쳐 문화예술의 경우도 문화예술비평이나 평론, 해설기능은 거의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음
-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재원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고 다른 오락 프로그램들과 경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

2) 신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개선 방안

- 소개, 안내 위주의 고정기사 보다 비평, 평론기사 중심으로 편집방향 전환
- 평균 기사크기(14×10cm)의 확대, 특정 작품이나 공연에 초점 맞추어 질높은 편집 요망
- 독자적 정보내용이 드러나도록 사진크기와 질 개선
- 전문비평가가 쓴 해설 및 비평위주의 기사를 증대함
- 학자, 비평가, 예술가, 자유기고가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 정보원의 기사율을 높일 것
- 잡지의 자체적 문화기자 양성 필요
- 전문기자 제도의 이점
 - 기자의 공신력과 전문성, 권위에 의한 책임소재 분명

- 고정된 필자와 독자와의 고정된 채널이 확립되어 대화의 느낌 조성
- 개인적 문체에서 비롯되는 독자와 필자의 주관적 만남 가능
- 신문의 문화예술기사가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비평으로 일반화
- 기자의 공신력, 권위가 바탕이 되며 신문사의 공신력과 권위로 연결
- 전반적 예술장르에 대한 기사와 서구예술양식의 1/3에 머무는 전통예술 분야의 기사를 늘임
- 비평의 질을 고양시킴
- 인쇄매체의 문학, 학술출판과 같은 시각적 예술에 치중하는 경향을 개선하여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의 기사를 늘임.
- 정보제공에 앞서 예술성을 우선할 것이 요구됨
- 우리 나라 신문 문화예술기사의 내용 재고
 - 호의적 기사—50% 중립적 기사—44% 부정적 기사—1.6%

3)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방안

- 전체 방송시간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비율—4.4%(외국과 비슷)
- 대부분 주말의 오전과 오후에 편성(외국과 비슷)
- 단순하고 평면적인 구성을 탈피
- 해외제작 프로그램의 경제성 및 관심도 측면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수입 비율을 높임
- 교육과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길잡이라 할 수 있는 스타를 발굴하여 적극 활용
- 친근감을 유도하는 예술인과 대중간의 대화 narration 형식을 보강, 전인격적인 만남을 조성
- 무용의 경우 드라마 혹은 이야기 형식을 도입
- 예술인과 전문가에 의한 직접적 해설을 보강하여 정보와 지식을 제공(특히 음악의 경우)
-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대중과 예술가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
- 예술작품의 예술성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연구 노력을 극대화
- 인간성과 갈등성의 부조화와 흥미성의 결여를 극복
- 매체 테크놀로지와 특성을 능동적으로 확장시켜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만드는 인식 전환이 필요
- 쇼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인이나 예술작품의 대중화 모색

—문화의 단절과 공백, 일방적 도입의 극복을 위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확대방안 모색

—수동적인 중계역할에서 벗어나 주제의식이 뚜렷한 기획프로그램을 증대시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비평을 관행화하고 전속의 비평가, 비평기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론양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4) 매체 내외적 제도차원의 문화예술활성화 방안

—매체 내적 개선 방안

- 문화예술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매체의 전문성이다. 이는 매체조직의 조직적 차원의 제도개선과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
- 경영진과 간부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예산, 인사제도상의 불이익(사기면에서), 기자재 미비 등이 극복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문화취향 개선,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제고 등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함

—매체 외적 개선 방안

- 프로그램 연구개발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재정은 공공기금으로 지원
- 기업을 문화예술프로그램 재정후원자로 적극 참여시킴
-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와의 상호협력, 교류를 활성화 내지는 제도화함
- 예술전문인, 매체실무자, 기술담당자, 평론가 등이 공동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색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정례화 함
- 젊은 연출가와 예술인들의 실험적 창작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창조성을 높임
- 방송국이나 공공단체가 주축이 된 프로그램 및 영상자료 보관을 위한 연구소와 자료실을 운영
- 해외제작 프로그램의 의존 비율을 높여 많은 이점을 활용

3. 공산권예술 수용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응방안 연구

* 연 도 : 1990년

* 연구진 : 최정호, 김상현, 김의곤,
이상식

1) 공산권 문화예술 수용상의 문제점

-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원칙성, 비일관성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수용절차상의 혼란
- 국제예술 교류를 위한 전문공연기획사(임프레사리오)의 부재로 인한 공산권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의 부족
- 自社の 선전과 영리추구의 목적에서 공산권 예술공연을 이용하려는 언론매체의 보도 경향과 그로 인한 비평의 부재
- 공산권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변화로부터 파장된 문화예술분야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부족
- 공연주관단체의 상업적 선정주의로 인한 공산권예술의 비호혜적이며 불균등한 유입양상 초래
- 국민에 대한 공산권 문화예술의 소개와 홍보 부족

2) 공산권 문화예술수용의 정책대안

- 국내의 문화예술정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공산권 문화예술의 자율적 교류와 수용에 대한 정책상의 적극성 요구
- 공산권 문화예술의 단계적 전면개방 계획안 필요
- 공산권 국가들과의 문화예술 교류와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화를 위한 대규모 공연전문기획사의 양성,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 필요
- 일반국민들의 올바른 문화수용과 한국문화계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공산권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과 기초연구가 필요
- 단기적으로는 정확한 안내와 냉정한 평가에 주력,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 비평과 평론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평작업을 지원하려는 언론매체의 노력 필요

4. 지역문화환경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활용과 확충방안

〈제 1편〉 청주지역의 문화환경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확충과
개선방향

* 연 도 : 1990년

* 연구원 : 이범재, 강준혁, 김광립

1) 연구목적

- 문화적 불평등을 자립의 시각에서 지역문화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중앙과 지역간의 관계적 특성과 사회의 각 부분체계들 간의 관계적 특성
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의 모색 제시
- 지역문화와 지역 문화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 문화예술공간의 수급상 불균형과 요인 해결방안 강구
- 충분한 양의 재정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체계관리 기법을 사용, 기존시
설들의 효율성 극대화
- 입지배분 모형을 적용 문화예술공간 시설의 최적화 방안 마련

2) 연구방법

- 지역문화활동을 문화제공자 집단과 수용자 집단의 관계로 구분, 이들의 지
역문화에 대한 태도와 행태를 조사
 - ① 문화제공자의 태도조사방법 개요
 - 응답자 기입식 질문지를 이용한 우송조사방법 사용
 - 문화제공자의 태도조사를 위해 충북 예충 산하 9개 분과별로 일정 인원수
할당, 배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인원수 비율에 따라 선정
 - 설문지는 구조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들을 혼합, 구성
 - ② 문화수용자 집단의 태도조사방법
 - 조사대상 지역 ; 청주시로 한정
 - 조사대상자 선정 ; 27개 지역으로 구분 13개 지역을 무선표집
 - 질문지 ; 구조형 질문문항과 개방형 질문문항으로 구성

3) 연구결과

①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평가

- 응답자의 59%가 타 지역보다 문화수준이 떨어진다고 인식
 - 45.4%가 문화가 낙후된 것으로 응답
 - 9.1%만 발전되었다고 응답
- 발전정도 조사결과
 - 서예, 영화 등 : 높은 점수
 - 무용, 발레, 서양 고전음악 등 : 낮은 점수
-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음
-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 문화예술 시설의 미비와 대조적으로 종교시설과 서비스 업종의 시설이 많음
음이 드러남 ; 건전한 문화육성이 절실함
- 공공건물에 대한 친근감, 공공건물의 전시회 등에 대해 부정적
- 지방문화의 이미지 ; 전통적, 건전, 제약, 자금 부족, 빈약, 인기 없음
- 70.9%가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인식

② 문화매체 이용실태

- 문화예술정보의 취득채널 중 지역텔레비전 방송을 가장 많이 이용. 하루
평균 178분 시청
- 비디오 소유 ; 36.8%
- 라디오 평균 청취량 ; 171분
- 신문 정기구독 ; 67.3%. 남성, 고학력, 고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독률
- 잡지 정기구독 ; 18.9%
- 독서 ; 1년간 평균 12권
- 도서관 이용 ; 65%가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음. 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영화 ; 32.5%가 거의 보지 않고 1.5%만이 1주에 1번 이상으로 응답. 외
화 감상이 압도적
- 박물관 ; 방문57.9%. 시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다소 높음

③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행사 참여도는 지극히 낮다.

- ‘주민의 관심과 참여부족’, ‘행사위주의 행사’, ‘경제적 지원부족’ 등이
문화예술행사의 문제점으로 부각

④ 취미활동

—성별 ; 남자는 등산/낚시, 여행/관광, 스포츠의 순

여자는 여행/관광, 독서, TV/비디오 시청의 순

—연령별 ; 20세 미만은 스포츠, 20대는 독서, 30대는 여행/관광, 40대는
TV/비디오 시청, 50대 이상은 여행/관광

—학력별 ; 국졸 이하는 화투/여행이었으며, 중졸은 TV/비디오 시청, 고
졸은 여행, 대졸 이상은 독서

—소득별 ; 월 가구소득 50만원 미만은 여행, 50~69만원대는 독서, 70만원
이상은 TV/비디오 시청

〈제 2편〉 수원지역 문화공간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활용과
확충방안

* 연 도 : 1990년

* 연구원 : 이남복, 전환성, 조철주

1) 이용자의 일반적인 특성

- 이용자의 성별비율은 남녀가 비슷
- 연령층 : 10대—18.6%, 20대—37.8%, 30대—24.4%, 40대—11.8%
- 학력 : 고등학교 이상—53.8%, 대학교 이상—41.3%
- 직업 : 주로 학생, 사무직, 상업, 주부, 기술직에 종사

2) 문화공간 수용형태 분석

① 문화공간 이용실태 및 균형정도

- 이용률, 위락시설(85%), 교육시설(70%), 공연시설(40~50%) 반면에 무
용, 방송국, 화랑은 극히 저조
- 문화의 발전 균형정도, 보통 혹은 비교적 낙후
- 관람한 적이 있는 장소 : 학교(33.2%)가 가장 많다. 공연내용은 연극

② 공연이용실태 및 만족도

- 가장 많이 찾는 공연 ; 외화(71.4%), 사진전시회(37.1%). 음악회, 무용
공연 등은 이용률 낮다.
- 공연내용 ; 만족스럽지 못하다.

③ 문화공간 및 공연

—적당한 시설이 없다 ; 남자

—정신적/경제적 여유가 없다 ; 여자

④ 다른 지역과의 문화예술 수준 인식 비교

—42.2%—약간 떨어진다. 33.8%—비슷한 수준이다.

⑤ 수준이 낙후된 원인

—지역주민 참여/관심 부족(26.7%)

—행정/경제적 뒷받침 부족(20.7%), 행사 부족(15.7%)

⑥ 문화공간 및 공연의 바람직한 수용을 위한 제언

—적극적인 의미의 문화생활 유도

—음악회, 무용공연을 위한 간이공간 마련, 개방

—작은 공간의 여러 곳 설치로 지방특유의 문화권 형성을 촉진

—특색 있는 행사를 가로나 지방유적지에서 개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3) 문화예술 및 공간에 대한 이해

①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

—낙후, 전통적, 폐쇄적, 희망적, 타의적, 수준 낮다, 종속적, 아름답다, 빈약, 인기 없다, 형식적이다.

② 만족도

—예술활동 참여기회

· 비교적 있는 편—27.9%, 모르겠다—28.1%, 많이 있다—1.1%, 전혀 없다—23.6%

—문화공간 및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 문화공간 숫자 부족, 규모협소, 시설의 노후/미비성

—주관식 기입 응답 분석

· 극장 및 공연시설 확충, 시설 개선, 홍보 확충 및 참여기회 확대의 순서로 나타남

③ 제언

—문화공간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소 적은 규모의 건물에 분산, 전문화

—종합공연장의 개방으로 자발적인 이용 유도

4) 문화공간/공연 참여형태 분석

- 공연 관람 빈도 ; 영화/월 1~2회, 연극/연 1~4회
- 문화공간을 찾는 빈도 ; 연 1회/여자 62.2%, 남자 51.9%
- 공연/문화공간을 찾지 못하는 이유 ; 정보 부족, 시간, 경제적 이유의 순서
- 형태분석(공연이 마음에 들 때)
 - 여럿이간다(41.1%), 친구와 둘이 간다(35.5%), 애인과 함께 간다(13.5%)
 - 서울 공연—42.5% 가본 적 없다
- 문화공간/공연의 욕구분석
 - 공연 정보 입수 ; 포스터, 친구
 - 입장권의 가격 ; 비싸다—33.3%, 적당하다—21.9%
 - 질적 수준 ; 대체로 보통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 공연 선호도 ; 마당놀이극, 영화, 클래식음악회, 가요음악제의 순서
- 문화공간 및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홍보판 설치,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영화주간, 연극주간, 전시주간의 설정과 문화예술 행사의 이벤트화
 - 집단적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팝아트 공연프로그램 마련
- 5) 문화공간에 대한 인지도
 - 목적성을 갖고 찾는 경우 ; 6.8%
 - 정보습득 ; 선전포스터 (37.7%), 인근지역을 지나다(22.5%)
 - 문화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주변시설로 인지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6) 문화공간의 장소적 의미
 - 문화공간은 접근성에 있어 보통을 유지하고 있다.
 - 자연적 주변환경 선호(43.2%)
 - 문화공간 이용의 주목적 ; 자연환경에서의 휴식, 공연 관람
- 7) 문화공간의 도시적 Context의미
 - 문화공간의 건축물의 규모 ; 극히 협소하다(42.7%), 적당하다(26.7%)
 - 옥외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의 부족
 - 주변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편(82.3%)
 - 쉽게 찾는다(32.4%), 어렵다(22.5%), 보통(44.1%)

8) 문화공간 내부시설 요소의 인식 및 선호도

- 공연장 및 문화시설 내부의 편의시설 등의 적극적 보완 필요
- 조명시설의 보충과 변화 필요
- 소음과 내부공기의 환기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내부시설(객석)의 개선
- 냉·난방 의 건축편의설비의 수준 향상, 유지
- 주차시설공간의 확충이 필요

9) 문화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

- 문화공간 및 공연관람 활성화
 - 문화 및 공연 공간 확충, 재정적 지원, 정보 및 홍보 활동 활성화, 참여 기회 확대
- 휴식 공간 조성, 시설 확충 및 활동 활성화,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주차 공간 설치, 공연장 확충
- 쾌적한 문화공간 위한 개선 요소 ; 공연장 시설,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설치 등
- 소극장 및 대극장의 융통성 있는 배치 필요

5.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 개발보급 방안 연구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이연숙, 김용학, 오찬옥.
신화경 외 4명

1) 연구의 목적

-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전용아파트의 개발 및 보급방안을 모색
 - 한국적 주거 모델로서의 타당성 검토
 - 적절한 주거유형 개발
 - 바람직한 보급방안 모색
- 구체적 연구 내용의 조사를 위한 접근방향
 - 문헌적 접근, 실증적 접근, 전문가적 접근 방법

① 관련문헌 연구

- a) 삼대가족형 아파트를 한국의 주거모델로 설정, 개발하는 것에 대해 노인 복지 측면에서 본 타당성과 전망
-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 가속화,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인부양 문제라는 사회문제 야기 시키게 됨
 -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내용의 보완 필요
 - 가족과 사회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정책 필요
 - 거주공간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와 노인의 영역성 확보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주택 대안 필요
 - 전통적인 가족지향적 주거문화, 가족문화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개발 보급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 b) 가족복지 측면에서 본 타당성과 전망
- 가족의 기능과 내부의 인간관계의 변화
 - 가족적 측면—수정확대 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형태의 도입
 - 정신건강적 측면—가족 치료 개념의 도입
 - 정책적 측면—가족 복지 정책의 강화
 - 동거개념이 확대된 새로운 가족제도를 통해 각 가족들이 노인문제 담당
 - 가족내 각 세대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보장으로 갈등 해소
 - 예방책으로 가족의 구조(기능 강화)와 문제(예방 및 치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가족 복지 기능의 강화
 - 치료책으로 민간 주도의 가족복지 사업의 강화
- c) 문화적 주체성 확립 측면
-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족형태—외적으로는 확대가족, 구조적으로는 직계가족
 - 단점—권위와 순종이 강조되는 비민주적 구조
 - 장점 ; 부부의 존속이 비교적 오래 이어지고 부부간의 이혼이나 일방적인 사망이 가족관계를 직접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경제적·심리적 안정 노후문제의 해소. 제 3자에 의한 가족간의 문제 즉시 해결 가능. 협조적인 자녀 양육으로 원만함과 적응능력의 강화
 - 전통주거의 특성—전체 주택이 채와 채로 분리되고 채는 간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느낌을 주면서, 내부공간의 연계성이 있고, 공간을 넓게 활용하여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공간의 다목적성

- 현대주택의 특성—주거공간 내부의 각 공간에 방을 배치하고 공적 공간을 개방하여 생활패턴과 가치관이 다른 삼대가 살기에 부적합한 경향이 있음
- 전통주거의 이점을 현대주거에 응용해보는 것이 바람직
- 전통 마을의 특성—마을 공동체 생활로 인한 마을 구성원간의 내부지향적, 개방성을 보임. 한 마을의 고유속성과 보수성이 강조
- 현대의 아파트 단지의 특성—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복리시설이 제공되지만 구매시설 외에는 생활을 수용하지 못해 외부에 대한 방어적 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민과 지역의 귀속성을 강조하는 외부적 폐쇄적인 복리시설을 강화하고, 외부에 개방시키는 복리시설과 분리계획하여 주민들의 영역적,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d) 노인주거 계획에서 본 타당성과 전망

- Murtha의 총체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주거공간 계획의 제시를 이용
- 외국의 경우 노인복지 정책은 수용시설을 단계별로 제공하던 방향에서 유동적 서비스 체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모색 발전시킴
- 우리 나라의 경우 시설주거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최근 선가정 후사회보호의 원칙에 관해 삼대가족형 아파트 권장

② 관련 문헌연구 2

- 선행 연구 검토 결과 ; 주호, 출입/접근, 방향, 노부모영역구성, 노부모 영역접속, 공실사용의 6가지 개념을 도출
- 6가지 개념을 거리, 방향, 공간구성의 3가지 기준으로 재설정
- 3가지 기준을 18개의 가능한 주거유형으로 재구분, 종합
- 18개의 주거유형의 자문결과 안면타당도 입증

③ 면접조사 연구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특성과 주거에 대한 욕구를 노인 및 자녀부양세대를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
- 삼대가족 주거유형 중 일부가 건설되어 있는 서울 상계지역과 목동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삼대가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④ 설문조사 연구

- 많은 사례수의 표집으로 변인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정함으로써, 결과에

대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

⑤ 사례조사 연구

—삼대가족의 생활상 및 공간상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상을 가족단위를 사례로 기술함으로써 삼대가족을 이해하는데 변인중심적(observation) 연구자료 분석에 사례중심적(variable) 시각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

⑥ 델파이 조사 연구

—전문가들의 시각을 추가하기 위하여 삼대가족형 아파트와 관련되는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 내용 ; 삼대가족 주거문화 보급에 대한 의의/중요성/보급방안, 삼대가족형 아파트 조성 시 계획에 관한 의견, 삼대가족형 시범아파트 조성에 관한 의견

2) 결론 및 제언

①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전용아파트(단지) 개발의 타당성

가. 이차적(외부시각)자료 분석을 통해 본 타당성

- a) 삼대가족형 아파트는 노부모와 동거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노인주거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적 시각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
 - 선가정보호를 위한 정책적 후원이 필요, 가정과 사회가 상호보완적인 노인부양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삼대가족 전용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대안과 효율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급방안이 될 수 있음
- b) 노후 불안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가족 내에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부양되도록 하고, 자녀세대에게는 부양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절충적인 정책의 후원이 필요
- c) 전통적 가족형태와 주거문화를 현대에 재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이 확인됨
 - 전통 주거문화의 가족형태적 특성과 환경 및 건축적 특성의 적용이 가능함

나. 일차적(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본 내적 타당성

- a) 편모의 비율이 가장 높다. 아들이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 동거 이유에서 의무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편모와 주부의 관계가 원만한 동거의 요건. 갈등해소에 종교가 도움이 되나 다른 객관적인 지원체제의 마련

이 필요

- b) 주부의 생활유형이 다양해지고 활동성이 많아졌다. 주택내에서 조부와 주부가 같이 있는 경우가 가장 적음. 삼대동거시 주부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늘어남. 주부들의 생활에서 삼대동거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적응형태가 보여지는데 이는 전반적인 생활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임.
 - c) 주택 내 의사결정과 경제력, 가사역할에서 가정 내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축소됨. 삼대동거시의 장점은 사회윤리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좋은 면을 느끼는 것이고, 서로 눈치를 보거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이 큰 문제점으로 인식됨
 - d) 현재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자녀부부 중에서 90%가 같은 집이 아닌 거리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 63.2%가 단지 외에서 멀리 살고 싶다고 응답, 단지내 근거리 포함하는 새로운 동거개념의 주거형이 개발되면 70%가, 이 중 89.6%가 새로운 주거유형에서 살겠다는 응답은 동거생활의 스트레스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삼대동거형 아파트의 잠재적 효용성을 암시함
 - e) 독립적 생활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공간을 분리해서 제공하는 유형의 개발, 의존적 생활을 하는 노인과 동거하여 부양부담을 전적으로 지는 동거가족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
 - f)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서로 가까이 산다는 의식이 들면서, 동시에 서로 원하는 만큼 공간적 분리가 된 상태에서 거주를 원하는 성향이 있음
 - g) 동거 외에도 인거, 근거 등의 절충적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고 각각의 유형 중에서도 분리의 정도를 달리한 평면형 개발을 시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②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전용아파트(단지) 개발보급 방안
- 가. 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
- a) 노인주거대안으로 접근한 삼대가족형 아파트는 한국의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적합함
 - 단지 내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국민의식의 형성을 위해 대표적인 계층인 중산층에도 주거문화차원에서 후원하는

것이 필요함.

- b) 삼대가족 전용아파트는 노인복지 및 가족복지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건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 아파트 단지 건설 시 8%정도의 비율을 할당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관련 법규에 삽입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체제의 제공을 활성화 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
 - 가족복지를 위한 단위 주거공간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 이웃관계를 재정립하고 주민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조성
 - 가족생활주기에서 비롯되는 욕구를 구분 큰 규모의 것은 중앙복지시설로 작은 규모의 것은 분산된 복지시설로 제공
 -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개방적인 복지시설과 반 폐쇄적 개념의 공간을 절충시켜 시도
- c) 삼대가족형 아파트는 삼대가족만 사용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
 - 세금혜택을 주어 보급에 노력, 일부 분양, 일부 임대
 - 일반 건설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배려 필요
- d) 노인을 위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 비율을 40%정도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e) '삼대가족', '삼대 아파트'와 같은 의미 있는 명칭이 필요
 - 적합한 이미지의 구상이 필요, 실수요자의 입주를 위한 제도적 기준 강구

나. 건축계획적 관점에서의 제언

- a) 단지규모—도시지역 내 ; 최소 100세대, 최대 1,100세대 정도
도시 근교 지역 ; 최소 300세대, 최대 2,000세대 정도
 - 아파트 평형—30~60평, 36~45평 집중적 보급
 - 각 건물은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건물이 혼합되는 형태가 바람직
 - 도시 근교의 경우 고층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 서비스 건물과 주거용 아파트간의 유기적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건설, 지역 내 사회적 관계 차원을 배려
- b) 거실, 베란다, 현관, 부엌, 식당 등의 융통성 있는 구성
 - 수납공간 부족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안 마련

다. 기타 제언

a) 지속적 보급을 위한 제언

- 적절한 보급 방법의 개발로 효과의 극대화
- 삼대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대안 제공으로 가족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인식시켜야 함
- 삼대가족 전용 아파트 내 노인세대 주거단위의 집합적 제공을 통해 노인 주거 대안의 다양한 개발을 지원함이 바람직
- 주변 주민들에게 개방될 필요의 인식과 공동체적 의식을 위한 보호기재 및 지원성 기능의 강도가 높아져야 함
- 단지 내부지향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시설의 확립으로 새로운 가족문화, 지역문화를 확립하는 모델 창출
- 철저한 홍보로 계획주거의 효율적 성과 획득
- 가족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세대간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 노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감과 경제력 보완의 방향으로 진행
- 문화적 전수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물리적 지원과 더불어 내부생활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한국의 노인주택 방향에 도움될 유형 선별, 정책적 건축적으로 지향해야 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b) 미래지향적 환경디자인을 위한 제언

- 건축물 자체에 삼대가족 문화를 나타내는 상징성 부여
- 보도, 차도를 건물을 경계로 구분하여 단지 안쪽을 정서감을 고양하는 방법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
- 방어적 공간 개념을 최대한으로 이용
- 단지 내에 노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생활기능이 해결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주거용 아파트와 지역 내 서비스 복합건물을 옥외통로로 연결
- 어린이를 동시에 돌보는 노인을 위해 유아원/탁아소/놀이공간과 노인 복지회관 내 휴게실을 유기적으로 연결
- 전자시스템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설치
- 환경지각을 통해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물체 고려 필요
-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센터의 입원실을 가정적 느낌을 갖도록 디자인
- 편의성과 환경지각적 정서적 국면이 되도록 보완

6. 문화향수 실태조사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장용호 외

1) 대중문화매체 이용실태

○ 조사대상—신문, 라디오, 영화, 잡지, 비디오, 도서 이용실태

—신 문

- 1종류 구독 ; 60%, 2종류 이상 구독 ; 40%

내용별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 반영

- 대재 이상, 화이트 칼라, 고소득 계층이 2종류 이상 구독률 상대적으로 높음
- 하루 평균구독시간 : 약 1시간 정도. 40대, 고학력, 고소득 계층 구독시간 많음
- 정기구독 : 59.1%, 학생 : 가판구독률 상대적으로 높음. 사무직, 기술직은 직장구독률이 40%

—라디오

- 40%가 듣지 않음. 신문, 텔레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10대, 20대 학생계층 청취율 70%
- 1시간 이하 청취 : 약 40%
- 30대 이상의 경우 주말의 청취시간 상당한 감소
- 선호 프로그램 : 뉴스, 음악 프로그램, 날씨 및 생활정보
연령 높을수록 음악보다 뉴스 선호

- 78%가 집에서 청취. 대졸 이상, 고소득 계층은 차안에서 듣는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영 화

- 47%가 1년에 한 번도 가지 않음. 10대, 20대는 1년에 1번 이상이 90% 이상
- 관람객의 관람횟수 총 평균 : 7.1회/연. 전문기술직, 서비스업 종사자 : 10회/연

—도 서

- 주로 소설과 잡지 구독
- 서점 구입 ; 60%. 고등학생 ; 22.7%가 빌려 봄. 사무직, 전문 기술직, 자유 전

문직 ; 70%가 서점 구입

- 서점 방문 : 30%가 1년에 한 번도 가지 않음.
- 잡지 : 부정기 구독이 20.2%. 주로 여성지 구독

—비디오

- 47.3%가 빌려 본 경험 있음.
- 한 달 평균 편수 : 대여자의 60%가 3편 이하
소득 높을수록 높고 서비스업 종사자 9.3편으로 가장 높음
- 집에서 시청 : 70%. 노무직, 학생과 도시화율이 낮을수록 친구, 친지집에서 시청
- 보유현황 : 주로 영화 프로그램(40.5%). 교양, 음악 프로그램 거의 없음

2) 사회문화활동

—도서관 이용

- 주로 학생 : 입시, 취직, 시험 공부
- 학교 도서관 주로 이용. 도시는 국·시립을 읍, 면은 마을문고 이용.
직장부속 도서관 이용 저조
- 이용률 강원, 호남 지역이 높음. 영남은 저조
- 낮은 연령의 이용률이 높음. 40대 이상 거의 이용하지 않음

—문화예술 참가, 문화시설 이용

- 연 평균 2회 미만
- 참가, 이용 이유 : '문화에 대한 관심', '정신적 건강'
- 관람 횟수 : 연극, 미술 전시회, 문학행사, 서양음악회의 순. 무용은 저조
- 문화시설 : 마을 회관, 학교 강당 주로 이용

—문화예술에 관한 소식, 정보

- 텔레비전과 일간신문이 주됨. 대도시일수록 의존도 높음

3) 여가활동

—취미생활이나 창조적인 능력개발의 기회로 이용하기보다는 일의 연속선상이나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여가활동 : 여행, 운동, 등산 등이 많음
- 시간, 경제적 여유 부족과 정신적 여유 부족이 큰 장애

- 여행 ; 1~2회/연. 운동 ; 3%내외
- 낮은 연령, 높은 수입일수록 운동 선호
- 서예, 원예, 꽃꽂이의 경우 10대, 20대는 희망하지 않음
- 월평균 수입이 높은 경우 여가시간에 취미를 가꾸고 싶어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지역간의 평균 여가시간은 차이 없음 : 도시규모나 연령, 교육정도, 수입 특히 직업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

4) 지역문화

-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대부분 무관심 ; 71.6%
 - 낮은 참여율 : 참여 경험자(28.4%)중 2회 미만이 79.1%
 - 정보원 : 주위사람(33.7%), 행사안내문 포스터(31.1%)
 -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가입률 ; 7.2%
 - 행사 공간 ; 31.4%가 불만족. 38.3%가 위치를 모르거나 관심 없다고 응답
 - 공간의 확충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홍보 절실함
 - 45.3%가 행사의 양이 적다고 응답
 - 중소도시, 읍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보다 다양한 예술행사가 이루어져야 함
 - 직장중심이나 거주지역 중심의 소규모 단위의 지역문화 행사의 활성화가 필요
- 5) 문화예술정책 및 교육

- 문화에 대해 다소 생활과 동떨어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 보다 나은 문화예술 교육정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문화예술 교육경험 ; 9.5%만이 참여
 -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학생과 주부가 주 교육대상
 - 피아노, 서예, 미술, 꽃꽂이, 풍물강습 정도로 내용 제한
 - 교육주관기관도 한정되어 있음
 - 반면에 교육에 대해 대체로 만족함 ; 48.8%
 - 74.1%가 관심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 실시된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
 -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확충하고, 관련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월평균 문화비 지출은 책, 잡지 구입비, 여행, 음반테이프 및 CD구입, 비디오

테이프 구입 및 대여의 순서

-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고급문화의 대중화 필요

6)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언

- 문화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함
- 문화지표가 결정되면 설문지가 구성되고 무응답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성 고정화해야 함
- 위의 작업이 선행될 때 표본추출과 현장조사, 결과분석만 필요하게 되어 시간과 돈의 절약이 가능함

7) 통 계

〈표 1〉 지역별 연령 별 인구분포	5
〈표 2〉 지역별 연령별 조사대상자 수	6
〈표 3〉 지역별 할당 부수	7
〈표 4〉 표본추출 지역	9
〈표 5〉 표본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추출 수	12
〈표 6〉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18
〈표 7〉 응답자의 도시규모별 분포	19
〈표 8〉 응답자의 성별 분포	20
〈표 9〉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20
〈표 10〉 혼인여부	21
〈표 11〉 가족 형태별 분포	21
〈표 12〉 가족 수	22
〈표 13〉 응답자의 교육정도	23
〈표 14〉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	23
〈표 15〉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	24
〈표 1—1〉 신문구독 형태	26
〈표 1—2〉 신문구독 형태 교차 분석표	27
〈표 1—3〉 신문구독 종수	29
〈표 1—4〉 신문구독 종수 교차분석표	30
〈표 1—5〉 하루평균 신문구독 시간량	32

〈표 1—6〉 하루평균 신문구독 시간량 교차분석표	33
〈표 1—7〉 라디오 청취 유무	35
〈표 1—8〉 라디오 청취 유무 교차분석표	36
〈표 1—9〉 1일 평균 라디오 청취 량	38
〈표 1—10〉 1일 평균 라디오 청취 량 교차분석표(평일)	39
〈표 1—11〉 토요일 라디오 청취 량 교차분석표	41
〈표 1—12〉 일요일 라디오 청취 량 교차분석표	43
〈표 1—13〉 라디오 청취 선호 프로그램	45
〈표 1—14〉 라디오 청취 선호 프로그램 교차분석표	46
〈표 1—15〉 라디오 청취 장소	52
〈표 1—16〉 라디오 청취 장소 교차분석표	53
〈표 1—17〉 지난 1년간 영화관람 여부	55
〈표 1—18〉 지난 1년간 영화관람 여부 교차분석표	56
〈표 1—19〉 지난 1년간 영화관람 횟수	58
〈표 1—20〉 지난 1년간 영화관람 횟수 교차분석표	59
〈표 1—21〉 주로 읽는 책 종류	61
〈표 1—22〉 주로 읽는 책 종류 교차분석표	62
〈표 1—23〉 서점 방문 경험	66
〈표 1—24〉 서점 방문 경험 교차분석표	67
〈표 1—25〉 도서 구입 장소	69
〈표 1—26〉 도서 구입 장소 교차분석표	70
〈표 1—27〉 잡지 구독 형태	72
〈표 1—28〉 잡지 구독 형태 교차분석표	73
〈표 1—29〉 비디오 테이프 대여 경험	75
〈표 1—30〉 비디오 테이프 대여 경험 교차분석표	76
〈표 1—31〉 한달 평균 비디오 테이프 대여 편수	78
〈표 1—32〉 한달 평균 비디오 테이프 대여 편수 교차분석표	79
〈표 2—1〉 도서관 이용 여부	81
〈표 2—2〉 도서관 이용 여부 교차분석표	83
〈표 2—3〉 도서관 연간 평균 이용 횟수	84
〈표 2—4〉 도서관 연간 평균 이용 횟수 교차분석표	85

〈표 2—5〉 각종 도서관 이용 실태	91
〈표 2—6〉 도서관 이용 목적	92
〈표 2—7〉 도서관 이용 목적 교차분석표	93
〈표 2—8〉 문화예술행사 참가 여부	95
〈표 2—9〉 문화예술행사 연 평균 참가 빈도	96
〈표 2—10〉 문화시설 이용 여부	97
〈표 2—11〉 문화시설 연 평균 이용 횟수	98
〈표 2—12〉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보원	99
〈표 2—13〉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보원 교차분석표	100
〈표 3—1〉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	105
〈표 3—2〉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 교차분석표	106
〈표 3—3〉 희망하는 여가활동	118
〈표 3—4〉 희망하는 여가활동 교차분석표	119
〈표 3—5〉 여가활동 장애 요인	129
〈표 3—6〉 여가활동 장애 요인 교차분석표	130
〈표 3—7〉 하루 평균 여가시간	132
〈표 3—8〉 하루 평균 여가시간 교차분석표	133
〈표 3—9〉 지난 1년간 여행 경험 유무	135
〈표 3—10〉 지난 1년간 여행 경험 유무 교차 분석표	136
〈표 3—11〉 연간 여행 횟수 교차분석표	138
〈표 3—12〉 연간 여행 횟수	139
〈표 3—13〉 여행 목적	141
〈표 3—14〉 여행목적 교차분석표	142
〈표 4—1〉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144
〈표 4—2〉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 횟수	144
〈표 4—3〉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원	145
〈표 4—4〉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원 교차분석표	146
〈표 4—5〉 지역문화예술단체 가입 여부	148
〈표 4—6〉 지역문화예술단체 가입 여부 교차분석표	149
〈표 4—7〉 지역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만족도	151
〈표 4—8〉 지역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표	152

〈표 4—9〉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양에 대한 견해	154
〈표 4—10〉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양에 대한 견해 교차분석표	155
〈표 4—11〉 지역문화예술행사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157
〈표 4—12〉 지역문화예술행사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표	158
〈표 5—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가의사	160
〈표 5—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가의사 교차분석표	162
〈표 5—3〉 문화예술행사 참가 장애 요인	164
〈표 5—4〉 문화예술행사 교육 참가의사 교차분석표	166
〈표 5—5〉 월평균 문화비 최대지출 항목	170
〈표 5—6〉 월평균 문화비 최대지출 항목 교차분석표	171
〈표 5—7〉 월평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175
〈표 5—8〉 월평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교차분석표	176

7. 퇴계의 활인심방을 활용한 한국적 민속체조의 개발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한양순 외

1) 이론적 배경

가. 한국의 전통적 움직임 문화

① 한국 민속놀이와 전래 체조

—발생과 기원 : 동양사상의 바탕 위에서 자연스러우며 인간의 정신적 측면까지
를 고려, 민간들 사이에 전래

—민속놀이의 성격 : 자연성, 전승성, 사회성, 소박성, 향토색, 자연운동과 리듬
운동성, 전신운동성, 에어로빅스성

—전래 체조 : 맨손요법(단전호흡, 활인법), 전통무예(수벽치기, 택견), 도인법
(양생체조)

② 한국적 움직임의 특징

—인간과 우주라는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모습을 모방한 동작으로 구성

—자연적이고 동물적 본능에 따른 인간 본성의 행위에 중점

나. 퇴계와 활인심방

① 퇴계의 양생사상

- 자신의 질병에 대한 실천적 치유의 방법에서 비롯
- 활인심방 : 신체에 관해 선비가 지녀야 할 체력을 규정한 저서로 도교의 양생법에 영향받음

② 활인심방의 내용

- 10개 부문 : 활인심서, 중화탕, 화기환, 양생지법, 치심, 도인법, 거병연수육자결, 사계양생가, 보양정신, 보양음식
- 예방의학적 저서

③ 활인심방의 양생도인체조

- 이황 자신이 직접 도해, 총 8면의 그림으로 구성
- 내용 : 고치삼십육, 천고이십사, 파감천주, 적룡교수훈, 폐기악수열, 배마후정문, 좌우관녹로, 차수쌍허택, 저두반죽빈

다. 활인체조의 현대적 적용

① 과학적 특성의 적용

- 특징 : 자연의 순환법칙 적용, 생물적 본능의 동작 중심, 호흡을 통한 기운동, 정적 움직임을 통한 근력운동
- 원리 : 텔사르프의 삼위일체의 법칙과 같이 자연과 신체의 조화원리를 민간체조에 적용한 것
- 내용 구성 : 기혈의 유통, 신체균형의 조정, 내장기관의 순환, 근력 및 유연성의 증강

② 민속체조 구성과 운동 시 주안점

- 종합체력을 얻고자 하는 운동
- 정신, 실체, 정서적 체력의 방법으로 실시

2) 한국적 민속체조의 순서

가. 체조 1 : 숨고르기, 기혈집중

- 숨고르기를 통하여 정신집중을 하고 기를 흡입하는 과정
- 天·地·人 사상을 담고 있으며 활인심방에 기록된 고치삼십육, 적룡교수훈, 두반죽빈, 차수쌍허택을 활용하여 꾸민 것
- 태극심법 : 숨을 길고 가늘게 들이마시며 우주의 삼라만상을 품에 안듯 너그럽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똑 같은 길이와 굽기로 내쉬며 자신을 미물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나. 체조 2 : 누르고 두드리기

- 동양의학의 경락사상에 입각하여 전신의 중요한 혈을 찾아 지그시 누르고 가볍게 두드리는 형식으로 꾸민 것
- 신체를 크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 몸 속에 흐르는 기를 다스리며 조절하는 과정
- 맨손요법 : 이런 동작의 경험이 축적되고 전달되면서 체계화하여 치병의 방법이 됨.
- 활인심방에 기록된 배마후정문을 활용하여 신유혈, 비유혈을 문지르는 등 얼굴, 머리, 등과 허리, 팔, 다리의 혈을 자극하여 혈액 및 임파액의 순화를 촉진 시키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도록 하였음.

다. 체조 3 : 기마, 활쏘기, 택견, 태극

- 하체의 강화를 위한 근력 운동과 관절의 유연성을 도모하여 기를 쌓는 과정
- 삼각형의 기본 품 밟기, 기마자세, 가락수 가세치기, 탈춤걸음 등을 활용하여 다른 것에 비해 난이도가 높지만 전통 민속놀이의 멋과 흥을 살리도록 함

라. 체조 4 : 뒷걸음질, 수벽치기, 제기차기

- 뒤로 걷고 뛰면서 신경의 조절능력을 키우고 손바닥을 마주 대며 기를 충전하는 과정으로 꾸민 것
- 손바닥과 발바닥은 인체의 기를 발동시키는 관문이며 인체 내에 흐르는 기의 움직임을 결정한다. 단순하게 손뺑을 치고 걷거나 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수축 정도를 높이고 기의 유통을 생각하며 조이고 풀어주는 과정의 연속
- 손뺑치기와 땅 밟기 : 인체의 기를 자연스럽게 단전에 모아서 발동시키는 것
- 뒷걸음질 :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여 자율신경의 원활한 작용 유지에 효과적임
- 제기차기 뛰면서 발을 차올리며 단전에 힘을 재주는 동작

마. 체조 5 : 기혈유통

- 척추운동을 숨고르기와 병행하여 몸과 마음이 항상 함께 움직이며 서서히 흐르는 물과도 같이 멈추지 않고 기의 흐름을 터주는 과정
- 척추운동 : 일자운동, 굴곡운동, 회전운동
- 사람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동작을 간단한 운동선으로 일치 시키는 것
- 단순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움직이는 곳으로 마음을 집중시키며 행해야 함

3) 민속체조의 과학적 효과

가. 운동강도 및 에너지 소모량 측정 결과

—에너지 소모량 : 국민체조 <민속체조> 청소년체조

—효과별 적용 가능 : warm-up, 스트레칭 등의 준비운동으로 활용, 에어로빅스 운동효과 가능

—실시 : 성별, 연령 및 심폐기능에 따라서 체조실시의 반복횟수를 달리하여 운동량 조절이 바람직

나. 근전도 측정 결과

—근전도 측정 부위 : 유도근 5개근을 2개근씩 각각 좌, 우측으로 나누어 같은 근육의 좌, 우측 근육을 동시에 실험

—승모근, 광배근,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각 체조 동작별 근활동 강도가 체조 3, 4, 5의 운동실시 중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체조 5는 높은 강도를 보여 스트레칭의 효율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 됨

—좌우측 근활동 패턴이 유사하여 좌우 대칭 유지를 위한 교정체조로써 근전도학적 근거 제시

※ 우리의 움직임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증명이 이루어져, 우리 고유의 우수한 움직임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야함.

8.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정영숙 외

1) 가정생활문화

가. 생활문화 : 생활양식과 결부된 문화형태로 대중문화와 민속문화 포함

나. 가정생활문화의 범위 : 세시풍속—설, 추석

통과의례—혼례, 상례, 돌, 회갑

가정행사—생일, 이사

2) 전통적 가정생활문화에 관한 의식조사와 해석

가. 전통적 가정생활문화에 관한 의식

①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 계승의 책임

—가정을 포함한 정부, 학교, 사회단체, 언론기관의 복합된 책임

—단일책임으로는 가정이 우선

② 행사일의 결정

—음력 : 설, 부모의 생신

—양력 : 돌, 자녀의 생일

—길일 산택 : 이사, 회갑, 결혼날

③ 행사시 한복착용에 관한 의식

—설, 추석과 같은 명절과 회갑날

④ 행사시 부조금 또는 선물에 관한 의식

—부조금은 혼례, 상례, 돌, 회갑, 생일, 이사 등의 가정행사 때

—월 평균 부조금은 5만원 전후

⑤ 가정생활문화의 계승에 관한 의식

—긍정적 반응 : 추석에 차례지내기와 성묘하기, 부모 회갑잔치, 생일날 미역

—부정적 반응 : 혼인시 사주보내기와 예단 풍습, 돌떡 받고 선물하는 풍습, 이
사시 팔죽이나 팔떡 돌리는 풍습

⑥ 생활언어 지식 정도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잘 알지 못함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사말을 아는 정도가 낮음

—사회계층이나 소득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잘 알고 있음

나. 가정생활문화 내용별 실태

① 설날 : 대부분 구정을 지냄

—유지되는 행사 : 세배하기, 떡국먹기, 차례지내기, 윷놀이, 성묘하기, 덕담
하기

—옷 : 한복이 좋다는 견해가 많으나 설빔은 사라져가고 있음

—세배 후 : 거의 세배돈을 주고, 식품류, 양말, 속옷, 책, 문구류 등 선물

② 추 석

- 행사 : 송편빚기, 성묘가기, 차례지내기 등은 대부분가정에서 실행되지만 현재는 실행되지 않는 행사도 많음
- 성모 : 추석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석전후에 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설보다는 전통성을 잃어 가는 경향이 많음
- 의복 : 한복을 형편에 따라 입는 것이 좋음
- 음식 :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

③ 혼례

- 배우자 선택 조건 : 상대방의 성격, 건강 등의 개인적인 조건을 가문이나 집안 배경보다 중시
- 궁합 : 보지 않거나 보고도 무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 택일 : 양가합의가 일방 결정보다 2배 가량 많음
- 예식 : 대부분 예식장이나 호텔
- 예물 : 신부는 예물로 시부모나 사촌 이내의 시댁식구들에게 주로 의류나 침구류를 많이 드림
- 혼례축하 선물 : 주방용품, 가전제품, 장식품이 신부에게 많이 전함
- 용어 : 폐백, 사주, 택일, 함은 거의 모두 잘 알고있으나, 납폐, 함근례, 연길 등의 용어는 잘 알지 못함
- 현고구례(폐백) : 신랑집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에 맞게 예식장에 마련된 폐백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
- 하객 접대 : 음식물을 빌려 하는 경우가 많음

④ 상례 : 대부분 전통식으로 치름

- 장례 일은 3일장으로, 탈상은 50~100일로 한 경우가 많음
- 앞으로 장례는 3일장이 좋고, 탈상은 50일 이내가 좋다는 의견이 많음.
- 수익는 장의사 등에서 구입, 상복은 흰 한복이나 전통상복을 탈상 때까지 착용
- 조객 대접 : 떡, 전류, 주류, 밥, 과일, 음료수, 차 등
- 용어 : 임종, 사자밥 등은 대부분 잘 알지만 수시, 습, 치장 등은 잘 모름

⑤ 첫 돌 : 양력 기준, 자택에서 전통적인 음식이나 돌상을 차리고 손님을 초대

- 돌상을 차린 경우는 대부분 돌잡이를 하였으며 집이나 사진관에서 돌 기념 사진을 찍었음
- 선물 : 금반지, 옷, 돈, 장난감

—첫돌 아이의 약 2/3가 한복을 입었음

⑥ 환 갑 : 대부분이 음력을 기준으로 잔치나 여행을 함

—잔치장소 : 자택이나 음식점, 자녀의 집

—비용 : 대개 1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100여명의 손님을 1~2일 동안 초대하여 치름

—음식 :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없음

—복장 : 회갑주는 한복, 자녀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한복

—회갑선물 : 현금, 한복, 금, 보석류, 속옷, 보약

⑦ 생 일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가족 : 남편, 시부모

—행사 : 대부분 전 가족이 아침식사를 함께 함 케이크에 촛불 켜고 자르기와 생일축하 노래부르기

—음식 : 수수팔떡과 케이크가 주로 장만, 미역국은 많지 않음

—선물 : 주로 의류

⑧ 이 사

—결정 : 부부공동 결정이 많음

—동기 : 집을 늘리기 위한 경우와 아파트로 옮기기 위한 경우

—이삿날 : 주말이나 공휴일

—이사 장소 : 방향을 고려하지 않음

—이삿짐 나르기와 정돈 : 가족, 친지의 협조, 전문회사의 도움

—이사 인사 : 팔죽이나 팔떡을 이웃에 돌리는 풍속은 많이 진행됨

—선물 : 새집 마련 축하의 뜻으로 집들이를 하며, 부자되기를 기원하는 세제류, 식기류, 휴지, 화분 등이 많이 선물됨

3) 가정생활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방안

가. 생활문화 내용 보급

① 전통적 가정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관련교과 담임교사(예 : 가정, 사회, 국민윤리 등)가 자녀와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생활문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함

③ 부모나 교사가 자녀와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생활문화의 주도적 내용을 끊임

없이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함

- ④ 사회 경제적 계층별로 생활문화 내용이 금전적 부담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음.
생활수준에 맞게 분수를 지켜가며 생활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⑤ 가정행사 각각에 대하여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방법을 대비하여 표를 만들고 몇 가지 좋은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면, 실생활에서 가능성과 적합성을 고려 각 가정의 분수와 조건에 알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생활문화 보급방안

- ① 가정교육을 통한 생활문화의 유지 발전
- ② 학교교육을 통한 생활문화의 전달
- ③ 사회교육을 통한 생활문화의 전달(주부대학, 부모교육, 어머니 교실, 자모회, 신부교실, 숙녀대학,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일반교양강좌 등)
- ④ 매스컴을 통한 생활문화의 전달
- ⑤ 반상회를 통한 생활문화의 전달
- ⑥ 지역사회 축제 또는 행사를 통한 생활문화의 전달

※ 생활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배려해야 바람직한 생활문화가 실제의 생활과 부합될 수 있을 것임.

9. 여가놀이문화 개발 및 확산방안 연구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전병재 외

1. 한국적 상황과 관련한 여가놀이 문화

1) 산업사회에서의 일과 놀이

—일과 놀이의 양극화 : 현대인들의 활동은 놀이성이 배제된 일의 과정에서 점점 더 맹목적으로 되고 일성이 배제된 놀이로 되어감

—과시적 소비로서의 놀이 : 평등주의적 교육관, 일 위주의 교육관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학교교육을 받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의 우위적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격이나 교양보다는 과시적 소비에 의존

—놀이문화의 상업화와 대중문화 :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중교육이 결

과적으로는 일반노동자의 비판의식과 고급놀이의 욕구 및 그 향유능력을 높여 줌→이와 병행하여 놀이문화의 상업화와 이에 필요한 소재의 대량생산화를 통해서 증대된 대중의 놀이요구가 폭넓게 충족됨으로써 놀이문화의 평준화가 대중문화의 형태로 확산

—놀이의 탈 전통화 : 현대 산업사회의 획일화된 문명은 문화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철저하게 질적이어야 할 문화적 가치마저 양적인 경제적 가치로 전락되어 문화의 승화적 요소가 그만큼 배제

2) 산업사회 놀이의 특성

- 임금노동자들의 일의 과정 속에서 놀이적 요소 배제로 일에 상응하는 놀이는 그만큼 도피적으로 됨
- 과시적 소비행태가 상층사회의 놀이 주도
- 일반 대중은 놀이 상품화 과정에서, 하는 놀이보다는 보는 놀이를 즐기게 되고 점점 더 피동적 관객으로 전락
- 놀이의 승화적 요소가 약화되고 놀이문화가 강화되면서 질적으로 평준화 되고 국제화 됨→놀이상품의 개발에서 뒤쳐진 후진국은 선진국 문화의 식민지로 되면서 전통이 허물거지고 사회결속력이 약화되어 사회해체 위기로 치달음
- 연령별 놀이문화의 분절화 현상이 사회결속력 약화에 크게 작용
- 대중적 놀이 욕구 증대

2. 여가놀이문화의 개발 및 확산방안

1) 여가활동 욕구의 적극적 충족 대책

① 놀이문화시설 및 놀이문화공간의 사회적 의무화에 의한 대안

- 건물 신축시 문화공간 배정 의무화
- 각급 학교시설 개방 의무화
- 각종 기업체의 사회환원적 문화설비 의무화
- 기업 내 문화시설 의무화

② 지방자치체를 활용한 정책 대안

- 공원도시 건설
- 주거지역 중심의 놀이문화시설 확보 : 가족중심적 놀이문화
 - 집안에서의 놀이

- 집 밖에서의 놀이
- 작은 모임(씨클)의 활성화-문화가족
- 지역문화 활성화와 여가선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 ③ 출, 퇴근 및 휴일의 획일주의 지양 대안
 - 출, 퇴근 시간 조정제의 휴일 적용
- ④ 여가놀이문화를 연구, 개발하는 전담 부서 설치
- 2) 후기 산업사회적 문화 및 가치관 정립
 - ① 정부 및 기업체의 가치관 교정
 - 사내 작은 모임(씨클)-문화가족, 전담 부서 설치
 - 회사-가정의 이원구조 해소
 - 모임방의 상설화
 - 사내 홍보 및 분위기 조성
 - ② 매스컴의 홍보
 - TV의 공익광고 이용
 - 세계 각국의 일-놀이에 대한 가치관 및 행태 소개
 - 여가놀이 문화 프로그램 공모
 - ③ 학교에서의 교육
 - 특기 위주의 교육이 시급
 - 전문학교의 활성화 및 가치관 변화
- 3) 상업주의로부터 여가놀이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 ① 퇴폐향락적 놀이문화에 대한 감시운동
 - ② 건전한 여가놀이문화 활동 홍보
- 4) 전통 여가놀이문화의 보급 방안
 - ① 전통놀이문화에 대한 교육, 교양 프로그램 개발
 -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
 - ② 전통놀이문화의 계승과 변용 방법
 - 전통의 계승
 - 전통에 대한 연구, 전문공연 활성화(양성), 대동놀이의 계승
 - 전통의 변용
 - 창작 예술의 적극 후원

—전통의 응용

- 현대 물질문명의 이기와 한국적 전통의 결합, 기풍진작

※결 론

- 바람직한 여가놀이문화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 점차 높아지는 여가활동욕구 충족을 위한 환경 조성
 - 금전적, 장소적, 시간적 제한을 줄여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
 - 여가활동욕구가 퇴폐로 흐르지 않도록 건강한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함.
 - 여가놀이문화를 레저산업으로부터 분리 해내어 놀이주체에게 돌려줘야 함.
 - 민족문화 육성을 위해 전통적 놀이문화를 재발굴, 개발해야 함.
- 앞으로의 할 일은 ‘일’성과 ‘놀이’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대 한국의 여가놀이문화는 일과 놀이의 양극화 속에서 스트레스 해소의 기능에 머물고 있어 보다 소극적이거나 혹은 퇴폐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0. 국립예술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음악·발레분야)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흥연택 외

〈음악분야〉

1. 예술교육의 문제점

- 초·중·고교
 - 예체능 교육의 전담교사제도 절실(국민학교)
 - 교육기자재를 갖춘 특수교실운영 및 형식적 교육시간 배정(중·고교)
 - 상급학교로 갈수록 수업시간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예능계 시간은 감소
- 예술 중·고교
 - 학교의 특성이 상실된 획일적 체계
 - 대학입시가 교과과정에서 절대적 영향을 끼침
 - 공통과목 외에 선택과목이 거의 없음
- 현행 입시제도 문제점
 - 음악전공 학생의 경우 학력고사와 실기시험의 이중부담

—예능과목에서 창의성, 정서, 예술감각 등의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함.

—예술교육보다는 체육교육에 치중(체력장)

4) 대학의 음악교육

—음악교육의 미세분화

—음악 각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독립적 교과과정 개발 필요

2. 외국의 음악원

1) 예비학교 과정

—미국 : The Mannes College of Music, Manhattan School of Music,

The Julliard School

—캐나다 : 로얄음악원

—일본 : 도호음악원

—유럽 : 비엔나 시립음악원의 예비반, 비엔나 국립음악원의 예비반

2) 본과정

—유럽 : 이태리 쾰타체칠리아 음악원,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학교,

불란서 국립고등음악원, 뮌헨 국립음악학교

—미국 : 줄리아드 학교, 커티스 음악원

—일본 : 도호음악원

—소련 : 레닌그라드 음악원, 모스크바 음악원

—북한 : 평양 음악 무용대학

3. 국립 음악학교 설립을 위한 기초안

1) 학 제

어린이 음악교실 I (4~6세 : 유치원 과정)

II(7~8세 : 국민학교 기초과정)

III(10~12세 : 국민학교 상급과정)

청소년 음악학교 I (13~15세 : 중학교 과정)

음악학교

2) 교과과정

—학교 설립 시까지 전문가들에 의한 장기적 연구 선행

—각 과정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재연구 병행

3) 전형종목, 인원, 방법

① 어린이 음악교실

—종목 : 초보자(전공악기 없음) ; 4~5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 5세부터

목관, 금관, 타악기 ; 10세부터

—인원 : 전공 구분 없이 한 학급에 10명 기준

—방법 : 면접과 음악적 감수성 테스트

초보자 외에는 면접 및 전공실기 심사

② 청소년 음악학교 I

—종목 : ①에 비올라, 더블베이스 추가

—인원 : ①의 약 1/3이 진학, 한 학년 정원 300명

③ 청소년 음악학교 II

—종목 : ②에 하프, 성악, 작곡 추가

—인원 : 한 학년 정원 200명

—방법 : 면접 및 전공실기 심사, 음악이론, 시창청음, 반 배정 시험

④ 음악학교

—종목 : ③에 지휘, 오르간, 하프시코드 추가

—인원 : 한 학년 정원 150명

—방법 : 면접 및 전공실기 심사

음악이론, 시창청음,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전공 지도교수 추천서

4) 설립연도, 규모 및 장소

—설립연도 : 준비만 된다면 가능한 빨리

—규모 : 서울—본교를 비롯한 각 지역의 분교 4개

각 도청소재지—1개의 분교, 각 직할시—1개의 분교

—장소 :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

4. 지도자 양성 및 교수확보계획

—어린이 음악교실

· 단기적 지도자 양성—외국 전문기관 연수, 외국 전문가초청 국내 연수

- 장기적 지도자 양성—연차적 양성 계획과 과정별 양성계획 병행
- 청소년 음악학교
 - 국내에서 확보, 외국교수 초빙
 - 쏘페지오 전문 지도자의 발굴 양성
- 음악학교
 - 전공실기 지도교수 확보
 - 전공실기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10~12명 기준

5. 설립에 따른 문제점

- 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대한 문제
- 국립예술학교 설립과 함께 사립예술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문제
- 국립예술학교 설립 시 기존 음악대학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
- 졸업생 및 재학생에 대한 혜택(병역의무) 및 의무사항 부과 문제
- 등록금 및 기숙사비의 국비보조에 대한 문제

〈발레분야〉

1. 발레교육의 문제점 : 교육실태의 역피라미드 현상
 - 어린이 교육기관과 초등교육기관이 거의 없음
 - 중등교육기관 2개교
 - 고등교육기관 15개교
 - 대학은 30여 개교

2. 발레학교 설립 기초안

1) 학 제

- 초급 : 7세~9세 국민학교 기초과정
- 중급 : 10세~12세 국민학교 상급과정
- 고급 : 13세~15세 중학과정
- 전문 : 16세~18세 고등학교과정
- 교사연수 : 상기 학제 12년을 졸업한 학생의 이후에 재교육

2) 교과과정

- 우리 나라의 현재 학제를 감안 외국 발레학교들을 모델로 참고하고 다각도로

연구하여 발전적이고 과학적인 교과과정을 마련

3) 전형종목, 인원 및 방향

—종목 : 발레

—인원 : 한 학급에 15명씩 2개 학급

—방법 : 체격심사—발레를 할 수 있는 체격 유무와 용모 심사

실기심사—정통 기본실기

음감심사—리듬감, 음악성 심사

혈통심사—응시생의 부모, 조부모까지의 혈통(체격)을 심사

4) 설립규모 및 장소

—장소 : 우선 서울본교 개설 후에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개설

—규모 : 몇 가지 안이 논의됨

- 서울에 대규모 1개교를 설치한 후 세계적 수준이 되도록 육성
- 서울에 큰 규모의 본교 설치하고 각 직할시, 도 별로 국민학교까지의 부설학교를 설치, 상호 연계하여 운영
- 서울에 큰 규모의 본교, 각 지방에 중학교과정의 부설학교 설치, 상호 연계하여 운영

3. 지도자 양성계획 및 교수확보

—단기적 지도자 양성 ; 외국의 우수한 기관에 위탁연수

외국의 유능한 전문교수 초청 국내연수

—장기적 지도자 양성 ; 연차적 지도자 양성계획과 연수계획을 병행

4. 국립발레학교 설립에 따른 문제점

—국립 발레학교 설립 시 기존의 일반학교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

—학력인정 및 학위수여문제

—졸업생, 재학생에 대한 혜택(병역) 및 의무사항 부과 문제

※결론 : 예술학교의 설립은 우리 나라의 예능교육의 많은 당면과제 중 하나이며 예술학교의 설립이 예능교육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사업이 잘 실천되던, 우리 나라 문화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1.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법제 연구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오연천 외

1. 연구의 목적

문예진흥기금을 구성하는 재원소스별로 기금조성의 활성화 및 건실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개편방향을 탐색하기 위함

2. 현행 문예진흥기금 조달의 현황 및 문제점

① 문예진흥기금 조달에 관한 관련 법규의 현황

- 기본재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 1조 1항에 의거한 모금수입과 동법 제 8조 1항에 의거한 국고보조금
- 문화예술진흥법 제 8조 2항에 법인 및 개인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의 법적 기틀을 마련
- 한국방송공사법 제20조 2항 : 방송광고 대행수수료 수입 중 정관이 정하는 율의 일정액을 언론공익사업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② 현행 문예진흥기금의 조달실태 및 특징

- 재원의 60%내외를 방송광고 수수료 수입으로부터 이전되는 공익자금에 의존
- 이자수입·사업수입 등의 자체수입과 기부금수입은 규모가 극히 미흡함

③ 현행 문예진흥기금 조달의 문제점

- 문예진흥기금의 증식과 규모확대를 위한 항구적이며 실효성 있는 재원조달 통로를 마련하지 못함
- 모금수입, 기부금 수입의 취약으로 재원조달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추가적 재원확보의 전망 불투명
- 공익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원조달상 구조적 취약성, 기금조달의 불안정성
- 모금수입의 경우 극장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 재원의 법적, 재정적 성격이 불확실

—자발적 기부 풍토가 조성되지 않음. 문화예술 활동을 단순한 사치재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취약하여 기부금 수입이 기대수준 이하

3. 주요국가의 문예재원 조달 및 지원제도 비교

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보조 및 재원조달 제도

1) 재정지원 제도—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간접적인 지원제도로 대별됨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경우 예산배정을 통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형태를 취함

2) 목적재원 조달제도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목적세 및 복권제도 등이 활용됨

②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

—기부금지원 또는 찬조와 후원활동으로 구분

③ 자체수입 및 기타 재원조달 수단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의 일부 오페라 공연이나 관현악단은 공연을 영리화하기 위해 독립제작회사를 설립하는 경향을 보임

④ 정책적인 시사점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우리 나라에 비해 선진국가들이 넓은 범위의 문화예술활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활동을 전개함

—예산배정을 통한 문예재원 조달 외에도 목적세 제도 및 별도의 재원조달장치 등이 각국의 사정에 맞게 활용되고 있음

—서구 선진국가들에 있어서 자발적인 문예재원의 출연 및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지출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됨

—입장수입 등 자체재원의 조달 비중이 우리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함

4. 문예진흥기금 확충의 접근방법

① 기본방향

—현재의 틀 속에서 모금수입의 확대, 기부금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방송광고 대행수수료에 의거한 공익자금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독자적인 재원확보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보다 혁신적인 방안 모색

② 공공부문의 역할과 특정재원 확보의 필요성

- 문화 예술활동은 민간 부문은 독자적 노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통한 재정보조가 불가피함
-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특정재원 조달구상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에 접근함에 있어 현행재정구도상의 한계점을 감안,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조달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③ 문화예술지원의 공공경제학적 성격

- 문화예술활동이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에 상당수준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수반되는 가격기구(이용자 부담)의 적용이 불가피하면서도, 창출하는 외부효과(사회적 편익)에 상응하는 공공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제시될 수 있음

5.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

①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향

1) 문예진흥 목적세의 도입구상

- 기존 세목의 세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관련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이 문화 예술재원확충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

2) 유희음식 및 입장행위분 특별소비세의 활용구상

- 사회적 비용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지적 가능
- 재원의 규모와 재원확보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
- 제원관리와 조세저항의 측면에서 유리
- 과세방식 ; 특별소비세수입을 문화예술재원으로 자동이관
; 세원확보방안으로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과세기초로 삼아, 메기에 일정비율을 별도로 추가

3) 복제기기 등에 대한 신세원(또는 재원) 개발구상

- 저작권 또는 창작권의 침해와 건전한 창작의욕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복제기기의 제조·판매 또는 이용단계에서 일정부담을 주어 문화예술진흥에 활용

4) 상업광고 및 광고탑에 대한 과세(부담금) 구상

가. 광고세의 도입구상

- 장점 ㉠상업활동을 촉진하는 광고행위의 사회적 비용유발행위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일부분을 활용, 국민정서 순화에 기여하도록 하

여 광고행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상쇄

②별도의 광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

③부과대상이 명확함

—문제점 ①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광고세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됨

②법인이익에 과세되는 기존의 법인세와 과세기초가 중복 가능

③방송광고에 대한 과세는 공익자금의 장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미 공익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④새로운 세목의 신설에 따른 저항

나. 광고탑의 활용구상

—적극적인 광고행위를 통한 재원조성 방법

—도심환경에 적합한 광고탑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터 일정사용료를 징수

—기존의 세목이나 부과금 등과 중복되지 않아 저항이 적고 부과·징수가 용이함

—공공광고탑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

—확보가능한 재원의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지 않음

—광고탑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유기적 조정 필요

5) 기부금 수입의 증대와 조세감면의 한계

—소득세법에 의한 논의의 전개가 가능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한도를 확대하는 과제로 집약됨

—촉진가능성은 미지수

② 모금수입의 확충

—모금을 문예진흥부과금으로 바꾸거나, 가칭 문예진흥세의 과세기초의 일부로 수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수입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

—모금수입 대상의 확대와 모금요율의 현실화 문제

③ 공익자금의 안정적 확보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문예진흥기금법이나 방송광고공사법 등 상위법에 법정화하는 것이 바람직

- 방송광고 대행수수료의 문예진흥기금 배분비율은 방송광고의 총량규모(총 수입)와 문화예술진흥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 평균적 배분비율 일정비율을 추가하여 기본비율을 결정하고, 방송광고 수수료의 증가속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연계장치 필요

④ 자체수입 운영의 효율화

- 문예진흥기금의 자체수입은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확충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음

12. 한국 전통문화 영상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 도 : 1991년

* 연구진 : 강현두 외

1. 연구의 성격

전통문화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계승과 홍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사전조사 연구

2. 전통문화 관련 영상물 제작 및 보존, 이용실태

1) 국립영화제작소

—보관 ; 가장 많은 분량의 전통문화영상 제작기관으로 보관량도 가장 많음

—이용 ; 개인이나 단체가 영상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영상시설 없음

이용방식의 홍보부족 및 이용을 위한 방안 강구 부족

—보급

· 정기 ; 해외공관, 각 지역 행정관청, 지방문화원, 농촌지도소, 교육연수기관

· 부정기 : 문예진흥원, 박물관, 미술관, 국립국악원, 방송국

2)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 총 54편

—이용 및 보급 ; 관람제도 없음

7대의 VTR을 이용, 전시 관련 내용을 상시 상영, 박물관 문화학교 · 토요

공개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에서 영상자료 이용, 국민학교 방문 상영 실시

3) 국립국악원

—보관 ; 국악관련 영상자료 자체 제작·보관. 영상자료는 총 538편

—이용 및 보급 ; 대부분 직원 내부 교육용

일반인 상대 영상보급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없음

1994년 교육연구동 완공 이후 도서관과 영상자료실 운영 계획

4) 문예진흥원

—보관 ; 여러 기관의 영상자료 보관. 총 976편

—이용 및 보급 ; 비교적 체계화

일반의 이용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절대적 숫자는 미미한 수준

영상자료 활용의 전통문화 보급 프로그램이 별로 없음

5) 세종문화회관

—영상자료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실정

—비디오 목록조차 없음

6) MBC프로덕션 영상사업센터

—보관 ; 전통문화 관련 작품은 '91년 현재 46편 정도

—이용 ; 방문, 전화주문으로 판매

해외대리점 운영하나 큰 실적은 없음

7) 국립극장

—무대공연작품 촬영 보관, 총 557편, 전통문화 관련 작품은 260편 정도

—공연 기록의 의미 뿐 홍보 및 교육용 자료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음

8) KBS영상사업단

—보관 ; 전통문화 관련 영상자료는 약 700~800편 정도로 추산

—판매 및 이용 ; 전화나 우편 주문 판매

국내 15개소 및 해외 10개소의 대리점 운영

3. 전통문화 영상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식적 특성

1) 외형분석

—칼라 작품 위주 제작, 16mm와 35mm작품이 전반적으로 고루제작

—VTR용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 활용에 관심 필요

—해외 홍보 및 자료 보존에 대한 관심은 다행

—작품들의 시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제대로 된 자료 보존용 작품은 기대하기 어려움

2) 질적분석

—민속놀이 : 정월 대보름에 관한 것이 없음

- 전체적 구성이 단조로움
- 살아 있는 세시풍속이라는 이미지 전달에 대체로 실패

—연희 : 정부차원의 체계적 자료화가 시급

- 적절한 해설 삽입 방법의 모색 필요
- 화면과 소리의 불일치 등 기술적 문제점 극복이 과제
- 구성 편집에 관심필요

—국악 : 홍보용이 대부분 ; 자료보존적 차원에서 체계적 작품화 필요

- 많은 작품에서 화면과 소리의 불일치, 단조로운 구성과 카메라워크가 극복과제
- 내용에 있어서도 속악과 정악의 균형 잡힌 구성추구 필요
-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모습 영상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미술 : 구성과 편집에서 신선한 기법 구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제작 참여와 해설을 맡기는 방안 강구

—공예 : 자료화된 영상 작품들이 많이 있으며, 추가로 체계적인 분류를 가지고 계속적인 자료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전문가의 직접 해설과 적절한 배경음악 선별 필요
- 민예품의 경우는 실생활에서의 긴요한 쓰임을 담아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함

—무용 : 비체계적인 작품화로 아직 영상화되지 못한 시급한 소재들이 산재해 있음

- 정통한 분류하에서 계획성 있는 자료보존용 작품제작 필요

—기타 : 현장음이 거의 없는 무미건조한 내용 주입식 제작으로 홍보효과 상실

- 전통문화와 현대의 조화를 담아내는 노력 필요

4. 전통문화 영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

1) 문교부의 교육 비디오 사업

- 학교교육 : 전통예술과 공동체적 민속놀이, 전통적 삶의 양식과 가치관 교육, 대상자에 따라 적절히 영상화
- 박물관 : 전통문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설비와 시설확충 필요
- 제작과정 : 제작지원을 하되 교육프로그램의 설정이나 구체적 제작내용 등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함

2) 문화영화의 육성

- 극장용 전통문화영화의 활용 : 민간제작사를 대상으로 극장용 전통문화 영화의 제작을 유도하는 방법 강구
- 전통문화영화제의 설립 :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전통문화 행사와 맞물려 연례화

3) TV방송의 역할

- 기록보존용 전통문화영화 전담 부서 설치 필요
- 홍보용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에 사용
- 전통문화의 교육이나 해외홍보물 제작의 자료

4) 전문인력의 양성

- 대학영화교육에서 문화영화의 전문인력 개발 육성
- 영화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영화아카데미 확대로 유능한 기록영화 전문가 육성
- 문화영화에서 보람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토양 마련

5) 제작방식의 체계화

- 다양한 제작기관을 연결하는 문화영화필름센터와 같은 기구 설치
-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영역 확보 필요
- 보존용 자료를 기본단위로 영상제작→장기적 체계화 노력

6) 기업의 참여 유도

- 문화영화필름센터에서 아이디어와 시나리오 제공→기업에서 제작비 투자하여 제작→여기에 투자기업의 상표를 넣어 극장에서 상영하거나 TV로 방영

5. 한국 전통문화 영상프로그램 개발방안

1) 민속놀이

- ‘설날’, ‘정월 대보름’을 한 묶음으로 하는 작품제작
- 용도별 제작(자료용, 홍보용)

—작품시간을 내용에 따라 과감히 설정

—살아있는 모습을 영상화해내야 함

2) 연희

—장기적인 작품화계획 수립

—작품시간을 적정하게 확보

—적절한 해설 및 작품이해 후에 작품제작

3) 국악

—음악소리와 함께 갖가지 정보와 이미지를 시각화하는데 주력

—해설의 적절한 삽입 및 화면과 소리의 불일치 극복

—촬영상의 제반문제 극복

4) 미술

—다양한 편집 필요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영상화해야 함

—적절한 배경음악과 현장음을 활용해야 함

5) 무용

—사전지식 습득 후에 작품제작과 소리의 불일치 극복

※결론 : 비체계적인 제작과 미흡한 보급실태 극복

열악한 제작조건과 질 낮은 영상 극복

효과적인 정책대안의 모색 필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함

13. 1991년도 연구과제

* 연 도 : 1991~1992년까지 완료 예정

- 1) 국내 문화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 2) 문화재 및 전통문화 관리기능 강화방안 연구
- 3)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 인증제도 연구
- 4) ‘어머니의 손’ 국토순례 문화관광 개발·보급방안 연구
- 5) CATV를 통한 국민문화창달 및 진흥방안 연구
- 6) 부과금제도 연구(부제 : 특히 문예진흥기금확보대안으로서의 접근)
- 7) 특수연극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
- 8) 국민독서 생활화 방안연구

▣ 부 록 2 >

1. 1920년대 조선시문학에 형상된 조국애

류 만*

- 조국애 : 1920년대 시문학의 사상정서적 내용에서, 중요한 특성을 이루는 것
- 애국의 감정을 노래한 시문학의 로정
 - 12~14세기의 반침략애국문학과 발전
 - 17세기 임진조국해방전쟁을 반영한 문학 ,
 - 19세기말~20세기초의 근대사회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담은 계몽기문학
 - 1920년대에도 애국의 감정은 뜨겁게 소용돌이쳤다
- 1920년대 시문학
 - 조국애가 간접적으로 형상
 - 한용운과 김소월을 비롯하여 김억, 리상화, 조명희, 김창술, 류완희, 정지용
- 고향과 조국의 자연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 토로, 일어난 고향에 대한 애수, 즐거웠던 동요시절에 대한 추억, 향토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
 - 정지용
 - 《향수》 : 향토에 대한 남다른 생각과 애착을 민족적정서가 짙게 노래
 - 김소월
 - 《고향》 : 고향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고향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 없어 하는 뜨거운 향토애
 - 향토를 못 잊어하는 그 향수와 거기에 기울이는 사랑 속에서 조국에 대한 무한한 애착심을 새겨듣게 된다.
- 잃어진 것에 대한 비애, 빼앗긴 조국을 두고 느끼는 통분의 감정이 그 모든 것을 애타게 찾는 애절한 정서와의 융합 속에서 뜨겁게 노래됨
 - 리상화의 《통곡》과 조명희의 《봄 잔디밭 우에서》
 - 한용운
 - 《님의 침묵》 : 《님》은 조국에 대한 상징적 모습
 - 김소월
 - 《초혼》 : 단순한 님이 아닌 크고 귀중한 그 무엇에 대한 애착이 응어져 간직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실장, 부교수, 준박사

되어 있음

- 《님》은 그리운 모든 것, 사랑하는 모든 귀중한 것, 나아가서는 향토와 조국과 겨레와 자유와 같은 크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

○내일에는 보다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질 생활에 대한 동경과 이상

—리상화

- 《빼 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비개인 아침》

—김소월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상쾌한 아침》

○평등의 길, 자유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갈데 대한 열망과 진리를 위한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설 의지가 솟구치며 근로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
프로레타리아 시인들(김창술, 류완희 등)

- 《대도행》, 《긴 밤이 새여지다》, 《지형을 뜨는 무리》, 《민중의 행렬》, 《어둠에 흐르는 소리》 : 전투적이고 진취적이며 격조 높은 서정세계가 유달리 힘차게 토로됨

2. 조선의 청동기시대 유적 유물

석 광 준*

○조선의 청동기시대문화는 기원전 2,000년 기에 이르러 조선의 신석기시대 문화의 바탕위에서 발생

—질 그릇갓춤새

- 바탕흙에 모래를 섞은 재질의 갈색이 기본
- 통이 깊은 화분모양의 그릇생김새
- 질그릇표면을 새김무늬로 약간 장식한 것
- 무늬를 새긴 질그릇만 놓고 보아도 아가리의 특징은 갈색민그릇의 겹아가리의 특징과 같음

—신석기시대 말기로 내려올수록 늘어나던 갈색민그릇이 청동기시대에 많아짐

—활촉, 창끝, 도끼 등 일부 석기의 형태, 움집을 기본으로 한 집자리구조

○청동기시대 유적유물 : 로동도구가 개선되고 생산활동이 확대장성 됨

—생산활동의 확대 : 청동기구조와 관련한 새로운 수공업분야 생김

- 끌, 손칼, 도끼, 활촉의 도구와 무기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

- 단추, 가락지의 치레거리

—마제석기제작수법이 더욱 완성

- 텍자귀, 돌단검, 곤봉대가리, 활촉
- 청동기시대의 석기갓춤새가 신석기시대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어 로동도구전반이 개선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생산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발전함

- 농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 : 반달칼, 도끼텍자귀의 다량 출토
- 반달칼과 낫이 함께 나옴 : 반달칼의 증가—날알생산이 부쩍 늘었음을 보임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

낫이 함께 쓰임—날알종류가 다양함

- 농업생산은 높은 발전수준에 도달 : 참나무평후치, 소와 말뼈, 조, 기장, 수수, 콩의 탄화한 낱알 출토

○주민들의 문화와 풍습의 변화

—집자리의 변화

- 집자리들은 윤곽이 방정한 네모집 일색화, 신석기시대와는 비할 바 없이 견고하고도 짜인 천정구조와 정연한 외형을 가진 집
- 지붕에는 량면경사로 된 배집지붕이나 우산각지붕 및 네모지붕
- 집안은 움바닥과 벽에서 생기는 습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움

—다양한 무덤을 쓰게 됨 : 씨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까운 혈연가족들을 한 곳에 묻는 풍습을 반영

- 고인돌 : 《탁상식》 고인돌 또는 오덕형고인돌과 침촌형고인돌의 두 종류
- 돌관무덤(돌상자무덤)
- 움무덤
- 무덤은 부계씨족사회의 모습을 반영함

—질그릇갓춤새

- 다양한 생김새의 갈색민그릇으로 팽이그릇과 같이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그릇들도 있음
- 붉은간그릇, 검정간그릇도 쓰임

○조선의 청동기시대는 자체의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기원전 2000년기로부터 기원전 1000년기전반기까지 계속된다.

—청동기시대물질문화의 시대적특성은 유적과 유물의 공통성에 따라 묶이워지는 지역성이 더 뚜렷해지고 발전속도에 불균형성이 나타나게된 점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어휘정리사업에 대하여

심 병 호*

- 어휘정리사업 : 해방 후 조선말을 발전시키는데 기본문제로 규정
- 조선말을 발전시키는데 기본문제로 설정한 이유
 - 언어가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의 하나이며 언어의 민족적특성은 주로 어휘구성의 질적상태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
 - 우리의 말과 글이 걸어온 역사적특수성과 해방직후의 어휘구성 실태로 어휘정리사업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
- 어휘정리사업의 성격
 - 비민족적인 어휘들을 정리하는 순수 언어실무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
 - 언어분야에 침습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어의 순결성과 민족적 특성을 지켜내기 위한 사업
 -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 민족적 자주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문제
- 어휘정리사업의 진행 과정
 -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 : 문맹퇴치사업과 결부하여 벌려 나감
 - 1947년 학술용어사정위원회 : 학술용어 정리 통일
 - 1964년 국가사정위원회 : 언어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
 - 전체인민이 참가하는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나감 : 《우리 말 다듬기 지상토론》
- 어휘정리사업의 원칙
 - 대원칙 : 우리말 어휘구성의 현 실태, 인민들의 언어생활의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위에서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
 - 어휘정리사업 대상 : 매개 한자말과 외래어들이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침투된 정도, 쓰이는 범위, 고유어와의 대응관계, 한자말과 외래어의 뜻의 폭과 다른 단어와의 결합관계 등 제 조건을 고려하여 정함
 - ① 한자말과 고유어가 뜻이 같고 그 쓰임도 같은 것
 - 비록 한자말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언어생활속에 침투되었다 하더라도 한자말을 쓰지 않고 고유어를 쓰도록 함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

- ② 일본말잔재와 힘든 한자말이나 외래어들은 고유한 우리말로 다듬도록 함
- ③ 지금에 와서 그 어원을 따질 필요도 없는 한자말과 외래어,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이는 어휘들과 비록 한자말이라 하더라도 인민의 언어생활에 굳어진 말들은 그냥 쓰도록 함
- ④ 한자어와 고유어가 있는 경우 그것들의 뜻 폭과 결합관계를 고려하도록 함
- ⑤ 새말을 만들 때에는 철저히 고유한 우리말 단어 만들기 수단들을 리용하여 만드는 원칙을 견지
- ⑥ 고유한 우리말로 된 학술용어라 하더라도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정리하도록 함
- ⑦ 사업의 성과가 실천에 철저히 구현되도록 함

—목적 : 고유한 우리말이 언어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하며 정리된 말들이 어휘구성과 언어생활에서 없어지도록 하자

○어휘정리사업 결과의 보급과 통제

- 학교교육, 보통교육부문의 인민학교 1차년부터 시작
- 교과서와 강의들에서 다듬은 말을 적극 쓰도록 함
- 출판보도물과 국가공식문건과 규정, 규범 등에서 적극 받아쓰도록 하고 수시로 장악하고 통제함

○어휘정리사업의 영향

- 우리 말 어휘구성은 질량적으로 변화
 - 고유어와 한자어의 2중 체계가 없어지고 고유어에 기초한 하나의 어휘체제가 이루어지게 됨
 - 어휘구성은 고유어휘로 더욱 풍부화되었고 어휘구성의 순결성과 민족적특성이 확고히 보장되었음
- 글말들이 인민대중이 알 수 있는 쉬운 글로 되었고, 일반용어와 학술용어 사이의 차이가 줄어 과학기술의 보급과 습득이 빨라짐
- 언어관점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
 - 고유어를 비롯한 쉬운 말, 쉬운 글을 쓰는 것이 유식하며 자기 민족의 것을 사

량하는 마음의 발현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게 됨

4. 서민시인 조수삼의 문학사적지위에 대하여

정 흥 교*

○조선봉건말기 문학의 진보적 경향

- 실학과문학
- 서민문학

○조수삼

- 영조 18년(1762) 전라도 사천 출생, 현종 15년(1849) 88세로 몰
- 자는 지원(芝園), 자익(子翼)이며 호는 추재(秋齋), 경원(經畹)
- 한생을 학문탐구와 현실체험 창작으로 일관

○연구자료

- 8권으로 된 《추재집》에 그의 시문이 전함
- 《풍요삼선》, 《완당집》, 《산천집》, 《호산외사》 등
 - 풍모, 시문, 과문, 의술, 바둑과 장기, 글씨와 그림, 기억력, 화술, 덕행, 병 없이 장수하는 것 등의 열 가지를 추재가 남보다 특출한 것으로 지적하고 이 중 한가지만 가져도 한평생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 부러워함

○신분상 위치와 갈등

- 신분이 천하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양반들과 뜻을 펴 나갈 수 없었음
- 생활에서는 천대와 가난을 면할수 없었음
- 양반사회에 지식과 재능으로 맞서 자진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려 몸부림 친 열정의 시인이며 탐구정신을 지닌 노력이

○작품에 드러난 열정과 탐구정신

- 《오늘은 새해》 : 유년시절을 감회깊이 회고
- 《강송암에게 써보이노라》 : 《나이 20에 군서를 다 읽었건만 60이 되도록 이룩한 것이 없어 내 다시 글을 읽노라》
- 83세에 진사시 응시 : 벼슬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반사회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며 관료배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

○접촉과 교제

* 사회과학원 주체문화연구소 실장, 박사

—실학과 문인들 : 박제가, 리덕무, 박지원, 김정희

—량반출신의 진보적 문인 : 리서구, 김명희, 남병철

—연경학자, 문인들 : 주문한, 강련, 오란설

- 실학사상 깊이 이해, 공감
- 당대 정치와 신분적 차별의 불합리 절감
- 시대와 생활에 대한 견식과 안목 세워나감
- 려행도 민족에 대한 이해와 현실체험에 도움

○당대인의 평

—의정 김명희 : 《선생의 시문은 늙을수록 새롭다…북방의 흰 눈과 변방의 칼바람을 련상케 한다》(산천집)

—동량 한치운 : 《추재의 시를 30년이나 거둬 읽어보지만 예전에는 별치 않게 생각 되던 것도 읽을수록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진다》(동량집)

—추사 김정희 : 추재의 시는 뜻이 깊은 것이 특징

—연경 문인들 : 《시단의 로장》

○대표작

—현실비판적 주제

- 시조 《북행백절》

—1822년 60세에 서울—서수라—두만강—백두산에 이르기까지 왕복 1만여리를 200여 일간 답사하면서 얻은 체험을 읊은 100여편의 절구시를 묶은 기행시조

—시적 형상을 통하여 일반화된 봉건말기 사회현실에 대한 축도

- 《썰바귀》 신분에 의한 천대와 차별
- 《룡성잡영》 : 1812년 평안도 농민전쟁을 제재로 읊은 22수의 시편으로 엮음
《도적될 사람 따로 있나 굶주림과 추위가 너무나 타이지》

—애국애족의 사상감정

- 시조 《밭갈고 길삼냥이》

—《씨 담그기》 노래에서 《새옷짓기》 시 까지 조선고유의 농촌생활과 미풍량속을 숨써 있게 펼쳐 보여 준 세시기적 작품
《기이편》

—민간설화들과 그를 제재로하여 읊은 50여수의 시편을 묶은 일종의 악부시집

○조수삼의 시고들의 특징

- 생활반영의 소박성과 진실성
- 시적 형상의 친근함과 생동성

5. 발해동경통원부—훈춘팔련령성설 재검토

채 태 형*

○동경통원부—훈춘팔련성설의 부당성

- ① 성건축자재와 크기에서
- ② 바다에 면하여 있는가 하는에서
- ③ 역참로정계산에서
- ④ 향로선정에서

○성건축자재와 크기 문제

—동경통원부는 《료사》 지리지에 의하면 돌로 쌓은 둘레 20여리의 성이지만, 훈춘팔련성은 흙성이며 둘레도 7리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다.

○바다에 면하여 있는가 하는 문제

—동경통원부는 바다에 면하여 있었다. 훈춘팔련성은 내륙도시 이다.

○역참로정계산문제

—후기신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천정군 즉 덕원을 시점으로 39개의 역참거리를 계산해서는 동경통원부의 위치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만 밝혀둔다.

· 향로선정에서

—겨울철항행은 추운날씨에도 바다물이 얼지 않는 부동항에서 동경통원부의 배들이 출항하였다. 훈춘팔련성은 수궁할만한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하고있다.

○필자의 가설 :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가 동경통원부자리가 아니겠는가

—근거

· 부거에는 고구려 발생시기와 돌성이 있다. 내성으로 인정되는 성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성이 건설되어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동남쪽으로 바다에 면하고 있으며 년중을 통하여 계속 일본에 배를 띄워보낼 수 있는 부동항인 룡제항과 련진항을 끼고 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 리조성립직후에 철관남쪽에는 강릉의 대참역까지 18개의 역참이 있었다. 그리고 철관이북으로 21개의 역을 여기에 합치면 후기신라의 북쪽경계에서 39개만에 있는 바다가의 역참인 회수역에 이른다. 회수역은 바로 부거에 위치하고 있다. 역참수에서도 《고금군국지》의 역참기사는 대창에서 회수까지의 역참로정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부거에는 18세기까지만 하여도 만 여개의 고분떼가 있었다. 발해유물도 적지 않게 드러난 이 고분떼는 부거성의 옛 주민과 떼어 수 없는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부거성유지를 고구려의 책성유지로, 발해의 동경원부유지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